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김성아
이주미·박형준·한솔희·한수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형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솔희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
	한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23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우리 사회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성장의一面에 깊게 뿌리내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소득의 불균형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부의 축적 결과인 ‘자산’의 격차가 세대 내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기회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자산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 가계의 위기 대응 능력을 결정짓고 주거와 교육 등 삶의 질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 등 장기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실태와 그一面에 작동하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과 가구 단위의 자산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혼인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물론,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대출을 통한 자산 형성 기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격차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보유 여부와 가액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청년기 초기 자산 형성 단계에서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집단이 이후 세대 내 자산 축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산 형성의 기회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초기 자산의 유무와 시장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자산의 집중이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무거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자산 격차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넘어, 자산의 공

정한 형성과 분배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OECD 국가들의 제도적 사례와 거시경제적 요인 분석 결과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산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위해 헌신하신 김성아 연구위원, 이주미 부연구위원, 박형준 광주대학교 교수, 한솔희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생, 한수진 연구원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생산적인 자문을 준 여유진 선임연구위원과 황선재 충남대학교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격차의 개념과 측정	21
제2절 자산 격차의 개념과 측정	30
제3절 자산 격차 요인과 영향	36
제3장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47
제1절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 추이	49
제2절 세계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54
제3절 한국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70
제4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87
제1절 문제제기	89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90
제3절 분석 결과	97
제4절 소결	115

제5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	117
제1절 문제제기	119
제2절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120
제3절 자산 구성의 유형화	123
제4절 자산 격차 영향요인 분석	146
제5절 소결	151
제6장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	155
제1절 문제제기	157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159
제3절 분석 결과	173
제4절 소결	177
제7장 결론과 정책 과제 …	179
제1절 요약 및 결론	181
제2절 정책 과제	183
참고문헌 …	195
부록 …	207
[제1장 부록] 서론	207
[제3장 부록]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210
[제4장 부록]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 가계금융복지조사	265



[제5장 부록]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한국복지패널	275
[제6장 부록]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290
Abstract	299

표 목차

〈표 1-1〉 연구 구성	17
〈표 2-1〉 가상의 소득 분포 시나리오	22
〈표 2-2〉 사례별 불평등 및 격차 지표 값	28
〈표 2-3〉 사례별 구조적 특성	29
〈표 2-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 항목 분류 체계	31
〈표 2-5〉 Arrondel et al.(2016)의 자산 원천별 분배 특징	32
〈표 3-1〉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가구주 평균 연령	65
〈표 3-2〉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67
〈표 3-3〉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68
〈표 3-4〉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가구규모	70
〈표 4-1〉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자료 및 개요	92
〈표 4-2〉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모형	96
〈표 4-3〉 개인 총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0
〈표 4-4〉 개인 순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4
〈표 4-5〉 가구 균등화 총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9
〈표 4-6〉 가구 균등화 순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13
〈표 5-1〉 잠재 프로파일 분석모형 적합도 결과: 2007년 19세 이상	124
〈표 5-2〉 자산 유형 프로파일: 2007년	126
〈표 5-3〉 프로파일별 상대적 자산 수준: 2007년	127
〈표 5-4〉 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속성: 2007년	128
〈표 5-5〉 프로파일별 총자산과 소득: 2007년	129
〈표 5-6〉 프로파일별 자산 구성: 2007년	130
〈표 5-7〉 잠재 프로파일 분석모형 적합도 결과: 2023년 19세 이상	138
〈표 5-8〉 자산 유형 프로파일: 2023년	139
〈표 5-9〉 프로파일별 상대적 자산 수준: 2023년	139
〈표 5-10〉 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속성: 2023년	140
〈표 5-11〉 프로파일별 총자산과 소득: 2023년	141



〈표 5-12〉 프로파일별 자산 구성: 2023년	142
〈표 5-13〉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 현황	144
〈표 5-14〉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금액, 백분위)	145
〈표 5-15〉 자산 40백분위 영향요인(무조건분위회귀분석)	147
〈표 5-16〉 자산 75백분위 영향요인(무조건분위회귀분석)	149
〈표 5-17〉 자산 90백분위 영향요인(무조건분위회귀분석)	150
〈표 6-1〉 국가 단위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자료 구축(결측치 처리 전)	166
〈표 6-2〉 포함 국가 및 시간범위(결측치 처리 후)	169
〈표 6-3〉 국가 패널데이터 기초통계량(결측치 처리 후)	170
〈표 6-4〉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영향요인 패널분석	175
〈부표 1-1〉 국내 평균 자산과 부채 추세(2010~2024년)	207
〈부표 1-2〉 소득 및 총자산 10분위 교차행렬	209
〈부표 3-1〉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주 연령	215
〈부표 3-2〉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216
〈부표 3-3〉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217
〈부표 3-4〉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규모	218
〈부표 3-5〉 가구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2010~2024년)	219
〈부표 3-6〉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2010~2024년)	220
〈부표 3-7〉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2010~2024년)	221
〈부표 3-8〉 가구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2010~2024년)	222
〈부표 3-9〉 가구의 총자산 대비 부채(2010~2024년)	223
〈부표 3-10〉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2010~2024년)	224
〈부표 3-11〉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2010~2024년)	225
〈부표 3-12〉 가구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2010~2024년)	226
〈부표 3-13〉 분석자료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가구 수(가중치 미적용)	227

〈부표 3-14〉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0년)	228
〈부표 3-15〉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1년)	229
〈부표 3-16〉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2년)	230
〈부표 3-17〉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3년)	231
〈부표 3-18〉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4년)	232
〈부표 3-19〉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5년)	233
〈부표 3-20〉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6년)	234
〈부표 3-21〉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7년)	235
〈부표 3-22〉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8년)	236
〈부표 3-23〉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9년)	237
〈부표 3-24〉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0년)	238
〈부표 3-25〉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1년)	239
〈부표 3-26〉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2년)	240
〈부표 3-27〉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3년)	241
〈부표 3-28〉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4년)	242
〈부표 3-29〉 분석자료의 연도별 자산분위별 가구 수(가중치 미적용)	243
〈부표 3-30〉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0년)	244
〈부표 3-31〉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1년)	245
〈부표 3-32〉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2년)	246
〈부표 3-33〉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3년)	247
〈부표 3-34〉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4년)	248
〈부표 3-35〉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5년)	249
〈부표 3-36〉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6년)	250
〈부표 3-37〉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7년)	251
〈부표 3-38〉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8년)	252
〈부표 3-39〉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9년)	253
〈부표 3-40〉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0년)	254



〈부표 3-41〉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1년)	255
〈부표 3-42〉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2년)	256
〈부표 3-43〉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3년)	257
〈부표 3-44〉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4년)	258
〈부표 4-1〉 개인 단위 기초통계량	265
〈부표 4-2〉 가구 단위 기초통계량	266
〈부표 4-3〉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67
〈부표 4-4〉 개인 총부채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69
〈부표 4-5〉 가구 균등화 처분기능소득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71
〈부표 4-6〉 가구 균등화 총부채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73
〈부표 5-1〉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인구사회학적 속성	275
〈부표 5-2〉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상대적 자산 수준	275
〈부표 5-3〉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총자산과 소득	276
〈부표 5-4〉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자산 구성	276
〈부표 5-5〉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가치분소득(금액, 백분위)	281
〈부표 5-6〉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가구주(배우자)인 비율	281
〈부표 5-7〉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동산 자산	282
〈부표 5-8〉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동산 자산 백분위	282
〈부표 5-9〉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금융자산	283
〈부표 5-10〉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금융자산 백분위	283
〈부표 5-11〉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채	284
〈부표 5-12〉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채 백분위	284
〈부표 5-13〉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노동소득	285
〈부표 5-14〉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노동소득 백분위	285
〈부표 5-15〉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 중 부동산	286
〈부표 5-16〉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 중 금융자산	286
〈부표 5-17〉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 중 부채	287

〈부표 5-18〉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287
〈부표 5-19〉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자가 거주 비율	288
〈부표 5-20〉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아파트 거주 비율	288
〈부표 5-21〉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증여·상속액(관측기간)	289
〈부표 6-1〉 국가 패널데이터 기초통계량(결측치 처리 전)	295
〈부표 6-2〉 결측치 처리 이전, 수집된 데이터 원본의 분석 결과	296
〈부표 6-3〉 금리와 연금자산만 결측치 처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	297
〈부표 6-4〉 모든 변수 결측치 처리 후 분석 결과	298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사례별 막대그래프	23
[그림 2-2] 로렌츠 곡선	24
[그림 2-3] 사례별 로렌츠 곡선	25
[그림 3-1] 주요국의 부-소득 비율(wealth-income ratio)(1990~2023년)	50
[그림 3-2] 가구 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과의 상관계수(2010~2024년)	51
[그림 3-3] 자산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총자산 간 상관계수(2010~2024년)	52
[그림 3-4] 소득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총자산 간 상관계수(2010~2024년)	53
[그림 3-5] 주요국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1800~2024년)	55
[그림 3-6] 주요국 고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1900~2023년)	56
[그림 3-7] 주요국 저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1900~2023년)	58
[그림 3-8] 주요국의 가구 자산 구성	59
[그림 3-9] OECD 주요국의 자산 구성(2013년)	60
[그림 3-10] 주요국의 가구 총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	61
[그림 3-11] 주요국의 주택 점유형태	62
[그림 3-12]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 추이(1970~2012년)	63
[그림 3-13] 자산 집단별 가구주 연령	65
[그림 3-14] 자산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66
[그림 3-15] 자산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68
[그림 3-16] 자산 집단별 가구원 수	69
[그림 3-17] 한국의 고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1995~2023년)	71
[그림 3-18] 한국의 고소득자 집단의 소득 점유율(1980~2023년)	72
[그림 3-19] 가구의 총자산 대비 자산 원천(2010~2024년)	74
[그림 3-20] 자산 분위별 실물자산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	76
[그림 3-21] 자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2010~2024년)	78
[그림 3-22] 자산 분위별 남성 가구주 비율(2010~2024년)	79
[그림 3-23] 자산 분위별 기혼 가구주 비율(2010~2024년)	80
[그림 3-24] 자산 분위별 가구규모(2010~2024년)	81

[그림 3-25] 자산 분위별 가구주 교육수준(2010~2024년)	82
[그림 3-26] 자산 분위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2010~2024년)	84
[그림 3-27] 자산 분위별 수도권 거주 가구 비율(2010~2024년)	86
[그림 4-1] 개인 자산 및 부채 보유율(2017~2024년)	93
[그림 4-2] 개인 소득 및 자산(2012~2024년)	94
[그림 4-3] 가구 소득 및 자산(2017~2024년)	95
[그림 5-1]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총자산 추이	132
[그림 5-2]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가처분소득 추이	133
[그림 5-3]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부채 추이	134
[그림 5-4]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총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율	136
[그림 5-5]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총자산 중 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137
 [부그림 1-1] 국내 평균 자산과 부채 추세(2010~2024년)	207
[부그림 1-2] 세계 소득 및 자산 점유율	208
[부그림 1-3] 한국의 자산 및 소득, 부채 지니계수	208
[부그림 3-1] 자산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의 상관계수(2010~2024년)	210
[부그림 3-2] 소득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의 상관계수(2010~2024년)	211
[부그림 3-3] 주요국 고소득가 집단의 소득 점유율(1900~2023년)	213
[부그림 3-4] 주요국 저소득가 집단의 소득 점유율(1900~2023년)	214
[부그림 3-5]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주 연령	214
[부그림 3-6]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216
[부그림 3-7]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217
[부그림 3-8]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규모	218
[부그림 3-9]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2010~2024년)	259
[부그림 3-10] 소득분위별 남성 가구주 비율(2010~2024년)	259
[부그림 3-11] 소득분위별 기혼 가구주 비율(2010~2024년)	260
[부그림 3-12] 소득분위별 가구규모(2010~2024년)	260



[부그림 3-13] 소득분위별 가구주 교육수준(2010~2024년)	261
[부그림 3-14] 소득분위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2010~2024년)	262
[부그림 3-15] 소득분위별 수도권 거주 가구 비율(2010~2024년)	264
[부그림 5-1]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실물자산 추이	277
[부그림 5-2]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금융자산 추이	278
[부그림 5-3]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노동소득 추이	279
[부그림 5-4]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자가 거주, 아파트 거주 비율	280
[부그림 6-1] 패널데이터 구조(좌: 결측치 처리 전, 우: 결측치 처리)	29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산(wealth)은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혼이나 실업, 장애 발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며, 은퇴 이후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과 함께 개인들의 삶에 있어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지탱하는 기제이다(Zucman, 2019, p.112; Rodems & Pfeffer, 2021). 그런데 자산 격차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정해식, 김성아, 2019). 현재의 불평등 혹은 격차는 기회의 불평등 혹은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의 불평등 혹은 격차를 심화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자산 격차 실태와 이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밝혀내어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자산 격차의 현황과 요인을 종합 분석하고, 둘째, 자산 격차의 보편성과 한국 자산 격차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격차 영향요인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격차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가구의 부(wealth) 혹은 자산은 소득과 함께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한편, 불균등한 분포를 일컫는 개념으로는 불평등(inequality), 양극화(polarization), 격차(disparity) 등이 주로 언급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개 이상의 집단 간 차이나 거리를 의미하는 격차, 특히 자산 격차에 주목하여 그 정의와 측정 및 쟁점, 그리고 요인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사자료에서 산정된 자산은 보통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자산을 변수로 활용하는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총합인 총자산의 개념과 함께 순자산의 개념을 활용한다. 순자산은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편,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부채를 활용하는 데는 계층화된 행태가 존재하고 거주주택 등 부채를 활용해 확보한 총자산 수준을 누린다는 점에서 총자산을 병행할 수 있다. 자산의 분포는 분산계수, 불평등은 지니계수, 불균등한 분포는 팔마비율이나 배율 등을 통해 측정하기도 하는데, 격차, 특히 자산 격차는 전체 자산 중 상층과 저층이 점유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소득과 자산은 가구에서 가구원이 공유하므로 가구 단위 데이터를 수집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을 균등화하는 합의된 방식은 없다. 다만, 가구 자산을 가구 내 성인 수로 나눈 성인 1인당 자산액을 활용한다. 가구 규모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 방식을 준용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소득과 자산의 개인화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개인 단위 분석의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다.

자산 격차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요인과 자산을 구성하는 원천, 정책과 외부 거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형성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별 요인에 주목하여 영향력을 검증한 반면, 실제 삶에 가까운 현상으로서 다차원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얹히는 실태를 조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3. 자산 격차 추이 및 실태

자산 격차의 추이와 실태를 검토하기에 앞서,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 특히 부-소득 비율은 199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증가했다. 그리고 1940년대 중후반까지 다시 감소했지만, 현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면서 주택 등 부동산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성 및 인구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경직되고 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부-소득 비율 지표나 한국의 가구 자산과 소득 간 상관계수의 추이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의 이원화된 경로를 보여준다. 결국 자산 격차에 주목하여 불평등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상위 10%와 1%의 자산 점유율은 199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 상위 10% 혹은 1%의 자산 점유율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덴마크나 인접 국가인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전 세계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이 1995년부터 최근까지 1~2%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10%를 넘지 않는다. 한국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미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인접한 일본이나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자산 하위 40% 집단 대비 상위 10% 이상 집단에 주목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비교적 높고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다. 또한 기혼 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고 가구원 수는 약간 더 많다.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혹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4.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 :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장에서는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로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7~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의 자산 격차, 즉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의 간극에 대한 다차원적인 요인의 영향을 조망한다. 개인과 가구 단위 자산 분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인과관계를 염밀히 검증하기보다 실제 삶에 가까울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각 요인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한계효과로 볼 수 있다.

자산 분위에 대해 노인 가구가 자산이 많고 비교적 중상층 이상에 분포하며,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를 확인하여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은 혼인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자산의 성별 격차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과 중상층 이상의 분위를 형성하는 교육 프리미엄이 자산에서도 존재한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을 점유하는 데에 가장 유리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나 기타 근로자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만,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원의 경제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 다소 이질적이다.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 등 전통적인 취약 집단은 자산 수준이 낮고, 비교적 하위 분위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보여 자산 측면에서도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 단위 자산에서는 자가 보유가 유리한데, 개인 단위에서는 주택 점유형태에서 다소의 이질성이 짐작된다. 특히 월세를 이용하는 행태는 고자산가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기제일 수 있다. 아파트, 수도권 주택 및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보다 대출이 자산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일 수 있다. 다만, 저축률이 분석자료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2000년대부터 현저히 줄었다는 점에서 자산 형성에 있어 저축의 효용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5.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한국복지패널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구성의 유형이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은 ‘주택, 부채, 금융자산,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유했고 무엇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후 생애의 자산 축적 행태가 달라지고, 자산 격차를 견인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반복 횟단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개인이 지난 서로 다른 자산의 구성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이 생애 기간 축적하는 자산의 수준, 그리고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2007년 당시 19~34세 청년의 자산 구성 유형이 2023년 자산 구성 유형으로 이행한 경로를 보면, 〈집단 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 집단은 2023년에 이르러 총자산의 절대적 금액 수준이 다른 유형(프로파일)보다 크게 높았다.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형성 초기 생활 영역 부채를 지난 청년의 경우(2007년의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 이후 생애 기간 자산 축적에서 다른 유형(프로파일)의 청년에 비해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 형성 초기의 부채가 이후 자산 축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청년의 경우 자산 형성 초기에는 부채가 없었지만, 자산 형성 고착기(35~50세)에 이르러 가장 많은 부채를 지니게 되었다. 이들의 부채 증가

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는 총자산의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형성의 용도로 증가한 것으로, 이른바 빚을 내어 자산을 축적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자산 분포에 대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 결과, 자산 40백분위수에 대한 2023년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영향은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를 기준으로 <집단 2, 3, 4>의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2, 3, 4>의 프로파일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자산을 보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부채의 여부나 양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자산이 있다면 중하위층의 자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여·상속의 합산액 역시 자산 40백분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75백분위와 90백분위에서도 동일하였다. 아울러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는 자산 40백분위, 중하위층의 자산 상승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75백분위에 대해서도 유효하였다. 다만, 90백분위 분석 결과에서는 유효하지 않아 최상위층의 자산 수준은 부채의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 분포의 최상위층(자산 90백분위)에게는 <집단4: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의 영향만 유효하였다. 이는 부동산자산 형성을 위해 부채를 끌어 쓰는 자산 증식 행위가 자산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여건은 자산 형성 초기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의 추이 분석과 잠재 프로파일의 이행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6.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자산격차는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소득이나 저축 습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에 6장에서는 국가 단위의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던 인구구조(고령화·출산율), 거시경제 여건(1인당 GDP·실업률·금리)뿐 아니라 사회지출,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사적연금, 재산세 등 사회 및 재분배 정책, 그리고 주거 비용 및 주택소유율, 가계부채 등 자산 중 가장 중요한 주택소유에 관련된 요인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산 격차(지니계수), 상위 1%, 5%, 10% 및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을 포함하여, 총 자산 격차뿐 아니라 각 자산 계층에 주요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서 관련 변수의 자료를 모아 거시 수준(macro level)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모형은 고정모형효과를 사용하여 시간 및 국가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자산 격차의 자기상관 및 지속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연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성장률이나 금리보다 사회정책·노동시장·가계 재무구조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소득 지니계수나 주택가격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지출과 사적연금자산은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을 높이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재산세 역시 자산 지니계수를 낮추고 하위 계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상위층 자산 집중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반면 출산율 증가는 상위층 자산 집중을 높이고, 실업률과 가계부채 증가는 하위층 자산 축적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정책이 상위층 자산을 줄이기보다는 하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7. 결론과 정책 과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자산 형성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되,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산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등 취약 집단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생애주기 관점에 따른 자산 형성과 활용 궤적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기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기의 축적, 노년기의 활용이 생애주기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이전하는 사적 상속과 증여를 사회적 상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 넷째, 자산 격차의 젠더화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결혼과 별거, 이혼, 사별, 재혼의 혼인상태 궤적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저학력자나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기타 근로자, 실업자 등 자산 형성에 취약한 집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역량 (financial literacy)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한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아파트 중심 자산 형성 행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대출 정책은 자산 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진적 조세정책 설계와 운용이 결국 자산 격차 완화에 필요하다.

주요 용어: 자산 격차, 다차원적 요인, 생애주기 자산 형성, 사회정책 및 조세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충분한 자원과 자산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고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이 실재하는 사회적 여건을 지배하고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voux, N., 2025, p.10)¹⁾”

자산(wealth)은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혼이나 실업, 장애 발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며, 은퇴 이후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과 함께 개인들의 삶에 있어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을 지탱하는 기제이다(Zucman, 2019, p.112; Rodems &
Pfeffer, 2021). 2022년 급증한 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총자산과 부채
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
액도 증가해왔다([부그림 1-1] 참조). 소비자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
2.3%에 비해 자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6.8%, 부채는 7.0%, 순자산액은
6.8%로 지난 15년 동안 자산액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부
표 1-1> 참조).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비경상적인 사건을 제
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출을 초과하는 소득을 저축하여 자산을 축적하면서
소득에 뒤따른다(Ando & Modigliani, 1963). 한편, 소득 격차는 장기

1) 원문은 “Only those with sufficient resources and assets can envision shaping their future, thereby gaining mastery over social settings that define their reality and impact the lives of others”이다.

적으로 자산 격차를 견인한다(정다운 외, 2019; De Nardi & Fella, 2017). 자산 격차는 자산소득을 통해 소득 격차로 전이되기도 한다(이우진, 2018, 김성아 외, 2021). 이 과정에서 저축 및 부채 형성과 활용 전략이 역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Saez & Zucman, 2016; Killewald, Pfeffer, & Schachner, 2017).

또한 자산 격차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정해식, 김성아, 2019). 현재의 불평등 혹은 격차는 기회의 불평등 혹은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의 불평등 혹은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피케티가 2013년 발간한 「21세기 자본」에서 조세데이터 등을 이용한 자산 집중(wealth concentration) 현상의 장기 추세를 밝혀낸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현대 자산 격차의 수준이 세계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연구가 다수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서베이자료와 조세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자산 격차의 장기 추세를 추정한 연구들에서 전반적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현상이 확인되었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Piketty, 2014; Saez & Zucman, 2016; Piketty et al., 2019; 김낙년, 2016; 김낙년, 2017).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 결과, “소득 불평등과 복지국가 레짐이 사회적 자산 불평등에 대한 좋은 예측 변인은 아니(both income inequality in society and its welfare state regime are poor predictors of societal wealth inequality”라는 발견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불평등 연구와 함께 자산 불평등, 혹은 자산 격차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Semyonov & Lewin-Epstein, 2013, p.1136)([부그림 1-2] 참조).

또한 소득 지니계수가 0.3~0.4 범위인 데에 비해 자산 지니계수는 0.5

를 넘는다. 부채의 지니계수는 0.7을 초과하여 소득으로 읽어낼 수 없는 불평등 양상이 자산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부그림 1-3] 참조). 국내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을 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과 가구 총자산의 상관계수는 0.4334 정도이고, 소득과 자산 간 상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재산소득을 처분가능소득에서 감한 상관계수는 2023년 0.1998로 줄어든다. 이는 1980년대 소득과 자산 간 상관계수가 0.5 정도였고, 재산소득을 감한 소득과 자산 간 상관계수가 0.26으로 감소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이다(Keister & Moller, 2000, p.65). 같은 자료를 이용해 소득과 총자산 10분위 간 교차행렬을 보면, 소득과 총자산 분위가 동일한 집단은 50.0%인데, 자산분위가 소득분위보다 높은 집단은 23.9%, 소득분위가 자산분위보다 높은 집단은 26.1%로 소득과 자산에 의한 지위의 불일치성이 상당하다. 즉, 소득과 자산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질적인 경로를 통해 축적되며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OECD(2013)의 정의에 따르면, ‘부(wealth)는 자산(asset)과 부채(liability) 등의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human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등은 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한 상태이고, 격차는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이다.²⁾ 지니계수 등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불평등은 이상치(outlier)에 취약 할 수 있는 한편, Piketty(2014)의 발견 이후 자산 집중 혹은 격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자산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총자산(gross asset/wealth)과 순자산(net asset/wealth)의 개념을 주로 활용한다. 국내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총자산은 OECD 지침을 준용해 부동산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4.3.9. 검색)

자산을 포함한 실물자산과 저축,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을 합한 부채를 감하여 순자산을 산출하고 있다 (통계청, 2022.3., p.15; Chancel et al, 2022). 자료 이용가능성과 연구목적에 따라 연금 자산(pension wealth)을 포함하기도 하며, 자산소득(property/capital income)을 이용해 자산액을 추정하기도 한다(Saez & Zucman, 2016). 그런데 자산 격차를 측정하는 데에 순자산의 단일 지표를 활용할 경우,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 불평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부그림 1-3] 참조).

자산 격차는 자산분위(quantile), 순위(rank), 상위 10% 고자산가 내지 상위 1% 초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Piketty, 2014; Piketty, et al., 2019; Zucman, 2019). 자산의 불평등한 분포는 지니계수를 이용하기도 한다(De Nardi, 2004; De Nardi & Fella, 2017; Keister & Moller, 2000; Pfeffer & Waitkus, 2021 등). 여전히 자산 격차를 들여다보는 데에 있어 자산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며, 서베이나 행정데이터, 조세데이터 등의 분석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제약되어 있다.

더욱이 자산 격차에 대한 주요 학술문헌은 전반적인 실태 및 추세에 주목하거나(Piketty, 2014; Saez & Zucman, 2016; Piketty et al., 2019; 김낙년, 2016; 김낙년, 2017), 개별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De Nardi & Fella, 2017; Killewald, Pfeffer, & Schachner, 2017; Piketty, Yang, & Zucman, 2019; Coibion, Gorodnichenko, Kudlyak, & Mondragon, 2020; Pfeffer & Waitkus, 2021; 이철승, 정준호, 2018; 전병유, 2023 등). 혹은 자산 격차를 다루는 지리적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거나(Chancel, Piketty, Saez, & Zuzman, 2022), 국내에서는 조세 제도 및 부채 등 특정 영역에 주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고 있다(정다운 외, 2019; 김영일, 2019). 정해식 외(2019)는 자산 격차를 청년과 중고령자,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심층분석하고 세대 간 이전과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였으나, 자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종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자산 격차 실태와 이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밝혀내어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자산 격차 현황과 요인을 종합 분석하고, 둘째, 자산 격차의 보편성과 한국 자산 격차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격차의 영향요인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격차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자산 격차의 실태와 다(多)요인을 조망하는 데에 있어 국가 단위 분석과 국내 실증분석을 입체적으로 시도하여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표 1-1>과 같이 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우선 보고서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우선 격차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량(flow)의 소득 대비 저량(stock)으로서 자산의 개념을 검토하고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며 자산 격차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탐색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종합 검토한다.

보고서 제3장에서는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해 국내외 자산 격차 실태

를 분석한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 추이를 분석하여 자산 격차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와 국내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자산 격차의 추이와 자산 구성의 변화, 그리고 자산 계층별 특성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다.

보고서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한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24년 반복 횡단면(repeated cross-sectional)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와 개인 단위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반복 횡단면 자료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국내 자산 격차 요인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국가 단위 자산 격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패널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분석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여,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자산 및 자산 격차 개념과 측정 방법, 자산 격차 실태와 요인을 종합한다. 둘째, 마이크로데이터 및 2차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국내외 자산 격차 실태 및 추세를 확인한다. 국내 자료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을 주된 분석자료로 이용하고, 국가 단위 분석을 위해서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룩셈부르크자산조사(Luxembourg Wealth Study),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 설계 및 결과 해석, 정책 과제 도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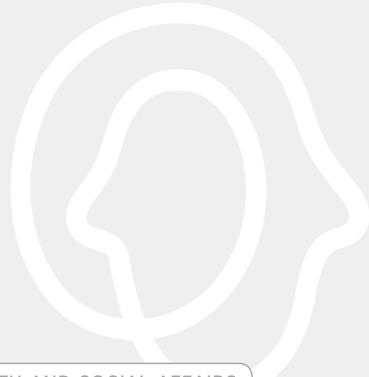
〈표 1-1〉 연구 구성

구분	주요 내용/분석자료
제2장 이론적 배경	개념 및 측정, 관련 요인 탐색
제3장 자산 격차 실태와 추이	2차 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4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5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한국복지패널 마이크로데이터
제6장 OECD 국가의 패널분석	국가별 시계열 패널데이터
제7장 결론과 정책 과제	주요 결과, 정책 방향 및 과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격차의 개념과 측정

제2절 자산 격차의 개념과 측정

제3절 자산 격차 요인과 영향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격차의 개념과 측정

불균등한 분포를 일컫는 개념으로 불평등(inequality), 양극화(polarization), 격차(disparity) 등이 주로 언급된다. 이들 용어는 ‘심화’, ‘확대’ 등의 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와 함께 언급되면서 해소해야 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현실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단과 정책적 대응은 다를 수 있다(신광영, 2016, p.481). 즉,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불평등, 양극화, 격차 등의 서로 다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후 ‘자산 격차 현황과 요인’ 분석에 앞서 불평등, 양극화 등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격차’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주로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되, 자산의 특성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의 개념과 이들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 현상, 정책적 함의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평등**은 사회 내 자원이나 기회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 **양극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두 개의 극단적인 집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며, 특정 지표나 분야에서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여 특정 집단 간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격차**는 두 개 이상의 집단 간 차이나 거리를 의미하며, 특정 지표나 상태에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격차의 개념은 다음의 측정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다루어보자.

불평등은 대체로 경제적 불평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재화의 크기가 다름을 의미한다(신광영, 2016, p.482). 물질적 재화(예컨대, 소득)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집단 간 소득의 평균을 비교하거나 소득이 얼마나 펴져있는지 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신광영(2016)에서는 ‘격차(disparity)’가 집단 간 평균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빈부격차를 부유층(상위 소득집단)과 빈곤층(하위 소득집단) 간의 평균 소득 차이로 설명한다. ‘양극화(polarization)’은 집단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집단이 이분화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중간 소득 계층이 감소하면서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으로 소득 집단이 양분화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를 김윤태 외 (2022, pp.23-30)에서 제시한 4개 사례의 수치를 기반으로 측정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2의 경우 Lorenz(1905, p.218)에 제시된 수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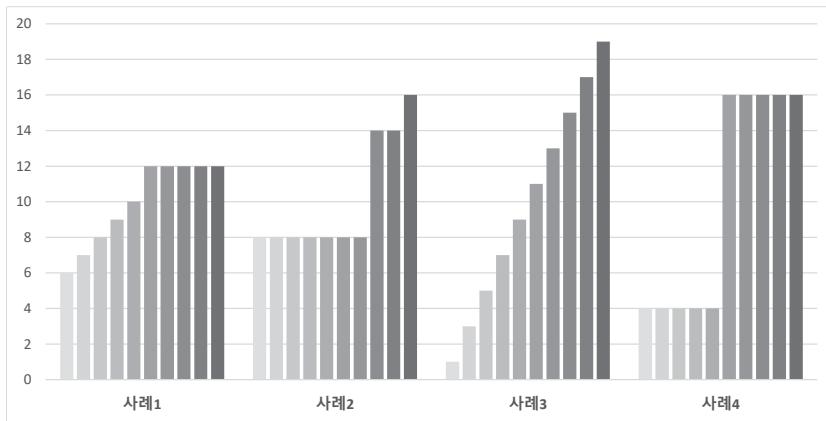
〈표 2-1〉 가상의 소득 분포 시나리오

구분	A	B	C	D	E	F	G	H	I	J
사례1	6	7	8	9	10	12	12	12	12	12
사례2	8	8	8	8	8	8	8	14	14	16
사례3	1	3	5	7	9	11	13	15	17	19
사례4	4	4	4	4	4	16	16	16	16	16

위 4개의 사례는 100달러를 10명이 나누어 가진다는 가정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례별 막대그래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직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사례4의 경우 이분화되어 양극화된 모습이라면, 사례3의 경우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편

적으로 막대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사례들에 대해 측정지표를 기반으로 좀 더 정교하게 살펴보자.

【그림 2-1】 사례별 막대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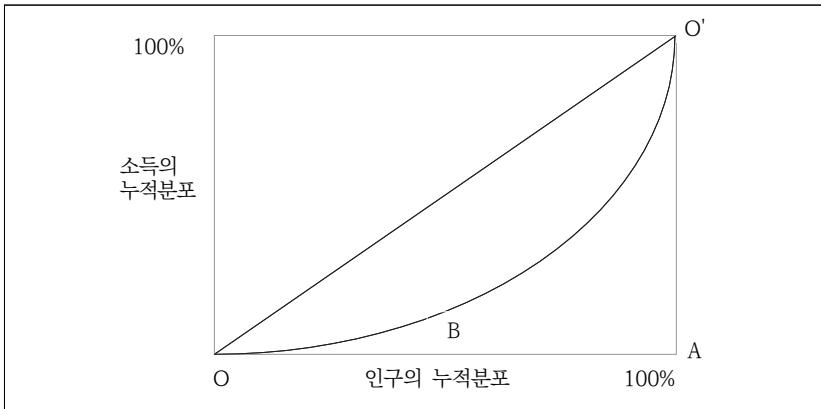


주: 위의 사례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평등은 소득의 크기가 집단별로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간단한 기술통계로 다루어지는 평균에서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variance)과 Gini(1912)가 제시한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기술통계의 주요 통곗값으로 활용되는 분산은 한곗값이 부재 하다는 점,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평 등 지표로는 활용되지 않는 반면, 지니계수는 측정단위에 무관하고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윤태 외, 2022, p.24).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 서 절대적 평등선(OO')과 로렌츠 곡선 간 차이의 비율, 즉 $\frac{OAO'}{OBO'}$ 로 계 산되는데(빈곤·불평등연구실, 2024, p.86),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 등) 사이의 값을 가진다.

2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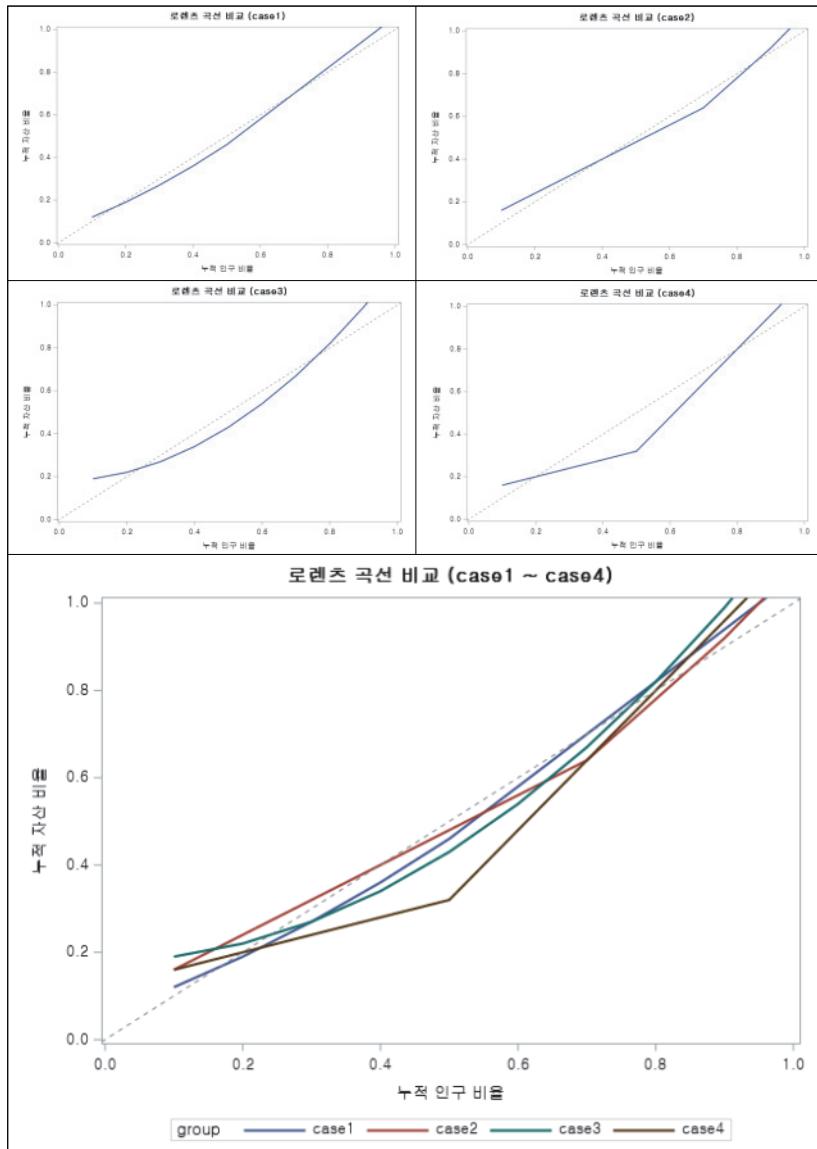
[그림 2-2] 로렌츠 곡선



출처: “2024년 빈곤통계연보,” 빈곤통계연보, 2024, p.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 특히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X축은 인구의 누적분포를 나타내며, Y축은 소득 혹은 자산의 누적분포를 나타낸다. 45도선(대각선)보다 아래로 휘어질수록 불평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한다. 위의 4가지 사례에 대해 로렌츠 곡선을 나타내면 [그림 2-3]과 같다. 개별 그래프를 보면 먼저 사례1은 45도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보이는 점에서 불평등 정도가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례2의 경우 경미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례3과 사례4는 뚜렷한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사례4의 경우 아래로 꺾인 구간이 존재하는데 일부 구간에서 소득 혹은 자산이 정체되어 있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계층의 일부에 소득 혹은 자산이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로렌츠 곡선을 통해 어떤 사례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지는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림 2-3] 사례별 로렌츠 곡선



주: <표 2-1>의 사례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Palma 비율은 칠레의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팔마(José Gabriel Palma)가 제안한 지표이다. Palma(2011)는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중간 50~90% 집단의 양편에 위치하는 상위 10%와 하위 40% 사이의 점유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text{Palma 비율} = \frac{\text{상위 10% 점유율}}{\text{하위 40% 점유율}}$$

Palma 비율과 비슷한 지표로서 분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점유율과 분위수배율이 있다. 소득(혹은 자산)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의 점유율 및 경곗값을 기준으로 분위의 배율을 산출하여 활용된다(빈곤·불평등연구실, 2024, pp.85-86). 소득점유율에는 5분위에 따른 상위 및 하위 20% 점유율 혹은 팔마비율에서 활용하는 하위 40% 점유율 등이 있다. 점유율을 활용한 지표로는 5분위 소득배율 등이 있으며, 분위수배율에는 P90/P10, P90/P50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5분위 소득배율(S80/S20)은 상위 20% 점유율/하위 20% 점유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상위계층과 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불평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text{분위 소득배율}(S80/S20) = \frac{\text{상위 20% 점유율}}{\text{하위 20% 점유율}}$$

P90/P10와 P90/P50는 분위수배율로 P90/P10는 상위 10% 경곗값/하위 10% 경곗값을, P90/P50는 상위 10% 경곗값/중위값을 의미한다.

$$P90/P10 = \frac{\text{상위 10% 경계 값}}{\text{하위 10% 경계 값}}$$

$$P90/P50 = \frac{\text{상위 10% 경계 값}}{\text{중위 값}}$$

여기서 P90/P10는 전체 소득을 1~100으로 보았을 때 90번째 소득 대비 10번째 소득을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극단적인 소득 격차 혹은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P90/P50는 소득 상위 10% 경계값과 중위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중산층과 상위층 간 격차(차이)를 측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반대로 P10/P50은 소득 하위 계층과 중위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중위소득과 소득 하위 10% 경계값 간 격차(차이), 즉 소득 하위 계층이 중위소득보다 얼마나 적은지를 측정하게 되어 다른 지표와 다르게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4개의 간단한 사례별로 각각의 지표 값을 비교하면서 양극화, 불평등, 격차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계수를 살펴보면 사례1의 경우 0.224로 다른 사례에 비해 작다. 이는 다른 사례에 비해 수치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사례2가 중간 정도의 불평등, 사례4는 두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나타내는 사례로 분산계수 또한 다른 사례에 비해 가장 크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나타냄)를 살펴보면 사례1 < 사례2 < 사례4 < 사례3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팔마비율 역시 지니계수의 추세와 유사하다. 점진적 증가 구조인 사례3이 분산계수가 가장 컸던 사례4보다 더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 40% 점유율은 사례3과 사례4가 가장 적고, 상위 20% 점유율은 사례 3이 가장 크다. 점유율을 활용한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총합의 비율인 80/S20

값을 비교해보면 사례1 < 사례2 < 사례4 < 사례3 순으로 나타난다. 극단 값을 비교한 P90/P10 값을 비교해보면 사례1 = 사례2 < 사례4 < 사례3로 사례3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난다. 중위값과 비교한 P90/P50, P10/P50를 보면 소득 상위층과 중위소득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례로 사례2, 소득 하위층과 중위소득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례는 사례3으로 보인다.

〈표 2-2〉 사례별 불평등 및 격차 지표 값

사례	분산 계수	지니 계수	팔마 비율	하위 40% 점유율	상위 20% 점유율	S80 /S20	P90 /P10	P90 /P50
사례1	0.224	0.120	0.400	30.0	24.0	1.846	1.739	1.091
사례2	0.310	0.144	0.500	32.0	30.0	1.875	1.775	1.775
사례3	0.574	0.330	1.188	16.0	36.0	9.000	6.143	1.720
사례4	0.600	0.300	1.000	16.0	32.0	4.000	4.000	1.600

주: 〈표 2-1〉의 사례를 토대로 엑셀을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분위수 값은 'PERCENTILE.INC' 함수 활용함. 볼드체는 지표에 따라 수치가 가장 큰 경우임.

출처: 연구진 계산.

종합하면, 사례1은 저층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상위층은 비교적 균등하여 상대적으로 평등한 상태이다. 사례2는 중하층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균등하여 불평등은 높지 않지만, 상위로 갈수록 급증하여 최상위층의 점유율을 볼 수 있는 P90/P50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례3은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층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고층까지 점증하지만, 최저층과 최고층 간 거리가 가장 멀어 격차 수준이 최대로 나타난다. 사례4의 경우 양극단이 단절된 구조, 즉 완전 양극화 구조로 볼 수 있다.

〈표 2-3〉 사례별 구조적 특성

	사례										구조적 특성
	사례1	6	7	8	9	10	12	12	12	12	
사례2	8	8	8	8	8	8	8	14	14	16	점진적 증가 후 상층 균등
사례3	1	3	5	7	9	11	13	15	17	19	중하층 균등 후 급증
사례4	4	4	4	4	4	16	16	16	16	16	완만한 증가, 그러나 저층과 상층 간 격차 최대
											양극화

출처: 연구진 정리.

격차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지표를 정리해보면, 먼저 S80/S20 비율은 총량을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를 직접 비교하는 점에서 계층 간 격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P90/P10 비율은 상위 10% 경계값과 하위 10% 경계값, 즉 극단적인 분위수 간의 비교를 통해 분포의 양극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앞의 사례별 측정지표 값에서도 막대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격차가 나타났던 사례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포착하는 지표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간 계층을 기준으로 양극단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P10/P50, P90/P50 또한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전체 소득 분포의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탁월할 수 있지만 극단 격차에는 덜 민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즉, 지표에 따라 포착할 수 있는 정보, 함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지표들을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격차는 상대적 거리와 같은 계량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차이가 지속되어 구조화되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중간층이 약화되어 양극단으로 분리되는 양극화를 야기시키고 특정 계층에 집중된 자원으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등 순환적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 발생에 앞서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격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며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자산 격차의 개념과 측정

1. 자산의 개념: 총자산과 순자산

가구의 부(wealth) 혹은 자산은 소득과 함께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강신욱 외, 2016). 울프(Wolff, 2002, p.260)는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부(market wealth)와 연금 및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확대된 부(augmented wealth)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울프의 연구는 개인의 부(private wealth)를 사회 안전망을 포함하는 사회적 부(social wealth)와 구별함으로써 (Wolff, 2006), 부의 개념을 단순한 자산의 합계로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보장 요소를 고려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사자료에서 산정된 자산은 보통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다(OECD, 2013b). 우리나라 통계청의 가구소득 및 자산의 대표적인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항목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금융자산에는 적립·예치식 저축과 같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유동성 있는 자산과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것돈 등 기타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이 포함된다. 실물자산은 거주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증도금 등 부동산 관련 과 자동차, 사업용 장비 및 재고자산, 동물과 식물,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중품, 고가 내구재(현재 시가 300만 원 이상), 차량(오토바이, 보트 등), 권리금, 기타(지적재산권 등) 등 기타 실물자산이 포함된다. 실물자산은 비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보존 가치가 있거나 증식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4, p.78).

〈표 2-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 항목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세부항목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당좌수표 포함)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저축성 보험 또는 만기에 일정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저축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낸 것돈
		전·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세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계약금·중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 아파트, 주거용 건물(연립, 다세대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빌딩 등), 토지, 해외부동산, 기타 부동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주택, 주택 이외 부동산, 예금·적금·보험·펀드·채권, 기타(전세권, 자동차 등)
			신용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너스통장 포함
			신용카드 관련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외상 및 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상, 할부, 카드 선포인트 할부 등 미결제 잔액(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임대보증금	기타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겟돈을 탄 후 낼 금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
			거주주택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주택의 일부를 임대
			거주주택 이외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주택 이외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임대

순자산 = 자산 - 부채

출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통계청, 2024, 금융감독원·한국은행, p.78.

Arrondel et al.(2016)에서는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른 분포의 특성 및 분배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총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중 거주주택 자산은 총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거주주택 외 기타 부동산자산은 투자 및 여가 목적으로 마련하거나 상속받는 자산의 특성상 고자산 계층이 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산은 자산 상위계층에 집중된 특징을 가진다. 금융자산은 안정 금융자산(safe financial assets)과 위험 금융자산(risky financial asse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90%가 예금이나 보험, 사적연금과 같은 안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 혹은 자산 계층에 따라 보유한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주식과 펀드와 같은 위험 금융자산은 사업자산과 마찬가지로 보통 고자산 계층에서 주로 보유한다(Arrondel et al., 2016, pp.6-12).

〈표 2-5〉 Arrondel et al.(2016)의 자산 원천별 분배 특징

자산 원천	내용	분배 특징
거주주택 자산 (household main residence)	실제 보유하며 거주하는 부동산 자산	15개 유럽 국가의 총자산 중 51%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자산
기타 부동산 자산 (other real estate)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투자 및 여가 목적으로 마련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고자산 계층에서 주로 보유
사업자산 (self-employed businesses)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산 및 무형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	자산 상위 5%가 주로 보유하여 분배가 불균등함
안전 금융자산 (safe financial assets)	예금이나 보험, 사적연금 등	90% 이상이 보유하되 금액은 계층에 따라 상이
위험 금융자산 (risky financial assets)	주식, 펀드 등	고자산 계층에서 주로 보유

출처: "How do households allocate their assets? Stylized facts from the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Arrondel, L., Bartiloro, L., Fessler, P., Lindner, P., Mathä, T. Y., Rampazzi, C. ... & Vermeulen, P. (2016). 44th issue (June 2016)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pp.133-142의 내용을 연구진 정리.

자산을 변수로 활용하는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비금융자산)의 종합인 총자산의 개념과 함께 순자산의 개념을 활용한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등 금융부채와 거주주택 혹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임대하여 추후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을 포함한다(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4).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함으로써 가구와 개인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강신욱 외, 2016; 이태직, 2021). Pinkow(2012)는 부채를 자산의 총량을 요인으로 간주하고, 실물자산, 금융자산과 함께 부채를 고려하여 자산을 정의하였다. 한편, 부채는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혹은 교육이나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미래 소득을 창출하는 음의 자산(negative asset)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박세리, 김기승, 2023). 부모 세대로부터 상속이나 자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저 자산층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정지수, 유경원, 서은숙, 2017, pp.17-19). 즉, 자산을 형성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부채를 활용하는 계층화 행태가 존재한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거주주택 등 부채를 활용해 확보한 총자산 수준을 누린다는 점에서 총자산을 병행할 수 있다.

2. 자산 격차의 측정

가. 측정 단위: 가구와 개인

소득과 자산은 가구에서 가구원이 공유하므로 가구 단위 데이터를 수집한다(OECD, 2013a, p.14). 가구 단위 자산을 분석할 때는 균등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가구가 주어진 생활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동일한 물질적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보다 더 높은 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는 주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의해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및 자산의 추가분과 가구규모가 선형관계는 아니다 (Buhmann et al, 1988; Lanjouw & Ravallion, 1995; OECD, 2013). ‘균등화’는 모든 가구의 경제력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IFS, 2025).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을 균등화하는 합의된 방식은 없다(OECD, 2013a, p.15).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특성에 주목할 때는 균등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반면, 자산을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과 가계의 경제적 웰빙 증진에 기여하는 소득원으로 간주한다면(OECD, 2013a, p.169), 소득과 마찬가지로 균등화할 수 있다. Piketty, Yang, & Zucman(2019)은 가구 자산을 가구 내 성인 수로 나눈 성인 1인당 자산액을 활용한다. 가구규모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 방식을 준용하기도 한다(Pfeffer & Waitkus, 2021).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남성 가구주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이 해체되고 소득보장정책이나 자산 등 경제력의 주체가 개인화되고 있다. 2025년 복지부 예산 총액은 125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24.12.10.). 그중 예산 규모가 상당한 단일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공적연금 44조 원, 기초연금이 21.8조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8.5조 원, 아동수당 2조 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5.1.).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국

민연금 가입과 수급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 기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는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수급은 개인에게 개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역시 가구 단위로 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별도 가구를 지원하는 등 개인화되는 추세이다. 아동수당은 가구 내 8세 미만인 아동의 수를 헤아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조사 단위가 아동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조세 부담은 명의자 개인 기준으로 부과한다. 헌법재판소(2008.11.13.)는 2006헌바 112 결정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간주한 것이다(박민, 안경봉, 2008).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은 가구를 통해 가구원이 공유하므로 가구 단위 분석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생산과 소비 주체가 개인화되는 경향에 따라 개인 단위 분석도 필요하다.

나. 측정 지표: 점유율과 분위

격차를 측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백분위수 배율은 연속변수의 분포에서 두 점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자산의 전체 분포는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일 수 있지만, 자산의 특성상 분포의 꼬리, 즉 자산보유액이 없어 실측값이 0일 경우 백분위수는 불안정할 수 있다 (OECD, 2013b, p.167). 격차를 측정하는 데에는 P90/P20 비율과 같은 지표가 적합할 수 있다(OECD, 2013b, p.167). <표 2-1>의 사례에서

P90/P10 비율이나 P80/P20 비율 등은 하위층과 상위층 간 격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초고자산가에 집중되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차는 1%, 5% 또는 10%의 상위층이 자산의 점유율을 활용할 수 있다(OECD, 2013b, p.168). 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위층의 점유율, 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하위 40% 집단의 점유율과 비교할 수 있다(Palma, 2011). 다만, 점유율은 측정 단위가 국가 등 집합적일 때 산출할 수 있다. 가구 혹은 개인 단위의 격차를 측정하는 데에는 전체 분포에서 위치하는 지점, 즉 분위가 적절할 수 있다.

지니계수와 같은 불평등지수를 자산에 적용할 수도 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전체 면적과 비교한 것으로, 완전평등은 0을, 완전불평등은 1의 값을 가진다(OECD, 2013b, p.170). 중위수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항상 증가하고, 중위수 미만의 자산을 가진 사람의 재산이 감소하면 지니계수도 항상 증가하는 구조이다. 지니계수 증가의 정도는 중위수 재산과 재산이 변화한 가구의 재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재산 변화 전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OECD, 2013b, p.170). 그러나 저층과 고층 간 거리, 즉 격차를 드러내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제3절 자산 격차 요인과 영향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이다. 모딜리아니는 생애주기 가설에서

전 생애에서 항상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성인기 입직 이후 경력을 쌓으며 소득이 증가하는 일반적 행태에 주목했다. 일정 생애주기에 이르러 소득이 항상소비수준을 초과하는 뜻을 자산으로 축적하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소득의 초과분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50~60대에 최고 자산을 형성한 이후 노후소득으로 자산 활용하며 점차 감소한다. 30대 후반에는 부채를 활용해 특히 거주주택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Kellewad, Pfeffer, & Schachner, 2017, pp.393-398; McKernan, Ratcliffe, Steuerle, & Zhang, 2014; 김성아 외, 2023; 전병유, 2023). 이 가설에 따르면 성인기 자산은 소득의 역U자 형태를 뒤따르는 역U자의 형태를 보인다.

한편, 부채는 주거 독립을 하고 자가 마련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고점을 보이고 상환하면서 감소하는 역U자 양상을 보인다(김성아 외,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서 2021년의 기간 동안 20대 초반의 전월세보증금 비중이 35%에서 61%, 20대 후반은 33%에서 53%, 30대 초반은 25%에서 40%로 동일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반면, 30대 후반에 전월세보증금 비중은 같은 기간 18~19%를 유지한다. 30대 후반의 실물자산 비중은 2011년 85%에서 2021년 97%로 증가해 전세 및 월세를 이용한 주거 독립 시기가 앞당겨지면서도 30대 후반의 생애시기에 자가 매매를 선택하는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전병유, 2023, pp.20-24). 20~30대는 부채를 이용해 전월세보증금 및 자가 매매 등의 방식으로 실물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여 저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상대적으로 순상속증여액이 높다. 실물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를 상환해 가는 50~60대 초반까지 저축의 비중이 점증하고, 60대 후반 이상 연령대에서는 자본이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전병유, 2023, pp.23-24).

젊은 세대는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정다운, 강동익,

최승문, 2019) 상속이나 증여, 혹은 부채를 이용해 자산을 축적해간다. 한국에서는 자녀의 주거 독립이나 결혼 등의 생애 사건이 발생하는 자녀를 둔 50~60대인 부모 세대가 20~30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주거 독립을 지원한다(전병유, 2023, pp.14-17).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자산 불평등에 대한 현 거주주택 자산의 기여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점차 다수 인구집단이 거주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으로 보인다(이성재, 이우진, 2017, pp.85-87).

두 번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이다.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순자산이 높고 빈곤하지 않을 확률 역시 높다(Ruel & Hauser, 2013; Kellewad, Pfeffer, & Schachner, 2017, pp.393-398; Kuypers & Marx, 2021). 22개 유럽 국가의 2017년 가계재정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23.9% 더 많은 평균 자산을, 18.7% 더 많은 중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Kukk, Meriküll, & Rõõm, 2023, p.305). 에스토니아 행정데이터를 분석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45%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데(Meriküll, Kukk, & Rõõm, 2021, p.512), 남성은 주로 사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eriküll, Kukk, & Rõõm, 2021, pp.522-524). 독일 사회경제패널자료(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SOEP)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자산 격차는 평균 3만 유로, 결혼한 부부의 자산 격차는 평균 5만 유로 정도이다(Sierminska, Frick, & Grabka, 2010, p.682).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회피 경향이 높을 가능성성이 있고, 이는 수익 투자로 이어져 퇴직 시점에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Neelakantan & Chang, 2010).

결혼과 이혼, 재혼 등의 혼인상태가 자산 축적과 격차의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02, 2007, 2012, 2017년 독일 사회경제패널자료(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SOEP)를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76%의 자산이 감소하였다 (Kapelle & Baxter, 2021, p.253). 2003~2013년 이스라엘 행정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서 여성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이혼 후 소득이 감소하는데, 남성은 소득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Endeweld, Herbst-Debby, & Kaplan, 2022, [그림 1]과 [그림 2]). 소득의 초과 분으로 자산을 축적한다면, 이혼한 여성의 자산이 회복할 확률은 낮다.

교육수준도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도 높다(Killewald, Pfeffer, & Schachner, 2017, pp.393-398; 정다운, 강동익, 최승문, 2019, pp.50-50). 유럽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식이나 펀드 등 위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확률이 높은데(Arrondel et al., 2016; pp.151-153, pp.159-161), 이는 관련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경제활동과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2012년 59%에서 2019년 64%로 증가한 한편, 사업소득 기여도는 2012년 32%에서 2019년 23%로 높은 편이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재산소득의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2년 6%에서 2019년 9%로 늘었다(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p.69). 다만, 근로 및 사업소득만으로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De Nardi, 2004; 정다운, 강동익, 최승문, 2019), 반대급부로 세대 간 상속이나 증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거주지역 등의 인적 자원 및 거주지역 등의 환경적 요인 역시 자산 격차에 주효하게 작동한다. 미국에서는 신용 접근성 혹은 신용 시장의 비대칭적 정보가 지역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가구 부채 규모에 차별적으로 영

향을 미쳐, 불평등 정도 높은 지역에서 소득 순위가 높은 가구보다 낮은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가 높게 나타났다(Coiboin et al., 2020, p.2953, 그림7). 또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등 유형의 실물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이 지역 단위 불평등과 소득 순위 간 상호작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iboin et al., 2020, pp.2956-2957). 유럽에서는 도시 중심 고가 주택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택 자산을 중심으로 청년의 자산 격차가 심화되었다(Dewilde & Flynn, 2021, pp.587-588).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소득 및 자산의 계층 요인이다. 고소득 가구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확률과 금액이 높고 재산이 없을 확률이 낮은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산 수준이 높고 재산이 없을 확률이 낮다 (Morelli, Nolan, Palomino, & Van Kerm, 2021, p.537). 소득 및 자산 계층은 자산 격차와 연동되는 현상일 수 있지만, 세대 간 상속이나 증여로 나타나는 강화 요인이기도 하다.

2. 가구 요인

앞서 생애주기 가설이나 계층 요인 등에서 논의한 것처럼 가구를 통한 상속이나 증여 등 세대 간 이전은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자본수익률이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과거에 축적된 자산의) 상속이 (현재 축적되는 자산인) 저축을 압도한다(Piketty, 2014, p.452).” “…젊은 사람들은… 상속이 그들의 삶과 친척, 친구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했다(Piketty, 2014, p.456).” 생애 이벤트로서 결혼이

나 이사와 같은 생애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모나 친지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태는 미국이나 스웨덴뿐만 아니라(De Nardi, 2004), 한국에서도 나타난다(전병유, 2023, pp.14-17).

유럽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 2013년 유럽 가구재정소비조사(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HFCS)를 분석한 결과, 상속을 받은 경우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독일은 8%, 그리스는 20% 높게 나타났다(Arrondel et al., 2016, pp.148-150). 결국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은 사회이동성을 경직화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 가구 요인은 부모이다. 부모의 자산과 부동산 가치가 교육수준, 인지 역량의 인적 자본과 직업적 성취 등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되어 자녀의 순자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Killewald, Pfeffer, & Schachner, 2017, pp.390-392; De Nardi, 2004, p.744).

3. 자산을 구성하는 원천

자산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금융자산 혹은 저축이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 계층별로 상위 1~5% 고자산가는 상대적으로 자본 이득의 비중이 높고, 하위 40%까지는 상대적으로 저축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전병유, 2023, pp.25-26).

부동산 자산 역시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거주주택 부동산보다 자산 지니계수를 증가시킨다(이성재, 이우진, 2017, pp.81-83;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p.77). 2012~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산 지니계수 기여도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가장 크고, 거주주택, 금융재산의 순서로 나타

났다(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p.77).

한편, 부채는 생애주기 가설과 항상소득 가설에 의해 소비 평탄화 용도로 활용된다(이동엽, 서상원, 2023, p.2). 주택 등 자산매입을 위한 부채는 자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계부채의 증가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이동엽, 서상원, 2023). 부동산 자산의 분위가 높을 수록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높은데(김영일, 2019, p.28),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는 행태를 추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자산소득이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성재, 이우진, 2017; 이우진, 2018;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소득 불평등에 대해 노동소득 기여도는 -35.3%인 데 반해, 자산소득 기여도는 79.4%에 달한다(이성재, 이우진, 2017). 소득불평등에 대한 최근 재산소득의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2년 6%에서 2019년 9%에 이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p.69).

4. 정책 요인

정책 요인으로는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금융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 대출 혹은 신용대출이 정책을 통해 확대되었다(김성아 외, 2023). 대출 가액이 높고 금리가 낮으면, 이자부담이 낮아져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려는 행태가 강화된다. 주택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한 대출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한다(이동엽, 서상원, 2023).

한편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저축이 적을수록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 저축은 자산 격차 감소에 상대적으로 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전병유, 2023, p.9, pp.27-28). 부동산 자산 등 실물자산 외 총자산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저축 또는 금융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정책 노력은 자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조세회피 행태를 강화하는 정책 역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86년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을 도입한 부작용으로 조세회피 행태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 보이지 않는 부(wealth)를 축적하며 실질적 자산 격차가 증가하였다(Saez & Zucman, 2016). 합리적 조사제도 설계 역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5. 외부 거시 요인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거시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신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Deaton(2013)은 “현대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오늘날 세계적 불평등을 만들어냈다(Today's global inequality was ... created by the success of modern economic growth)”고 보았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뒤쳐진다. 성공한 누군가가 가진 자본은 그의 다음번 성공을 가능케 한다. 뒤쳐진 누군가는 자본이 없어 성장 속도가 더디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그친다. 두 집단 간 간극이 점차 커지는 것이다. Deaton(2013)은 어느 단계에 이른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쿠츠네츠 가설이 현실에서는 부정된다고 보았다. 실제 미국에서는 1920년대 대공황 이후 1980년까지 불평등이 감소하였으나,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최근까지 불평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Hubmer, Krusell, & Smith, 2021, p.401). 역진적 조세 제도, 소득 불평등, 계층별 자산 수익률 격차, 상위층의 자본 소득 증가로 소득의 중심점 변동, 금융위기와 자산 가격 하락 시 고위층이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는 등의 요인이 결합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기 역시 자산 격차를 강화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20~40대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Dewilde & Flynn, 2021). 1920년대부터 장기 시계열로 보는 자산 불평등은 1980년대부터 세계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추세를 보인다(Piketty, 2014).

한편, 복지국가,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자산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Piketty, Yang, & Zucman(2019)가 국민계정, 서베이자료, 조세데이터를 이용해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간 중국의 자산 불평등 추세를 살펴본 결과, 최근 자산 불평등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도농 간 격차가 심해졌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이는 자본의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 of capital) 정도가 많은 중국의 혼합경제구조(mixed economy structure)가 과세와 공적이전(tax-and-transfer system)에 의한 복지국가에 비해 불평등 완화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Piketty, Yang, & Zucman, 2019, p.2493)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주의도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된 선거로 측정하는 민주주의가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Scheve & Stasavage, 2017, pp.459-462). 그러나 부유한 엘리트에 의해 민주주의 절차가 장악된다면 계층 친화적 정책결정이 실현될 우려가 있다(Scheve & Stasavage, 2017, pp.464-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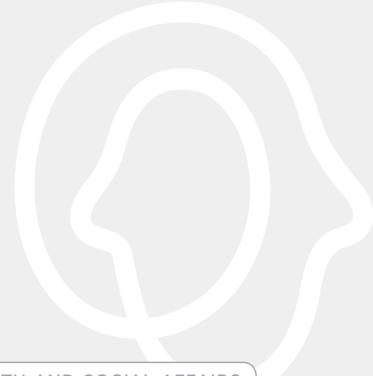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에 따른 복지태도와 연관된다. 유럽에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으로 보는 자가 보유 가능성이 낮을수록 재분배 혹은 개입주의적

주택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Ansell & Cansunar, 2021, p.603). 영국의 2010~2019년 투표 양상을 보면, 주택소유자(homeowners)의 재분배 및 개입주의적 주택 정책 선호도는 평이한 반면, 임차인은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클수록 재분배 및 개입주의적 주택 정책 선호도 높았다(Ansell & Cansunar, 2021, p.607).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소유자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여 재분배를 반대하는 반면,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재분배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개입주의적 주택 정책을 시행하면 주택소유자는 기존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우려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차인은 임대료 하락에 대한 기대로 정책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에서는 2010~2019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주택소유자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고, 특히 하위 10%의 저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자가 이탈하는 등 보수당 지지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제1절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 추이

제2절 세계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제3절 한국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제3장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제1절 소득과 자산의 상관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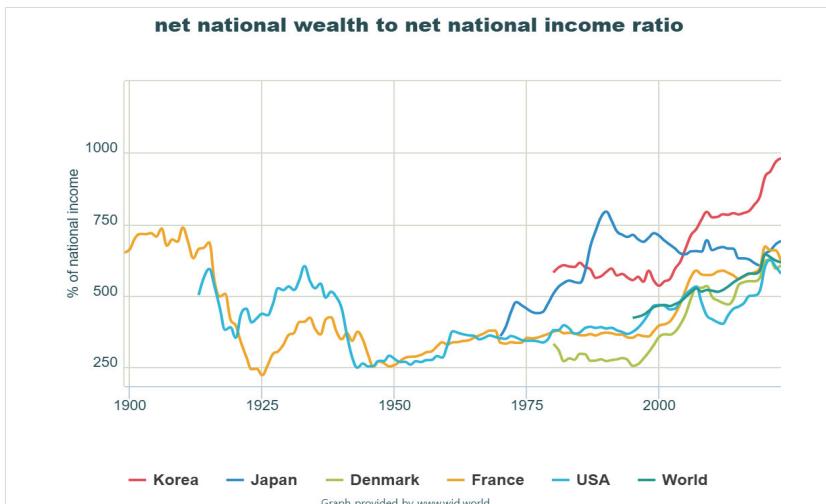
부-소득 비율(wealth-income ratio)은 가구 및 정부, 기업 등의 금융 자산과 실물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의 시장가액을 감가상각을 감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다(Piketty & Zucman, 2014, p.1270). 이 지표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시화하여 자산 축적 동향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불평등의 구조적 경직성을 드러낸다 (Piketty & Zucman, 2014, p. 1261).

다음 그림은 주요국의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을 보여준다.³⁾ 부-소득 비율은 199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증가했다. 1940년대 중후반까지 다시 감소했지만, 현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부-소득 비율의 동향은 다소 상이한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소득 비율이 증가하다가 최근까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면서 주택 등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성 및 인구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경직되고 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Galor & Zeira, 1993; Pfeffer & Schoeni, 2016; Piketty & Zucman, 2014).

3)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프랑스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덴마크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Esping-Andersen, 1990).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서 한국과 함께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국가 유형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연명, 2004).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비교적 짧은 한국은 덴마크나 미국, 프랑스와 일본의 부-소득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소득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다. Shin(2020)은 금융화된 주택 정책으로 소득과 대출이 자산 격차를 견인하고, 결국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짚었다.

[그림 3-1] 주요국의 부-소득 비율(wealth-income ratio)(199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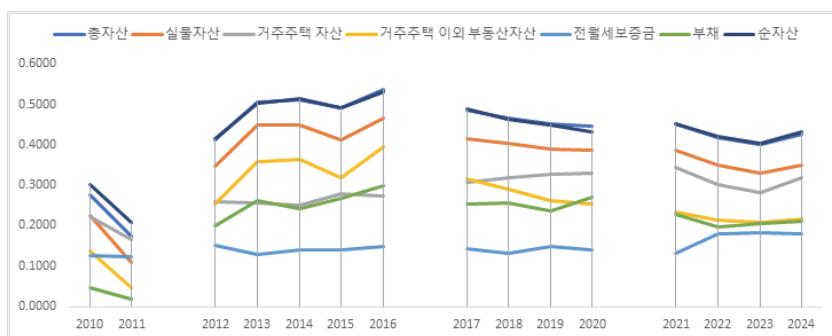
주: 이 그림의 부-소득 비율(wealth-income ratio)은 가구 및 정부, 기업 등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에 부채를 감한 순자산의 시장가액을 감가상각을 감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임.

출처: “Net national wealth to net national income ratio, (n.d.) World Inequality Database(https://wid.world/share/#0/countries/timeseries/wwealn_p0p100_z/U_S;FR;CN;WO;FI;KR;JP/last/eu/k/p/yearly/w/false/185.2575/1250/curve/false/country에서 2025.3.31. 추출).

여기에서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서 소득 및 자산 간 상관계수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구 자산과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 간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총자산과 가구 소득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과 실물자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및 거주주택 자산과의 상관계수 절댓값이 큰 편이지만 0.5 내외 수준에 머무른다. 2010년대 중반에 특히 총자산과 거주주택 자산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과의 상관계수 절댓값이 커지는데, 2017년 분석자료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에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2017년까지는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과의 상관계수 절댓값이 거주주택 자산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에는 역전되었다. 상대적으로 부채나 전월세보증금과의 상관계수 절댓값은 낮은 편이다.

[그림 3-2] 가구 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과의 상관계수(2010~2024년)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해석 시 분석자료 원천에 따른 시계열 단절에 주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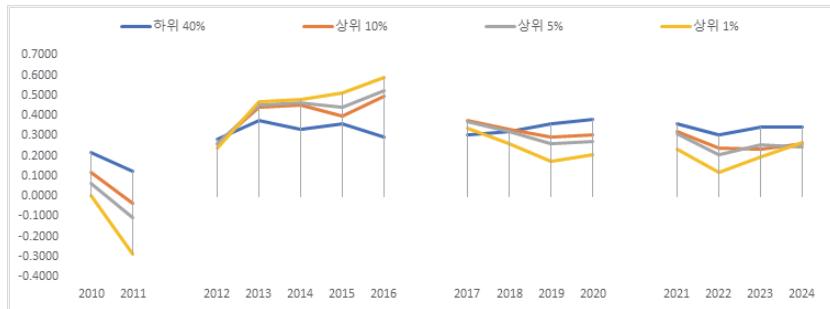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자산분위에 따른 가구 총자산과 처분가능소득 간 상관계수의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201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상관계수 절댓값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40% 집단의 상관계수 절댓값은

5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2024년까지 0.3 범위를 유지하는데, 상위 10%, 5%, 1% 집단의 상관계수 절댓값은 2016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특정 시기에 일부 집단을 제외하면 자산과 소득 간 상관계수는 0.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림 3-3] 자산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총자산 간 상관계수(2010~2024년)⁴⁾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해석 시 분석자료 원천에 따른 시계열 단절에 주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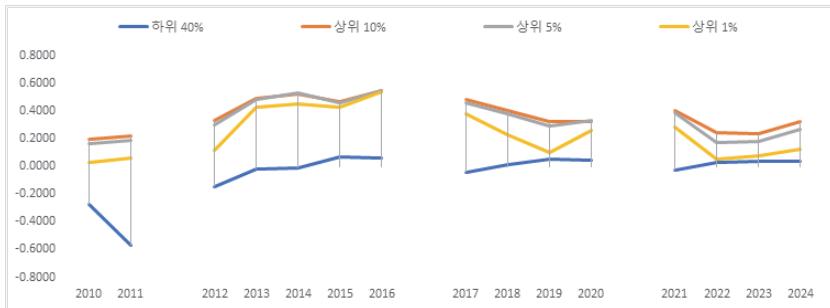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다음 그림은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 총자산과 처분가능소득 간 상관계수의 추이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상관계수 절댓값이 음수로서 소득과 자산 간 관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하위 40% 집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상관계수 절댓값이 0~0.2 범위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위 40% 집단의 상관계수가 201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최근까지 0 내외를 유지하고

4) 자산분위 집단별 가구 자산 요소와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 간 상관계수는 [부그림 3-1]에서 제시하고 있다.

있다. 통계적 상관관계가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상위 10%, 5%, 1% 집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관계수의 값이 다소 증가한 후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0.2 범위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소득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총자산 간 상관계수(2010~2024년)⁵⁾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해석 시 분석자료 원천에 따른 시계열 단절에 주의해야 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불평등한 초기 자산 분포는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초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집단은 대출 접근성 역시 제한된다. 충분한 투자를 전제로 학습된 역량은 교육 프리미엄을 통해 또 다른 소득 격차를 견인한다. 세대 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산 격차가 이전되고, 사회이동성은 경직된다(Galor & Zeira, 1993; Pfeffer & Schoeni, 2016; Shin, 2020). 더욱이 최근 부-소득 비율 지표나 한국의 가구 자산과 소득 간 상관계수의 추이는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의 이원화된 경로를 보여준다. 결국 자산 격차에 주목하여 불평등 구

5) 소득분위 집단별 가구 자산 요소와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 간 상관계수는 [부그림 3-2]에서 제시하고 있다.

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먼저 자산 격차의 추이와 실태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한국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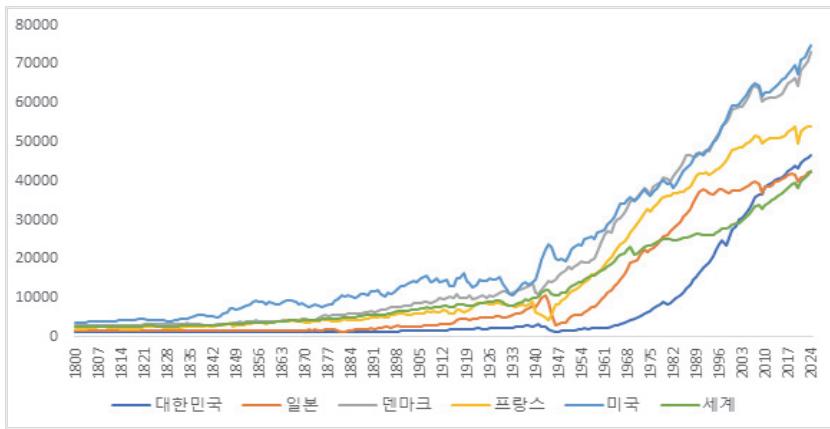
제2절 세계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1. 자산 격차 추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이후 1950년부터 주요국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주요 선진국으로서 미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고 일본 국부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전 세계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다소 큰 편이다. 한국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 추세는 다소 특이하다. 1960년대까지 한국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세계 국부에 비해 적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그 증가율 역시 크지 않았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한국 국부의 증가율이 점차 높아져 가파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2002년에 한국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이 전 세계를 앞지르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보다 높아졌다. 비록 증가율이 압축성장 시기에 비해 낮아지긴 했으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으로 보는 경제성장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 주요국의 성인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1800~2024년)

(단위: Euro €)



주: 2024년을 기준연도로 PPP 환율(Purchasing Power Parity Exchange Rate)을 적용한 값임.

출처: "Gross domestic Product", (n.d.).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한국의 자산 격차를 측정하는 자산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 범위는 1995년부터 시작한다. 그럼에도 1900년부터의 세계 자산 격차, 특히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 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 3-6]과 같다.⁶⁾ 전 세계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은 199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 것처럼 보인다. 상대적으로 긴 시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은 약 120년 동안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 수준이 유지된 것처럼 보인다. 세계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 전후, 1960년대 초반의 단기적 증가,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장기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역시 긴 시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900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68운동의 원년인 1968년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그리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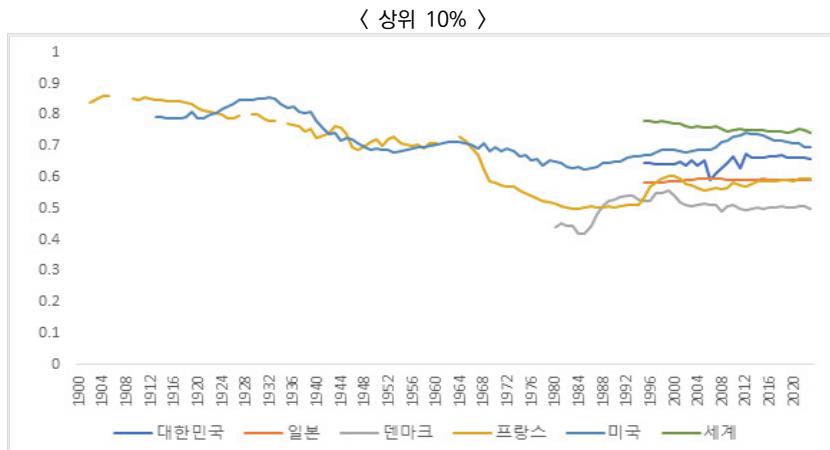
6) 주요국 고소득가 및 저소득가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부그림 3-3] 및 [부그림 3-4]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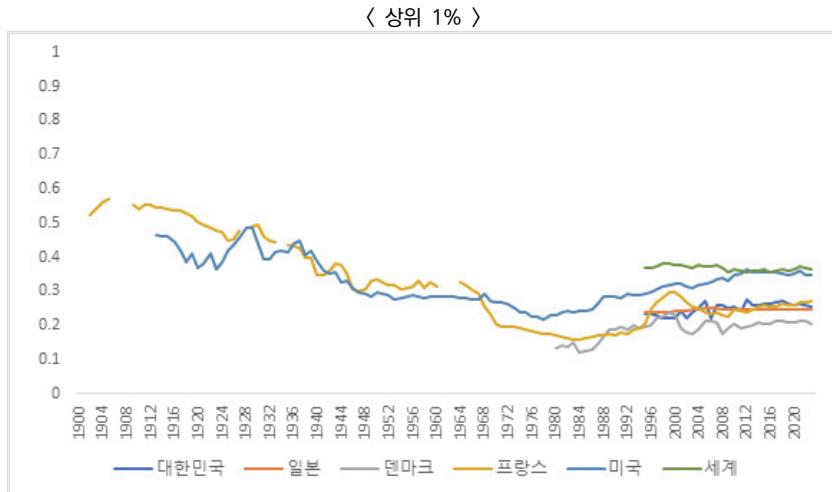
시 1980년대에 정체하다가 1990년대에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상위 10% 자산 점유율이 1980년부터 1990년대까지 점차 증가한 이후부터는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일본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6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995년부터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2006년 급감한 이후 2000년대 후반 다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6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 수준보다는 낮지만, 1900년 이후 추세는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201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한 것과 달리,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 점은 한국의 상위 10% 혹은 1% 자산 점유율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덴마크나 인접 국가인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림 3-6] 주요국 고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1900~2023년)

(단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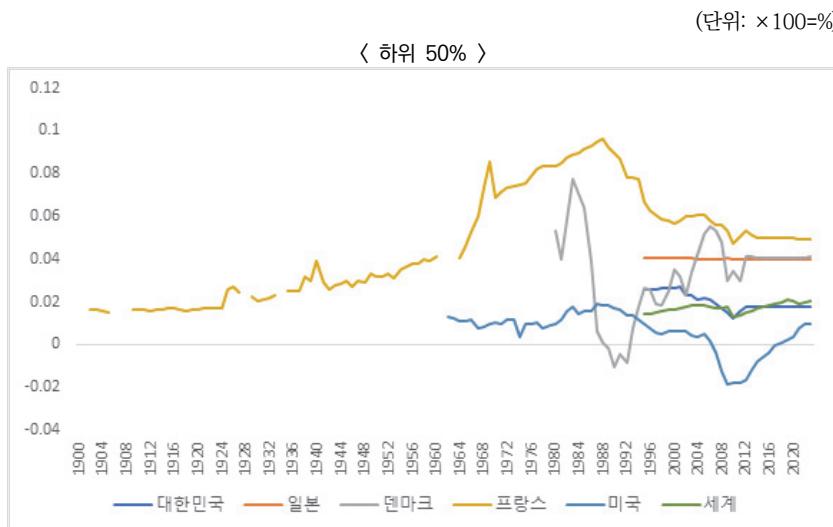
주: 고소득자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부록 [부그림 3-3]에서 제시함.

출처: (상위 10%) “Net personal wealth share(Top 10%)”. (n.d.)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상위 1%) “Net personal wealth share(1%)”. (n.d.) World Inequality Database(<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다음 [그림 3-7]은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시계열을 확보하는 프랑스를 보면, 1900년대 초반에 0.16% 정도였던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이 1988년 9.7%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2010년 4.8% 정도까지 감소한 후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하위 50% 자산 점유율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0.1% 내외를 유지하다가, 세계금융위기인 2000년대 후반에는 음의 비율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 다소 회복하여 최근에는 0.1% 정도 수준이다. 덴마크는 1980년 5.4% 정도에서 점차 감소해 1990년 전후에는 음의 비율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점차 증가해 2000년대 중반 5.6% 정도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4%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이 1995년부터 최근까지 1~2%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일본은 같은 기간 4%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하위 50% 자산 점유율은 1995년 이후 2.6% 정도에서 2010년대까지 점차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1.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미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인접한 일본이나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림 3-7] 주요국 저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1900~2023년)



주: 저소득자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부록 [부그림 3-4]에서 제시함.

출처: "Net personal wealth share(Bottom 50%)". (n.d.)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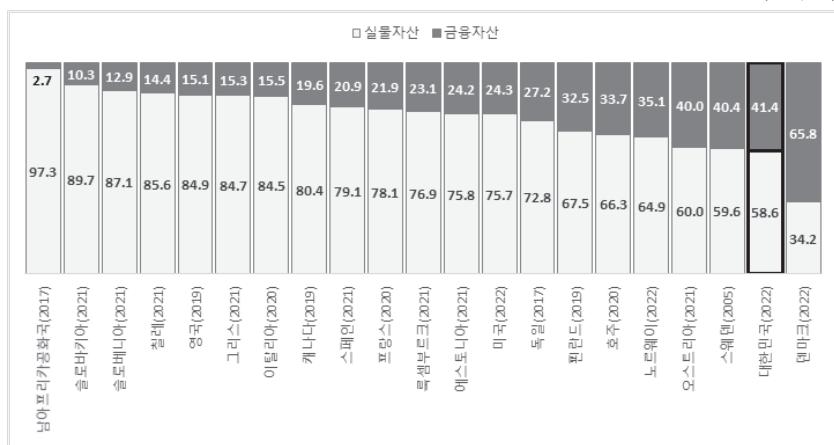
2. 자산 구성

자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성한다. 금융자산은 예금 및 적금, 주식, 그리고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이고, 실물자산은 거주주택이나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동차 등 그 외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다음 [그림 3-8]은 13개 국가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가구 자산을 구성하는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자산에서 실물자산의 평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97.3%에 달한다. 이어 슬로바키아(89.7%), 슬로베니아(87.1%), 칠레(85.6%) 등의 순으로 가구 내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 영미권 국가로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흔히 분류되는 영국, 미국, 호주의 실물자산 비중이 84.9%, 75.7%, 66.3% 정도로 편차를 보이는 데에 비해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등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실물자산 비중은 78.1%, 76.9%, 72.8% 정도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실물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67.5%, 64.9%, 34.2%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58.6% 정도로 가구 자산의 절반 이상을 실물자산이 차지하지만,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3-8] 주요국의 가구 자산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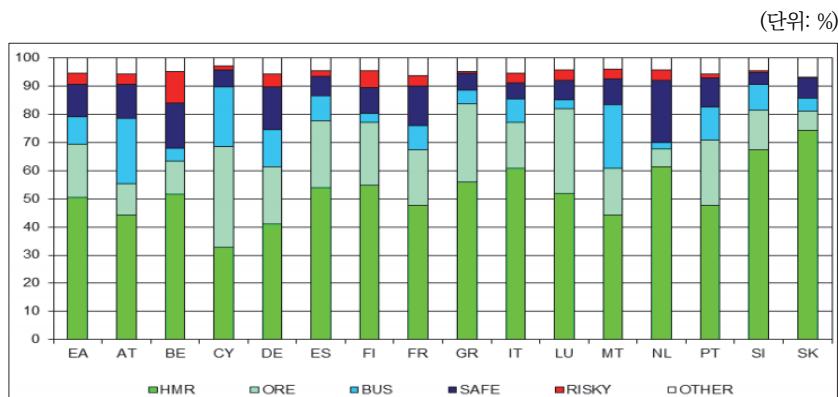


주: 총자산 대비 비율임.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국가명 옆 괄호의 숫자는 기준연도임.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가구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Arrondel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가계 총자산의 85% 이상이 실물자산이다. 그중에서도 거주주택 자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 금융자산은 대부분 예금이나 보험 등 안전한 자산이고,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적다.

[그림 3-9] OECD 주요국의 자산 구성(2013년)



주: 1) EA는 유럽, AT는 오스트리아, BE는 벨기에, CY는 사이프러스, DE는 독일, ES는 스페인, FI는 핀란드, FR은 프랑스, GR은 그리스, IT는 이탈리아, LU는 룩셈부르크, MT는 몰타, NL은 네덜란드, PT는 포르투갈, SI는 슬로베니아, SK는 슬로바키아임.

2) HMR은 거주주택 자산(Household main residence), ORE는 기타 부동산 자산(other real estate), BUS는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산(self-employment business), SAFE는 안전한 금융자산(safe financial assets), RISKY는 위험 금융자산(risky financial assets), OTHER는 기타 실물자산(자동차 등) 및 금융자산(빌려주고 받을 돈, 증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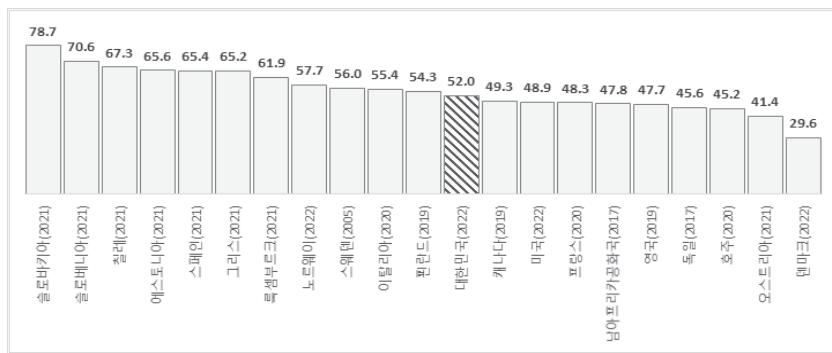
출처: OECD (2024),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 indicator HM1.3 Housing tenures, <https://oe.cd/ahd>.

실물자산 중에서 거주주택 등 부동산 자산에 국한하면, 그 비율은 다소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국가에 따라 실물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부동산 자산의 비율 경향이 일관된 것은 아니다. 가구 자산의 97.3%가 실물자산 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가구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47.8%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부동산 이외 실물자

산을 중심으로 가구 자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물자산이 가구 자산의 84.9%에 달했던 영국도 부동산 자산으로 제한하면 그 비율이 47.7%로 줄어든다. 그런데 한국은 [그림 3-8]에서 가구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58.6%였는데, 부동산 자산으로 제한하면 52.0%로 6.6%포인트 감소 한다. 가구 총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중간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서, 한국에서 가구가 자산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실물자산에 한해 부동산 자산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따라 가구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고유의 전략을 추구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에 의한 분류와는 이질적일 수 있다.

[그림 3-10] 주요국의 가구 총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

(단위: %)



주: 총자산 대비 비율임. 총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국가명 옆 괄호의 숫자는 기준연도임.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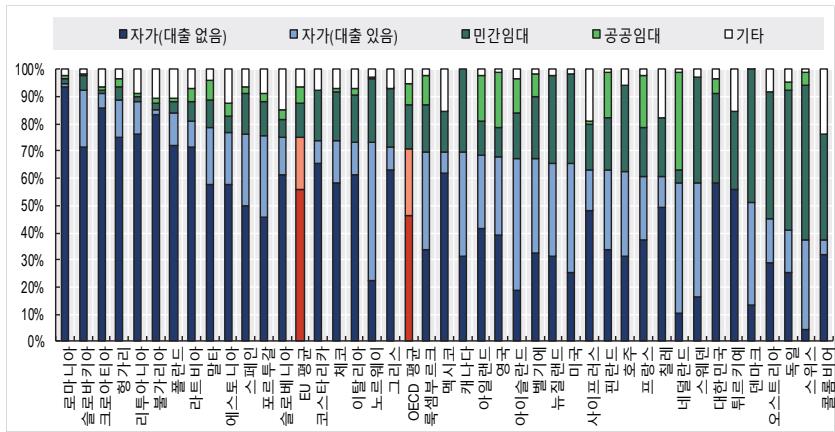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이다. EU 국가의 평균 자가 보유율은 대출의 유무와 관계없이 74.9%이고, OECD 평균은 70.9%이다. 한국은 58.0%로 자가 보유율은 절반을 넘지만 EU 및 OECD 가입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공공임대의 비율도 5.4%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민간임대 비율은 32.9%로 스위스와 독일, 덴마크 등에 이어 7번째로 높다. 앞선 [그림 3-8]에서 한국의 실물자산 구성비가 비교대상 국가 대비 다소 낮았다. 하지만 전월세보증금이 금융자산으로 간주되고 전월세보증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는 점에서 거주주택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실물자산의 비율이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다.

[그림 3-11] 주요국의 주택 점유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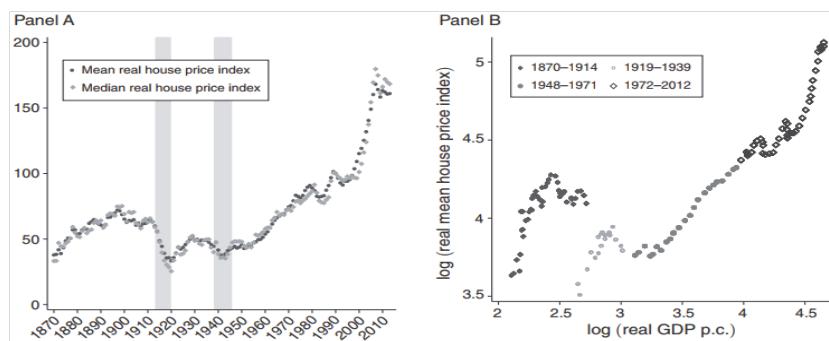
주: 자가 보유(대출 없음)의 원어는 own outright이고, 자가 보유(대출 있음)은 owner with mortgage, 민간임대는 rent(private), 공공임대는 rent(subsidised), 기타는 other, unknown임.

출처: OECD (2024),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 indicator HM1.3 Housing tenures, <https://oe.cd/ahd>.

한편, Knoll과 Schularick, & Steger(2017)가 구축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 시계열 부동산 가격 지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이 1990년대부터 급등하였다.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즉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 지수 역시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을 견인한 요인은 토지 가격(land prices) 인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house prices) 상승이다. 1950~2012년 부동산 가격 인상의 84%가

토지 가격 인상으로 설명되는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건축 비용은 16%에 불과하였다(Knoll, Schularick, & Steger, 2017, p.348). 결국 경제성장에 따라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자산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는 가구 자산을 축적하는 고유 전략의 이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그림 3-12]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 추이(1970~2012년)



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펜란드, 호주의 14개 국가 데이터의 집값(aggregate values)임. 패널A의 Y축은 1990년 가격을 100의 기준값으로 설정한 부동산 가격 지수임. 음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시점임.

출처: "No Price Like Home: Global House Prices, 1870-2012", Knoll, Schularick, & Steger, (2017). American Economic Review, 107(2), 331-353. doi:10.1257/aer.20150501. p.340.

3. 자산 계층별 특성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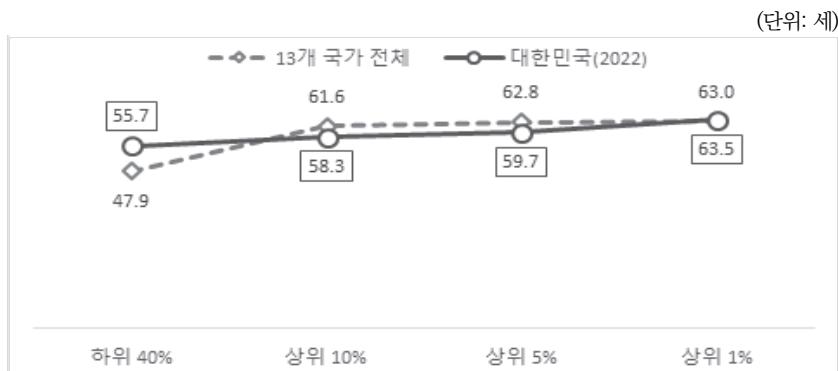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룩셈부르크 자산조사(Luxembourg Wealth Study, 이하 LWS)의 최근 자료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13개 국가의 자산 계층에 따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LWS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 LIS)에서 파생되어 자산에 대한 국가 단위 조사자료를 집약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국가에서 생산한 자산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과정을 거

7) 소득 계층별 특성의 국제비교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부그림 3-5]~[부표 3-4] 참조).

친다(LIS, n.d.). 여기에서는 LWS에서 제공하는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해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총자산 기준 고자산가 집단과 중저자산가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현재 LWS에서는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의 24개 국가의 분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구 자산의 정보가 빈약한 9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13개 국가를 비교한다.

13개 국가 전체 평균 대비 한국은 집단의 가구주 연령이 높은 편이다. 하위 4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55.7세인 반면, 상위 1%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5세이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부터 소득을 벌어들이기 시작해 소비 수준 대비 소득의 초과분을 자산으로 축적하면서 소득 수준의 정점은 중장년기에, 자산의 정점은 초기 노령기에 등장하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ndo & Modigliani, 1963). 그런데 상위 1% 가구주 평균 연령과 하위 40% 가구주 평균 연령 간 차이는 이탈리아가 2.3세로 가장 낮고, 한국은 7.8세로 그 뒤를 잇는다. 두 집단의 가구주 평균 연령 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호주로 17.7세이고 덴마크는 17.6세, 미국은 17.3세 순으로 나타난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점진적으로 소득을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은 자산을 통한 계층 이동이 매우 활발하거나 경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한편, Saez & Zucman(2016, p.558)은 1960년대부터 전 세계 부유층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짧어지는 추세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LWS에서 확인한 한국의 자산 하위 40%의 가구주 연령은 13개 국가 전체 평균 대비 7.8세 정도 높고, 상위 1%는 0.5세 정도 높다.

[그림 3-13] 자산 집단별 가구주 연령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팔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표 3-1〉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가구주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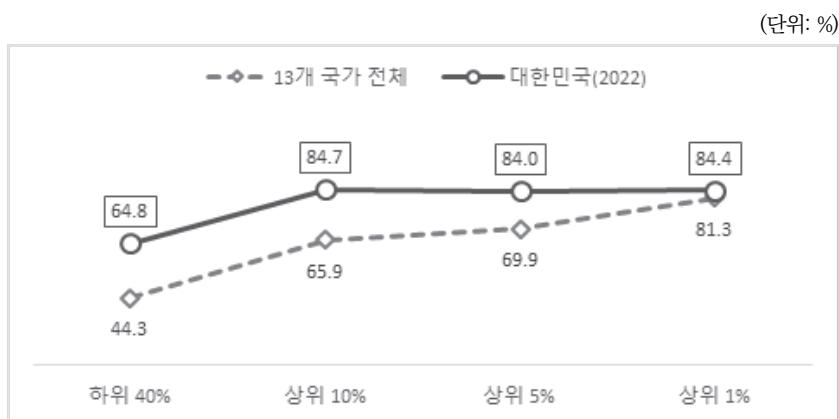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44.1	60.9	61.3	59.6	15.5
대한민국(2022)	55.7	58.3	59.7	63.5	7.8
덴마크(2022)	43.4	62.9	62.9	60.9	17.6
독일(2017)	51.1	62.5	62.5	62.9	11.8
미국(2022)	46.4	61.8	63.5	63.7	17.3
스웨덴(2005)	45.7	58.9	60.3	61.9	16.2
영국(2019)	47.5	61.0	60.6	60.8	13.3
이탈리아(2020)	57.5	61.3	61.4	59.8	2.3
칠레(2021)	45.8	57.0	57.1	58.2	12.4
캐나다(2019)	44.9	56.4	55.8	58.4	13.4
프랑스(2020)	49.3	61.3	62.2	60.8	11.5
핀란드(2019)	45.6	59.3	60.1	59.8	14.2
호주(2020)	45.4	60.7	62.6	63.1	17.7
13개 국가 전체	47.9	61.6	62.8	63.0	15.2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팔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자산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하위 40% 가구 중 남성이 가구주인 비율은 64.8%인데, 상위 10%는 84.7%, 상위 5%는 84.0%, 상위 1%는 84.4%에 이른다. 13개 국가 평균을 보면, 하위 40% 가구의 44.3%가 남성 가구주인데, 상위 10%는 65.9%, 상위 5%는 69.9% 정도이고, 상위 1%는 81.3%에 달한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상위 1%의 남성 가구주 비율과 하위 40%의 남성 가구주 비율 간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는 호주로 6.8%에 그치는 반면, 미국은 46.0%에 이른다. 고자산가의 지위를 점하는 데에는 남성이 가구주일 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위 40% 집단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상위 5% 내지 10% 역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가구 자산의 성별 분포가 불평등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그림 3-14] 자산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표 3-2〉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단위: %)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63.2	77.5	80.4	84.1	20.9
대한민국(2022)	64.8	84.7	84.0	84.4	19.6
덴마크(2022)	51.4	65.7	69.4	76.5	25.1
독일(2017)	42.9	59.2	61.4	64.5	21.6
미국(2022)	42.8	67.3	72.2	88.7	46.0
스웨덴(2005)	52.6	67.4	67.0	71.8	19.1
영국(2019)	52.6	69.7	72.1	76.6	24.0
이탈리아(2020)	51.7	70.8	78.7	79.3	27.6
칠레(2021)	43.7	67.0	71.8	66.4	22.7
캐나다(2019)	53.5	64.1	67.4	77.0	23.5
프랑스(2020)	49.3	66.7	68.0	79.2	29.9
핀란드(2019)	46.7	56.4	57.5	58.6	11.9
호주(2020)	53.9	59.0	61.0	60.7	6.8
13개 국가 전체	44.3	65.9	69.9	81.3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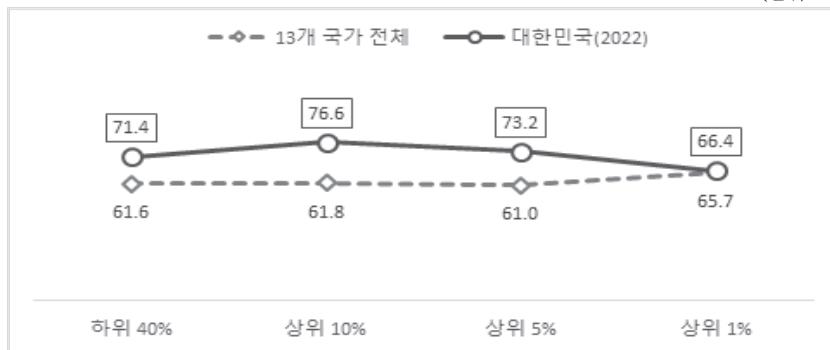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기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팔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한국에서 자산 하위 40% 집단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은 71.4%이고, 상위 10%는 76.6%, 상위 5%는 73.2%인데, 상위 1%는 66.4%로 줄어든다. 반면, 비교 대상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주 비율은 하위 40%가 61.6%, 상위 10%가 61.8%, 상위 5%가 61.0%인데, 상위 1%는 65.7%로 다소 증가한다. 국가별로 상위 1%와 하위 40% 간 경제활동하는 가구주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로 32.9%포인트에 이른다. 칠레와 독일, 한국은 자산 상위 1% 가구의 가구주보다 하위 40% 가구 가구주가 경제활동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가구의 자산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초고자산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림 3-15] 자산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단위: %)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표 3-3〉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단위: %)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55.7	54.4	54.1	57.1	1.4
대한민국(2022)	71.4	76.6	73.2	66.4	-5.0
덴마크(2022)	47.7	65.6	69.0	80.5	32.9
독일(2017)	52.7	53.3	52.7	47.1	-5.6
미국(2022)	65.0	65.3	63.9	72.6	7.7
스웨덴(2005)	56.0	64.3	62.5	64.9	8.9
영국(2019)	59.3	52.2	55.6	61.0	1.7
이탈리아(2020)	48.1	57.5	59.6	76.6	28.4
칠레(2021)	70.3	61.9	61.2	57.2	-13.1
캐나다(2019)	55.3	54.3	56.1	55.7	0.4
프랑스(2020)	52.5	54.4	57.5	64.2	11.7
핀란드(2019)	43.9	54.5	56.4	55.9	12.0
호주(2020)	66.2	64.3	63.6	66.0	-0.2
13개 국가 전체	61.6	61.8	61.0	65.7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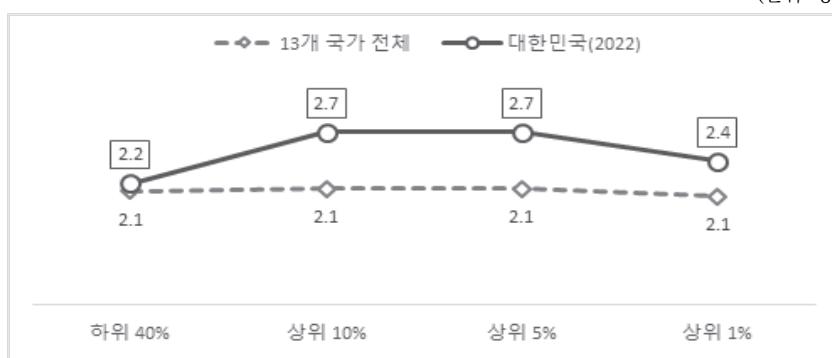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한국에서 자산 하위 40% 집단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인데, 상위 10% 와 상위 5%는 각각 2.7명으로 늘어난다. 상위 1%의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다소 감소하지만, 하위 40%보다는 많다. 그런데 13개 비교 대상 국가는 하위 40%와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집단 모두 가구원 수가 2.1명으로 동일하다. 캐나다나 덴마크, 핀란드는 고자산가 집단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 은데,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저자산가 집단의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다. Pfeffer & Waitkus(2021)의 방식에 따라 자산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 였음에도 한국은 고자산가 집단의 가구규모가 저자산가 집단보다 크다. 가 구 자산은 가구원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활용해 축적할 뿐 아니라 가구원이 누리는 경제적 웰빙의 척도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하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가구 자산 형성 및 축적 에 가구의 규모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림 3-16] 자산 집단별 가구원 수

(단위: 명)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팔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표 3-4〉 주요국의 자산 집단별 가구규모

(단위: 세)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1.9	2.1	2.1	2.2	0.3
대한민국(2022)	2.2	2.7	2.7	2.4	0.2
덴마크(2022)	1.6	2.0	2.1	2.2	0.6
독일(2017)	1.8	1.9	1.9	1.9	0.1
미국(2022)	2.2	2.2	2.2	2.1	-0.1
스웨덴(2005)	1.7	2.0	1.9	2.0	0.3
영국(2019)	2.5	2.1	2.2	2.3	-0.2
이탈리아(2020)	2.4	2.2	2.3	2.2	-0.2
칠레(2021)	3.2	2.6	2.6	2.2	-1.0
캐나다(2019)	1.9	2.2	2.3	2.6	0.7
프랑스(2020)	2.0	2.1	2.1	2.2	0.2
핀란드(2019)	1.7	2.0	2.0	2.1	0.4
호주(2020)	2.5	2.3	2.3	2.2	-0.4
13개 국가 전체	2.1	2.1	2.1	2.1	-0.1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총자산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자료: "Luxembourg Wealth Study"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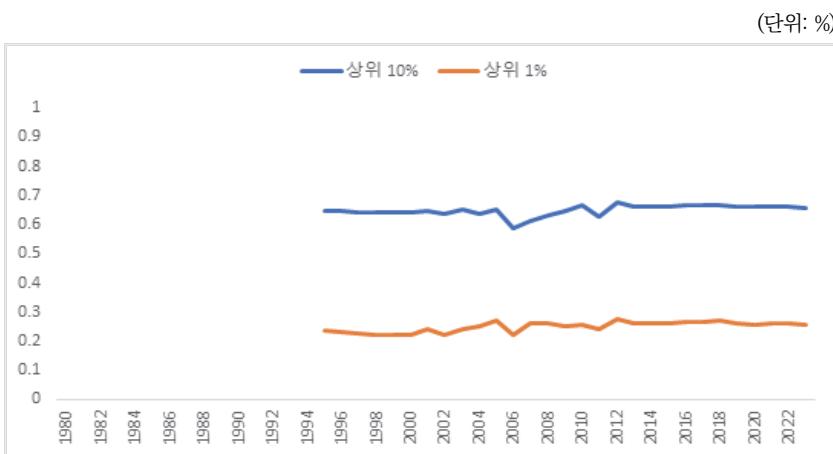
제3절 한국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1. 자산 격차 추이

이 절에서는 한국의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에 주목한다. 다음 그림은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한국의 자산 격차를 도식화하고 있다. 상위 10%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은 1995년 약 65% 수준에서 세계금융위기 전후 시기인 2006~2010년의 등락을 제외

하면 최근 2023년 6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1% 초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은 1995년 약 23%에서 2005년 약 27%까지 증가하고 등락을 보이며 최근 2023년 26% 정도에 머무른다. 최근 약 25년 정도의 시간적 범위에서 상위 10% 내지 상위 1%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7] 한국의 고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1995~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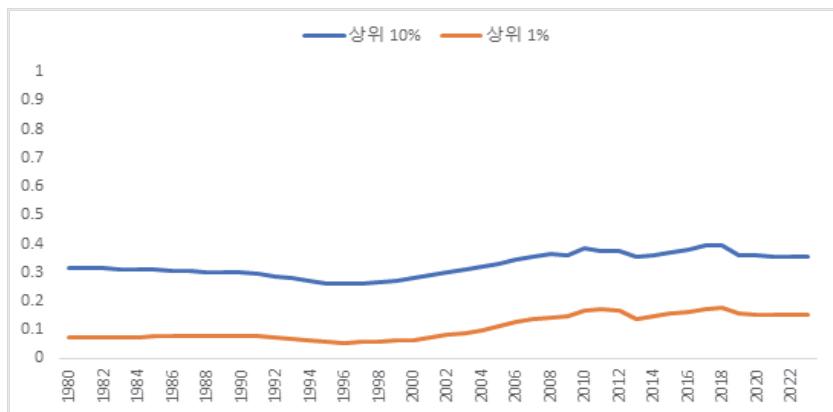
출처: WID.world의 Statistical Software Components에서 STATA 명령어 wid로 2025.8.3. 추출하여 저자 작성.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고자산가 집단의 자산 점유율 추이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약 30%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해 1997년 금융위기 당시 26% 정도에 이르렀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8% 정도까지 도달 후 2018년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35% 정도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상위 1%의 초고소득자 집단의 소득 점유율은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7~8%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 금융위기에 6% 정도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2011년 17% 정도까지 점증한 후 등락을 보이다가 2023년 15% 정도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3-18] 한국의 고소득자 집단의 소득 점유율(1980~2023년)

(단위: %)



출처: WID.world의 Statistical Software Components에서 STATA 명령어 wid로 2025.8.3. 추출하여 저자 작성.

한국에서 최근 고소득자의 소득 점유율 추이와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 추이를 비교하면, 첫째, 상위 10% 내지 상위 1%의 점유율은 자산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상위 10% 고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30%를 웃도는 수준이라면, 상위 10% 고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은 60~70%에 육박한다. 자산 격차의 실재가 소득 격차의 실재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산 격차의 추이가 소득 격차의 추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자산은 소득과 함께 경제적 웰빙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소득을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기도 하지만,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와는 또 다른 맥락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 격차를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와 연동되면서도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자산 구성

가. 총자산 대비 자산 원천⁸⁾

여기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가구 자산 구성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은 2010년부터 최근 까지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특히 거주주택과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금융자산의 일부이지만 거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월세보증금을 중심으로 가구 총자산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의 총자산 수준이 점증하고 보유자의 실물자산 평가액 또한 점증하는데, 가구에서 실물자산을 1원 이상 보유한 비율은 2010년부터 85% 내외 수준을,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66~70% 범위에서 머무른다.

실물자산의 일부인 거주주택 자산의 보유율은 2010년 57.6%에서 2013년 56.3%까지 다소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해 2019년에 61.2%에 이른다. 이후 다시 감소해 2024년에는 58.5% 정도이다.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의 비율은 2010년 64.2%에서 점차 감소해 2014년 59.4%에 달했다가 다시 점증하여 2022년에 64.3% 정도로 201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해 2024년 최근 62.4% 수준이다.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2010년 30.3%에서 다소 등락을 보이지만 2024년 30.6%까지 30~34%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비율은 2010년 49.0%에서 점차 감소해 2019년 41.3%에 이르렀다가 다시 약간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42% 내외 수준에서 머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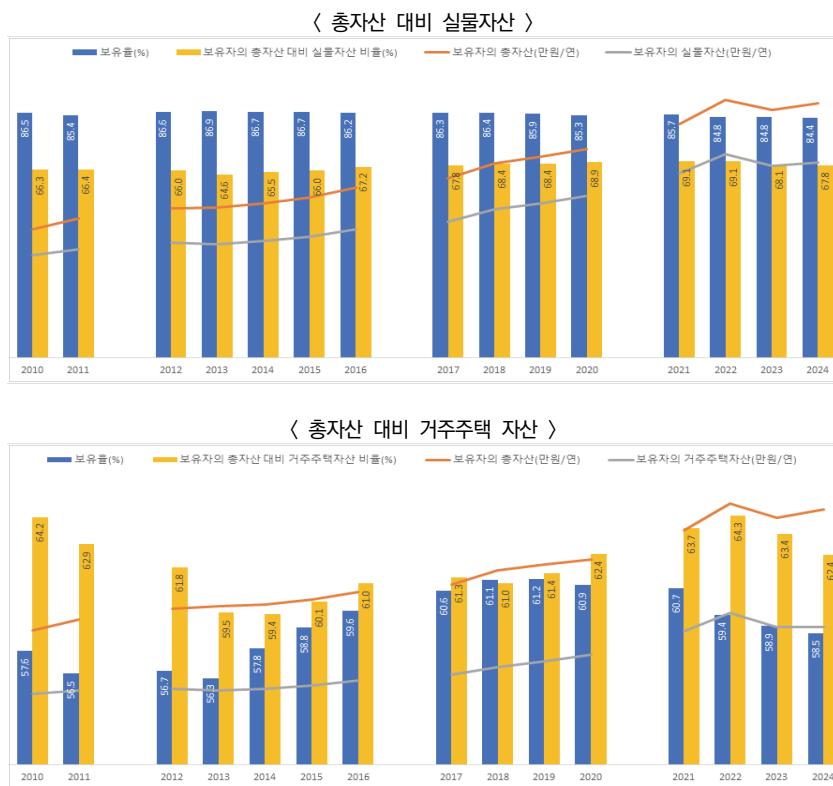
금융자산의 일부인 전월세보증금의 보유율은 2010년 35.8%에서

8) 그림의 상세한 내용은 <부표 3-5>~<부표 3-12>에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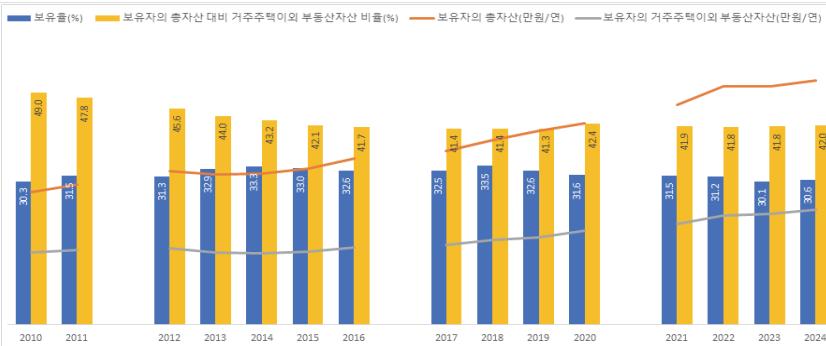
7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2013년 36.5%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해 2018~2019년에는 31.7% 정도였다. 이후 다시 증가해 2024년 35.0%에 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31~37%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의 비율은 2010년 55.8%에서 다소 감소해 2014년 51.8%로 줄었다가 2020년 53.7%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2024년까지는 49.2%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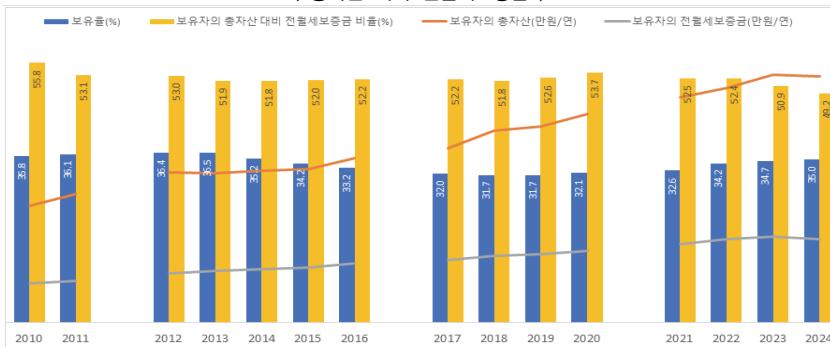
[그림 3-19] 가구의 총자산 대비 자산 원천(2010~2024년)



〈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



〈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개별 자산 요소의 보유자에 한함.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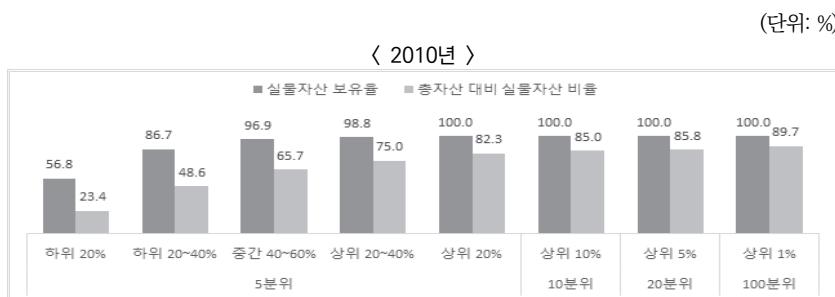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같은 기간 동안 실물자산과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 그리고 전월세보증금의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던 추세와 비교하면, 202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대에 보유자의 거주주택 자산의 보유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의 비율은 2010년대 중후반에 점차 증가하여 보유율 추세를 뒤따른다. 지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산 형성의 행태가 거주주택 자산을 중심으로 상당히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계층별 자산 원천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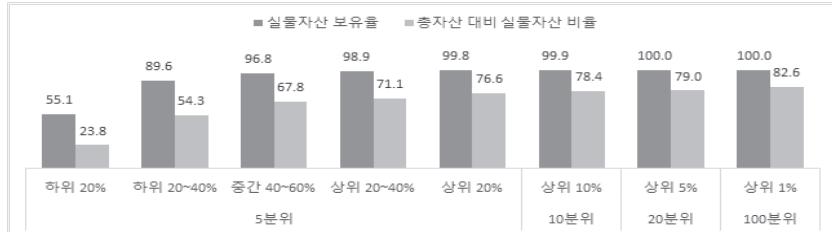
다음 그림은 자산 분위 집단에 따른 실물자산 보유율과 총자산 대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 하위 20% 집단의 실물자산 보유율은 56.8%인데 하위 20~40% 집단은 86.7%로 높아지고, 분위가 높아질수록 보유율이 증가해 상위 20%, 상위 10%, 상위 5%, 상위 1%의 고자산가 집단은 100%가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다. 가구 총자산 대비 비율 역시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하위 20%는 23.4%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89.7%에 달한다. 하위 20%의 실물자산 보유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한편, 하위 20~40%의 실물자산 보유율이 90%에 가까운 수준까지 급등하고 분위가 높아질수록 점증하여 초고자산가가 100%에 가까운 보유율을 보이는 경향은 2024년까지 고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0] 자산 분위별 실물자산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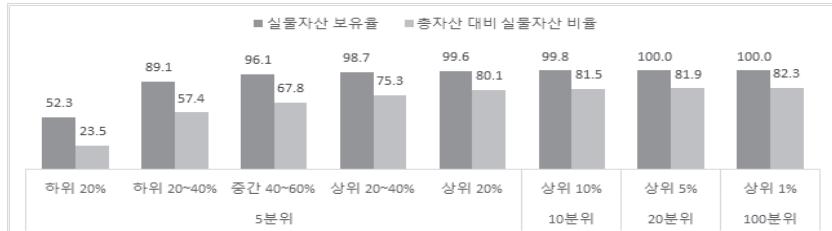


9)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의 상세한 내용은 <부표 3-13>~<부표 3-28>에서,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의 상세한 내용은 <부표 3-29>~<부표 3-44>에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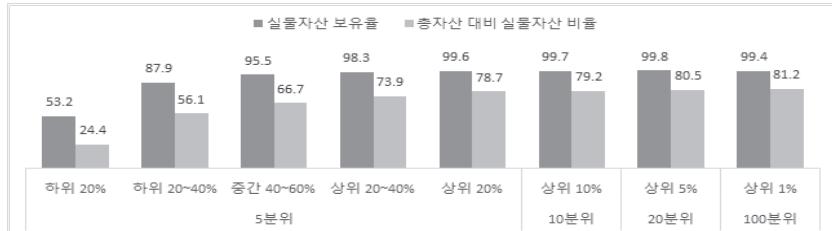
〈 2015년 〉



〈 2020년 〉



〈 2024년 〉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3. 자산 계층별 특성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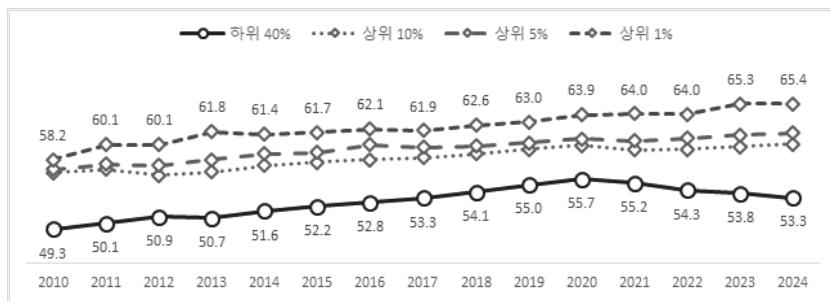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

10) 소득 계층별 특성은 [부그림 3-9]~[부그림 3-15]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위 40%, 상위 10%, 5%, 1%의 집단별 가구, 특히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추이를 다룬다. 다음 그림은 자산 분위 집단별 가구주 평균 연령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하위 40% 집단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9.3세인데, 2020년 55.7세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53.3세까지 다소 감소하였다. 상위 집단일수록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데, 상위 1%는 2010년 58.2세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65.4세로 나타났다. 지출 수준 대비 소득의 초과분을 자산 형성의 종잣돈으로 활용하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커진다는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자산 상위 집단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은 연령 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집단과 다르게 2020년 이후 하위 40% 집단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은 다소 특이할 수 있다.

[그림 3-21] 자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2010~2024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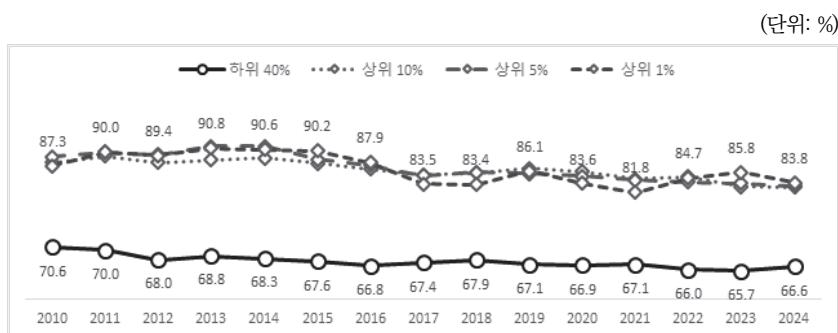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하위 40% 집단에서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은 2010년 70.6%였는데, 점차 감소하여 2024년까지 66% 내외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상위 집단은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상위 1%를 기준으로 보면 2010년 87.3%에서 2014년 90.6%까지 다소 증가했다. 이후 2018년 83.4%까지 감소했다가 등락을 보이고 2024년 기준 83.8% 정도이다.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제2장 제3절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다수의 논문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축적하는 자산의 수준이나 자산의 형태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 가구원이 가구를 형성할 때 남성을 가구주로 지정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 혹은 가구주 명의로 자산을 등록한다면, 가구 내 가구원, 특히 성별에 따른 자산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Bessière & Pugliese, 2025).

[그림 3-22] 자산 분위별 남성 가구주 비율(201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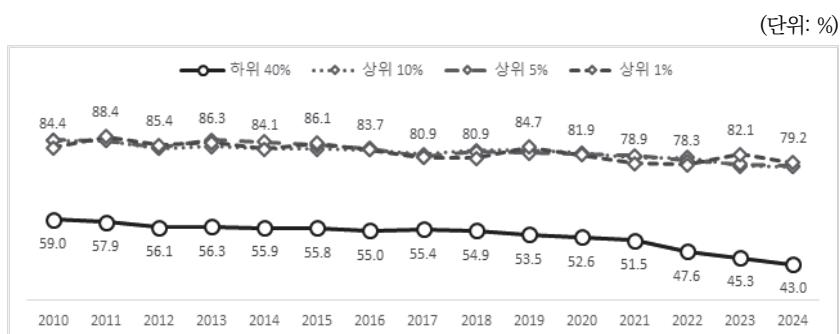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다음 그림은 자산 분위별 집단에 따라 가구주가 기혼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 40% 집단에서 가구주가 기혼인 비율은 2010년 59.0%에 서 점차 감소해 2024년에는 43.0% 수준으로 16%포인트 줄었다. 반면,

상위 1% 집단을 기준으로 2010년에 가구주가 기혼일 비율은 84.4%였는데, 다소 등락을 보이다가 2024년에 79.2%로 5.2%포인트 줄었다. 상위 집단은 기혼 가구주의 비율이 높고 그 비율의 감소폭이 작다.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기혼일 때 자산 분위가 높을 수 있다. 가구 규모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하였음에도 고자산 분위에서 기혼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산이 결혼 선택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과 성인 가구원이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결혼이 유리한 가능성의 상호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3-23] 자산 분위별 기혼 가구주 비율(2010~2024년)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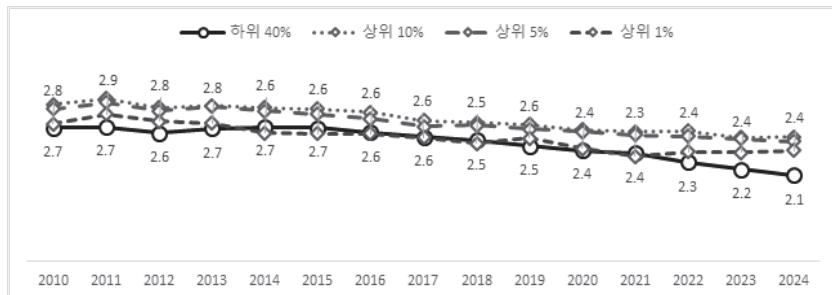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하위 40% 집단의 가구원 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6~2.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해 2024년에는 2.1명 수준이다. 상위 1% 집단을 기준으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2.9명 정도이다가 점차 감소해 2021년 2.3명에 이른 후 2023~2024년에 2.4명을 유지하고 있다. Pfeffer & Waitkus(2021)의 방식에 따라 가구 순자산을 가구원 수

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상위 집단이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규모가 클수록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 결혼을 통해 가구 규모를 확장한다면, 앞선 고자산 분위에서 기혼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사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림 3-24] 자산 분위별 가구규모(2010~2024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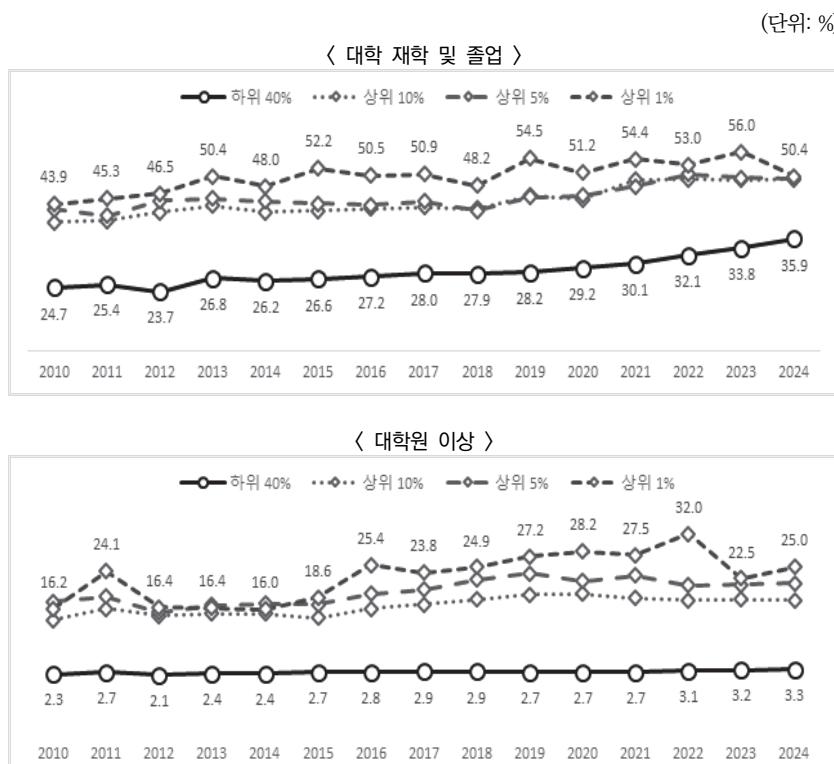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이번에는 자산 분위 집단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확인한다. 2010년 기준 하위 40% 집단 가구주 중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비율은 24.7%이고, 대학원 이상인 비율은 2.3% 정도이다. 대학에 대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비율은 지난 15년 동안 점차 증가해 2024년에 35.9%인데, 대학원 이상인 비율은 3.3%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한편, 상위 1%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비율은 2010년에 43.9%인데 연도별 등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0.4%에 이른다. 대학원 이상인 비율은 2010년에 16.2%인데 역시 연도별 등락을 보이면

서 2022년에 32.0%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25.0% 정도 수준을 보인다. 자산 상위 집단일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하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즉,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고등교육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초기 자산이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투자로 작동한다면, 자산 격차가 교육 격차를 견인할 가능성 역시 있다(Galor & Zeira, 1993).

[그림 3-25] 자산 분위별 가구주 교육수준(2010~2024년)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 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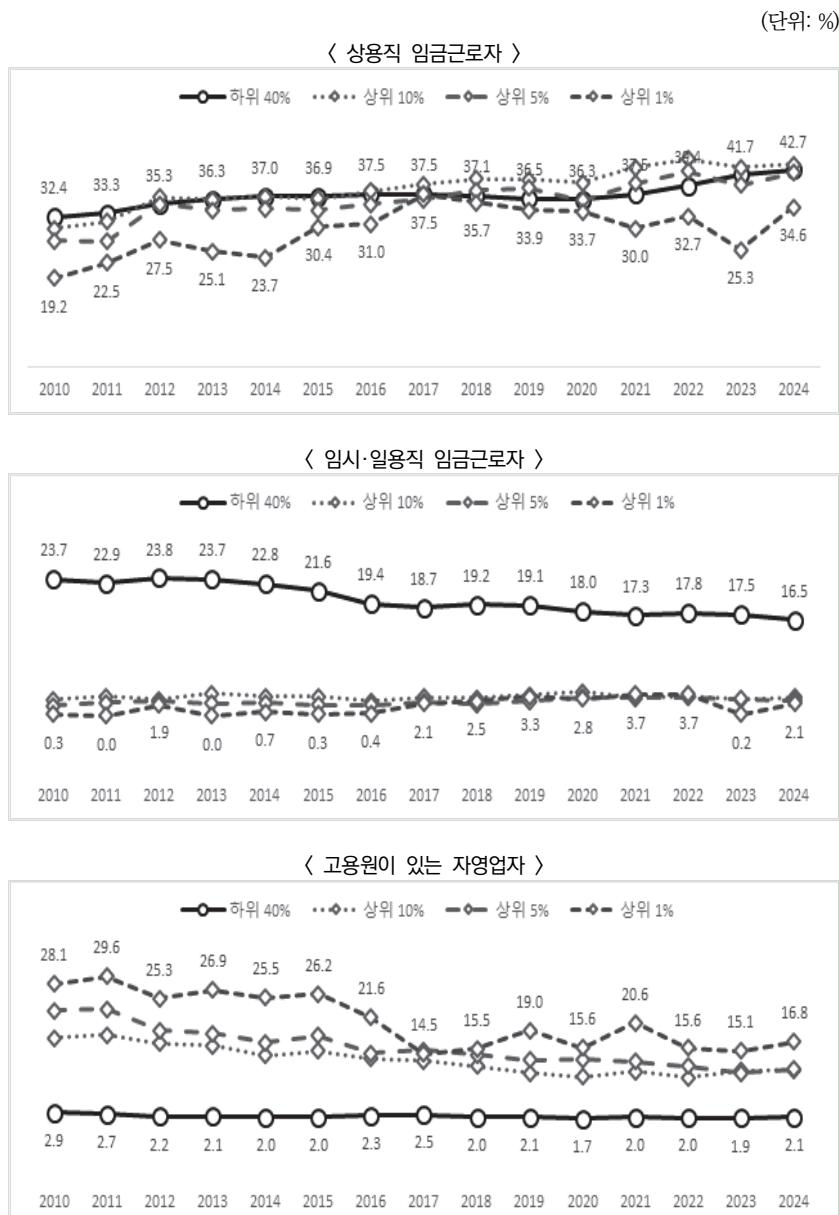
다음 그림은 자산 분위별 집단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 40% 집단은 상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가구주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낮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현저히 높다. 비임금근로자로서는 하위 40% 집단에서 가구주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비율이 상위 집단보다 현저히 낮은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비율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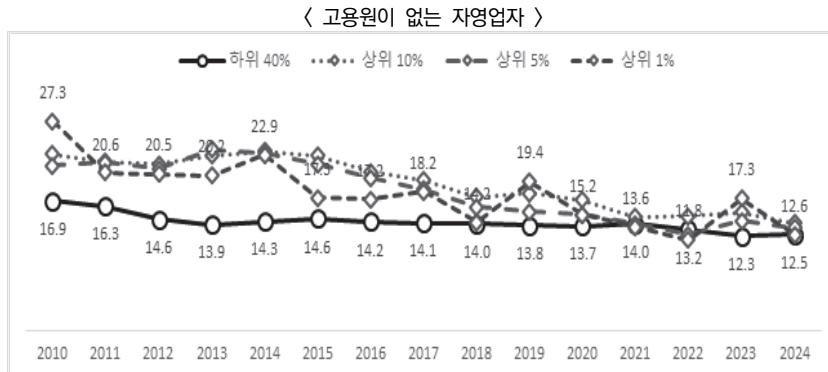
추이로는 하위 40% 집단 가구주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2010년 23.7%에서 2024년 16.5%까지 점차 감소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같은 기간 32.4%에서 42.7%로 점차 증가한다. 하지만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의 연도별 등락은 비교적 큰 편으로 불안정하게 보인다. 하위 40% 집단 가구주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24년 2.1%로 0.8%포인트 감소하는데,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인 비율은 같은 기간 16.9%에서 12.5%로 4.4%포인트 감소한다. 가구주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휴업, 혹은 폐업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이탈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고자산가 집단에 주목하면, 하위 40%를 기준으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은 같은 기간 23.7%에서 16.5%로 점차 감소하였는데,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은 2010년 32.4%에서 2024년 42.7%로 점차 증가하였다. 상위 1% 집단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0~2014년에 25~30%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17년 14.5%까지 감소한 이후 2019년 및 2021년의 급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5~17% 범위에 머무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비율은 2010년 27.3%였는데 연도별 등락을 보이면서도 2024년 12.6%로 줄었다. 고자산가 집단에서는 임금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8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그림 3-26] 자산 분위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201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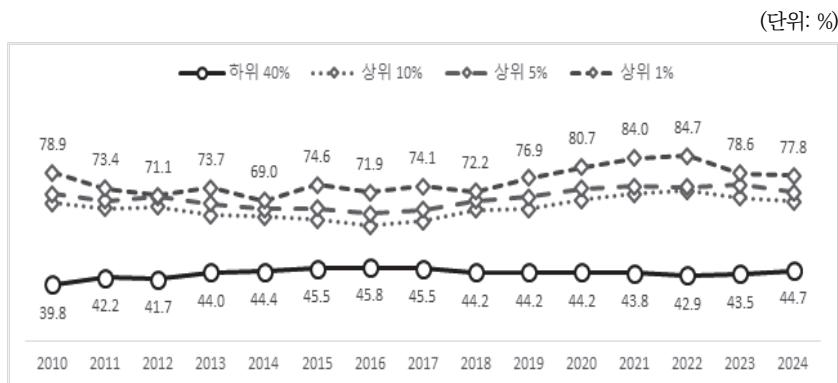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다음 그림은 자산 분위별 집단 중에서 서울이나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 40% 집단 가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2010년 39.8%에서 2016년 45.8%까지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4년까지 42~45% 범위에도 머무르고 있다. 자산 상위 집단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10년 78.9%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2014년에 69.0%로 감소했다가 2022년 84.7%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78% 내외 수준을 보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실이 자산을 축적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림 3-27] 자산 분위별 수도권 거주 가구 비율(2010~2024년)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4 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제1절 문제제기

이 장에서는 한국의 자산 격차, 즉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의 간극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을 조망한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의 분배지표 산출에 이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이 자료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가구에 속한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년 실시되는 반복 횟단면 조사자료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구와 개인의 행태 변화를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소득과 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마이크로데이터로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크다. 더욱이 개인 명의 기준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산의 개인화 추세를 반영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은 가구 단위에서 공유된다(Canberra Group, 2011, pp.24-25). 게다가 가구 내에서 모든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거주주택 등 자산을 공동으로 누리더라도 가구주의 남성화 경향 등에 의해 자산을 소유하는 분배 실태는 이질적인 성별 격차로 드러나기도 한다(Ruel & Hauser, 2013; Bessière & Puglises, 2025). 이 장에서 시도하는 개인 단위의 자산 격차 분석은 자산의 개인화 추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에서 희석되는 자산 분배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다.

한편,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산 분포 혹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차원적 요인을 종합하여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실제 삶을

분석모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이 장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의 자산 구성과 정책 이용 행태 등 분석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했을 때 개별 요인들이 자산 격차, 특히 하위 40백분위의 저자산층과 상위 10, 5, 1백분위의 고자산층 간의 차이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격차를 유발하거나 완화하는 특정 요인과의 염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1. 분석자료

자산 격차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과 소비, 자산 등의 종합 분포를 파악하여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는 지정통계이다(통계청, 2025.3.28., pp.1-2).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모든 가구와 가구원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1년을 주기로 하는 반복 횟 단면 조사이다(통계청, 2025.3.28., p24). 매년 표본의 20%를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하는 연동패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통계청, 2025.3.28., pp.24-25).

분석자료에서는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한다(통계청, 2025.3.28., p.9). “조사 기준일 현재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구주와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 노후생활 등을 조사한다(통계청, 2025.3.28., pp.8-9). 가구 단위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정보를 제공하지만 원격접근하는 마이크로데이터에 한해서 소득과 자산, 부채는 명의 기준 개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과 지출의 유량(flow) 정보는 조사연도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연간 실태를 파악하고, 자산과 부채의 저량(stock) 정보는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실태를 파악한다. 부동산 자산이나 자동차 등 구입 시기의 화폐 가치가 변동되는 실물자산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파악하고, 해외 부동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환산한다.

조사방법은 표본가구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가구주 또는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배우자 등의 가구원이 각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조사나 인터넷조사를 병행한다(통계청, 2025.3.28., p.32). 가구의 일반적 특성 이외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정보 역시 조사를 통해 획득하지만, 2017년 자료부터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 자료를 연계한다. 국세청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를 조사자료와 연계할 때는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성명 등 개인고유정보를 조합하는 식별키를 활용한다(통계청, 2025.3.28., pp.63-66).

이 장에서는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자산 격차 요인을 탐색한다. 분석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행정데이터 연계를 시작한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자산은 소득 및 자산의 개인화 추세를 고려해 명의 기준 개인 단위 분석을 시도하지만, 소득처럼 가구에서 공유한다는 점에서 가구 단위 분석을 병행한다(Canberra Group, 2011, pp.24-25). 개인 단위 분석은 분석 자료에서 제공하는 명의 기준 소득 및 자산, 부채 정보를 활용한다. 개인은 민

법에 의한 결혼 가능 연령을 고려해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개인 단위 분석에서 재산 및 부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석하되 보유 여부는 전체 18세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 단위 자산에서 성인 1인당 자산을 고려한 연구도 있지만(Piketty, Yang, & Zucman, 2019; Zucman, 2019), 가구 규모 경제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Pfeffer & Waitkus(2021)에 의한 균등화 방식을 채택한다(Buhmann et al., 1988; Lanjouw & Ravallion, 1995).

〈표 4-1〉은 이 장에서 활용하는 분석자료의 특성과 변수를 보여준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인 총자산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순자산을 고려한다. 순자산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한다(Canberra Group, 2011, p.70). 제2장에서 검토한 자산 격차에 대한 주요 요인을 고려해 설명변수는 가구 혹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산 구성요소, 정책 이용으로 구성한다.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부표 4-1〉과 〈부표 4-2〉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다.

〈표 4-1〉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자료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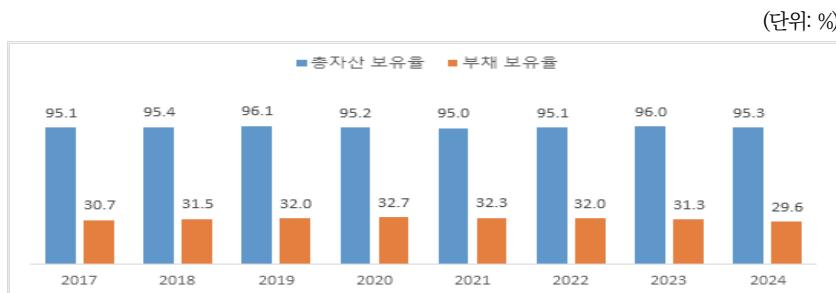
구분		내용	
단위	개인	가구	
시간적 범위		2017~2024년	
공간적 범위		전국	
결과변수	개인 자산 보유 여부, 수준(level), 백분위(quintile)	가구 균등화 자산 수준(level), 백분위(quintile)	
설명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나이와 나이 제곱,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취약계층 여부	가구주 나이와 나이 제곱,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주 종사상 지위, 취약계층 여부
		주택 점유형태, 아파트, 가구주 동거 여부, 가구원 수	주택 점유형태, 아파트, 가구주 거주지역(수도권),
	자산 구성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가구 저축(=소득-지출),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정책 이용	-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담보/신용, 전월세보증금)
가중치	가구 가중치	개인 가중치 (=가구 가중치 × 가구원 수)	

출처: 연구진 작성.

2. 분석자료의 자산 현황

다음 그림은 개인이 본인 명의의 자산 혹은 부채를 보유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는 비율은 2017년 95.1%에서 2024년 95.3%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본인 명의의 부채를 보유한 비율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9~33% 범위에서 유지된다. 자산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고, 금융자산은 예금 및 적금 등을 포함한다. 개인 명의의 통장이 있고, 통장에 1월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자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산 보유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부채를 생산하는 주체는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나 배우자 등 생계를 책임지는 일부 가구원, 혹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가구원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채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림 4-1] 개인 자산 및 부채 보유율(2017~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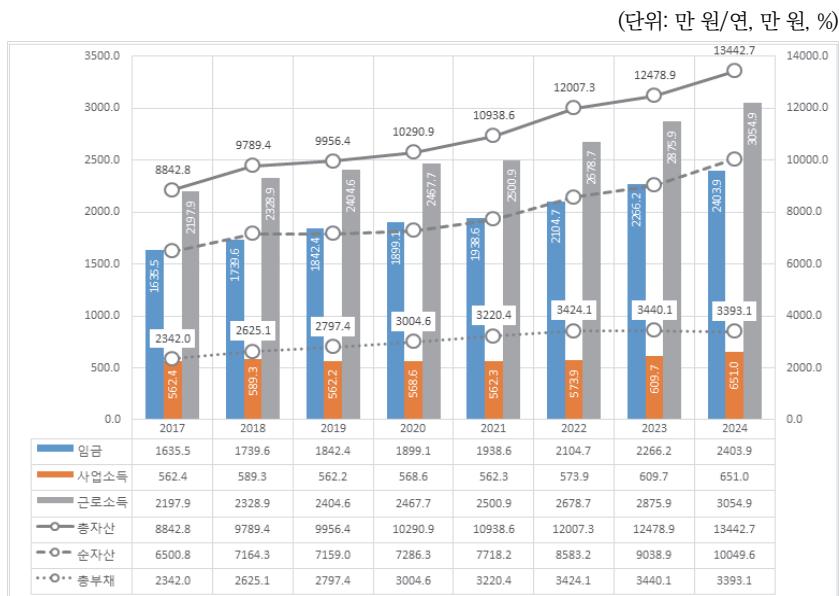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각 연도.

다음 그림은 명의 기준 개인의 소득과 자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소득 및 자산의 추이와 다르게 개인 소득과 자산은 모든 지표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구 자산이 가구원 명의 자산의 총합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총자산과 순자산이 202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추세와 이

질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 개인 소득 및 자산(2012~2024년)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각 연도.

분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구 소득과 자산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가구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은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총자산과 총부채 수준은 2023년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부채 수준이 단조롭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총자산과 순자산의 동향이 평행한 것을 고려하면, 2023년 가구 자산액의 일시적 감소는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부동산 가격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수 있다.¹¹⁾

11) 주택매매가격지수(종합)는 2023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4-3] 가구 소득 및 자산(2017~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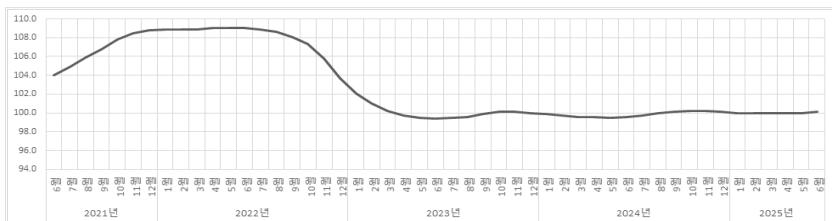
(단위: 만 원/연, 만 원)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각 연도.

[참고그림 1]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종합, 2021.6.~2024.6.)



주: 2025년 5월 가격을 100으로 두고 산출한 월별 지수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2025.7.28.). 통계청 KOSIS(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A012&conn_path=I2에서 2025.8.7. 데이터 추출 후 연구진 작성).

3. 분석방법

자산 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결과변수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구 및 개인 자산의 주요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는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한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결과변수가 수준(level)일 경우 반복 횟단면 자료의 통합 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보유 여부일 경우 프로빗 회귀분석을, 격차의 대리변수로서 분위수일 경우 무조건부 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UQR)에 기반한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이하 RIF)를 이용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Firpo, Fortin, & Lemieux, 2009)을 활용한다.

〈표 4-2〉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모형

구분	분석모형	주요 결과변수
추이와 실태	기술통계분석	수준
영향요인	Pooled OLS 회귀분석, 프로빗 회귀분석, 무조건분위회귀분석	수준, 보유 여부, 분위

출처: 연구진 작성.

무조건분위회귀분석(Firpo, Fortin, & Lemieux, 2009)은 임금이나 순자산 불평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된다(김계숙, 민인식, 2013; 김수현, 2015; 최충, 정성엽, 2017; 박현준, 진창하, 2020; 김현경, 2024; 배세영, 2024). Firpo, Fortin, & Lemieux(2009)가 제안한 RIF는 결과변수의 무조건부 분포에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 이하 IF)를 더한 값이다. 분위수 q_τ 를 결과변수로 할 때, RIF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Firpo, Fortin, & Lemieux, 2009, p.958). IF가 무조건부 분포에 미치는 모든 영향의 합이 0에 수렴하고, 반복 기댓값의 원칙을 적용하면 RIF

함수에 의한 값을 결과변수로 이용해 설명변수의 한계효과와 일치하는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Firpo, Fortin, & Lemieux, 2009, p.956; 김수현, 2015, pp.121-126; 김현경, 2024, pp.7-9). 분위수를 결과변수로 하는 무조건분위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와 일치하는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Firpo, Fortin, & Lemieux, 2009).

$$RIF(y; q_\tau) = q_\tau + IF(y; q_\tau)$$

이 장에서는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한다. 따라서 각 변수의 한계효과는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산 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영향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절 분석 결과

1. 개인 자산 분위 영향요인¹²⁾

가. 개인 총자산

총자산 기준 개인 단위 자산 분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분석 결과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산의 보유여부와 로그로 변환한 총자산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12)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과 총부채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부표 4-3>과 <부표 4-4>에서 제시함.

총자산 보유 여부와 수준은 나이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인다. 경제활동기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노년기에 자산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궤적에 부합한다. 나이에 따른 역U자 형태는 자산 하위 40백분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효한데, 상위 5백분위에서는 나이에 따른 U자 형태를 띠고 상위 10백분위와 1백분위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한편, 상위 10백분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생애주기 전반에서 점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짐작되지만 5백분위와 1백분위의 초고자산층에서는 나이에 따른 영향이 이질적이다.

성별은 개인 단위의 자산 보유 여부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자산 보유와 수준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월하다기보다 자산의 성별 격차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경제 및 자산 구성 등에 의한 구조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Sieminska, Frick, & Grabka, 2010; Ruel & Hauser, 2013; Bessière & Puglises, 2025). 이런 맥락에서 성별의 영향은 혼인상태와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다. 미혼 집단에 비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 혹은 이혼하여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산의 보유 여부 확률이나 수준이 높다. 성별과 혼인상태의 상호작용을 보면, 특히 남성 기혼자의 자산 보유 확률과 수준이 높다. 한편, 사별했거나 이혼한 남성의 자산 보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편 자산의 수준은 유의하게 높다.

성별과 혼인상태,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자산 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성일 경우 자산 하위 50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위 1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남성일 경우 저자산층에 머무를 확률은 낮고, 초고자산가일 확률은 높다. 미혼 집단과 비교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하위 40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상위 10, 5, 1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별과

이혼상태는 자산 하위 10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혼 경험이 자산 분위를 낮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별과 혼인상태의 상호작용을 보면 기혼 남성이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사별과 이혼은 하위 40백분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별은 혼인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을 보유할 확률과 자산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육 프리미엄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자산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이 확인된다. 다만, 계수를 들여다보면 고자산가 집단에 대한 교육 프리미엄이 보다 강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그리고 무직자가 자산을 보유할 확률과 수준이 낮다. 고용원 유무와 무관하게 자영업을 하는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자산 보유 확률과 수준이 높다. 자산 하위 40%와 고자산 분위에 대해서는 임시·일용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무직자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이들 집단이 자산 하위 40백분위보다 더 낮은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영업자는 자산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계수는 상위 분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 고자산층은 자영업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위 1% 초고자산 분위에 대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장애를 가진 여부는 자산을 보유할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편,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산 분위에 대해서는 하위 40, 상위 10, 5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인의 자산 분위가 자산 하위 40백분위보다 더 낮은 분위일 가능성성이 높다.

가구주와 동거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자산을 보유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한편, 자산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위별로는 하위 40, 상위 10, 5백분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편, 상위 1백분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초고자산가는 가구주로부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기보다 가구주와 동거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3〉 개인 총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나이	0.021*** (0.005)	0.109*** (0.004)	0.157*** (0.005)	0.036*** (0.006)	0.022** (0.007)	-0.017 (0.011)
나이제곱/100	-0.020*** (0.005)	-0.086*** (0.004)	-0.142*** (0.005)	0.010 (0.006)	0.018* (0.008)	0.056*** (0.013)
남성	-0.066* (0.027)	-0.088** (0.028)	-0.096* (0.042)	0.003 (0.021)	-0.001 (0.020)	0.057* (0.023)
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423*** (0.045)	0.279*** (0.032)	0.650*** (0.048)	-0.584*** (0.041)	-0.548*** (0.043)	-0.372*** (0.058)
사별	0.395*** (0.084)	0.528*** (0.061)	0.855*** (0.078)	0.000 (0.096)	-0.055 (0.104)	-0.139 (0.125)
이혼	0.454*** (0.085)	0.406*** (0.054)	0.555*** (0.078)	0.040 (0.077)	0.101 (0.084)	-0.057 (0.067)
성별×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351*** (0.047)	1.065*** (0.034)	0.962*** (0.050)	1.651*** (0.047)	1.394*** (0.051)	0.852*** (0.077)
남성×사별	0.213 (0.157)	0.392** (0.133)	0.365* (0.144)	0.263 (0.264)	0.301 (0.333)	0.332 (0.379)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남성×이혼	-0.083 (0.106)	-0.178* (0.076)	-0.221* (0.103)	-0.141 (0.104)	-0.186+ (0.108)	-0.098 (0.094)
가구원 수	-0.119*** (0.013)	-0.152*** (0.008)	-0.216*** (0.011)	-0.052*** (0.014)	-0.016 (0.016)	0.018 (0.023)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144*** (0.044)	0.292*** (0.029)	0.222*** (0.037)	0.619*** (0.053)	0.582*** (0.061)	0.680*** (0.073)
대학(3년제 이하)	0.236*** (0.052)	0.605*** (0.034)	0.524*** (0.044)	0.954*** (0.063)	0.871*** (0.073)	0.982*** (0.100)
대학(4년제 이상)	0.273*** (0.049)	0.724*** (0.032)	0.620*** (0.040)	1.098*** (0.061)	1.069*** (0.072)	1.183*** (0.101)
대학원 이상	0.231*** (0.065)	0.902*** (0.042)	0.671*** (0.050)	1.632*** (0.099)	1.832*** (0.128)	2.358*** (0.234)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83*** (0.033)	-0.610*** (0.022)	-0.775*** (0.033)	-0.214*** (0.031)	-0.099** (0.033)	-0.019 (0.045)
고용원 있는 자영자	0.315*** (0.094)	0.990*** (0.033)	0.529*** (0.031)	2.162*** (0.114)	2.401*** (0.157)	2.568*** (0.305)
고용원 없는 자영자	0.218*** (0.050)	0.718*** (0.022)	0.644*** (0.027)	0.877*** (0.057)	0.611*** (0.064)	0.105 (0.073)
무급가족종사자	-0.482*** (0.081)	-0.329*** (0.067)	-0.401*** (0.113)	-0.318*** (0.061)	-0.169** (0.056)	-0.037 (0.060)
기타 종사자	-0.113 (0.072)	-0.196*** (0.048)	-0.308*** (0.073)	-0.164* (0.072)	-0.130+ (0.075)	0.049 (0.168)
무직자	-0.538*** (0.030)	-0.487*** (0.022)	-0.637*** (0.031)	0.065* (0.030)	0.105** (0.033)	0.133*** (0.051)
장애인	-0.068 (0.050)	-0.168*** (0.045)	-0.108* (0.054)	-0.309*** (0.087)	-0.276** (0.093)	-0.187 (0.124)
가구주와 동거	0.207*** (0.038)	0.026 (0.041)	0.067 (0.053)	0.130+ (0.073)	0.171+ (0.088)	0.371** (0.118)
가구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개인 근로/사업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상수	1.292*** (0.124)	3.398*** (0.098)	2.336*** (0.132)	6.915*** (0.160)	8.104*** (0.181)	9.911*** (0.289)
N	211329	206856	206856	206856	206856	206856
pseudo / adj. R-sq	0.167	0.418	0.284	0.208	0.138	0.043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소득 및 자산은 명의 기준임. 보유 여부는 프로빗 분석함. 자산 유/무값이 있는 표본에 한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년.

나. 개인 순자산

여기에서는 순자산 기준 개인 단위의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한다. 순자산은 제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것으로, 총자산 기준 분석에 비해 부채를 이용하는 행태가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다.

순자산 기준 개인 자산 보유 여부와 수준은 연령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인다. 이는 총자산 기준 분석과 동일하다. 하위 40백분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U자 형태가, 상위 10, 5백분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U자 형태가 나타난다. 총자산과 달리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효과가 자산 분위에서도 확인된다.

성별은 총자산 기준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혼인상태와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산을 보유할 확률이나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낮다. 그런데 자산 분위에 대해서는 하위 40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상위 1%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 남성이 순자산 기준 고자산 분위를 점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혼인상태와 상호작용항을 통제한 것이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 혹은 이혼한 경우가 자산을 보유할 확률은 높은 반면 수준은 낮다. 분위별로는 미혼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별 혹은 이혼한 경우 하위 40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시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것이다. 상호작용항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순자산을 보유할 확률과 수준 모두 높다. 그리고 모든 분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남성이 사별한 경우 순자산 수준과 하위 40백분위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혼한 경우에는 순자산 수준에만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순자산 역시 성별은 혼인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순자산을 보유할 확률과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상위 10, 5, 1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분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시 계수를 들여다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자산 분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교육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많을수록 순자산을 보유할 확률과 수준이 낮다. 분위별로는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10, 5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상위 1백분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총자산은 많아질 수 있겠으나, 가구와 자산을 공유하면서 개인 단위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영향은 총자산 기준 분석과 유사하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임금근로자와 기타 종사자, 무직자가 순자산을 보유할 확률이나 그 수준은 낮다. 그리고 자산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10, 5백분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하위 40백분위보다 더 낮은 자산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자영업자인 경우 순자산을 보유할 확률과 그 수준이 높다. 하위 40, 상위 10, 5백분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하위 40백분위보다는 높은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총자산 기준 분석과 동일하게 상위 1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순자산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그리고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어,

장애인이 순자산 기준에서도 낮은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성이 높다.

가구주와 동거하면 순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만, 그 수준은 낮다. 순자산 하위 40백분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상위 1백분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구주와 동거하며 지출을 경감함으로써 개인 단위의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4〉 개인 순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나이	0.024*** (0.005)	0.076*** (0.007)	0.164*** (0.008)	0.035*** (0.006)	0.018* (0.007)	-0.014 (0.011)
나이제곱/100	-0.024*** (0.005)	-0.022** (0.007)	-0.120*** (0.008)	0.018** (0.007)	0.027*** (0.008)	0.054*** (0.012)
남성	-0.056* (0.027)	-0.123** (0.038)	-0.188** (0.066)	0.011 (0.022)	0.008 (0.021)	0.065** (0.024)
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468*** (0.046)	-0.944*** (0.058)	-0.302*** (0.077)	-0.627*** (0.042)	-0.553*** (0.043)	-0.377*** (0.055)
사별	0.425*** (0.087)	-1.038*** (0.103)	-0.567*** (0.126)	-0.147 (0.100)	-0.144 (0.102)	-0.121 (0.123)
이혼	0.444*** (0.086)	-1.379*** (0.105)	-0.923*** (0.123)	-0.067 (0.078)	0.068 (0.085)	-0.017 (0.074)
성별×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345*** (0.048)	0.825*** (0.059)	0.765*** (0.082)	1.631*** (0.048)	1.380*** (0.051)	0.865*** (0.077)
남성×사별	0.175 (0.154)	0.605** (0.201)	0.764*** (0.224)	0.307 (0.278)	0.396 (0.343)	0.406 (0.444)
남성×이혼	0.009 (0.111)	0.372** (0.139)	0.221 (0.162)	-0.124 (0.106)	-0.143 (0.111)	-0.155 (0.095)
가구원 수	-0.102*** (0.012)	-0.122*** (0.015)	-0.215*** (0.018)	-0.071*** (0.014)	-0.035* (0.016)	0.003 (0.022)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147*** (0.043)	0.081 (0.050)	0.029 (0.058)	0.631*** (0.056)	0.604*** (0.062)	0.674*** (0.075)
대학(3년제 이하)	0.226*** (0.051)	0.320*** (0.063)	0.331*** (0.072)	0.916*** (0.065)	0.878*** (0.074)	0.974*** (0.100)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대학(4년제 이상)	0.276*** (0.048)	0.474*** (0.058)	0.446*** (0.066)	1.070*** (0.063)	1.084*** (0.072)	1.153*** (0.100)
대학원 이상	0.247*** (0.065)	0.733*** (0.088)	0.555*** (0.091)	1.660*** (0.104)	1.840*** (0.128)	2.326*** (0.231)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76*** (0.035)	-0.360*** (0.042)	-0.741*** (0.051)	-0.277*** (0.033)	-0.133*** (0.033)	-0.054 (0.043)
고용원 있는 자영자	0.366*** (0.091)	1.094*** (0.088)	0.726*** (0.079)	1.787*** (0.113)	2.032*** (0.152)	2.097*** (0.285)
고용원 없는 자영자	0.249*** (0.050)	0.927*** (0.050)	0.917*** (0.051)	0.823*** (0.058)	0.560*** (0.064)	0.041 (0.068)
무급가족종사자	-0.478*** (0.083)	-0.551*** (0.136)	-0.649*** (0.178)	-0.413*** (0.067)	-0.245*** (0.058)	-0.121* (0.056)
기타 종사자	-0.113 (0.080)	-0.288** (0.104)	-0.357** (0.117)	-0.127 (0.081)	-0.172* (0.075)	0.030 (0.167)
무직자	-0.549*** (0.030)	-0.276*** (0.038)	-0.701*** (0.049)	0.009 (0.032)	0.062+ (0.034)	0.093+ (0.051)
장애인	-0.068 (0.051)	-0.204* (0.087)	-0.212* (0.097)	-0.267** (0.092)	-0.293** (0.098)	-0.231* (0.114)
가구주와 동거	0.207*** (0.039)	-0.183** (0.063)	-0.239** (0.086)	0.038 (0.076)	0.111 (0.089)	0.284* (0.122)
가구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개인 근로/시업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상수	1.227*** (0.125)	3.091*** (0.174)	1.522*** (0.217)	6.725*** (0.166)	7.884*** (0.182)	9.627*** (0.274)
N	211329	207119	207119	207119	207119	207119
pseudo / adj. R-sq	0.175	0.121	0.110	0.191	0.129	0.041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소득 및 자산은 명의 기준임. 보유 여부

는 프로빗 분석함. 자산 유/무값이 있는 표본에 한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년.

2. 가구 자산 분위 영향요인¹³⁾

가. 가구 총자산

가구 균등화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 분위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가구주 연령에 따라 총자산 수준은 역U자 형태를 보인다.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10, 5백분위에 대해서도 역U자 형태를 띠어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분위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단위 분석과 동일하게 가구주의 성별은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남성 가구주의 자산 수준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산 분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 이혼한 경우 총 자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하위 40, 상위 10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구주의 성별과 혼인상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 가구주의 자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성별과 혼인상태의 조합에 따라 가구 내 자산이 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산 수준이 높고, 모든 자산 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계수를 들여다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 연한이 길어질수록 총자산 수준이 높고, 각 자산 분위에 포함될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편, 임시·일용 임금근로자와 기타 종

13)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균등화 총부채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부표 4-5>와 <부표 4-6>에서 제시함.

사자는 총자산 수준이 낮다. 분위별로는 임시·일용 임금근로자는 하위 40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더 낮은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한편, 상위 10, 5, 1백분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초고자산 가구 가구주의 임시·일용직 고용상태와 질이 저자산층에 비해 이질적일 수 있다. 무직자는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10, 5, 1백분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역시 가구 자산은 가구원의 자산의 총합으로서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 이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편,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자영업자는 총자산 수준이 높고, 하위 40백분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위 10, 5, 1백분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규모가 있는 자영업이 유리할 수 있다.

가구 내 노인이 있으면 자산 수준이 높을 수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기에 축적한 자산 수준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노인이 있는 가구는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10, 5, 1백분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분위가 높아질수록 계수가 커져 초고자산가의 경우 노인이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자산 수준이 낮다. 이들 가구는 자산 하위 40백분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상위 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취약 집단으로서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하위 40백분위보다 더 낮은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전세인 경우 총자산 수준이 높은 데, 월세거나 기타이면 수준이 낮다. 한편, 전세인 경우 하위 40백분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위 1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하위 분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월세인 경우 하위 40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한편, 보증금 없는 월세는 상위 10, 5백분위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고자산층이 월세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질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 총자산 수준이 높은데,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혹은 수도권 거주 여부가 중상층 이상의 자산 분위에 머무를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

월소득에서 월지출을 감한 저축액이 낮을수록 총자산액이 높고, 모든 자산 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월지출에 대출 상환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자산 분위에 대해서는 저축액의 절대액보다는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될 수 있다.

총자산에서 거주주택 자산 혹은 거주주택 자산 이외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이 높고,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혹은 수도권 거주와 유사하게 주택 혹은 부동산 자산 등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행태가 중상층 이상의 자산 분위에 머물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수준이 높을수록 총자산 수준이 높고, 역시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 가능함을 짐작 할 수 있다.

〈표 4-5〉 가구 균등화 총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로그 총자산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가구주 나이	0.027*** (0.003)	0.028*** (0.003)	0.033*** (0.004)	0.029*** (0.005)	0.019+ (0.010)
가구주 나이제곱/100	-0.020*** (0.003)	-0.024*** (0.003)	-0.014*** (0.003)	-0.009* (0.005)	0.003 (0.010)
남성 가구주	-0.127*** (0.030)	-0.016 (0.038)	-0.068 (0.044)	-0.056 (0.049)	-0.034 (0.077)
가구주 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156*** (0.030)	-0.104* (0.041)	-0.308*** (0.057)	-0.275*** (0.075)	-0.107 (0.141)
사별	-0.217*** (0.030)	-0.066+ (0.037)	-0.156** (0.049)	-0.114+ (0.062)	-0.229* (0.109)
이혼	-0.183*** (0.032)	-0.115** (0.039)	-0.091+ (0.049)	-0.061 (0.061)	-0.091 (0.095)
가구주 성별×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122*** (0.035)	0.082+ (0.047)	0.097 (0.061)	0.030 (0.078)	-0.206 (0.144)
남성×사별	0.092+ (0.051)	0.053 (0.054)	0.036 (0.073)	0.001 (0.099)	0.049 (0.207)
남성×이혼	-0.109* (0.042)	-0.045 (0.050)	-0.053 (0.057)	-0.090 (0.067)	-0.171+ (0.094)
가구주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206*** (0.014)	0.115*** (0.017)	0.277*** (0.023)	0.344*** (0.029)	0.398*** (0.049)
대학(3년제 이하)	0.322*** (0.018)	0.241*** (0.024)	0.365*** (0.032)	0.488*** (0.042)	0.655*** (0.075)
대학(4년제 이상)	0.482*** (0.017)	0.386*** (0.020)	0.656*** (0.031)	0.731*** (0.042)	0.849*** (0.081)
대학원 이상	0.577*** (0.022)	0.368*** (0.027)	1.106*** (0.055)	1.376*** (0.084)	1.421*** (0.167)
가구주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25*** (0.014)	-0.190*** (0.019)	0.140*** (0.020)	0.201*** (0.027)	0.256*** (0.044)
고용월 있는 자영자	0.407*** (0.017)	0.331*** (0.022)	0.608*** (0.053)	0.735*** (0.081)	0.819*** (0.161)
고용원 없는 자영자	0.224*** (0.012)	0.229*** (0.017)	0.016 (0.025)	-0.039 (0.030)	0.040 (0.058)
무급가족종사자	0.065 (0.117)	0.300+ (0.161)	-0.335 (0.297)	0.192 (0.479)	0.405 (0.976)
기타 종사자	-0.067* (0.033)	-0.039 (0.048)	-0.088 (0.057)	-0.093 (0.067)	-0.088 (0.063)

11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로그 총자산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무직자	-0.004 (0.014)	0.083*** (0.016)	0.406*** (0.027)	0.459*** (0.039)	0.331*** (0.077)
노인 있는 가구	0.115*** (0.017)	0.092*** (0.020)	0.069* (0.030)	0.129** (0.044)	0.358*** (0.103)
한부모 가구	-0.129*** (0.033)	-0.180*** (0.036)	0.044 (0.040)	0.042 (0.041)	0.121* (0.053)
장애인 있는 가구	-0.174*** (0.014)	-0.127*** (0.017)	-0.095*** (0.024)	-0.094** (0.031)	-0.096+ (0.051)
주택 접유형태(준거집단=자가)					
전세	0.609*** (0.023)	0.286*** (0.035)	-0.039 (0.055)	-0.090 (0.074)	-0.317* (0.131)
보증금 있는 월세	-0.445*** (0.026)	-0.746*** (0.040)	0.010 (0.056)	0.025 (0.074)	-0.186 (0.117)
보증금 없는 월세	-2.061*** (0.080)	-0.618*** (0.048)	0.273*** (0.063)	0.270*** (0.078)	0.003 (0.112)
기타	-1.149*** (0.038)	-0.524*** (0.042)	-0.013 (0.057)	-0.052 (0.075)	-0.276* (0.125)
아파트 거주	0.238*** (0.009)	0.356*** (0.012)	0.156*** (0.017)	0.149*** (0.023)	0.137*** (0.041)
수도권 거주	0.259*** (0.009)	0.275*** (0.012)	0.500*** (0.018)	0.484*** (0.024)	0.452*** (0.041)
로그 저축액	-0.072*** (0.002)	-0.058*** (0.002)	-0.061*** (0.003)	-0.066*** (0.005)	-0.064*** (0.010)
거주주택 자산/총자산	0.009*** (0.000)	0.006*** (0.000)	-0.004*** (0.001)	-0.006*** (0.001)	-0.010*** (0.002)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총자산	0.025*** (0.000)	0.020*** (0.000)	0.023*** (0.001)	0.023*** (0.001)	0.020*** (0.002)
로그 주택담보대출	0.075*** (0.002)	0.081*** (0.003)	0.074*** (0.004)	0.078*** (0.005)	0.059*** (0.009)
가구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상수	6.555*** (0.076)	6.818*** (0.092)	8.214*** (0.118)	8.667*** (0.156)	9.954*** (0.278)
N	146154	146154	146154	146154	146154
adj. R-sq	0.718	0.542	0.288	0.195	0.061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가구 자산은 로그로 변환하였음.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년.

나. 가구 순자산

다음 <표 4-6>은 순자산 기준 자산 분위별 영향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순자산 수준은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를 보이지 않는 한편, 연령이 많아 질수록 자산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하위 40백분위, 상위 10백분위에서는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가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은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혼인상태와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 가구주의 순자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상위 10백분위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시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미혼 집단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 혹은 이혼한 경우 자산 수준과 모든 자산 분위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다. 반면, 가구주 성별과 혼인상태의 상호작용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이 경우 하위 40백분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별한 남성 가구주 역시 순자산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교육수준이 역시 높을수록 순자산 수준 또한 높고,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수를 들여다보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 수준이 더욱 높고, 고자산 분위에 속할 확률 역시 증가하는 교육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기타 종사자의 순자산 수준이 낮다. 한편, 분위별로는 임시·일용 임금근로자가 하위 40백분위일 확률이 낮고, 상위 10, 5, 1백분위에 속할 확률이 높다. 무직자는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속할 확률이 모두 높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 자산 분위에 대해서는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획일적이지

않을 가능성과 가구원 구성의 영향일 수 있다. 한편,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순자산 수준이 높고,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면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비해 월세이거나 기타 형태이면 순자산 수준이 낮다. 그리고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세이거나 월세, 혹은 기타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순자산 기준 분위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에 살거나 수도권에 사는 경우 순자산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주택의 형태와 거주지역이 순자산 기준 중상층 이상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월소득에서 월지출을 감한 저축액은 낮을수록 순자산 수준이 높으며,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이를 통해) 저축액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 순자산 기준의 분위를 높이는 데에는 주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 혹은 거구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순자산 수준이 높고, 하위 40, 상위 10, 5, 1백분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혹은 수도권 거주 여부와 유사하게 순자산 기준 중상층 이상을 형성하는 데에 거주주택과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 축적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액은 총자산과는 달리 순자산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위 10, 5, 1백분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쳐, 실물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을 이용하는 행태가 순자산 기준 고자산 층을 형성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표 4-6〉 가구 균등화 순자산 분위에 대한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로그 순자산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가구주 나이	0.016*** (0.005)	0.050*** (0.003)	0.039*** (0.004)	0.029*** (0.005)	0.015 (0.010)
가구주 나이제곱/100	-0.004 (0.004)	-0.036*** (0.003)	-0.016*** (0.003)	-0.007 (0.005)	0.009 (0.010)
남성 가구주	-0.253*** (0.064)	-0.045 (0.043)	-0.098* (0.042)	-0.032 (0.048)	-0.031 (0.078)
가구주 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348*** (0.066)	-0.254*** (0.049)	-0.376*** (0.056)	-0.324*** (0.069)	-0.274* (0.119)
사별	-0.323*** (0.061)	-0.233*** (0.043)	-0.252*** (0.049)	-0.162** (0.060)	-0.207+ (0.112)
이혼	-0.443*** (0.069)	-0.276*** (0.045)	-0.216*** (0.049)	-0.135* (0.057)	-0.108 (0.095)
가구주 성별×혼인상태(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281*** (0.076)	0.147** (0.056)	0.104+ (0.059)	0.017 (0.073)	-0.052 (0.119)
남성×사별	0.180* (0.089)	0.071 (0.062)	0.120 (0.076)	0.020 (0.101)	0.054 (0.211)
남성×이혼	-0.107 (0.092)	-0.057 (0.057)	0.018 (0.055)	-0.068 (0.064)	-0.142 (0.093)
가구주 교육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142*** (0.025)	0.080*** (0.019)	0.307*** (0.023)	0.371*** (0.029)	0.412*** (0.049)
대학(3년제 이하)	0.281*** (0.036)	0.209*** (0.028)	0.398*** (0.032)	0.525*** (0.041)	0.667*** (0.074)
대학(4년제 이상)	0.475*** (0.030)	0.428*** (0.023)	0.673*** (0.031)	0.724*** (0.041)	0.875*** (0.081)
대학원 이상	0.560*** (0.040)	0.408*** (0.032)	1.164*** (0.056)	1.430*** (0.083)	1.450*** (0.166)
가구주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81*** (0.030)	-0.187*** (0.022)	0.130*** (0.020)	0.206*** (0.026)	0.271*** (0.044)
고용월 있는 자영자	0.327*** (0.034)	0.297*** (0.027)	0.456*** (0.051)	0.559*** (0.076)	0.734*** (0.160)
고용원 없는 자영자	0.173*** (0.025)	0.176*** (0.020)	0.028 (0.024)	0.013 (0.029)	0.040 (0.056)
무급가족종사자	-0.729 (0.622)	0.136 (0.260)	-0.292 (0.282)	-0.446 (0.282)	0.432 (0.953)
기타 종사자	-0.183* (0.081)	-0.128* (0.052)	-0.044 (0.062)	-0.068 (0.066)	-0.022 (0.105)

11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로그 순자산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무직자	-0.006 (0.026)	0.085*** (0.019)	0.428*** (0.027)	0.496*** (0.039)	0.344*** (0.076)
노인 있는 가구	0.213*** (0.029)	0.134*** (0.022)	0.112*** (0.031)	0.190*** (0.045)	0.393*** (0.102)
한부모 가구	-0.300*** (0.076)	-0.126** (0.041)	0.098* (0.039)	0.062 (0.040)	0.148** (0.052)
장애인 있는 가구	-0.165*** (0.024)	-0.162*** (0.020)	-0.083*** (0.024)	-0.090** (0.031)	-0.066 (0.053)
주택 점유형태(준거집단=자가)					
전세	-0.071 (0.045)	-0.499*** (0.042)	-0.353*** (0.052)	-0.377*** (0.068)	-0.490*** (0.128)
보증금 있는 월세	-1.759*** (0.052)	-1.681*** (0.045)	-0.313*** (0.053)	-0.265*** (0.067)	-0.335** (0.116)
보증금 없는 월세	-3.465*** (0.114)	-1.703*** (0.054)	-0.055 (0.059)	-0.009 (0.071)	-0.110 (0.110)
기타	-2.251*** (0.065)	-1.541*** (0.048)	-0.312*** (0.054)	-0.312*** (0.069)	-0.392** (0.120)
아파트 거주	0.356*** (0.017)	0.363*** (0.014)	0.183*** (0.017)	0.167*** (0.022)	0.158*** (0.039)
수도권 거주	0.260*** (0.017)	0.294*** (0.014)	0.485*** (0.018)	0.490*** (0.023)	0.476*** (0.041)
로그 저축액	-0.064*** (0.004)	-0.056*** (0.003)	-0.056*** (0.003)	-0.059*** (0.005)	-0.065*** (0.009)
거주주택 자산/총자산	0.008*** (0.000)	0.004*** (0.000)	-0.007*** (0.001)	-0.009*** (0.001)	-0.013*** (0.002)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총자산	0.024*** (0.000)	0.019*** (0.000)	0.017*** (0.001)	0.017*** (0.001)	0.014*** (0.002)
로그 주택담보대출	0.000 (0.005)	0.003 (0.004)	0.063*** (0.004)	0.070*** (0.005)	0.068*** (0.009)
가구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상수	7.124*** (0.142)	6.746*** (0.107)	8.125*** (0.117)	8.673*** (0.150)	9.923*** (0.272)
N	146154	146154	146154	146154	146154
adj. R-sq	0.505	0.486	0.263	0.177	0.058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가구 자산은 로그로 변환하였음.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년.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횡단 반복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로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7~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과 가구 단위 자산 분위, 즉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제2장 제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에 주목하였다. 각 요인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검증하기보다 실제 삶에 가까울 수 있도록 다양한 요인을 설명변수로 투입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각 요인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한계효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자산 분위에 대해 노인 가구가 자산이 많고 비교적 중상층 이상에 분포하며,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를 확인하여 생애 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은 혼인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자산의 성별 격차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과 중상층 이상의 분위를 형성하는 교육 프리미엄이 자산에서도 존재한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을 점유하는 데에 가장 유리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나 기타 근로자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만,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원의 경제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 다소 이질적이다.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 등 전통적인 취약 집단은 자산 수준이 낮고, 비교적 하위 분위에 밀집해 있을 것으로 보여 자산의 측면에서도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 단위 자산에서는 자가 보유가 유리한데, 개인 단위에서는 주택 점유형태에서 다소의 이질성이 짐작된다. 특히 월세를 이용하는 행태는 고자산가가 자산을 축적하는 기제일 수 있으며, 이들은 아파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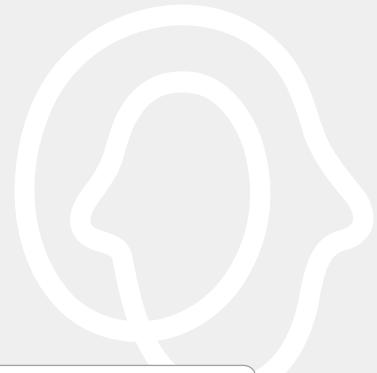
도권 주택 및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보다 대출이 자산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일 수 있다. 다만, 저축률이 분석자료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2000년대부터 현저히 줄었다는 점에서(김성아 외, 2023, p.34),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저축이 가지는 효용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 장의 분석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한국의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마이크로데이터로서 대표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반복 횟단면 조사자료로서 시간에 따른 자산 형성의 구조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자산 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언급되는 상속이나 증여 등 세대 간 이전 기제는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이 장의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내 개인 및 가구 단위에 집중하였으므로, 국가 단위 거시 지표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분석하고 국가 단위 패널분석을 시도하여 이 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 제3절 자산 구성의 유형화
- 제4절 자산 격차 영향요인 분석
- 제5절 소결

제 5 장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제1절 문제제기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多)요인을 실증분석한다. 특히 자산 구성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이 생애 동안 축적하는 자산의 수준, 그리고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한다. 자산은 ‘주택, 부채, 금융자산,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유했고 무엇에 더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 축적이 가속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상속 혹은 증여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추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한, 같은 수준의 부일지라도 어떤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부의 차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자기자본 외 차입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 변동이 이른바 자본 수익률을 배가하는 현상,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행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주택 중심의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인이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자산 형성에서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보다는 ‘수익’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자산 유형의 구성 차이가 자산 축적의 속도와 경로를 결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를 확대 혹은 고착시키는 문제는 한국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긴 시계열을 지닌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2007년 당시 자산 유형이 2023년 현재 자산 축적의 수준과 경로를 어떻게 달리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산 형성 초기인 19~34세 표본을 추

출해 청년기 자산 유형이 16년이 지난 자산 고착기인 35~50세 중장년의 자산 축적 현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유형별 자산 및 자산 관련 연속형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잠재집단을 도출하여, 2007년의 자산 유형이 2023년의 어떤 자산 유형과 수준으로 이행하는지 살펴본다. 셋째,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앞서 도출한 자산 유형이 2023년의 자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제2절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19차 가구 - 개인 결합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긴 시계열을 지니면서도 자산 연구에 필요한 중요 변수를 개인과 가구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자산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값을 개인에게 부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 외 노동소득은 개인 단위로 측정한 것을 사용하였고, 회귀모형에 투입한 제 변수들은 그 특성에 따라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의 정의와 측정에서 소개하였다.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자산 구성의 유형화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이하 LPA)을 통해 시도한다. LPA는 일반화 구조방정식(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SEM)에 기반한 분석기법으로, 모집단이 이질성을 지닌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관측되지 않은 잠재적인 그룹(계층)을 측정된 변수의 구조를 파악하여 도출해낸다. LPA는 범주형 잠재변수 모형(categorical latent variable modeling approach)으로, 연속형 변수들을 기반으로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잠재 하위 집단(latent subpopulations)을 식별하는 방법이다(Spurk et al., 2020; Collins & Lanza, 2013). 분석에 사용한 개체들은 측정변수들 – 여기에서는 유형별 자산과 부채, 노동소득 – 의 다른 패턴(configural profile)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을 가지며, LPA를 통해 각 개체는 특정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값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유형화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범주화가 갖는 단순화와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기인한다(Spurk et al., 2020). 하위 집단을 도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군집분석이 있지만, LPA는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추정하여 각 개체가 여러 집단에 속할 확률을 제공하는 확률적 모델링 접근이다. 도출한 하위 집단의 수와 모형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염밀한 통계적 지수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Collins & Lanza, 2013; Woo et al., 2018). 아울러 프로파일 간 형태의 차이(shape differences)와 수준의 차이(level differences)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데, 형태의 차이란 어느 하나의 프로파일의 일부 지표(측정변수)는 평균보다 높고 다른 지표는 낮은데, 다른 프로파일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나는 것, 수준의 차이란 한 프로파일의 모든 측정 변수의 평균이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 우리 연구에서는 유형별 자산의 구성이 프로파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특정 유형의 자산의 높낮이와 더불어 자산과 부채 노동소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경제력의 수준도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 작업은 단일 변수의 평균 비교나 회귀분석 등으로 설명하기 까다로운 질적으로 다른 구성(configurations)을 밝히는 데 유리하다(Zyphur, 2009).

LPA에서 사용한 측정변수, 즉 자산 구성의 유형을 결정하는 변수로 연

구자가 주목한 것은 실물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개인의 노동소득이다. 자산 유형 프로파일은 2007년과 2023년 양 시점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후속작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파일별 기술통계를 통해 자산 구성의 유형별 자산 격차를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07년 19~34세 청년 인구집단에 집중해 자산 구성 유형의 프로파일에 따라 2023년 중장년기에 접어들었을 시점에 자산의 축적이 진행된 추이를 살펴본다. 세 번째 후속작업으로는 도출한 2007년 시점 자산 구성 유형의 프로파일을 2023년 시점의 자산 격차 영향요인 분석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자산 구성의 유형이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제4장에서 활용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 방법을 준용한다.

LPA에 사용한 측정변수인 자산과 부채는 0이 많은, 우측으로 꼬리가 긴 편포(right-skewness)를 보이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자산과 부채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뒤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값을 개인에게 부여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이 제공하는 개인 가중치(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동일 가구에 속한 개인 개체의 가구 내 상관을 보정하기 위해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프로파일별 측정변수의 기술통계(〈표 5-2〉 참조)는 해석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로그변환한 값이 아니라 로그를 취하기 전의 균등화 값에 대하여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하여(표본가중치도 적용) 계산한 조건부 가중 평균을 제시하였다.

제3절 자산 구성의 유형화

1. 자산 유형 프로파일: 2007년

잠재프로파일분석(LPA) 결과 다섯 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모형의 적합성 판단에는 AIC, BIC, Entropy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AIC, BIC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리고 Entropy 지수를 통해 도출된 프로파일이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를 통해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잠재집단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을 좋은 수치로 간주한다. 이에 더해 도출된 잠재집단의 크기가 3% 이하로 극히 작은 경우가 없는지, 도출된 집단의 형태가 이론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따라 집단의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집단부터 6집단까지 집단의 수를 추가 지정할수록 AIC와 BI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Entropy는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집단 대비 집단 수를 3개로 늘린 경우 AIC와 BIC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Entropy 역시 0.980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4집단 모형에서는 AIC와 BIC의 추가적 감소가 관찰되었고, 5집단 모형에서는 AIC와 BIC가 2집단 대비 3집단의 수준으로 직전 모형에 비해 매우 크게 감소하였고, Entropy는 0.924로 다소 낮아졌으나 상당히 좋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반면, 6집단 모형은 AIC와 BIC가 감소하였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 자산 유형별 조건부 가중 평균값을 검토한 결과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집단 모형은 AIC와 BIC가 크게 개선되면서도 Entropy가 0.92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집단 간 구분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집단 크기(3% 이하

의 극히 작은 집단이 없는지 여부)와 이론적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5집단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5-1〉 잠재 프로파일 분석모형 적합도 결과: 2007년 19세 이상

Model	N	ll(model)	df	AIC	BIC	Entropy
class2	12,737	-124237.1	13	248500.3	248597.1	0.992
class3	12,737	-119051.0	18	238138.0	238272.1	0.980
class4	12,737	-118127.3	23	236300.6	236472.0	0.964
class5	12,737	-111337.7	28	222731.4	222940.0	0.924
class6	12,737	-110777.5	33	221621.0	221866.9	0.920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도출한 다섯 개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과 프로파일 도출에 사용한 측정 변수의 조건부 가중평균, 그리고 각 집단의 규모(비율)가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각 프로파일의 자산 구성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1〉은 일체의 부채나 부동산 자산이 없이 평균 수준 금융자산을 지닌 프로파일로, 개인의 노동소득도 낮다. 〈집단2〉는 평균에 근접한 중간 수준의 부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부동산은 없고, 금융자산도 〈집단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의 노동소득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집단의 부채는 뒤에 서술할 부동산 자산이 많은 프로파일들이 보유하는 부채와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3〉은 부채가 없음에도 평균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집단1〉과 〈집단2〉에 비해 다소 높지만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중간 수준의 개인 노동소득을 보인다. 〈집단4〉는 부채가 있는 프로파일 중 가장 적은 액수의 부채를 보유하면서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되기는 하였지만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금융자

산은 <집단1>과 <집단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 <집단5>는 부채가 매우 많으면서 부동산에 집중된 초고자산가형으로, 개인의 노동 소득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표에 제시한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묘사(명명)는 우선 백분위를 기준으로 ‘무/고/중/저’를 구분하고, 경곗값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대비 $\pm 10\%$ 범위를 고려하여 ‘고/중/저’로 조정하였다.¹⁴⁾ 백분위는 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지만, 절대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연구에서 도출한 <집단2>를 보더라도, 금융자산의 백분위는 51이라도 전체 평균에 비해 금융자산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자산이나 소득처럼 분포가 비대칭(오른쪽 꼬리가 긴 경우)인 변수는 백분위와 같은 상대적 수준과 평균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단순히 집단에 대한 명기이지만 상대적 수준인 백분위를 기본으로 고려하면서 절댓값이 평균 대비 $\pm 10\%$ 범위를 ‘중’으로, 그 외는 ‘고’, ‘저’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2>의 금융자산처럼 백분위 50~69 구간도 평균과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파일의 명명은 표에 제시하고, 본문의 서술에서는 <집단1~5>로 명기하였다.

다섯 개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은 자산 유형별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선 <집단1>은 부채와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고 금융자산은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3,783만 원). 이를 집단은 개인 노동 소득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1,679만 원)에 머물고 있으며, 자산이 금융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집단2>는 부채가 평균 수준(2,039만 원)으로 존재함에도 부동산은 없고, 금융자산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보다 낮

14) 무: 백분위 ≤ 5 또는 절대금액이 매우 적음.

저: 백분위 ≤ 49 이거나 백분위 50~69라도 평균보다 10% 이상 낮음.

중: 백분위 50~69이고 평균 $\pm 10\%$ 범위.

고: 백분위 ≥ 70 또는 평균보다 10% 이상 높음.

은 수준(3,056만 원)으로 다소 취약한 자산 구성을 보인다. 다만 노동소득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1,789만 원)이었다. <집단3>은 부채가 없으면서도 부동산 자산이 매우 많아(1억 7,887만 원)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 금융자산도 평균 이상(4,395만 원)이면서 노동소득은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에 꽤 근접한 수준(1,880만 원)이다. <집단4>는 일정 수준의 부채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중간 수준의 부동산 자산(부채 1,470만원, 부동산 1억 361만 원)을 가지면서, 금융자산(2,137만원)과 노동소득(1,833만원)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구조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집단5>는 부채(6,860만 원)와 부동산 자산(3억 598만 원)이 모두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하면서 금융자산(4,409만 원)도 평균 이상이고, 노동소득(2,658만 원) 또한 평균을 상회한다. 표에 명기된 것처럼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형’으로, 높은 부채를 통해 가장 큰 자산 규모를 실현하면서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부채(및 이자)를 충당하는 집단으로 해석된다.

〈표 5-2〉 자산 유형 프로파일: 2007년

(단위: 만 원, %)

구분	실물 자산	금융 자산	부채	노동 소득	집단 비율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0	3,783	0	1,679	13.9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1	3,056	2,039	1,789	14.0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17,887	4,395	0	1,880	24.1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10,361	2,137	1,470	1,833	21.9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30,598	4,409	6,860	2,658	26.0
전체 평균	14,551	3,630	2,395	2,032	100.0
전체 중위(p50)	6,809	1,583	641	961	100.0

주: N=12,737, 가구원 수 균등화 자산, 개인노동소득, 당해연도 개인가중치, cpi, 군집표준오차 이용, 사례가 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계산한 조건부 가중 평균임(개인 가중 치도 적용).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표 5-3〉 프로파일별 상대적 자산 수준: 2007년

(단위: 분위)

구분	실물자산 백분위	금융자산 백분위	부채 백분위	노동소득 백분위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1	56	2	45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2	51	63	50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66	55	2	41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58	42	61	46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81	57	86	49
전체	50	52	46	46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007년 당시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인구사회적 속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1〉은 평균 연령이 44.5세로 여성 비율(53.3%)과 가구주·배우자인 비율(85.2%)이 가장 높은 편이다. 수도권 거주율은 49.6%로 중간 정도이고,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1%), 아파트 거주율은 32.7%이다. 〈집단2〉는 가장 얕은 집단으로 평균 연령이 39.6세이다. 여성 비율은 51.1, 가구주·배우자인 비율은 80.6%로 〈집단1〉에 비해 낮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수도권 거주율은 59.3%로 높지만,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없었고, 아파트 거주율은 25.4%이다. 〈집단3〉은 평균 연령이 48.6세로 가장 높으며. 여성 비율은 50.5%, 가구주·배우자인 비율은 74.6%이다. 이 집단은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85.1%로 가장 높으며, 아파트 거주율도 47.4%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집단4〉는 수도권 거주율은 38.1%로 낮지만, 자가 거주 비율은 81.4%로 상당히 높다. 아파트 거주율은 39.4%에 머무른다. 〈집단5〉는 평균 연령이 42.8세로 〈집단2〉 다음으로 얕은 편이다. 여성 비율은 집단

중 가장 낮은 49.6%, 수도권 거주율은 59.5%로 가장 높으며, 자가 거주 비율도 82.0%로 높은 편이다. 또한 아파트 거주 비율은 55.3%로 다섯 집 단 중 가장 높다.

〈표 5-4〉 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속성: 2007년

(단위: 세, ×100=%)

구분	연령	여성	가구주 및 배우자	수도권	자가 거주	아파트 거주
〈집단1〉 무부동산-중금용자산-무부채-중소득	44.5	0.533	0.852	0.496	0.001	0.327
〈집단2〉 무부동산-저금용자산-중부채-중소득	39.6	0.511	0.806	0.593	0.000	0.254
〈집단3〉 고부동산-중금용자산-무부채-중소득	48.6	0.505	0.746	0.399	0.851	0.474
〈집단4〉 중부동산-저금용자산-중부채-중소득	43.0	0.503	0.723	0.381	0.814	0.394
〈집단5〉 고부동산-중금용자산-고부채-고소득	42.8	0.496	0.738	0.595	0.820	0.553
전체	44.0	0.507	0.762	0.487	0.597	0.426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실질적인 경제력을 보기 위해 총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는 2007년에 유형화한 프로파일별 총자산으로, 〈표 5-2〉의 프로파일 소속 확률까지 반영한 조건부 가중평균이 아닌, 도출된 프로파일별로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만을 적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2007년에 도출한 자산 유형 프로파일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없는 〈집단1〉과 〈집단2〉의 총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있는 〈집단3〉부터 〈집단5〉의 총자산은 많은 편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집단5〉의 경우, 총자산의 수준도 가장 높다. 자산의 격차와는 달리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한 〈집단5〉의 가처분소득이 평균을

상회하며, 부채가 없으면서도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집단3〉의 가처분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표 5-5〉 프로파일별 총자산과 소득: 2007년

(단위: 만 원, 분위)

구분	총자산	총자산 백분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백분위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4,084	27	2,144	44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	3,390	24	2,245	47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22,922	64	2,964	55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	12,594	53	2,531	52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	36,341	80	3,725	68
전체	18,818	55	2,854	55

주: 백분위는 당해 연도 전체 인구 기준.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총자산과 가처분소득의 수준에 더해 다음 〈표 5-6〉에서는 각 유형별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총자산 수준이 낮았던 〈집단1〉과 〈집단2〉는 자산의 90% 내외가 금융자산이었으며, 특히 〈집단2〉는 부채의 비율이 33.5%에 달해, 모든 프로파일 중 가장 높았다. 한편, 부동산 자산이 있는 〈집단3〉부터 〈집단5〉까지 실물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자산이 많은 〈집단4〉의 자산 중 부채 비율은 16.9%, 〈집단5〉의 부채 비율은 24.7%로 〈집단2〉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집단4〉는 약 125%, 〈집단5〉는 약 313%로 〈집단2〉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채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산이 없이 비교적 소액인 금융자산만 있는 〈집단2〉의 부채는 생활 영역에 관련된 부

채인 반면, 〈집단4〉와 〈집단5〉의 부채는 부동산 자산 형성에 사용한 부채일 가능성이 있다.

〈표 5-6〉 프로파일별 자산 구성: 2007년

(단위: %)

구분	총자산 중 실물자산	총자산 중 금융자산	총자산 중 부채	기처분소득 대비 부채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0.000	0.911	0.000	0.000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0.001	0.856	0.335	0.696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0.747	0.212	0.000	0.000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0.761	0.174	0.169	1.249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0.838	0.125	0.247	3.134
전체	0.569	0.365	0.149	1.189

주: 부채는 금융기관 및 전월세 임차보증금(받은 돈)의 합으로 비공식 부채는 제외.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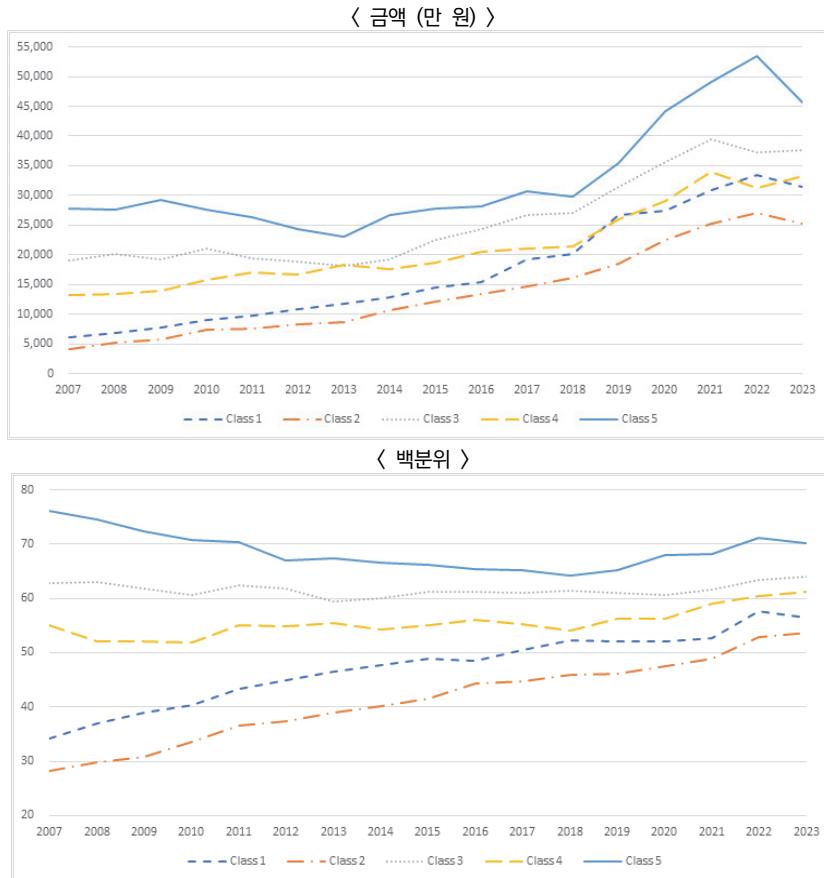
2. 2007년 청년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추이

이하에서는 2007년 당시 19~34세인 청년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에 따라 2023년의 35~50세에 이르기까지의 자산, 소득, 부채, 자산 중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의 비율,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는 자산 형성 초기(19~34세)의 자산 구성에 따라 생애기간 동안 자산 축적의 경로가 어떠한지 직관적으로 살피기 위함이다. 이 장에서의 관심은 자산 형성기의 자산 구성이 자산 고착기(35~50세)의 자산 구성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후 살펴볼 2007~2023년 자산 포트폴리오의 이행 결과와 더불어 생애기간의 자산 형성을 입체적이고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청년이 속한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총자산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자산 형성 초기에 비해 2023년의 35~50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산 유형 프로파일에 따라 총자산의 차이는 적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상대적 유불리 현상은 2023년에도 유효하였다. 특히,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높은 부채를 지녔던 <집단5>에 속한 청년은 총자산의 절대적 금액 수준이 다른 집단에 속했던 청년의 그것을 매우 크게 상회하였다. 결국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 증식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프로파일에 비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산이 거의 없고 부채의 유무에서만 차이를 보였던 <집단1>과 <집단2>에 속한 청년의 총자산은 관측 시점 초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하여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부채가 없었던 <집단1>의 총자산이 중간 수준의 부채가 있었던 <집단2>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가 꽤나 크게 나타났다. <집단2>의 부채 규모는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표 5-2> 참조), 자산 형성 초기의 부채(부동산 레버리지용 부채가 아닌)가 생애기간 동안의 자산 축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집단1>과 <집단4>는 관측 종료 시점에서 총자산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집단4>는 2007년 당시 <집단1>에 비해 자산의 수준이 높았고, 특히 부동산 자산도 있었지만 중간 수준의 부채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집단의 당시 부동산 자산이 중간 수준이었다는 점을 볼 때, 부채의 역할이 자산 형성의 용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산 형성 초기의 부채가 이후 자산 축적의 경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집단1>과 <집단2>의 자산의 격차 증대, <집단1>과 <집단4> 간 자산의 격차 감소를 관찰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1]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총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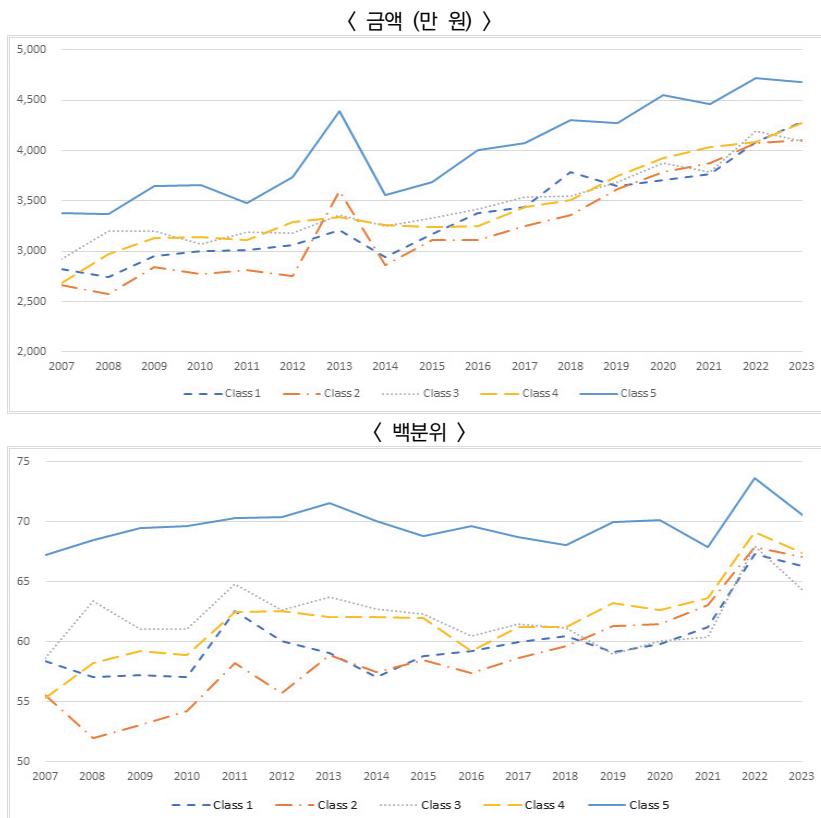
주: <집단1>은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2>는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3>은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4>는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5>는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가처분소득 수준의 차이는 자산 형성 초기부터 고착기에 이르기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파일 중 가장 많은 부채와 가장 많은 자산을 지녔던 <집단5>는 가처분소득 자체도 높았고, 그 상대적 우위는 자산 형성 고착기에도 유효하였다. <집단5>를 제외한 다른 프로파일

들은 오히려 자산 형성 초기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관측 종료 시점에서는 프로파일 간 차이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림 5-2]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가치분소득 추이



주: <집단1>은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2>는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3>은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4>는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5>는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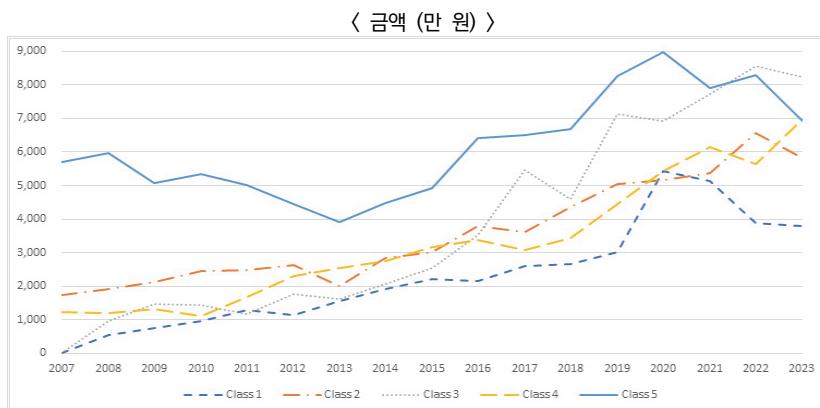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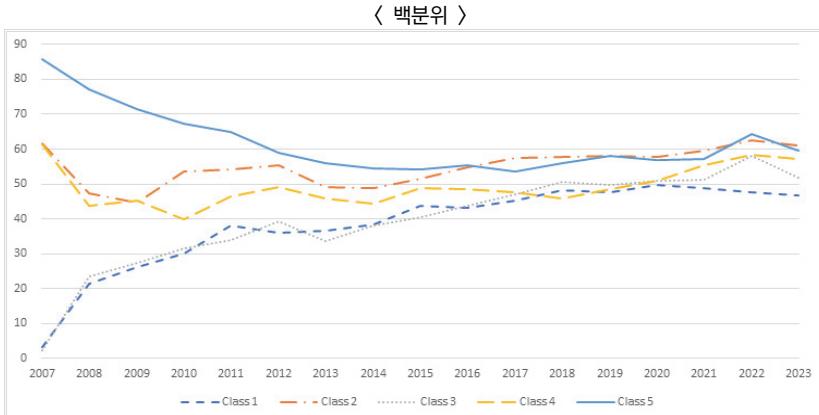
부채 규모는 <집단1>이 자산 형성 초기부터 관측 기간 내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가하였다. 모든 프로파일에서 부채가 증가하였지

만, <집단3>의 경우 자산 형성 초기에는 부채가 없었지만, 자산 형성 고착기에 이르러 가장 많은 부채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부채 증가는 총자산의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형성의 용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 금액 기준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그림 5-1]의 총자산 백분위와 [그림 5-3]의 부채 백분위를 볼 때, 부채의 상대적 분포 차이에 비해 총자산의 상대적 분포 차이가 더욱 크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부채를 이용하더라도 자산 형성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단순히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이상으로 기존의 자산 구성 유형에 따라 다른바 수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구성의 어떠한 측면이 수익의 차이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5-3]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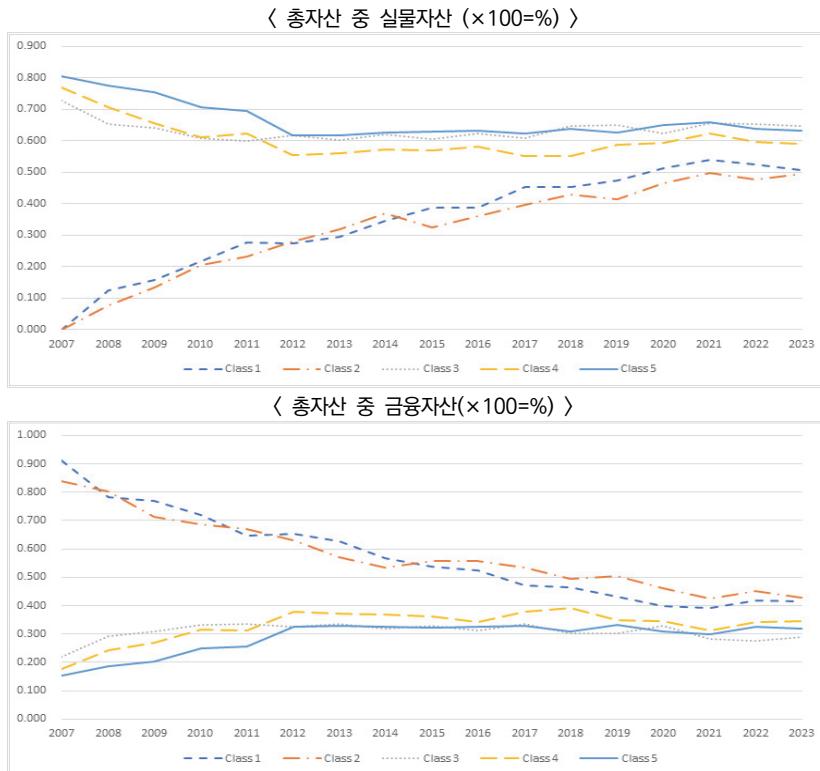


주: 〈집단1〉은 무부동산-중금용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2〉는 무부동산-저금용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3〉은 고부동산-중금용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4〉는 중부동산-저금용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5〉는 고부동산-중금용자산-고부채-고소득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관측 기간 동안 청년의 총자산 중 실물자산,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파일을 막론하고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은 낮아진 것이다.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1〉과 〈집단2〉조차 지난 16년 동안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여 그 비율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이 되었고, 자산 형성 초기 그들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금융자산의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로써 부동산 자산으로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4]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총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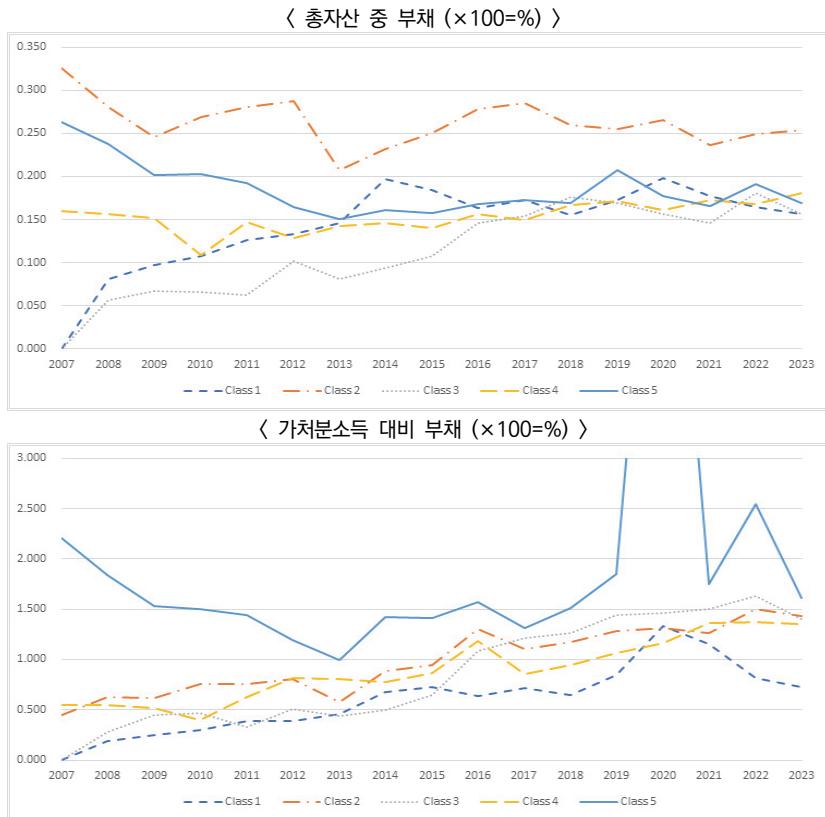


주: <집단1>은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2>는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3>은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4>는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5>는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총자산 중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율의 프로파일 간 차이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산 중 부채의 비율은 프로파일 간 차이를 보인다. 자산 형성 초기 부동산도 없었고 금융자산도 소액이었던 <집단2>의 경우, 당시 보유했던 중간 수준의 부채는 16년 동안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2023년 현재 약 25% 수준의 부채 비율을 보인다. 그 외 프로파일에서는 부채 비율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5]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총자산 중 부채 비율,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주: 1) <집단1>은 무부동산-중금용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2>은 무부동산-저금용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3>은 고부동산-중금용자산-무부채-중소득, <집단4>는 중부동산-저금용자산-중부채-중소득, <집단5>는 고부동산-중금용자산-고부채-고소득임.

2) 부채는 금융기관 및 전월세 임차보증금(받은 돈)의 합으로 비공식 부채는 제외.

3) <집단5>의 2020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는 약 7.2배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3. 자산 유형 프로파일: 2023년

2023년의 19세 이상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2007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LPA)을 수행한 결과 다섯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2개 집단부터 6개 집단까지 집단의 수를 추가 지정할수록 AIC와 BI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Entropy는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3집단 대비 집단 수가 4개인 경우 AIC와 BIC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Entropy는 0.943에서 0.918로 다소 감소하였다. 5집단 모형에서는 Entropy가 0.92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AIC와 BIC의 감소가 매우 미미하였고 도출된 집단의 비율이 5% 미만이었다.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4집단 모형에서 AIC와 BIC가 크게 감소하면서도 Entropy 수치가 여전히 양호하며 도출한 집단의 비율 또한 안정적이므로 최종적으로 2023년 자산 구성의 유형화는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5-7〉 잠재 프로파일 분석모형 적합도 결과: 2023년 19세 이상

Model	N	ll(model)	df	AIC	BIC	Entropy
class2	13,540	-128211.3	13	256448.6	256546.3	0.994
class3	13,540	-127560.4	18	255156.8	255292.0	0.943
class4	13,540	-124884.5	23	249814.9	249987.7	0.918
class5	13,540	-124534.4	28	249124.8	249335.2	0.927
class6	13,540	-124460.5	33	248986.9	249234.9	0.856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최종적으로 도출한 각 잠재집단별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프로파일의 특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1〉은 부채가 없으면서 부동산 자산도 없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금융자산만을 보유한 집단이다. 또한 이들의 개인 노동소득은 중위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집단2〉의 경우, 부채가 없으면서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면서 금융자산 또한 평균과 근접한 중간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개인의 노동소득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집단3〉은 소액의 부채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였지만,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자산 현황을 보인다. 다만 개인 노동소득은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집단4〉는 1억여 원의 많은 부채와 부동산에 집중된 초고자산가형으로, 개인의 노동소득 또한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2023년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 또한 전술한 기준에 맞추어 프로파일 명을 명명하였고, 표에는 제시하되 본문에서는 〈집단1~4〉로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표 5-8〉 자산 유형 프로파일: 2023년

(단위: 만 원, %)

구분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노동소득	집단비율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	196	5,305	0	1,628	14.3
〈집단2〉 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23,513	8,061	0	1,912	26.7
〈집단3〉 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	14,335	5,468	924	2,115	18.1
〈집단4〉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34,063	8,523	10,402	3,122	40.9
전체 평균	22,830	7,387	4,421	2,403	100.0
전체 p50	11,900	3,495	732	1,721	100.0

주: N=13,540, 성인 1인당 자산, 개인노동소득, 당해연도 개인가중치, cpi, 군집표준오차.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표 5-9〉 프로파일별 상대적 자산 수준: 2023년

(단위: 분위)

구분	실물자산 백분위	금융자산 백분위	부채 백분위	노동소득 백분위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	1	44	1	38
〈집단2〉 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62	58	1	41
〈집단3〉 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	40	47	57	46
〈집단4〉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63	57	82	55
전체	50	54	45	47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023년 현재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5-10>과 같다.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던 <집단1>은 평균 연령이 53.1세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55.6%)과 가구주·배우자인 비율(83.7%)이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다. 수도권 거주율은 52.3%,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1%), 아파트 거주율은 42.5%이다. <집단2>는 가장 고령으로 평균 연령이 55세이다. 여성의 비율은 49.6%, 가구주·배우자인 비율은 74.7%이다. 수도권 거주율은 37.6%로 프로파일 중 가장 낮지만,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89.6%로 가장 높다.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여(52.4%), 이는 프로파일 중 두 번째로 많다. <집단3>은 평균 연령이 48.2세, 여성 비율은 48%, 가구주·배우자인 비율은 71%로 낮다. 수도권 거주 비율이 47.6%, 절반 정도가 자가에 거주하고(54.4%),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 정도이다(49.5%). 자산과 부채가 가장 많으며 높은 개인 노동소득을 지닌 <집단4>는 수도권 거주율이 55.9%, 자가 거주 비율은 71.6%, 아파트 거주율은 64.4%로 프로파일 중 가장 높다. 평균 연령은 45.7세로 가장 젊다.

<표 5-10> 프로파일별 인구사회학적 속성: 2023년

(단위: 세, ×100=%)

구분	연령	여성	가구주 및 배우자	수도권	자가 거주	아파트 거주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저소득	53.1	0.556	0.837	0.523	0.001	0.425
<집단2> 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저소득	55.0	0.496	0.747	0.376	0.896	0.524
<집단3> 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중소득	48.2	0.480	0.710	0.476	0.544	0.495
<집단4>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45.7	0.498	0.777	0.559	0.716	0.644
전체	49.7	0.503	0.766	0.490	0.631	0.554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총자산과 처분가능소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자산이 없는 <집단1>의 총자산은 약 5,700만 원으로, 총자산도 적으면서 가처분소득도 전체 분포에서 41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프로파일 중 경제력이 가장 약한 이 집단은 복지패널의 관측기간 동안 합산한 평균 증여·상속액도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총자산 규모가 작은 프로파일은 <집단3>으로, 약 2억여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 분포에서 44분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여·상속액의 평균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집단2>은 평균 이상의 총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가처분 소득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여·상속의 합산액 평균도 513만 원으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집단4>의 경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4억 3천여 만 원의 총자산을 보유하면서, 가처분소득도 평균보다 크게 높다. 관측기간 동안의 증여·상속액 또한 약 1천만 원에 달한다.

〈표 5-11〉 프로파일별 총자산과 소득: 2023년

(단위: 만 원, 분위)

구분	총자산	총자산 백분위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백분위	증여· 상속액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저소득	5,761	22	2,547	41	247
<집단2> 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저소득	32,710	61	3,363	53	513
<집단3> 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중소득	20,105	44	3,439	56	522
<집단4>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43,857	67	4,394	68	1,034
전체	31,255	55	3,686	58	692

주: 1) 백분위는 당해 연도 전체 인구 기준.

2) 증여·상속액은 한국복지패널의 관측 기간 합산.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14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다음의 표는 각 유형별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의 프로파일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총자산 수준이 낮은 <집단1>의 경우 자산의 91.5%가 금융자산이었다. 두 번째로 총자산 수준이 높았던 <집단2>의 경우 자산의 68.3%가 부동산 자산으로, 프로파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총자산이 가장 많았던 <집단4>의 경우 총자산 중 67.5%가 부동산이면서 부채의 비율은 30.7%에 달한다. 이들 집단은 연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약 279%에 달하였는데, 2007년의 <집단5>와 유사하다. 부동산 자산 형성에 사용한 부채로서 높은 가치분소득을 바탕으로 상환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3>의 경우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유형으로, 실물자산의 비율이 45.7%, 금융자산의 비율이 43.9%로 균형적이다. 이들의 부채의 비율은 14.3%이고 연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은 24.6%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다.

<표 5-12> 프로파일별 자산 구성: 2023년

(단위: %)

구분	총자산 중 실물자산	총자산 중 금융자산	총자산 중 부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저소득	0.001	0.915	0.000	0.000
<집단2> 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저소득	0.683	0.273	0.000	0.000
<집단3> 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중소득	0.457	0.439	0.143	0.246
<집단4> 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0.675	0.274	0.307	2.792
전체	0.543	0.394	0.152	1.197

주: 부채는 금융기관 및 전월세 입차보증금(받은 돈)의 합으로 비공식 부채는 제외.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

4.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이행: 2007~2023년

2007년 당시 19~34세 코호트가 2023년 35~50세에 이르러 부채가 많은 부동산 집중형 고자산 유형('23년-집단4)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54.5%)으로 높은 가운데, '07년 당시 부채가 없이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중간 수준의 노동소득을 가졌던 <'07년-집단1>은 이들 부동산 집중형 고자산 유형('23년-집단4)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42.6%에 머물렀다.

이들 <'07년-집단1>은 <'23년-집단1>로 이행하는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12.3%). 즉, 부동산이 없었지만, 부채 또한 없었고 대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을 가졌던 이들 청년은 '23년에 이르러 여전히 부동산이 없고 낮은 자산 수준 집단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07년-집단1>은 <'23년-집단3>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23년-집단3>의 성격으로 보건데 자산 형성기를 지나 약간의 부채와 부동산을 소유하는 유형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07년-집단1>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부채가 없으면서도 부동산 자산이 많고 금융자산도 적지 않았던 <'07년-집단3>은 <'23년-집단4>로의 이행을 제외하면 16년이 지난 후에도 부채가 없는 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07년 당시 높은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채가 없던 이들 집단은 부채가 없이 중간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지닌 <'23년-집단2>로 이행하는 경우가 31.4%로 다른 '07년 집단이 이행하는 비율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당시에는 부동산 자산이 높았을지언정 추가적인 대출 없이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이행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부채가

14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없이 많은 부동산 자산을 지녔던 <'07년-집단3>은 가장 열악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닌 <'23년-집단1>로 이행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기는 하였다.

청년기에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와 부동산 자산을 지녔던 <'07년-집단5>은 <'23년-집단4>로의 이행률이 단연 높은 61.4%를 보였다.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고부채를 유지한 채 자산의 안정화를 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3>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 현황

(단위: %)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2.3	22.5	22.7	42.6	15.1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9.9	12.0	21.9	56.3	20.4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4.1	31.4	13.6	50.9	20.2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8.6	16.2	17.7	57.5	22.2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6.6	16.6	15.4	61.4	22.0
전체	8.1	19.4	18.0	54.5	100.0

주: 전체 사례 수는 1,175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다음의 표에서는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이행별로 총자산과 가치분소득을 살펴보았다. 우선 총자산 금액과 전체 인구 중 백분위를 살펴본 결과, 같은 집단으로의 이행이여도 '07년 당시의 출발점(자산 유형 프로파일)에 따라 총자산의 수준 차이는 여실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면서 자산이 가장 많은 〈'23년-집단4〉에서 청년기에 이미 높은 자산을 가졌던 〈'07년-집단5〉의 총자산이 약 5억 2천 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07년-집단1〉과 〈'07년-집단2〉의 경우, 〈'23년-집단4〉로 이행하였더라도 평균 총자산은 3억 초반대에 머무른다.

〈'07년-집단2〉는 2007년 당시 총자산이 가장 작은 청년 코호트였다. 이들은 부동산 자산이 없음에도 중간 수준의 부채를 지녔었으며, 금융자산도 많지 않았다. 이들 집단은 일정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지닌 〈'23년-집단3〉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9천만 원 초반에 그쳐, 2007년 당시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산이 적었다. 그리고 〈'07년-집단2〉의 〈'23년-집단3〉으로의 이행은 앞선 표에 제시된 것처럼 다른 '07년 집단에 비해 적지 않은 편이다.

〈표 5-14〉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금액, 백분위)

(단위: 만원, 백분위)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2,004	33,887	31,151	33,819	30,549
	34	65	45	63	56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1,063	26,533	9,284	31,329	23,934
	35	57	30	63	52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4,778	32,131	24,861	47,528	37,839
	25	63	53	72	64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3,794	27,617	19,101	39,265	31,625
	40	60	51	67	61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18,345	37,727	26,478	52,949	44,059
	43	69	55	74	68

14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전체	12,586	31,951	21,224	41,896	33,883
	36	63	46	68	61

주: 각 셀의 두 번째 열은 백분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

제4절 자산 격차 영향요인 분석

여기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02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산 분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무조건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자산 격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총자산과 순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한 표에 병기하였으며, 이 장의 분석에서는 앞서 LPA를 통해 도출한 자산 구성 유형 프로파일과 한국복지패널에서 측정하고 있는 증여 및 상속금액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 40백분위, 75백분위, 90백분위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총자산 40분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영향은 〈집단1〉을 기준으로 〈집단 2, 3, 4〉의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은 부채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즉, 부채의 여부나 양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중하위층의 자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 또한 커지는 경향도 관찰된다. 순자산 40백분위에 대한 결과에서는 프로파일의 영향이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나, 고액의 부채를 지닌 〈집단4〉의 계수의 크기는 총자산의 그것에 비해 작았고, 부채가 없이 중간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집단2〉의 계수에 비해 작은 크기를 보인다.

개체가 관측된 기간의 증여·상속의 합산액 역시 총자산 40분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순자산에 대한 결과에서도 동일하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75백분위와 90백분위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40백분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정적 영향력도 발견되었다. 이는 자산 상위층에서는 영향이 없었던 직계준비속에 의한 사적이전이 자산 중하위층의 자산 형성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자산 40백분위를 상승시키지만, 주목할 점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산 40백분위가 상승한다는 결과이다. 이는 뒤에 살펴볼 75백분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유효하였지만, 90백분위 분석 결과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와 수도권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총자산 및 순자산 분포의 40백분위 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5〉 자산 40백분위 영향요인(무조건분위회귀분석)

구분	총자산		순자산	
여성(ref. 남성)	0.059*	(0.024)	0.030	(0.027)
연령대(ref. 19~34세)				
35~49세	0.225***	(0.062)	0.397***	(0.073)
50~64세	0.408***	(0.062)	0.657***	(0.074)
65세 이상	0.680***	(0.076)	0.937***	(0.090)
교육수준(ref. 중학 이하)				
고등학교 이하	0.089+	(0.053)	0.135*	(0.058)
대학교 이상	0.377***	(0.061)	0.417***	(0.067)
종사상 지위(ref. 정규직)				
비정규직	-0.223***	(0.047)	-0.209***	(0.051)
고용주	0.221*	(0.103)	0.233+	(0.125)
자영자(무급종사 포함)	0.255***	(0.060)	0.254***	(0.067)
무직자(실업, 비경제활동인구)	0.081+	(0.043)	0.133**	(0.048)
유배우(ref. 무배우)	0.282***	(0.057)	0.264***	(0.062)
가구주 및 배우자(ref. 기타 가구원)	-0.356***	(0.062)	-0.494***	(0.072)
가구원 수	-0.140***	(0.025)	-0.145***	(0.028)
수도권 거주(ref. 비수도권)	0.362***	(0.044)	0.355***	(0.049)
장애인 여부(ref. 비장애)	-0.098+	(0.054)	-0.145*	(0.060)
자가 거주(ref. 비자가)	0.981***	(0.063)	1.294***	(0.072)

구분	총자산	순자산
아파트 거주(ref. 비아파트)	0.338*** (0.048)	0.355*** (0.053)
로그처분가능소득	0.830*** (0.048)	0.969*** (0.053)
로그사적이전소득	0.026** (0.010)	0.026* (0.011)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0.005** (0.002)	0.006*** (0.002)
로그증여·상속액(관측기간 합산) 2023년 자산 프로파일 (ref.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	0.036*** (0.008)	0.034*** (0.009)
집단2(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0.829*** (0.085)	0.897*** (0.094)
집단3(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	0.336*** (0.075)	0.289*** (0.085)
집단4(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1.039*** (0.078)	0.514*** (0.088)
상수	0.987** (0.367)	-0.441 (0.411)
N	13524	13524
adj. R-sq	0.425	0.408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팔호 안은 군집표준오차(가구 내).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

자산 75백분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총자산과 순자산에서 동일하였다. 이는 앞선 40백분위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다.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영향도 유효하였는데, 총자산에서는 초고자산형인 부동산 자산이 매우 많은 <집단4>의 영향력만 나타났고, 순자산에서는 평균에 근접한 수준의 자산을 보였던 <집단2>의 영향력도 유효하면서 <집단4>의 계수 크기보다 크게 나타난다. 총자산과 순자산에서 나타난 <집단4>의 계수 크기 변화는 40백분위에 관찰된 현상과 동일하다. 이는 매우 많은 부채를 지닌 <집단4>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75백분위 값에도 증여·상속액은 정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의 자산 형성에도 증여 및 상속이 지니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40백분위와 차이는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더 높은 연령대, 더 높은 교육수준, 수도권 거주 역시 자산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이는 40백분위와 90백분위에서도 동일하다.

〈표 5-16〉 자산 75백분위 영향요인(무조건분위회귀분석)

구분	총자산		순자산	
여성(ref. 남성)	0.074***	(0.022)	0.070**	(0.023)
연령대(ref. 19~34세)				
35~49세	0.207***	(0.053)	0.207***	(0.053)
50~64세	0.607***	(0.053)	0.627***	(0.055)
65세 이상	0.919***	(0.070)	0.904***	(0.072)
교육수준(ref. 중학 이하)				
고등학교 이하	0.159**	(0.050)	0.173***	(0.052)
대학교 이상	0.453***	(0.056)	0.402***	(0.058)
종사상 지위(ref. 정규직)				
비정규직	-0.148***	(0.042)	-0.175***	(0.043)
고용주	0.422***	(0.124)	0.215	(0.134)
자영자(무급종사 포함)	0.260***	(0.062)	0.295***	(0.064)
무직자(실업, 비경제활동인구)	0.185***	(0.042)	0.204***	(0.043)
유배우(ref. 무배우)	0.081	(0.052)	0.116*	(0.053)
가구주 및 배우자(ref. 기타 가구원)	-0.295***	(0.055)	-0.362***	(0.058)
가구원 수	-0.132***	(0.025)	-0.147***	(0.024)
수도권 거주(ref. 비수도권)	0.393***	(0.044)	0.421***	(0.045)
장애인 여부(ref. 비장애인)	-0.057	(0.047)	-0.089+	(0.050)
자가 거주(ref. 비자가)	0.432***	(0.056)	0.517***	(0.057)
아파트 거주(ref. 비아파트)	0.132**	(0.044)	0.179***	(0.045)
로그쳐분가능소득	0.752***	(0.048)	0.761***	(0.051)
로그사적이전소득	0.000	(0.010)	0.001	(0.010)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0.006*	(0.003)	0.005**	(0.002)
로그증여·상속액(관측기간 합산)	0.022*	(0.010)	0.037***	(0.010)
2023년 자산 프로파일				
(ref. 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				
집단2(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0.106	(0.067)	0.231**	(0.070)
집단3(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	0.023	(0.053)	0.053	(0.056)
집단4(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0.407***	(0.061)	0.147*	(0.062)
상수	3.511***	(0.373)	3.341***	(0.389)
N	13524		13524	
adj. R-sq	0.255		0.23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팔호 안은 군집표준오차(가구 내).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

최상위층인 총자산 90백분위 분포에 대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 결과는 75백분위에 대한 결과와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가처분소득의 정적 영향 만이 유효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즉, 중하위와 비교적 상위 분위에서는 부채의 증가를 통해 자산의 상승이 가능하였지만, 최상위층의 자산 수준은 부채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영향을 살펴보면, <집단1>에 비하여 초고가의 부동산과 높은 수준의 금융자산, 고소득을 바탕으로 많은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집단4>의 정적 영향력이 관찰되었다. 이는 75분위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다.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증여·상속액의 정적 영향은 90백분위에서도 관찰되었다.

<표 5-17> 자산 90백분위 영향요인(무조건분위회귀분석)

구분	총자산		순자산	
여성(ref.남성)	0.039	(0.025)	0.052+	(0.027)
연령대(ref. 19~34세)				
35~49세	0.165**	(0.055)	0.110+	(0.059)
50~64세	0.561***	(0.061)	0.617***	(0.065)
65세 이상	0.990***	(0.084)	1.113***	(0.093)
교육수준(ref. 중학 이하)				
고등학교 이하	0.253***	(0.059)	0.323***	(0.066)
대학교 이상	0.570***	(0.069)	0.679***	(0.076)
종사상 지위(ref. 정규직)				
비정규직	-0.018	(0.047)	0.001	(0.049)
고용주	0.181	(0.170)	0.375*	(0.189)
자영자(무급종사 포함)	0.354***	(0.074)	0.457***	(0.078)
무직자(실업, 비경제활동인구)	0.254***	(0.050)	0.330***	(0.054)
유배우(ref.무배우)	0.059	(0.056)	0.061	(0.062)
가구주 및 배우자(ref.기타 가구원)	-0.264***	(0.057)	-0.293***	(0.062)
가구원 수	-0.135***	(0.024)	-0.149***	(0.026)
수도권 거주(ref. 비수도권)	0.404***	(0.051)	0.350***	(0.054)
장애 여부(ref. 비장애)	-0.038	(0.055)	-0.049	(0.057)
자가 거주(ref.비자가)	0.223***	(0.067)	0.255***	(0.069)
아파트 거주(ref.비아파트)	0.107*	(0.048)	0.093+	(0.050)

구분	총자산	순자산
로그처분가능소득	0.572*** (0.065)	0.704*** (0.070)
로그사적이전소득	0.001 (0.011)	0.005 (0.012)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0.005 (0.003)	0.004+ (0.002)
로그증여·상속액(관측기간 합산)	0.030* (0.014)	0.032* (0.014)
2023년 자산 프로파일 (ref.집단1: 무부동산-저금융자산-무부채)		
집단2(중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0.069 (0.073)	0.147+ (0.079)
집단3(저부동산-저금융자산-저부채)	0.037 (0.054)	0.107+ (0.059)
집단4(고부동산-고금융자산-고부채)	0.329*** (0.067)	0.171* (0.070)
상수	5.558*** (0.505)	4.308*** (0.554)
N	13524	13524
adj. R-sq	0.144	0.147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팔호 안은 군집표준오차(가구 내).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구성의 유형이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자산 구성 유형 프로파일을 발견하고, 2023년까지의 시간적 범위에서 나타나는 추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2023년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다차원적 요인과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앞선 제2장 제3절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자산 격차 요인의 일관된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자료의 한계로 제4장에서 분석하지 못한 사적이전액이나 상속 및 증여액 등이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자산 분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2007년 당시 19~34세 청년의 자산 구성 유형이 2023년 자산 구성 유형으로 이행한 경로를 보면,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 집단

은 2023년에 이르러 총자산의 절대적 금액 수준이 다른 유형(프로파일) 보다 크게 높았다. 결국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 증식 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프로파일에 비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산 형성 초기에 생활영역의 부채를 지닌 청년의 경우(2007년의 <집단2>), 이후 생애기간의 자산 축적에 있어서 다른 자산 유형을 보이는 청년에 비해 불리함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형성 초기의 부채가 이후 자산 축적의 경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집단1>과 <집단2>의 자산의 격차 증대, <집단1>과 <집단4> 간 자산 격차의 감소를 관찰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집단3>의 청년의 경우 자산 형성 초기에는 부채가 없었지만, 자산 형성 고착기에 이르러 가장 많은 부채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부채 증가는 총자산의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산 형성의 용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빚을 내어 자산을 축적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2007년 당시 프로파일별 청년의 총자산 백분위와 부채 백분위 추이를 보면, 부채의 상대적 분포 차이에 비해 총자산의 상대적 분포 차이가 더욱 크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부채를 이용하더라도 자산 형성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이상으로 자산 형성 초기 청년에게 주어진 자산 구성 유형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구성의 어느 측면이 이러한 수익의 차이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청년의 총자산 중 실물자산,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 수록 프로파일의 차이가 없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16년 동안 총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청년의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율은 낮아진 것이다.

자산 분포에 대한 무조건분위회귀분석 결과, 자산 40분위에 대한 2023년의 자산 유형 프로파일의 영향은 <집단1>을 기준으로 <집단 2, 3, 4>의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파일은 부채 규모의 차이가 적지 않지만,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부채의 여부나 양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중하위층의 자산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 또한 커지는 경향도 관찰된다. 개체가 관측된 기간의 증여상속의 합산액 역시 자산 40백분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75백분위와 90백분위에서도 동일하였다.

아울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는 자산 40백분위, 중하위층의 자산 상승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75백분위에 대해서도 유효하였다. 다만, 90백분위 분석 결과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 이는 최상위층의 자산 수준은 부채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 40분위에서 75분위, 그리고 90분위로 분석의 초점을 달리했을 때, 상위 분위로 갈수록 고액의 부채를 바탕으로 초고가의 자산을 형성하는 자산 유형 프로파일(<집단4>)의 정적 영향력만이 유일하게 남겨졌다. 이는 부동산 자산 형성을 위해 부채를 끌어 쓰는 자산 증식 행위가 자신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그러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능력 혹은 여건은 자산 형성 초기에 형성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 제3절 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제 6 장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제1절 문제제기

자산 격차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 격차나 저축 행태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국가의 제도적·정책적 환경은 가구의 자산 축적 경로와 분배 구조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조세·재정정책, 사회보장제도, 금융·부동산 시장 구조, 인구별 소득 및 자산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 국가가 직접 설계·운영하며, 변화의 속도도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 수준을 고착화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산 격차 혹은 불평등을 가시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제도와 정책의 차이가 부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 일부 연구는 주택과 같은 특정 자산 유형이 자산 격차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조세·금융제도의 설계, 임대 및 소유 구조, 복지국가의 정책적 선택이 장기적인 자산 분포를 결정짓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득 불평등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자산 구성과 제도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거시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요소를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제도·정책 환경이 부의 불평등 수준과 변화 경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조명한다.

기존 문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자산 격차 혹은 부의 불평등을 분석해 왔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나 시장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금리, 실업률, 주택가격 등과 불평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다. 둘째, 제도·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세·금융제도, 주택 및 연금제도, 사회보장정책의 구조가 자산 축적 경로와 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다. 예를 들어, 유럽 16개국 비교연구는 주택금융 자유화와 민영화가 직업계층 간 주택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하였고(Wind et al., 2017), 장기 세제 비교연구는 모기지 이자 공제, 주택자본이득세 면제와 같은 제도가 주택소유율과 자산 분포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Kholodilin et al., 2023). 이 외에도 임대시장 규제(Kholodilin et al., 2018), 모기지 금융제도의 차이(van Hoenselaar et al., 2021), 자산구성에 따른 국가별 불평등 수준 차이(Pfeffer & Waitkus, 2021)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특정 경제 변수나 자산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정책 변수와 거시경제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인구·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변수를 포함해, 국가 단위의 제도·정책 환경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인구구조, 거시경제, 소득·부채, 주택, 재정정책, 연금 및 자산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와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각 변수별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살펴보고, 자산 격차와의 관계를 선행연구에 기반해 정리한다.

제2절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1. 변수와 분석자료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자산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선정하여 국가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자산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인구구조, 경제정책, 소득 혹은 주택 자산뿐 아니라 사회정책 변수를 포함한다. 특히, 총사회지출과 고령화 시대에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 외 사적연금자산은 고소득자의 자산 축적뿐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중간 및 저소득층의 자산 축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주택 자산이 자산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해당 요소들이 어떠한 경로로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고령의 고자산층이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상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장에 자산이 크게 유입되지 않아 자산 집중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인구 고령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Hsieh, 2023).

출산율은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양육비 혹은 부의 되물림을 통해 자산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하위 가구가 양육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 축적이 어려워 자산 불평등 격차가 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Cooke et al., 2025). 또한, 상위 소득/자산 가구가 하위 가구에 비해 자녀를 적게 두어 상속이 덜 분산되어 부가 집중될 수 있다. 자녀를 더 많이 두면서도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

을 때 혹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더 많이 두는 경우, 소득이나 자산 축적 혹은 양육비 지출이 어려운 하위 계층과의 자산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즉, 하위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 축적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체로 더 많은 자녀를 두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 자산이 분산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

GDP 수준은 경제 발전 단계와 밀접하며, 금융시장과 연금 제도, 자산 과세 등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다.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동일한 GDP 수준이라도 자산 분배 구조는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경제 발전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부의 불평등 분석에 필수적일 것이다(IMF 2021).

실업률 상승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손실과 저축 고갈, 부채 증가로 이어지며, 순자산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반면 고소득 가구는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이 보다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에 실업률 증가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 있다(Furceri et al., 2021).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 상이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금리를 낮출 경우 주식 및 금융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주택 가격 상승은 중·하위 계층에도 자산 증가를 가져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자산 구조에 따른 차등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O'Farrell, Rawdanowicz, & Inaba, 2016).

소득 지니계수와 부의 지니계수는 밀접히 연동되지 않는다. OECD(2019)는 일부 국가에서 낮은 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의 불평등이 나타나며, 이는 자산 축적이 노동소득보다 상속, 증여, 자본이득과 같은 비 노동 소득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일 수 있다. Fessler & Schürz(2015)는 상속 경험이 가구의 부 분포 내 위치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보고하며, 이는 부의 불평등이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재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형은 가구 자산 축적 경로를 다르게 만든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적 연금 대신 주택소유 장려 정책과 세제 혜택을 통해 자산 기반 복지를 형성한다(Doling & Ronald, 2010). 반면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관대한 공적 연금과 사회지출로 민간 자산 축적의 필요성을 줄이지만, 그 결과 하위·중위 계층의 사회적 자산 축적은 낮아지고 측정된 부의 불평등은 높게 나타난다(Fessler & Schürz, 2015). 남유럽 복지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 복지에 의존하며 연금 지출이 높음에도 불가하고 높은 주택소유율을 보이고 있다(Castles, 1996).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와 주택소유율 간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 Kemeny(1980)와 Castles(1998)는 관대한 복지국가일수록 개인의 자산 축적 필요성이 줄어 주택소유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사회지출이 적은 국가는 주택소유를 사실상의 노후 보장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관계가 보편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Conley & Gifford(2006)는 낮은 사회지출이 오히려 가구의 주택소유 확대를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Delfani, De Deken, & Dewilde(2014)는 사회지출과 주택소유 간의 관계가 제도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예: 미국, 영국)에서만 주택 자산이 연금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주택 자산이 노후소득 보장의 보편적 대체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금과 주택소유율 간의 단순한 음의 상관관계는 제도적 차이를 무시한 통계적 착시일 뿐이며, 자산 기반 복지 전략은 특정 제도적 맥락에서만 성립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공적 연금을 자산에 포함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부의 지니계수는 크게

하락한다. Wróński(2023)는 연금 제도가 자산 축적이 어려운 하위·중위 계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과 간접적인 ‘자산’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처럼 보편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제도는 부의 분배 효과가 크다.

그러나 공적연금자산에 비해 사적연금자산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과거 사적 연금은 공적 연금과는 분리되어 복지국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적 연금의 감축과 동시에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 즉 재정복지(fiscal welfare)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때문에 사적 및 공적 연금의 구분이 이전에 비해 불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공적 연금이 단일 연금자산이었던 이전과 달리 연금을 위한 사적 자산축적(예: 연금저축계좌)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 연금의 고갈과 신뢰 하락 역시 사적 연금자산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

이에 주택 이외에 인구 대부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인 연금(총사회지출에 포함) 및 사적연금자산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사적 연금자산은 연기금, 연금 보험 계약, 은행·투자회사 운용 펀드,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 확정급여(DB)형 또는 확정기여(DC)형 모두 포함된다.

소득 및 자산 수준별로 부채로 인한 위험 및 부채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자산 격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소득·자산 대비 부채가 높은 가구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게 된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가구의 약 25%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며, 이는 주로 하위 계층과 청년층에서 나타난다.

또한, 상위 소득/자산 가구는 투자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만 하위 계층은 생활비와 비생산적 소비를 위해 차입함으로써 자산 누적이 어려워지고 격차가 확대된다. 단기적으로 차입 덕분에 소비 격차가 완화되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Ari & Cergibozan, 2023).

주거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특히 도심 지역에서 임차인과 자가 보유자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된다. 임차인의 절반가량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며, 이들의 순자산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반면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경우, 주택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OECD, 2019). 따라서 주거비는 자산 격차에 영향을 주게 된다.

OECD 36개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는 주택소유율에 따라 상이하다. 소유율이 약 75% 이상인 국가는 주택가격 상승이 중산층의 자산을 함께 상승시켜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소유율이 낮은 국가는 부유층만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OECD, 2019). 그러므로 주택가격 역시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자산 가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은 중산층 자산의 핵심이며,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순자산 불평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OECD, 2019).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보유층이 많은 국가에서는 중위 및 하위 집단의 자산 가치를 함께 올려 불평등을 줄이는 반면, 주택소유율이 낮은 국가는 상위 집단만 이익을 얻어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산 격차에 영향을 주는 자산과 정책에 대한 국외 연구에 최근 주택자산과 주택 자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주택 자산(주거용 부동산)의 격차가 국가별 부의 불평등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 주요한 논지이다(Pfeffer & Waitkus, 2021).

주택금융 자유화·민영화가 진행된 시장 지향형 주택체제에서는 계층 간 주택 자산 불평등이 심하고, 비시장 지향형 체제에서는 보다 평등하게 분

포(Wind, Lersch, & Dewilde, 2017)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이 모기지 이자공제, 주택 취득에 대한 재산세 면제, 간주임대료 과세 면제 등 주택보유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이러한 제도는 장기적으로 주택소유와 자산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holodilin, Kohl, Korzhenevych, & Pfeiffer, 2023). 또한 임대시장 규제 강도와 형태(엄격한 임대료 통제부터 유연한 세입자 보호까지)는 주거비 부담과 세입자의 자산 축적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holodilin, Weber, & Sebastian, 2018). 모기지 금융제도의 구조(차입자 보호, 채권자 권리, 대출 조건 등)는 주택소유 접근성과 주택 자산 축적의 포괄성을 결정하게 된다(van Hoenselaar, Cournède, De Pace, & Ziemann, 2021). 종합적으로, 자산 격차는 개인의 소득이나 저축 행태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정책 틀과 주택·금융 구조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내용에 기반하여, 주요 변수를 다양한 자료원에서 찾아 국가 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변수 내용과 자료원, 연도 범위는 〈표 6-1과〉 같다. 분석자료는 다양한 국제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World Inequality Database)를 포함한다. OECD 데이터는 Tax revenue, Social Expenditures, Historical Population database를 사용하였다.

자산 격차의 변수로서 자산 점유율은 전체 자산에서 특정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며, 순자산(net personal wealth)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 단위는 성인이다. 자산 지니계수는 전체 성인 인구의 순자산 분포를 0~1 사이 값으로 요약한 지표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자산 분포가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인구구조 지표로는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산율을 이용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출산율은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이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산구성 지표로는 가계부채, 사적연금자산, 주택소유율, 주택가격, 주거비 변수를 이용하였다. 가계부채는 가계에서 발생한 총부채를 의미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산출하였다. 사적연금자산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산은 연금기금, 은행 또는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축적되며, 개인연금, 급여확정형, 확정기여형 등 모두를 포함한다. 사적연금자산 또한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이용한다. 주택소유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다. 주택가격은 일정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100$)으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준연도는 2015년이다.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료 등 거주주택에서의 주거를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말하고, 주거비 부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을 활용한다.

정책 변수로는 조세 및 사회지출 관련 지표를 포함하였다. 재산세는 정부가 거둔 재산 관련 세수를 의미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산출한 것이다. 최고소득세는 법정 최고소득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소득 임계점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소득을 얻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개인소득세율과 사회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산출한 값을 의미한다. 총사회지출은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 등 총 9개 주요 영역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하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모

두 포함한다. 총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산출하였다. 금리는 IMF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연도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요인으로 1인당 GDP, 실업률, 소득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득 지니계수는 전체 성인 인구의 소득 분포를 0~1 사이 값으로 요약한 지표이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가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표 6-1〉 국가 단위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자료 구축(결측치 처리 전)

구분	변수		내용	자료원	시간범위
결과변수	격차		상위 1, 5, 10% 점유율	WID	1995-2023
	자산 점유율		하위 40% 점유율		
	불평등		자산 지니계수		
인구 구조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	OECD	1960-2022
	출산율		가임 여성당 예상 평균 자녀 수	WB	1960-2023
설명변수	자산 구성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IMF	1995-2023
		연금자산	GDP 대비 사적연금자산 비율	OECD	1981-2023
		주택소유율	주택소유율	OECD	2010-2022
		주택가격	부동산가격지수	OECD	1980-2024
		주거비용부담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비(주택담보대출, 임대료) 비율	OECD	2010-2022
정책	재산세		GDP 대비 재산세 비율	OECD	1965-2022
	최고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의 한계세율	OECD	2000-2024
	총사회지출		GDP 대비 총사회지출 비율	OECD	1980-2024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IMF	1980-2025
거시 요인	1인당 GDP	1인당 실질 GDP	WB	1960-2023	
	실업률	실업률	OECD	1980-2024	
	소득 불평등	소득 지니계수	WID	1980-2023	

주: IMF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WB는 세계은행(World Bank), WID는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OECD 데이터는 Tax revenue, Social Expenditures, Historical Population database를 사용함.

자료: 연구진 작성.

2. 결측치 처리

위와 같이 다양한 자료원에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 단위 패널을 구축하였으나, 자산과 관련된 데이터의 한계가 커 결측치가 많고, 변수 및 국가별 데이터 제공 연도의 차이가 크다. 이에 결측치 처리를 먼저 진행한 뒤 종속변수의 1년 지연변수(lagged variable)를 모델에 포함하여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결측치 처리에는 일괄적용, 핫덱, 콜드덱, 구간 평균 (moving 혹은 rolling average) 방식이 대체로 이용되지만, 여기에서는 국가 단위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구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구간 평균치에는 3개 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중간값이나 상수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은 결측치 구간이 길 경우 결측치 원래값의 분산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지는 않는다.

이 외로 추정을 통해 비슷한 값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식은 국가 단위의 데이터 결측치 생성에 몇 가지 위험성을 가진다. 개인 단위 데이터에서 결측치 변수가 아닌 기타 인구특성을 이용하여 비슷한 인구특성을 가지는 경우 결측치 변수의 값을 삽입하는 방식은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특성 및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과 주거지역이 비슷한 개인의 소비를 이용하여 소비 결측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국 혹은 타국의 국가 단위의 경제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자산 관련 규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추정하여 결측치를 처리하기 어렵다.

구간 평균치는 결측치의 앞뒤 연도 중 데이터가 주어진 연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을 계산한 뒤 그것을 결측치에 넣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국가 단위 데이터에 더 용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개년도 혹은 5개년도 구간 평균을 사용하나

수집된 데이터의 패널 구간이 짧으므로 데이터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년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결측치 처리 전 29개 국가의 평균 8개 연도에서 총 233개의 관측치가 수집되었다. 결측치 처리 후 29개 국가의 평균 15개 연도에서 총 441개의 관측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분석에는 독립변수 결측치를 처리하여 29개 국가 평균 10개 연도의 총 420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한 기간 동안 결측치 없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만 동일 국가의 3개년도 평균을 이용하여 결측치 처리가 된 변수를 사용하면 분석에 총 420개의 관측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측치 처리가 된 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모델로 분석한 결과, 관측치 처리 이전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부표 6-2> 참조). 이에 관측치 수와 민감도 분석 결과의 장점은 모두 충족시키므로, 주요 분석에는 종속변수의 결측치 처리가 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변수 중 가장 결측치가 많은 두 개의 변수인 금리와 사적연금자산만 결측치 처리를 하면 분석 시 315개의 관측치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관측치 처리 이전 분석 결과와 유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민감도 분석 결과로 따로 수록하였다(<부표 6-3> 참조).

한편, 종속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결측치 처리를 할 경우 총 441개의 관측치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의 변화가 급격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하지 않고, 민감도 분석 결과만 추가로 보고하였다(<부표 6-4> 참조).

3. 기초통계량

〈표 6-2〉는 분석자료의 최종 국가 범위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등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29개 국가를 포함한다. 결측치 처리 이후 국가별 변수의 유효값이 존재하는 시간적 범위는 다소 상이하다.

〈표 6-2〉 포함 국가 및 시간범위(결측치 처리 후)

국가	관측치수	비율
Austria	11	2.62
Belgium	8	1.90
Canada	14	3.33
Chile	15	3.57
Colombia	11	2.62
Czechia	16	3.81
Denmark	16	3.81
Estonia	16	3.81
Finland	16	3.81
France	16	3.81
Germany	16	3.81
Greece	16	3.81
Hungary	10	2.38
Iceland	13	3.10
Ireland	16	3.81
Italy	16	3.81
Korea	12	2.86
Latvia	16	3.81
Lithuania	16	3.81
Luxembourg	16	3.81
Mexico	16	3.81
Netherlands	16	3.81
Poland	16	3.81
Portugal	9	2.14
Slovenia	16	3.81
Sweden	16	3.81
Switzerland	13	3.10
United Kingdom	16	3.81
United States	16	3.81
합계	420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표 6-3〉은 분석에 활용한 결측치 처리 이후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결측치 처리 이전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부표 6-1〉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결측치 보완으로 시계열·국가가 증가되었고, 평균과 분포는 안정적이나, 변동성은 일부 감소하였다. 또한, 극단값 변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측치 처리를 통해 대부분 변수에서 관측치 수가 증가하였으나, 중앙은행금리 등 원자료 결측치가 거의 없는 경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표 6-3〉 국가 패널데이터 기초통계량(결측치 처리 후)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65세 이상 인구 비율	2,528	12.5	4.6	2.9	29.0
출산율	2,698	2.1	0.9	0.7	6.8
로그 1인당 실질 GDP	2,431	9.9	0.8	7.0	11.6
중앙은행 금리	1,550	8.0	41.9	-0.8	1330.0
실업률	1,475	7.6	3.8	1.8	25.6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1,968	0.5	0.1	0.1	0.8
가계부채(% GDP)	1,139	56.7	32.0	2.0	146.6
주거비용	646	15.9	7.0	0.0	28.3
주택소유율	594	67.8	12.6	36.4	93.8
주택가격(실질)	1,415	93.6	32.6	24.4	186.9
재산세(% GDP)	1,998	1.7	1.0	0.1	5.1
최고소득구간세율	1,036	44.4	12.4	6.6	70.3
총사회지출	1,594	18.8	6.3	0.0	32.2
사적연금자산	940	44.9	51.8	0.0	216.0

자료: 연구진 작성.

더 구체적으로 결측치 처리 전¹⁵⁾과 후를 비교해보면, 전후 대부분 변수의 평균 변화폭이 매우 작고, 처리 후에도 기존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거비용도

15) 〈부표 6-1〉 참고.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변화폭이 1 이내이거나 소수점 단위 수준인 점이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편차의 경우, 결측치 처리 후 다수 변수에서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실업률, 주택소유율, 최소소득구간세율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실업률 표준편차가 줄어들었고, 주택소유율 등 일부 변수도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표준편차 감소는 값들이 평균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분산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추가 관측치가 평균을 사용하여 결측치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최솟값과 최댓값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일부 변수에서 소폭 조정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실업률의 최솟값이 1.55에서 1.83로 상승하였고, 재산세 최솟값이 0.073에서 0.015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표준편차나 분산과 비교하면 비교폭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모형

이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의 불평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산의 분포를 대표하는 여러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의 지니계수(Wealth Gini), 상위 1%, 5%, 10%의 자산 점유율(Top1, Top5, Top10 wealth share), 그리고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Bottom40 wealth share)을 주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불평등의 전반적 수준뿐 아니라 분포 양극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각도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그 불평등의 정도가 어느 자산 계층에서 생겨났는지 알기가 어렵다. 여기에서는 상위 및 하위 자산 점유율을 통해 자산 격차, 즉 어떤 요인이 각 계층에 영

향을 주었는지 검증한다.

설명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구조 요인과 거시경제 및 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인구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고령인구 비중(aged 65 and over)과 출산율(fertility rate)을 포함하였고, 거시경제 변수로는 1인당 GDP의 로그값, 중앙은행 기준금리, 실업률, 가계부채 비율, 주택가격지수, 주거비 부담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소득 불평등(Income Gini), 주택 점유형태(자가 비율), 재산세 비중, 최고 한계세율, 연금 및 사회지출(SOCX), 은퇴를 위한 자산 비중 등의 조세·복지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제도적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외에도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금융위기, 글로벌 경기 변동, 팬데믹 등 특정 연도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한 충격을 통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동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간 평균치로 측정된 종속변수의 1년 지연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는 특정 연도의 불평등 수준이 이전 시점의 불평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즉 불평등이 시계열적으로 높은 자기상관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은 과거 불평등 수준의 지속성과 누적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추정 방법으로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FE) 모형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국가마다 고유하게 존재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들(예: 지리적 조건, 역사적·문화적 배경, 정치·제도적 특성 등)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국가 간 불변의 차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각 국가 내부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설명변수들이 불평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더미를 포함함으로써 특정 연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정효과 추정치는 국가 고유의 변하지 않는 요인과 시점별 공통 요인을 제거한 뒤 남는, 국가 내부에서의 시계열적 변동을 근거로 계산된다. 이는 각 변수와 불평등 지표 간 관계를 보다 염밀히 식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정책적 해석에서도 특정 국가 특유의 요인이나 일시적 외부 충격의 영향이 아니라 구조적·내재적 변화에 기반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제3절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을 설명하는 요인은 단순한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변화보다는 사회정책·노동시장 상황·가계 재무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평등 완화 정책이 상위층의 자산 집중을 직접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하위 40%의 자산 축적 여건을 개선하는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정책의 초점이 상위 자산 집단의 자산을 줄이기보다는 하위 자산 집단의 자산을 끌어올리는 데 더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첫 번째로, 소득 지니계수는 자산 불평등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산 축적이 주로 노동소득이 아닌 다른 요인(예: 부모로부터의 자산 상속이나 자본이득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지수 역시 예상외로 부의 불평등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사회지출이 자산의 지니계수를 낮추면서 특히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지출은 자산 중 특히 주택소유율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지출

이 늘어나면 사회지출이 노후 보장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택소유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주택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가장 큰 항목임을 고려하였을 때, 본 분석에서 사회지출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위와 하위 계층의 자산 점유율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 완화는 특히 하위 자산 점유율 상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지출을 통해 하위 자산 점유율을 높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적연금자산 역시 비중이 커질수록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이 증가하고,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는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상위 1, 5%의 자산 점유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연금 제도가 상위층 자산 집중을 재분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하위층의 자산 형성과 유지에는 분명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만 공적연금 축소의 효과가 자산 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비중이 높을수록 자산 불평등(지니계수)은 유의하게 감소했고,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부동산·금융 등 비이동성 자산에 대한 과세가 상위층의 자산 축적 속도를 둔화시키고, 일부를 하위 층으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가 모든 상위 계층 지표 (상위 1, 5, 10% 자산 점유율)에 유의하지 않은 것은, 재산세가 직접적으로 상위층 자산 비중을 대폭 줄이는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하위층 자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위 1, 5%의 자산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이 많은 경우 자녀 수가 많아도 충분히 자산을 유지·증식 할 수 있는 반면, 중·하위층은 출산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자산 축적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 즉, 높은 출산율이 하위층의 자산 축적을 방해하고 상대적으로 상위층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의 상승은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고용 충격이 임금 손실뿐 아니라 자산 축적 기반(저축·투자)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기존 자산을 매각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위층은 금융 완충장치가 약해,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부채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순자산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고 하위 40%의 자산 비중이 줄어든다. 중·저자산층은 주로 대출을 통해 주택 등 자산을 형성하지만, 경기 변동이나 금리 상승 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순자산이 불안정해지게 된다. 반면, 상위층은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을 바탕으로 부채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적게 받게 된다.

주택가격 상승은 본 분석에서는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중산층까지 순자산을 올려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소유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소수만 이익을 얻어 불평등을 키우는 효과가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가 상쇄되어 분석에서 효과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있다. 그러므로 주택 가격과 소유율 혹은 기타 요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자산 격차에 영향을 주는지 매개변수 등을 사용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표 6-4〉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영향요인 패널분석

구분	(1)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2) 상위 1% 점유율	(3) 상위 5% 점유율	(4) 상위 10% 점유율	(5) 하위 40% 점유율
총사회지출 (% GDP)	-0.00196** (-3.16)	0.000879 (1.41)	0.000176 (0.27)	-0.000438 (-0.64)	0.00106** (2.84)

17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2) 상위 1% 점유율	(3) 상위 5% 점유율	(4) 상위 10% 점유율	(5) 하위 40% 점유율
연금자산 (% GDP)	-0.000287*** (-4.03)	-0.0000849 (-1.24)	-0.000115 (-1.70)	-0.000147* (-2.15)	0.000142*** (4.26)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0146 (1.23)	-0.000384 (-0.40)	0.00101 (1.06)	0.00124 (1.19)	-0.000330 (-0.59)
출산율	0.0172 (1.56)	0.0236** (3.35)	0.0165* (2.12)	0.0178 (2.02)	-0.00413 (-0.86)
1인당 GDP(로그)	-0.00483 (-0.27)	0.000403 (0.04)	-0.00105 (-0.08)	-0.00499 (-0.35)	-0.00507 (-0.58)
중앙은행 금리	0.00302 (1.17)	-0.000854 (-0.76)	0.000202 (0.15)	0.000989 (0.63)	-0.00189 (-1.52)
실업률	0.00192** (3.40)	0.000473 (1.64)	0.000695 (1.87)	0.00103* (2.46)	-0.00104** (-3.46)
소득 지니계수	0.0231 (0.27)	0.105 (1.43)	0.0820 (1.12)	0.0529 (0.73)	0.00260 (0.07)
가계부채 (% GDP)	0.000303** (2.77)	0.0000439 (0.66)	0.000115 (1.60)	0.000182* (2.30)	-0.000139* (-2.36)
주거비용부담 (% 처분가능소득)	-0.0000556 0.0231	0.0000466 0.105	0.0000164 0.0820	-0.0000108 0.0529	-0.00000601 0.00260
주택소유율	-0.000107 (-0.29)	-0.0000160 (-0.05)	-0.000369 (-1.16)	-0.000473 (-1.43)	-0.0000896 (-0.52)
주택가격	-0.000104 (-1.28)	-0.0000248 (-0.47)	-0.0000549 (-0.91)	-0.0000586 (-0.90)	0.0000513 (1.34)
재산세 (% GDP)	-0.00690*** (-4.34)	-0.00106 (-0.52)	-0.00237 (-1.08)	-0.00300 (-1.43)	0.00390*** (5.90)
최고소득세율	-0.000390 (-0.94)	-0.000215 (-1.13)	-0.000199 (-0.82)	-0.000205 (-0.77)	0.000227 (1.15)
L.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0.650*** (13.17)				
L. 상위 1% 점유율		0.740*** (16.52)			
L. 상위 5% 점유율			0.778*** (17.18)		
L. 상위 10% 점유율				0.734*** (13.34)	
L. 하위 40% 점유율					0.605*** (10.00)
_cons	0.312 (1.76)	-0.0282 (-0.24)	0.0618 (0.43)	0.181 (1.12)	0.0432 (0.45)
N	420	420	420	420	420

주: 고정효과모형임. 연도 더미 2008-2022년이 포함된 모델임. + p<0.1 * p<0.05, ** p<0.01 *** p<0.001.

출처: OECD, WD, WID, IMF database.

제4절 소결

자산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고, 자산을 통한 계층의 대물림이 사회이동성을 경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위 10%, 심하게는 1%의 자산 점유율이 자산 하위 50%의 점유율을 압도한다([그림 3-6], [그림 3-7] 참조). 자산의 연속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 간극, 즉 격차는 자산 불평등을 극심하게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한 제4장과 제5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 자산과 관련된 인구 구조, 세금, 경제 및 사회정책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구체화하면서, 특히 사회정책이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총사회지출과 사적연금자산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측치를 처리해 OECD 국가의 시계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자산 격차의 경로의존성을 통제하기 위해 1년 지연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지출과 연금자산과 같은 사회정책이 특히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을 높이고 총자산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효과나 금리 등 경제지표만으로 자산 격차를 설명하는 모델에 비해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재산세 역시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총자산 지니계수를 감소시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합이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실업이나 가계부채는 소득 및 자산이 불안정한 하위 40%의 점유율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소득 지니계수는 자산 지니계수나 저층과 고층의 점유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교육 등을 통한 세대 간 이전이 자산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자산 항목별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어려운 것이 한계로 남는다.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의 효과를 심층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부의 자산 재분배 정책, 주택가격 정책이나 임대규제, 세금혜택 등 규제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분석이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과 정책 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과제

제 7 장 결론과 정책 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자산(wealth)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은퇴 이후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삶의 경제적 안정성을 뒷받침한다(Zucman, 2019, p.112; Rodems & Pfeffer, 2021). 한편, 자산 불평등, 혹은 격차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한다(정해식, 김성아, 2019). 현재의 격차는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의 격차를 심화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자산 격차 실태를 살피고 이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조망하여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세계의 자산 격차, 특히 부-소득 비율은 199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증가했다. 그리고 1940년대까지 감소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50년대부터 현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10%와 1%의 자산 점유율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을 들여다보면, 하위 40%의 저자산층보다 상위 10%의 고자산층 가구주의 연령이 비교적 높고 남성 가구주 비율이 크다. 기혼 가구주의 비율이 더 많고, 가구원 수는 약간 더 많다.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혹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체계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백분위에 주목하여 한국의 자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4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제5장에서 반복 횟단면

조사자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인 가구가 자산이 많고 비교적 중상층 이상에 분포하는 한편, 자산 수준은 연령에 따른 역U자 형태를 드러내어 생애주기에 따른 경향이 드러난다. 성별은 혼인상태와 상호작용하여 자산의 성별 격차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과 중상층 이상의 분위를 형성하는 교육 프리미엄이 자산에서도 존재 한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자산층을 점유하는 데에 가장 유리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나 기타 근로자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만,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원의 경제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 다소 이질적이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아파트에 살면 자산 분위가 높을 확률이 높아진다. 처분가능소득과 상속 및 증여액이 높을수록 자산 하위 40백분위와 상위 25백분위, 상위 10백분위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산 축적과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한편, 사적이전소득은 자산 하위 40백분위에 한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쳐 그 영향력이 제한된다. 고액의 부채를 바탕으로 고가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형성하는 집단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채를 토대로 고가치의 자산을 형성하는 행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 등 전통적인 취약 집단은 자산 수준이 낮고, 비교적 하위 분위에 밀집해 있을 것으로 보여 자산의 측면에서도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 패널분석을 시도한 제6장의 결과에서는 실업률이나 가계부채가 소득 및 자산이 불안정한 하위 40%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지출과 연금자산과 같은 복지정책이 특히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을 높이고 총자산 불평등, 즉 지니계수

를 감소시켰다. 재산세 역시 하위 40%의 자산 점유율 증가에 도움이 되며 총자산 불평등을 감소시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이용해 자산 격차의 실태와 추이, 그리고 다차원적 요인의 영향을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개별 요인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복지패널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는 행태의 영향 검증을 시도했으나, 세대(generations)를 넘나드는 장기 시계열을 고려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국가 단위 분석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사회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나 가구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실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정책 과제

1. 정책 방향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자산 형성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되, 첫째,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산을 증식하는 선택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자산 증식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고자산층의 자산 증식은 국가 단위의 자산 총량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6장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높은 사회지출은 자산 상위 집단의 점

유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산 하위 집단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다.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사회정책은 중저자산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중저자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은 자산 격차 자체를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저자산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자산 격차 완화에 있어 생애주기 관점은 적용해야 한다. 보고서 제4장에서 다시 확인한 연령에 따른 자산 수준의 역U자 형태와 관련된다.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기부터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해 50대 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생애 최고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고 노년기에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한다(Mckernan, Ratcliffe, Steuerle, & Zhang, 2014). 이 관점에서는 20~30대에 자산 증가율이 높고, 50대 이후 자산증가율이 낮아지는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 효과가 유효하다. 실제로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형성 행태를 보면, 20대부터 전월세보증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30대 후반에서 18~19% 정도로 안정화된 후에 30대 후반부터 자가를 매입하는 경향이 드러난다(전병유, 2023, pp.20-24). 전월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활용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상환하여 순자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생애 궤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산 형성에 더해 자산 활용을 아우르는 생애 궤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자산을 형성하는 기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출을 지렛대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저축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왔지만, 제4장과 제5장, 제6장 등에서 대출 혹은 가계부채가 고자산층이 자산을 형성

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이로 인해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대출을 활용하여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행태는 2000년 대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금융화가 본격화되면서 자리 잡았다(김수현, 2022). 2011~2021년 동안 자산 축적에 대한 저축의 기여도는 56.0%인데, 2016~2021년으로 시점을 축약해서 보면 저축의 기여도는 50.3%로 감소하기도 했다(전병유, 2023, pp.17-20). 유럽과 미국에서 세계금융 위기 이후 모기지(mortgage) 등 주택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저소득 20~40대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도 주택 금융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Dewilde & Flynn, 2021). 주택 매입 등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자산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지만 (이동엽, 서상원, 2023), 부동산 시세 변화에 따라 자산의 평가액이 변동하면서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 불평등을 높인다(이동엽, 서상원, 2023, pp.16-18). 그렇다면, 사회주택이나 공공의료와 교육 등 공공재에 대해서는 기본자산의 관점에서 필수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 조세정책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제6장에서 사회지출과 재산세 비율이 클수록 저자산층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이전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나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정다운, 강동익, 최승문, 2019, pp.153-155). 그러나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자산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정책의 배타적인 설계를 넘어 조세정책과의 적극적인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Hubmer, Krusell, & Smith, 2021).

2. 정책 과제

자산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등 취약 집단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여성 노인, 건강이 나쁜 취약 집단이 금융적으로도 더 취약하다 (Christelis, Jappelli, Paccagnella, & Weber, 2009).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남유럽에 사는 50세 이상 노인은 자산이 많지만 금융 유동성이 부족해 위기 대응력이 낮은 한편,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의 50 세 이상 노인은 금융자산이 많고, 부채를 통해 소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Christelis, Jappelli, Paccagnella, & Weber, 2009). 제4장에서도 한부모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혹은 장애인 개인이 자산분위가 높을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제6장에서는 국가 단위의 사회지출이 고자산층의 점유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지출이 많을수록 하위 40%의 점유율이 높아져 자산 지니계수를 낮추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취약 집단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공공주택 입주 우대 등으로 거주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은 현재도 시행 중이나 자산 격차 관점에서 정책 설계에 의한 체계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 집단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의료와 교육 등 필수지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 관점에 따른 자산 형성과 활용 궤적을 지원해야 한다. 제4장에서 성인기 이후 나이에 따른 자산 수준의 역U자 형태를 확인하였다. 청년기에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해 중장년기에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은퇴 이후 노년기에 자산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가정할 수 있다.

청년기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독립 시 전 월세보증금이나 주택자금을 확보하며 저축이나 증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장에서 2007년 기준 청년이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 2023년 자산 수준이 높은 경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 등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통장사업, 즉 금융자산을 주축으로 한다.

그렇다면, 첫째, 실질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이 자산 형성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청년기 자산 형성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출과 금융을 종합하고 유기적으로 구조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 등 원가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지만, 사적 지지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접근성이 낮아지는 성인기에 자산의 생애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등의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기제 강화가 필요하다.셋째, 필요하다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행태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이 있다. 보통의 아동과 청소년도 용돈과 간헐적인 수입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대 금리 혹은 매칭 지원금 등의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년기는 자녀나 부모의 부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한편,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을 장기간 상환하는 등 청년기부터 형성한 자산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시기이다. 제4장에서 저축액이 순자산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액이 늘어날수록 고자

산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자산층일 확률이 높았다.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 중심의 투자 행태가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실태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첫째, 대출을 상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순자산을 축적하는 경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금융자산에 한해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줄이면서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는 투자 전략 수립 컨설팅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는 청중장년기에 형성한 자산, 특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주축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제6장에서 GDP 대비 연금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이 낮고 자산 하위 40%의 점유율이 높으며, 결국 자산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첫째,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할 때(Cowell et al., 2017),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가려진 연금자산(pension asset)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 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중장년기에도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 둘째, 현세대 노인의 거주주택 중심의 자산 형성 행태를 고려해 주택연금 등 자산활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재난적 의료비나 장기요양,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통해 질병 및 돌봄 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 부담을 공적으로 완화하고 (De Nardi & Fella, 2017), 필요에 따라 접근성이 높은 서민금융으로 노년기 자산 빙곤화를 지연해야 한다.

셋째,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이전하는 사적 상속과 증여를 사회적 상속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5장에서 상속과 증여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분위가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소득이 높은 청년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임대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Dewilde & Flynn, 2021, p.587). 한국에서도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을 이유로 50대가 상속과 증여를 제공하고, 30대가 수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전병유, 2023, p.17). 또 다른 문헌에 따르면, 상속을 받은 저 소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 수준이 높고, 재산이 없을 확률도 현저히 낮다. 상속 자산은 주택보다는 현금이나 금융자산 등 유동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저 소득층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확률도 낮고 받더라도 금액이 적다 (Morelli, Nolan, Palomino, & Van Kerm, 2021). 그렇다면, 사회적 상속의 일환으로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서는 기본 자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자산 격차의 젠더화를 완화해야 한다. 제4장에서 개인 단위 자산은 남성이 유리하지만, 가구 내에서는 성별 자산 격차가 희석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결혼한 남성이 자신 명의의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 내 자산 배분 혹은 자산 격차의 젠더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Sierminska, Frick, & Grabka, 2010, Ruel & Hauser, 2013, Kellewad, Pfeffer, & Schachner, 2017, pp.393-398; Kuypers & Marx, 2021, Meriküll, Kukk, & Rõõm, 2021, Kukk, Meriküll, & Rõõm, 2023).

그렇다면, 결혼과 별거, 이혼, 사별, 재혼의 혼인상태 궤적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두 개인의 자산을 가구 단위로 결합하고, 부모 세대로부터 주택이나 비용 등을 증여받아 자산이 증식하며, 결혼 생활 중에 두 개인의 소득을 합하거나 가구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구원 1인당 지출액의 총합에 비해 가구 지출액이 감소하면서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 소득의 초과분을 획득하여 자산이 증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을 선택한 개인이 가구 단위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사별과 달리 별거나 이혼을 통해 가구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감소하고(Kapelle & Baxter, 2021, p.253),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이 감소한다(Endeweld, Herbst-Debby, & Kaplan, 2022). 따라서 별거나 이혼하는 가구의 조정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재혼하면서 자산이 재증식하는 등 혼인상태의 궤적을 고려한다면, 결혼 시 자산 형성에 대한 교육과 설계, 별거나 이혼 시 자산 배분 상담 및 필 요에 따라 공적 지원제도로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자산 형성에 취약한 집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역량(financial literacy)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자산 분위가 높아지는 데에 작동하는 교육 프리미엄의 존재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유리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 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이 높고, 하위 40%의 점유율이 낮으며, 결국 자산 지니계수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저 학력자의 금융지식(financial knowledge)과 금융기술(financial skills), 금융태도(financial attitudes), 금융행동(financial behaviour) 등 금융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높은, 이른바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교육 프리미엄이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 니다(Killewald, Pfeffer, & Schachner, 2017, pp.393-398; 정다운, 강 동익, 최승문, 2019, pp.50-50). 유럽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식이 나 펀드 등 위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확률이 높은데(Arrondel et al., 2016, pp.151-153, pp.159-161), 이는 관련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상 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정규교육 이후에도 금융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전 생애 금융교육과 금융상담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많은 자산을 축적 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다음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상용직 임금근

로자로 추정되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기타 종사자, 무직자는 자산 축적에 불리하다. 따라서 자영업의 실패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계 소상공인의 실패에 대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폐업할 예정이거나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및 법률자문, 전직이나 재창업 교육 및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지원과 취업지원, 재기사업화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나 기타 종사자 등 일하지만 자산 축적에 취약한 노동시장 취약 집단을 우대하는 자산 형성 및 기본금융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금리를 우대하거나 매칭적립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실질적인 처분가능소득을 줄임으로써 역진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공공주택, 의료와 교육 등 필수지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 생애 위기 상황에서 접근성이 높은 기본금융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기가 절대적인 취약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저리의 햅살론 등을 제공하지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간 공급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이용이 어려울 뿐더러 해당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사회적 위험이 자산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막는 것 역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제6장에서 높은 실업률이 자산 하위 40%의 점유율을 낮추고 상위 10%의 점유율을 증가시켜 자산 지니계수를 높이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활동기

에 실업으로 근로소득원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면, 저축의 금융자산 등을 생활비로 전환하면서 자산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결국 저자산층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산 빈곤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업 이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고용보험의 효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괄성의 사각지대와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의 사각지대를 재점검해야 한다.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아파트 중심 자산 형성 행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제4장에서 수도권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면 고자산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가격 변화가 불균등하여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도시 중심 고가주택은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외곽 저가 주택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Dewilde & Flynn, 2021, pp.587-588). 인접한 지역의 자산 불평등이 확산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역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Coibion et al., 2020, pp.2956-2957). 결국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주택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하여 다차원적 삶의 질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대출 정책은 자산 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자산 분위가 높았다. 제6장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이 높고, 하위 40%의 점유율이 낮으며, 결국 자산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대출은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다. 정책에서는 상환능력 대비 고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금융권 및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출 위험에 대응해 이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거주주택 매입 용도의 대출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불안정 고용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취약 집단,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등 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등 우대 지원으로 추가 대출 부담을 봉쇄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 거주주택 안정성 확보와 노후소득으로의 유동화를 고려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 자산활용제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 대출로 인한 금융취약화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연체나 상환 능력 대비 과중한 대출을 지양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사금융이나 작업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고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과 서민금융 등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 제6장에서 GDP 대비 재산세 비율이 고자산층의 점유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높은 재산세 비율이 하위 40%의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자산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사회정책은 누진적 조세정책과 결합하였을 때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에 대한 유권자의 계층적 공정성 선호와 부유층에 의해 민주주의 절차가 장악되어 계층 친화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부(wealth) 이외의 균열이 부의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채택을 방해할 수 있다(Scheve & Stasavage, 2017, pp.462-465). 따라서 고자산가와 저자산가의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사회통합적 관점을

19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누진적 보유세 설계로 확보하는 재정은 저자산층의 자산 형성과 구매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강신욱, 노대명, 이소정, 양난주, 김근혜. (2016).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계숙, 민인식. (2013). 무조건분위회귀를 이용한 도시지역 임금불평등 변화 분석. *국토계획*, 48(3), 53-74.
- 김낙년. (2016).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62, 393-429.
- 김낙년. (2017).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4. *경제사학*, 64, 127-160.
- 김성아, 노현주, 박형준, 신영규. (2023).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2021).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 (2015).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에 대한 연구: 분위별 임금격차 양상. *사회경제평론*, 28(3), 119-154.
- 김수현. (2022).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택의 금융화' 논의,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 할까?. *주택연구*, 30(2), 161-195.
- 김연명. (2004).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20, 133-154.
- 김영일. (2019). 가계 소득-자산의 분포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윤태 외. (2022).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한울아카데미*.
- 김현경. (2024). 2004~ 2019년 한국 임금불평등 추이와 변화의 원인. *사회경제평론*, 37(2), 1-43.
- 박민, 안경봉. (2008).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조세법연구*, 14(3), 263 - 295.
- 박세리, 김기승. (2023). 가계 부채의 결정 요인 분석: 소득계층 변화를 중심으로. *주택금융연구*, 5-24.
- 박현준, 진창하. (2020). 무조건부 분위회귀를 활용한 가구 순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30(3), 23-35.
- 배세영. (2024). 무조건부 분위회귀 (UQR) 와 Oaxaca-재중심영향함수 (RIF)

- 분해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임금불평등에 관한 비교분석. 아태연구, 31(3), 5-32.
- 보건복지부. (2024.12.10.).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5.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빈곤·불평등연구실. (2024). 2024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광영. (2016). 불평등, 격차, 소득집중과 양극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81-489.
- 이동엽, 서상원. (2023). 가계부채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37(4), 1-32.
-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과제. 경제와사회, 60-94.
- 이성재, 이우진. (2017).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57-109.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 이철승, 정준호. (2018).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1990~2016. 동향과 전망(104), 316-373.
- 이태직. (2021). 가계의 자산 불평등 측정지표 알아보기. 통계 포커스 가을호. 통계청.
- 전병유. (2023).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의 요인 분해와 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30(4), 3-34.
- 정다운, 강동익, & 최승문, (2019).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지수, 유경원, 서은숙. (2017). 가계부채와 자산분배. 한국경제연구, 35(3), 5-30.
- 정해식, & 김성아. (2019). 한국인의 행복: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사회

- 복지정책, 46(1), 185-213.
- 최충, 정성엽. (2017). 비정규직 전환이 임금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23(1).
- 통계청. (2022.3).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25.3.28.).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4),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 현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등 결정.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http://www.jstor.org/stable/1817129>
- Ansell, B., & Cansunar, A. (202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ousing (un)affordabilit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1(5), 597-613.
- Ari, A., & Cergibozan, R. (2023). Household debt and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In S. B. T. Nguyen & T. N. Tran (Eds.), *Financial inclusion and income inequality: International evidence* (pp. 117-140).
- Arrondel, L., Bartiloro, L., Fessler, P., Lindner, P., Mathä, T. Y., Rampazzi, C., . . . Vermeulen, P. (2016). How do households allocate their assets? Stylized facts from the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44th issue (June 2016)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 Bessière, C., & Pugliese, M. (2025). Gender and wealth accumul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ocio-Economic Review*, 23(2), 479-512
- Buhmann, B., Rainwater, L., Schmaus, G., & Smeeding, T. M. (1988).

- Equivalence Scales, Well-Being, Inequality, And Poverty: Sensitivity Estimates Across Ten Countri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4(2), 115-142.
- Canberra Group, (2011). *Handbook of Household Income Statistics* (2nd edition). United Nations.
- Castles, F. G. (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33(1).
- Castles, F.G. and Ferrera, M. (1996).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s Southern Europe Different?,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i, no. 2.
- Chance, L.,, Piketty, T., Saez, E., & Zucman, G. (2022).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World Inequality Lab.
- Chancel, Piketty, Saez, Zuzman, 2022
- Christelis, D., Jappelli, T., Paccagnella, O., & Weber, G. (2009). Income, wealth and financial fragility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doi.org/10.1177/1350506809341516
- Coibion, O., Gorodnichenko, Y., Kudlyak, M., & Mondragon, J. (2020). Greater Inequality and Household Borrowing: New Evidence from Household Data.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8(6), 2922-2971. doi:10.1093/jeea/jvz076
- Collins, L. M., & Lanza, S. T. (2013).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nley, D., & Gifford, B. (2006). Home ownership, social insurance, and the welfare state. *Sociological Forum*, 21(1).
- Cooke, A., Ghimire, U., Lee, H., & Zhao, K. (2025). Intergenerational

- transfers, differential fertility, and wealth inequality. *Macroeconomic Dynamics*, 29, Article e51.
- Cowell, F., Nolan, B., Olivera, J., & Van Kerm, P. (2017). Wealth, top incomes and inequality. *National Wealth: What is missing, why it matters*, 175-206.
- De Nardi, M. (2004). Wealth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link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3), 743-768.
- De Nardi, M., & Fella, G. (2017). Saving and wealth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 Dynamics*, 26, 280-300.
- Deaton, A.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 Delfani, N., De Deken, J., & Dewilde, C. (2014). Home-ownership and pension generosity: Alternative modes of welfare provision. *Housing Studies*, 29(6).
- Dewilde, C., & Flynn, L. B. (2021). Post-crisis developments in young adults' housing wealth.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1(5), 580-596.
- Doling, J., & Ronald, R. (2010). Home ownership and asset-based welfar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5(2).
- Duvoux, N. (2025). Class and Time-Based Subjective Inequality: Wealth Forecast: Taylor & Francis.
- Endeweld, M., Herbst-Debby, A., & Kaplan, A. (2022). Do the privileged always win?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by income and gender group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9(1), 77-100.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Fessler, P., & Schürz, M. (2015). Private wealth across European countries: The role of income, inheritance and the welfare state.

- ECB Working Paper No. 1847.
- Firpo, S., Fortin, N. M., & Lemieux, T. (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953-973.
- Firpo, S., Fortin, N. M., & Lemieux, T. (2018). Decomposing wage distributions using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egressions. *Econometrics*, 6(2), 28.
- Furceri, D., Loungani, P., Ostry, J. D., & Pizzuto, P. (2021). The rise in inequality after pandemics: Can fiscal support play a mitigating role? (IMF Working Paper No. 2021/12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Galor, O., & Zeira, J.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35-52. doi:10.2307/2297811
- Gini, C. (1912). Variabilità e mutabilità: contributo allo studio delle distribuzioni e delle relazioni statistiche.[Fasc. I.]. Tipogr. di P. Cappini.
- Hsieh, J. (2023). Population aging and wealth inequality. *Econ Change reconstruct* 56, 4223-4252.
- Hubmer, J., Krusell, P., & Smith Jr, A. A. (2021). Sources of us wealth inequality: Past, present, and future. *NBER Macroeconomics Annual* 35.
- IF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25). About the tool. Retrieved August 6, 2025, from <https://ifs.org.uk/about-tool>.
- Kapelle, N., & Baxter, J. (2021). Marital dissolution and personal wealth: Examining gendered trends across the dissolution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3(1), 243-259.
- Keister, L. A., & Moller, S. (2000).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63-81.
- Killewald, A., Pfeffer, F. T., & Schachner, J. N. (2017). Wealth

- Inequality and Accumul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 379-404. doi:10.1146/annurev-soc-060116-053331
- Kemeny, J. (1980). Hom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3), pp. 372-388.
- Kholodilin, K. A., Kohl, S., Korzhenevych, A., & Pfeiffer, L. (2023). The hidden homeownership welfare state: An international long-term perspective on the tax treatment of homeowners. *Journal of Public Polic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Kholodilin, K. A., Weber, J. P., & Sebastian, S. (2018). Rental market regulation over the last 100 years i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IW Weekly Report*, 8(42), 397-404.
- Killewald, A., Pfeffer, F. T., & Schachner, J. N. (2017). Wealth Inequality and Accumul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 379-404. doi:10.1146/annurev-soc-060116-053331
- Knoll, K., Schularick, M., & Steger, T. (2017). No Price Like Home: Global House Prices, 1870-2012, *American Economic Review*, 107(2), 331-353. doi:10.1257/aer.20150501. p.340.
- Kukk, M., Meriküll, J., & Rõõm, T. (2023). The Gender Wealth Gap in Europe: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to Predict Individual-level Wealt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9(2), 289-317.
- Kuypers, S., & Marx, I. (2021). Poverty in the EU using augmented measures of financial resources: the role of assets and deb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1(5), 496-516.
- Landouw, P., & Ravallion, M. (1995). Poverty and Household Size. *The Economic Journal*, 105(433), 1415-1434. doi:10.2307/2235108
- Levin, R. (2021). IMF Working Paper – Strategy, Policy and Review Department Finance, Growth, and Inequality. 202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64.

- Lorenz, M. O. (1905). Methods of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wealth.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70), 209-219.
- McKernan, S.-M., Ratcliffe, C., Steuerle, E., & Zhang, S. (2014). Disparities in wealth accumulation and loss from the great recession and beyond. *American Economic Review*, 104(5), 240-244.
- Meriküll, J., Kukk, M., & Rõõm, T. (2021). What explains the gender gap in wealth?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dat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9, 501-547.
- Morelli, S., Nolan, B., Palomino, J. C., & Van Kerm, P. (2021). Inheritance, gifts and the accumulation of wealth for low-income household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1(5), 533-548. doi:10.1177/09589287211040419
- Neelakantan, U., & Chang, Y. (2010). Gender differences in wealth at retire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0(2), 362-367.
- OECD. (2013a).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9). *Housing wealth accumulation and wealth distribution: Evidence and stylized facts*. OECD Publishing.
- OECD. (2024).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 indicator HM1.3 Housing tenures*, <https://oe.cd/ahd>.
- O'Farrell, R., Ł. Rawdanowicz and K. Inaba (2016), 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8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m2hz2x9hxr-en>.
- Palma, J. G. (2011). Homogeneous middles vs. heterogeneous tails,

- and the end of the 'inverted-U': It's all about the share of the rich. *development and Change*, 42(1), 87-153.
- Pfeffer, F. T., & Schoeni, R. F. (2016). How Wealth Inequality Shapes Our Future.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 RSF, 2(6), 2-22. doi:10.7758/rsf.2016.2.6.01
- Pfeffer, F. T., & Waitkus, N. (2021). The wealth inequality of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6(4), 567-602.
- Piketty, T.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유엔제이, 공역). 글항아리.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Piketty, T., & Zucman, G.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3), 1255-1310.
- Piketty, T., Yang, L., & Zucman, G. (2019). Capital Accumulation, Private Property, and Rising Inequality in China, 1978–2015. *American Economic Review*, 109(7), 2469-2496. doi:10.1257/aer.20170973
- Piketty, T., Yang, L., & Zucman, G. (2019). Capital Accumulation, Private Property, and Rising Inequality in China, 1978–2015. *American Economic Review*, 109(7), 2469-2496. doi:10.1257/aer.20170973
- Piketty, T., Yang, L., & Zucman, G. (2019). Capital Accumulation, Private Property, and Rising Inequality in China, 1978–2015. *American Economic Review*, 109(7), 2469-2496. doi:10.1257/aer.20170973
- Pinkow, L. (Ed). (2012). *Wealth Inequality Reader. Dollars & Sense*.
- Rodems, R., & Pfeffer, F. T. (2021). Avoiding material hardship: The buffer function of wealth.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1(5), 517-532.
- Ruel, E., & Hauser, R. M. (2013). Explaining the gender wealth gap. *Demography*, 50(4), 1155-1176.
- Saez, E., & Zucman, G. (2016).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 1913: Evidence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2), 519-578. doi:10.1093/qje/qjw004
- Saez, E., & Zucman, G. (2016).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13: Evidence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2), 519-578. doi:10.1093/qje/qjw004
- Scheve, K., & Stasavage, D. (2017). Wealth inequality and democra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 451-468.
- Semyonov, M., & Lewin-Epstein, N. (2013). Ways to Richness: Determination of Household Wealth in 16 Countries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6), 1134-1148. doi:10.1093/esr/jct001
- Shin, K.-Y. (2020). A new approach to social inequality: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7(1), 17. doi:10.1186/s40711-020-00126-7
- Sierminski, E. M., Frick, J. R., & Grabka, M. M. (2010). Examining the gender wealth gap. *Oxford economic papers*, 62(4), 669-690.
- Spurk, D., Hirschi, A., Wang, M., Valero, D., & Kauffeld, S. (2020).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0, 1-21.
- van Hoenselaar, F., Cournède, B., De Pace, F., & Ziemann, V. (2021). Mortgage finance across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8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Wind, B., Lersch, P., & Dewilde, C. (2017). The distribution of housing wealth in 16 European countries: Accounting for institu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2(4), 625-647.
- Wolff, N. E. (2002). Inheritances and Wealth Inequality. *The American*

- Economic Review, 92, 260-264.
- Wolff, N. E. (Ed). (2006).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Household Wealth. Edward Elgar Press.
- Woo, S. E., Jebb, A. T., Tay, L., & Parrigon, S. (2018). Putting the “person” in the center: Review and synthesis of person-centered approaches and methods in organizational scienc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 814-845.
- Wróński, M. (2023).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Wealth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the EU. World Inequality Lab WP 2023/13.
- Zucman, G. (2019). Global wealth inequality. *Annual Review of Economics*, 11, 109-138.
- Zyphur, M. J. (2009). When mindsets collide: Switching analytical mindsets to advance

[인터넷 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4.3.9. 검색)
지표누리 국민 삶의 질 지표 가구순자산(<https://www.index.go.kr/unify/info.do?idxCd=8087>에서 2025.1.15. 추출)
World Inequality Database(<https://wid.world/>에서 2025.2.4. 인출 후
연구진 작성)
LIS, (n.d.). The LWS User Guide 2024 Template(<https://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files/data-lws-guide.pdf>에서 2025.10.3. 인출)

[데이터세트]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https://mdis.kostat.go.kr/index.do>

통계청. (2025.7.28.).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2025.8.7. 추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A012&conn_path=l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https://www.koweps.re.kr:44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각 연도). IMF DATA에서 2025.7.10. 추출,

<https://data.imf.org/en>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각 연도).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OECD. (각 연도). OECD Data Explorer에서 2025.7.10. 추출, <https://data-explorer.oecd.org/?lc=en>

World Bank. (각 연도). Open Data에서 2025.7.10. 추출, <https://data.worldbank.org/>

World Inequality Database. (각 연도). **Net national wealth to net national income ratio**. 2025.3.31. 추출, https://wid.world/share/#0/contriestimeseries/wwealn_p0p100_z/US;FR;CN;WO;FI;KR;JP/last/eu/k/p/yearly/w/false/185.2575/1250/curve/false/country

World Inequality Database. (각 연도). **Net personal wealth share**. 2025.8.3. 추출, <https://wid.world/data/>

World Inequality Database. (각 연도). **Gross domestic Product**. 2025.8.3. 추출, <https://wid.world/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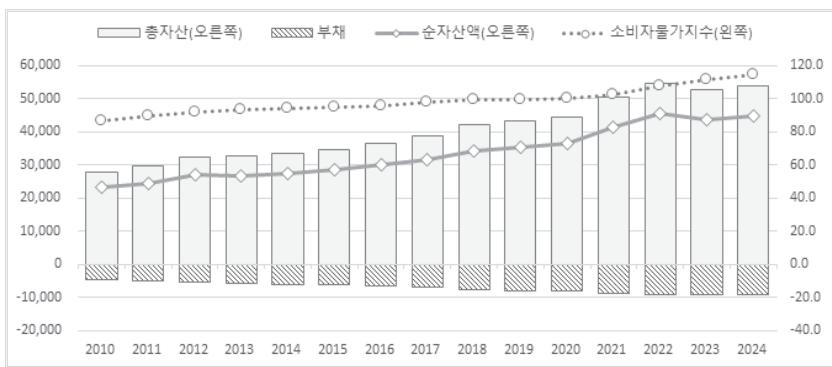
World Inequality Database. Statistical Software Components에서 STAT A 명령어 wid로 2025.8.3. 추출.



[제1장 부록] 서론

[부그림 1-1] 국내 평균 자산과 부채 추세(2010~2024년)

(단위: 만 원/연)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 “가구순자산,” 지표 누리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7>에서 2025.1.15. 추출 후 연구진 작성.

〈부표 1-1〉 국내 평균 자산과 부채 추세(2010~2024년)

(단위: 만 원/연)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순자산액
2010	27,684	4,618	23,066	86.37	26,705
2011	29,765	5,205	24,560	89.85	27,334
2012	32,324	5,450	26,875	91.82	29,271
2013	32,688	5,858	26,831	93.01	28,847
2014	33,539	6,051	27,488	94.20	29,182
2015	34,685	6,256	28,429	94.86	29,969
2016	36,637	6,719	29,918	95.78	31,235
2017	38,671	7,099	31,572	97.65	32,333
2018	42,036	7,668	34,368	99.09	34,685
2019	43,191	7,910	35,281	99.47	35,470

20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자산	부채	순자산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순자산액
2020	44,543	8,256	36,287	100.00	36,287
2021	50,253	8,801	41,452	102.50	40,441
2022	54,772	9,170	45,602	107.72	42,334
2023	52,727	9,186	43,540	111.59	39,018
2024	54,022	9,128	44,894	114.18	39,319
연평균 증가율	6.8	7.0	6.8	2.3	3.4

주: 1) 가구순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 - 전체 가구의 평균부채.

2) 실질 가구순자산은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하여 실질화함.

3) 2017년부터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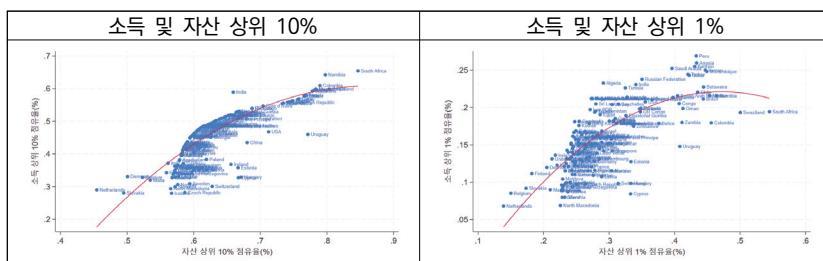
4) 자산, 부채, 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말 기준 자료임.

5)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24년 수치의 증가율을 14개 연도 간격의 수로 나눈 값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 「가구순자산」, 지표

누리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7>에서
2025.1.15. 추출 후 연구진 작성.

[부그림 1-2] 세계 소득 및 자산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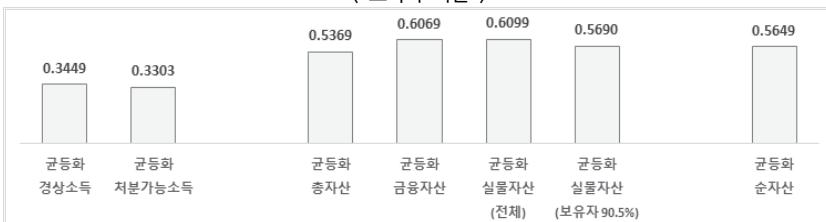


주: 실선은 자산 점유율과 소득 점유율 간 2차 함수의 관계를 가정한 회귀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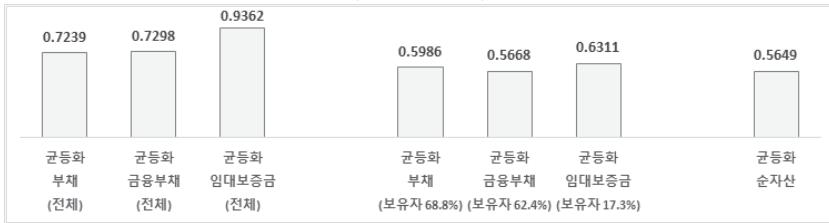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ase(<https://wid.world/>에서 2025.2.4. 인출 후 연구진 작성).

[부그림 1-3] 한국의 자산 및 소득, 부채 지니계수

〈 소득과 자산 〉



〈 부채와 자산 〉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하였고,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부표 1-2〉 소득 및 총자산 10분위 교차행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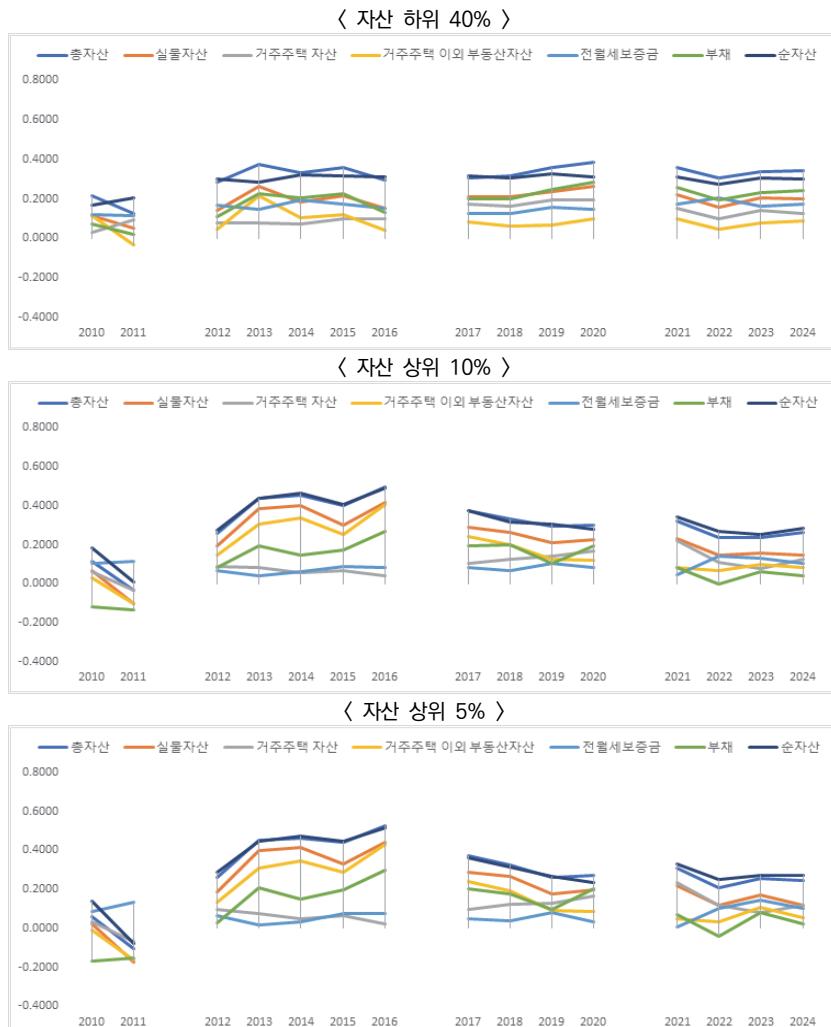
구분	자산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4.1	2.0	1.4	0.9	0.5	0.4	0.3	0.2	0.2	0.1	10.0
2분위	2.5	1.8	1.4	1.1	1.0	0.6	0.5	0.4	0.3	0.2	10.0
3분위	1.3	2.0	1.6	1.4	0.9	0.9	0.6	0.5	0.4	0.3	10.0
4분위	1.0	1.5	1.7	1.3	1.3	1.1	0.8	0.6	0.5	0.3	10.0
5분위	0.5	1.0	1.5	1.4	1.5	1.2	1.0	0.9	0.8	0.4	10.0
6분위	0.3	0.8	1.1	1.4	1.4	1.4	1.1	1.1	0.8	0.7	10.0
7분위	0.2	0.5	0.7	1.3	1.3	1.4	1.5	1.4	1.1	0.7	10.0
8분위	0.1	0.2	0.4	0.9	1.2	1.4	1.5	1.7	1.3	1.2	10.0
9분위	0.1	0.1	0.3	0.4	0.8	1.2	1.8	1.7	2.0	1.8	10.0
10분위	0.0	0.0	0.0	0.1	0.3	0.4	0.9	1.5	2.5	4.3	10.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주: 분석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 소득 및 총자산 분위를 이용하였고,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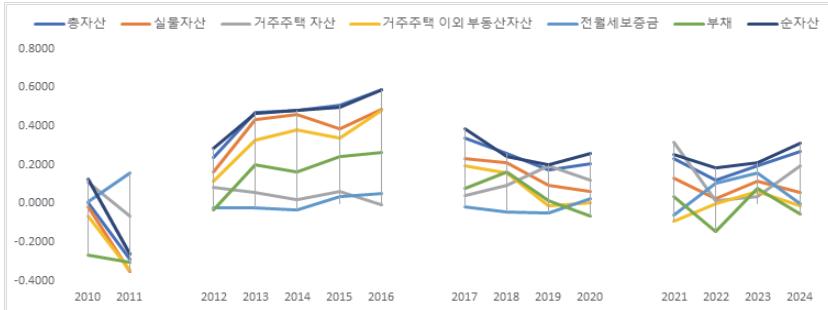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2023,

[제3장 부록] 자산 격차 추이와 실태

[부그림 3-1] 자산분위별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의 상관계수(2010~2024년)



〈자산 상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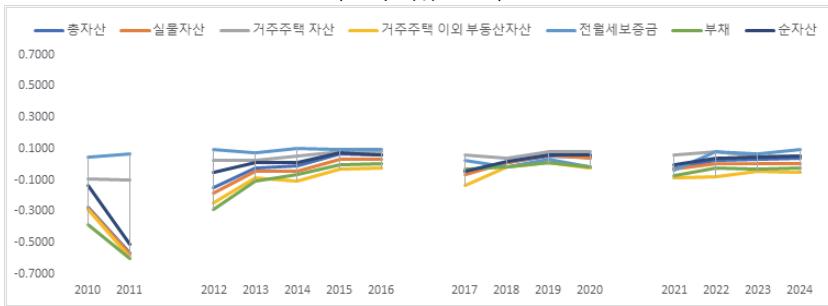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기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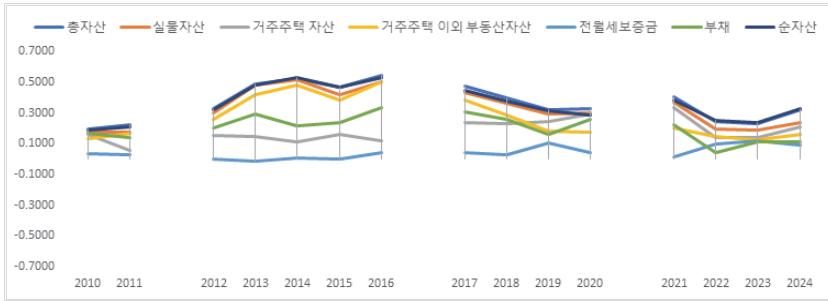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그림 3-2] 소득분위별 균등화 가구 치분기능소득과의 상관계수(2010~2024년)

〈소득 하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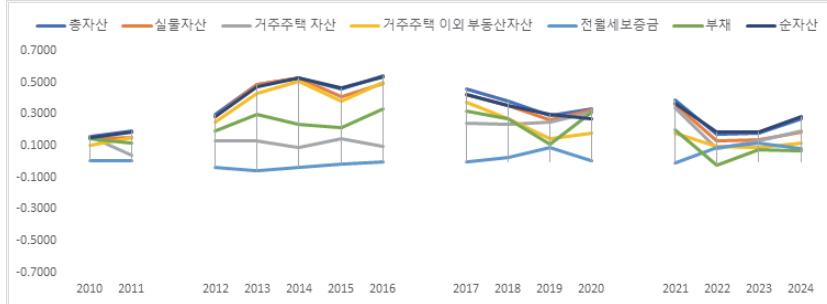


〈소득 상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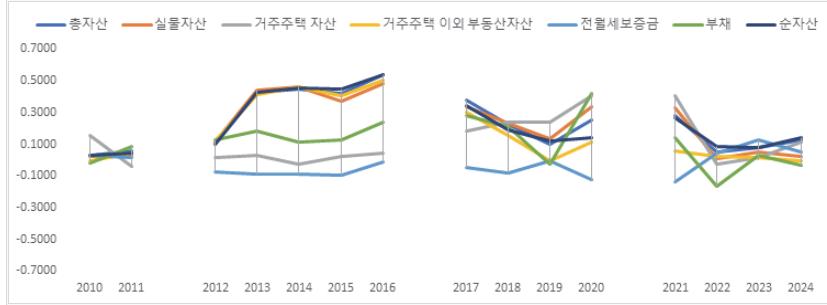


21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 소득 상위 5% 〉



〈 소득 상위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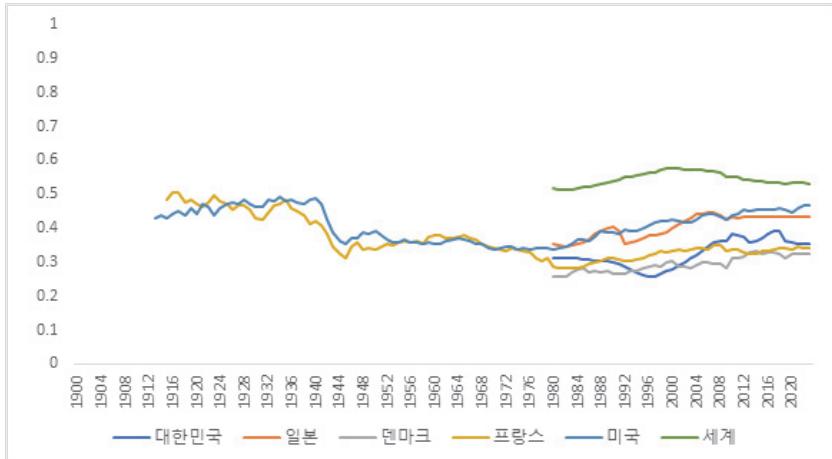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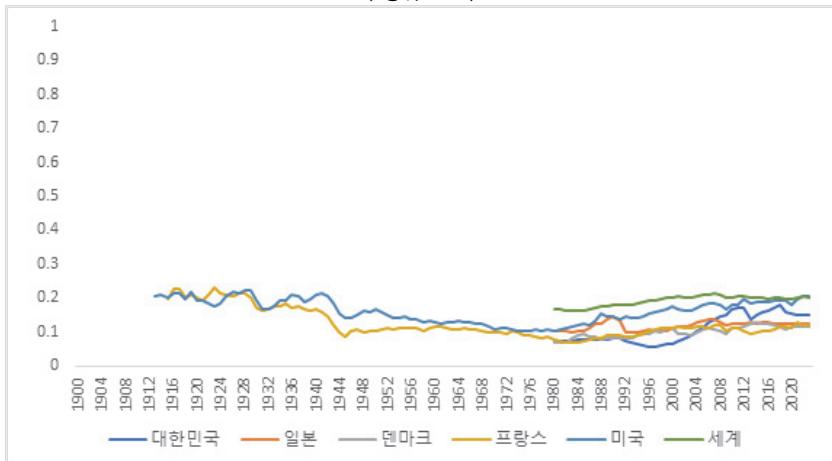
[부그림 3-3] 주요국 고소득가 집단의 소득 절유율(1900~2023년)

(단위: ×100=%)

〈 상위 10% 〉



〈 상위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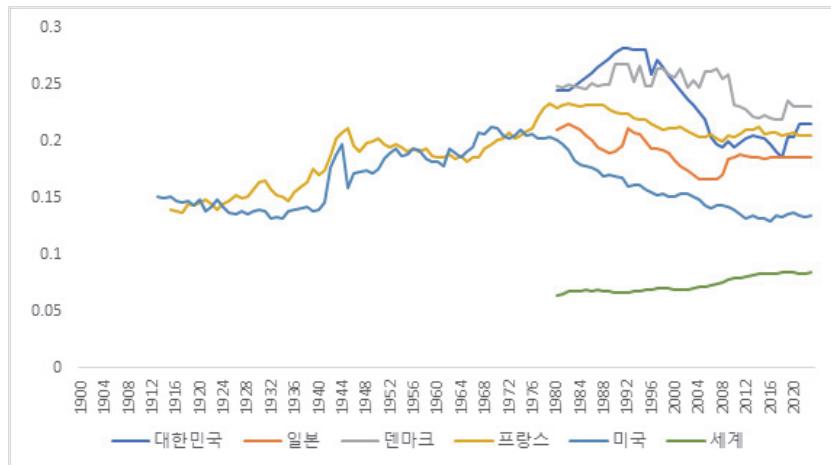


출처: (상위 10%) “Pre-tax national income((top 10%)”, (n.d.)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상위 1%) “Pre-tax national income((top 1%)”, (n.d.) World Inequality Database(<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21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그림 3-4] 주요국 저소득가 집단의 소득 절유율(190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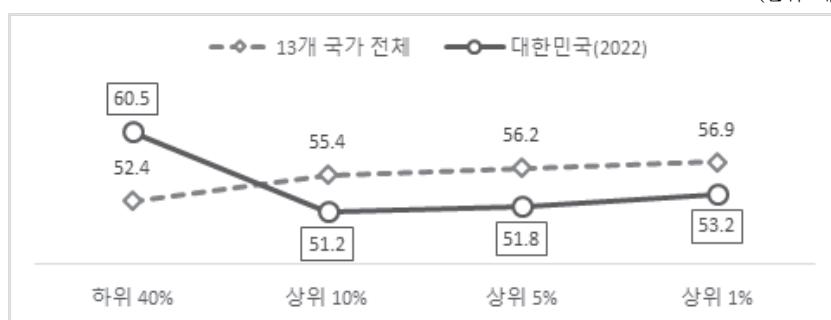
(단위: ×100=%)



출처: (하위 50%) “Bottom 50% national income share”. (n.d.)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에서 2025.8.3. 추출 후 저자 작성).

[부그림 3-5]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주 연령

(단위: 세)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쳐분가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팔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부표 3-1〉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주 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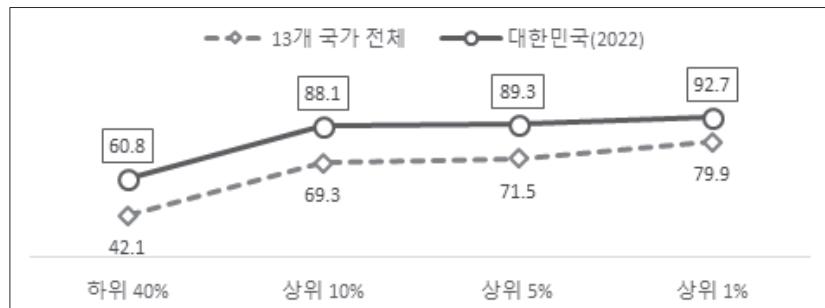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50.6	53.5	54.6	55.8	5.3
대한민국(2022)	60.5	51.2	51.8	53.2	-7.3
덴마크(2022)	51.7	53.6	54.7	56.3	4.6
독일(2017)	55.7	55.0	55.3	55.0	-0.7
미국(2022)	50.6	56.3	57.3	58.3	7.8
스웨덴(2005)	53.9	52.4	53.6	54.6	0.7
영국(2019)	54.1	50.8	50.6	48.9	-5.2
이탈리아(2020)	59.7	57.8	57.7	58.2	-1.4
칠레(2021)	54.1	47.1	48.7	50.4	-3.7
캐나다(2019)	50.9	49.8	51.7	56.1	5.3
프랑스(2020)	53.0	56.6	56.6	57.8	4.8
핀란드(1029)	54.7	52.3	53.7	56.3	1.6
호주(2020)	57.6	49.6	50.5	52.5	-5.2
13개 국가 전체	52.4	55.4	56.2	56.9	4.6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척분가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팔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분석.

[부그림 3-6]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단위: %)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부표 3-2〉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남성 가구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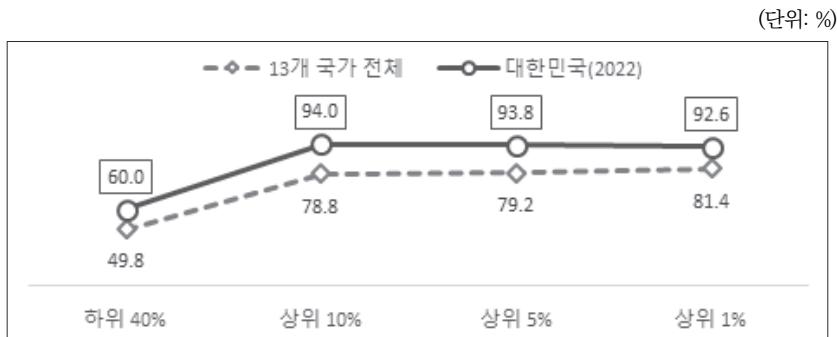
(단위: %)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52.1	89.3	90.5	92.1	40.0
대한민국(2022)	60.8	88.1	89.3	92.7	31.9
덴마크(2022)	47.2	73.1	74.8	80.0	32.8
독일(2017)	44.6	62.4	64.4	58.3	13.7
미국(2022)	39.5	70.2	72.5	87.3	47.9
스웨덴(2005)	46.5	78.0	78.3	79.1	32.6
영국(2019)	50.6	72.5	75.4	79.6	28.9
이탈리아(2020)	46.8	77.1	80.2	84.7	37.8
칠레(2021)	45.1	66.0	69.4	64.4	19.3
캐나다(2019)	49.3	71.4	71.8	81.7	32.4
프랑스(2020)	47.5	73.9	75.4	77.4	29.8
핀란드(2029)	41.9	60.2	61.1	57.9	15.9
호주(2020)	48.0	71.0	72.3	66.4	18.4
13개 국가 전체	42.1	69.3	71.5	79.9	37.8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부그림 3-7]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기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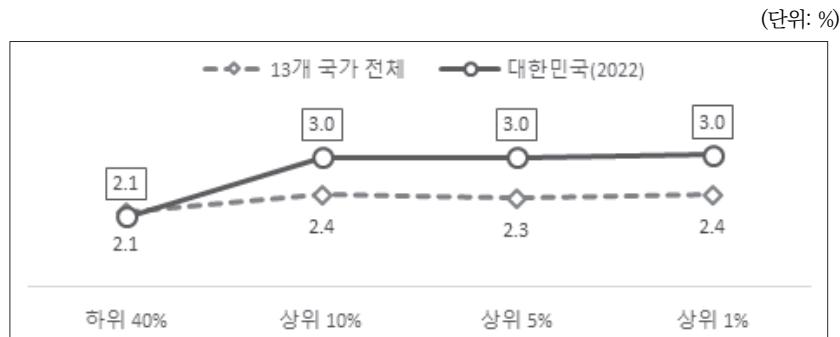
〈부표 3-3〉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경제활동하고 있는 가구주 비율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35.2	79.4	78.9	77.8	42.6
대한민국(2022)	60.0	94.0	93.8	92.6	32.6
덴마크(2022)	26.5	94.1	94.1	94.1	67.6
독일(2017)	39.1	79.6	80.4	86.7	47.6
미국(2022)	55.0	78.1	78.2	79.7	24.7
스웨덴(2005)	35.1	89.4	88.5	86.5	51.4
영국(2019)	41.5	83.0	84.3	90.1	48.7
이탈리아(2020)	36.7	67.6	74.6	80.5	43.8
칠레(2021)	47.5	86.8	83.7	70.8	23.3
캐나다(2019)	37.7	82.0	79.9	71.7	34.0
프랑스(2020)	44.1	67.7	71.1	77.6	33.5
핀란드(2029)	21.5	79.6	77.0	73.9	52.4
호주(2020)	38.7	90.8	90.0	86.8	48.1
13개 국가 전체	49.8	78.8	79.2	81.4	31.6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기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 분석.

[부그림 3-8]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규모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13개 국가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임.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분석.

〈부표 3-4〉 주요국의 소득 집단별 가구규모

구분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상위 1% - 하위 40%
노르웨이(2022)	1.6	2.5	2.5	2.4	0.9
대한민국(2022)	2.1	3.0	3.0	3.0	0.9
덴마크(2022)	1.5	2.4	2.4	2.4	1.0
독일(2017)	1.8	2.2	2.2	2.2	0.4
미국(2022)	2.2	2.4	2.3	2.4	0.2
스웨덴(2005)	1.6	2.3	2.3	2.3	0.7
영국(2019)	2.2	2.5	2.5	2.6	0.3
이탈리아(2020)	2.4	2.6	2.5	2.5	0.1
칠레(2021)	3.0	2.8	2.8	2.4	-0.7
캐나다(2019)	1.8	2.6	2.5	2.3	0.5
프랑스(2020)	2.0	2.3	2.3	2.3	0.3
핀란드(2029)	1.5	2.3	2.3	2.3	0.8
호주(2020)	2.2	2.7	2.7	2.7	0.5
13개 국가 전체	2.1	2.4	2.3	2.4	0.3

주: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분위를 설정함. 가구주 기준임. 가중치를 적용함.
국가명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기준연도임. 국가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출처: "Luxembourg Wealth Study" 원자료, LIS Cross-National Data Center in Luxembourg, rkr 연도, <https://webui.lisdatacenter.org/userinterface/>에서 원격접근서비스로 저자분석.

〈부표 3-5〉 가구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실물자산 (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
2010	86.5	31629.3	25214.1	66.3
2011	85.4	34318.0	26774.3	66.4
2012	86.6	36841.4	28313.5	66.0
2013	86.9	37117.7	27883.0	64.6
2014	86.7	38153.6	28716.0	65.5
2015	86.7	39477.9	29728.2	66.0
2016	86.2	41923.9	31730.7	67.2
2017	86.3	44177.8	33541.2	67.8
2018	86.4	47984.5	36671.4	68.4
2019	85.9	49569.1	37973.4	68.4
2020	85.3	51396.7	39889.7	68.9
2021	85.7	57732.8	45409.7	69.1
2022	84.8	63517.4	50316.9	69.1
2023	84.8	61053.1	47362.5	68.1
2024	84.4	62726.1	48138.1	67.8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2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6〉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 비율(%)
2010	57.6	38003.6	20081.2	64.2
2011	56.5	40904.9	20902.2	62.9
2012	56.7	43987.9	21524.8	61.8
2013	56.3	44808.4	20910.8	59.5
2014	57.8	45279.0	21405.8	59.4
2015	58.8	46595.5	22396.7	60.1
2016	59.6	48753.4	23887.6	61.0
2017	60.6	51012.4	25438.3	61.3
2018	61.1	54818.5	27634.8	61.0
2019	61.2	56444.4	29318.2	61.4
2020	60.9	57993.0	31124.4	62.4
2021	60.7	66161.9	37669.5	63.7
2022	59.4	73669.4	42932.6	64.3
2023	58.9	69791.0	38967.4	63.4
2024	58.5	71987.6	38785.7	62.4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기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7〉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자산(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자산 비율(%)
2010	30.3	56115.4	30636.3	49.0
2011	31.5	59256.1	31468.7	47.8
2012	31.3	64657.5	32329.6	45.6
2013	32.9	63477.3	30617.3	44.0
2014	33.3	63780.9	30258.5	43.2
2015	33.0	66018.5	30940.5	42.1
2016	32.6	70251.6	32727.0	41.7
2017	32.5	73450.6	33858.0	41.4
2018	33.5	77983.6	35888.6	41.4
2019	32.6	81616.1	36960.8	41.3
2020	31.6	84861.1	39801.3	42.4
2021	31.5	92639.9	42626.1	41.9
2022	31.2	100552.9	46124.6	41.8
2023	30.1	100356.6	46956.8	41.8
2024	30.6	103060.5	48617.7	42.0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2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8〉 가구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전월세보증금(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비율(%)
2010	35.8	14633.1	4864.2	55.8
2011	36.1	16150.1	5202.5	53.1
2012	36.4	18859.6	6122.9	53.0
2013	36.5	18706.1	6467.5	51.9
2014	35.2	18978.3	6642.4	51.8
2015	34.2	19284.8	6909.5	52.0
2016	33.2	20565.8	7386.4	52.2
2017	32.0	21806.7	7844.5	52.2
2018	31.7	24083.2	8405.6	51.8
2019	31.7	24575.1	8518.8	52.6
2020	32.1	26099.9	8953.0	53.7
2021	32.6	28236.7	9868.6	52.5
2022	34.2	29359.6	10453.1	52.4
2023	34.7	31037.6	10793.8	50.9
2024	35.0	30873.4	10466.2	49.2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기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9〉 가구의 총자산 대비 부채(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부채(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10	59.8	34710.0	7722.2	1164.5
2011	62.8	36915.9	8289.2	676.5
2012	65.2	39470.7	8364.6	703.9
2013	67.0	39432.5	8747.9	143.8
2014	65.9	40597.0	9186.1	184.3
2015	64.6	42753.9	9679.2	233.7
2016	64.6	44982.9	10399.5	440.7
2017	63.5	47340.3	11179.1	139.7
2018	64.1	50987.9	11955.4	175.9
2019	63.8	52435.9	12397.4	143.8
2020	63.7	54128.0	12970.5	407.2
2021	63.6	60575.8	13837.2	121.2
2022	63.3	66378.1	14484.8	170.1
2023	62.1	64191.9	14804.5	792.3
2024	60.7	67368.8	15043.2	136.0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치분가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2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10〉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거주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
2010	15.3	34303.3	6016.3	22.1
2011	16.4	36026.8	6419.0	23.0
2012	17.3	39303.7	7230.4	22.3
2013	18.0	38801.9	7399.0	25.7
2014	18.4	39358.8	7856.0	35.6
2015	19.2	41214.0	8330.5	24.5
2016	20.7	43463.2	8996.8	877.8
2017	21.2	46305.6	9558.3	26.5
2018	20.9	49983.0	9904.2	25.3
2019	20.6	54896.1	10286.7	24.9
2020	20.0	56876.0	10727.0	24.1
2021	21.2	65011.2	11479.7	22.1
2022	21.2	73008.5	12436.3	21.3
2023	20.9	67226.5	12573.1	23.2
2024	20.6	69617.3	13121.1	24.4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11〉 가구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
2010	4.3	71898.6	12811.4	20.7
2011	4.8	74141.9	13103.6	19.3
2012	4.5	81639.9	13237.5	18.2
2013	4.7	82061.3	12537.4	17.8
2014	5.0	80556.8	12805.9	18.7
2015	4.6	90364.1	14724.8	18.8
2016	5.1	98267.0	17030.1	18.9
2017	5.2	102116.0	18887.8	19.0
2018	5.8	106374.4	19003.6	19.6
2019	5.9	107262.2	18104.6	18.5
2020	5.8	111127.8	20062.1	19.9
2021	5.6	120838.6	20603.3	24.6
2022	5.7	132564.8	21078.8	18.3
2023	5.4	134292.2	20604.0	18.4
2024	5.3	140128.1	21817.1	19.4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2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12〉 가구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2010~2024년)

구분	보유율(%)	보유자의 총자산(만원/연)	보유자의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원/연)	보유자의 총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
2010	5.3	15947.6	2751.7	44.4
2011	5.3	16714.5	3005.1	31.3
2011	5.3	16686.1	3005.1	286.6
2012	6.0	21850.9	3462.0	54.6
2013	6.5	21999.3	3692.6	60.0
2014	6.9	22083.8	3973.3	30.6
2015	6.9	24444.5	4422.3	30.0
2016	6.9	23978.3	4559.2	52.3
2017	6.6	25382.2	5336.4	57.2
2018	6.8	27136.9	6177.8	43.8
2019	7.6	31090.0	6944.1	38.6
2020	8.0	30911.7	7744.7	42.9
2021	8.1	33252.7	8748.5	41.3
2022	8.9	37554.8	9614.7	95.6
2023	8.6	33888.6	9824.1	44.2

주: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 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13〉 분석자료의 연도별 소득분위별 가구 수(가중치 미적용)

(단위: 가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분위	하위 20%	2,546	2,752	5,356	5,235	5,153
	하위 20~40%	1,916	2,009	3,828	3,591	3,339
	중간 40~60%	1,842	1,891	3,485	3,293	3,177
	상위 20~40%	1,779	1,896	3,489	3,189	3,038
	상위 20%	1,917	1,969	3,586	3,286	3,156
10분위	상위 10%	1,008	1,034	1,868	1,712	1,604
20분위	상위 5%	538	528	973	882	845
100분위	상위 1%	124	104	209	193	177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분위	하위 20%	5,206	5,394	5,490	5,570	5,628
	하위 20~40%	3,433	3,466	3,596	3,747	3,678
	중간 40~60%	3,206	3,182	3,326	3,290	3,239
	상위 20~40%	3,048	3,054	3,008	3,040	3,008
	상위 20%	3,138	3,177	3,077	2,993	2,853
10분위	상위 10%	1,596	1,632	1,589	1,507	1,417
20분위	상위 5%	842	833	828	787	713
100분위	상위 1%	182	196	179	167	153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분위	하위 20%	5,559	5,759	5,817	5,903	6,114
	하위 20~40%	3,638	3,684	3,562	3,648	3,690
	중간 40~60%	3,146	3,096	3,144	3,112	3,074
	상위 20~40%	2,935	2,912	2,823	2,757	2,736
	상위 20%	2,786	2,736	2,608	2,674	2,700
10분위	상위 10%	1,354	1,359	1,318	1,387	1,378
20분위	상위 5%	706	689	666	718	718
100분위	상위 1%	143	142	148	162	174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2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14〉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0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4.6	54.8	25.4	32.7	42.5	8.5	2.2	3.0
	하위 20~40%	83.6	51.7	23.4	41.4	61.7	15.6	2.9	6.5
	중간 40~60%	89.2	57.1	27.0	38.5	64.1	18.2	4.3	6.2
	상위 20~40%	93.1	59.1	32.4	37.1	69.0	18.4	5.3	6.5
	상위 20%	97.2	67.2	46.0	30.2	69.2	18.9	7.7	5.1
10분위	상위 10%	98.5	69.6	52.7	28.4	70.1	18.8	8.4	4.0
20분위	상위 5%	99.3	69.0	58.9	28.1	71.2	16.7	10.3	2.5
100분위	상위 1%	100.0	73.6	74.0	21.8	72.1	15.2	7.6	0.6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6.1	38.4	13.9	23.5	2344.0	2.4	0.7	4.0
	하위 20~40%	53.4	35.3	11.7	25.0	396.9	3.8	0.6	2.1
	중간 40~60%	56.1	37.2	12.9	20.4	19.7	4.2	0.9	1.8
	상위 20~40%	58.9	37.0	15.8	17.5	18.4	3.5	1.0	1.4
	상위 20%	63.0	36.6	20.5	11.6	17.7	3.3	1.4	1.6
10분위	상위 10%	65.2	35.8	23.3	9.6	17.1	3.3	1.5	1.9
20분위	상위 5%	66.2	33.2	26.8	8.6	16.2	3.1	1.8	0.3
100분위	상위 1%	72.4	31.9	33.5	5.3	25.9	2.9	3.9	0.0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15〉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1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3.3	35.6	13.4	23.8	1385.2	2.4	0.8	53.5
	하위 20~40%	54.0	33.8	13.9	22.3	132.7	3.7	0.7	2.3
	중간 40~60%	56.7	36.3	13.1	19.9	80.5	4.6	0.8	1.5
	상위 20~40%	58.6	37.1	14.7	15.5	98.5	5.2	1.1	1.1
	상위 20%	62.3	34.9	21.0	12.2	16.4	3.5	1.2	1.5
10분위	상위 10%	64.6	34.5	24.0	10.0	17.5	3.5	1.4	1.4
20분위	상위 5%	65.3	30.9	28.2	9.2	19.0	3.0	1.5	0.8
100분위	상위 1%	66.6	28.7	31.4	6.3	15.3	2.5	1.4	0.4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4.6	54.8	25.4	32.7	42.5	8.5	2.2	3.0
	하위 20~40%	83.6	51.7	23.4	41.4	61.7	15.6	2.9	6.5
	중간 40~60%	89.2	57.1	27.0	38.5	64.1	18.2	4.3	6.2
	상위 20~40%	93.1	59.1	32.4	37.1	69.0	18.4	5.3	6.5
	상위 20%	97.2	67.2	46.0	30.2	69.2	18.9	7.7	5.1
10분위	상위 10%	98.5	69.6	52.7	28.4	70.1	18.8	8.4	4.0
20분위	상위 5%	99.3	69.0	58.9	28.1	71.2	16.7	10.3	2.5
100분위	상위 1%	100.0	73.6	74.0	21.8	72.1	15.2	7.6	0.6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3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16〉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2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1.2	50.1	22.7	36.2	44.8	8.7	2.1	4.2
	하위 20~40%	85.7	52.3	25.3	41.0	67.9	17.2	2.9	6.8
	중간 40~60%	90.8	56.7	28.7	38.6	71.3	20.7	3.9	6.1
	상위 20~40%	95.3	61.6	35.5	34.5	74.8	23.2	5.6	6.8
	상위 20%	97.5	66.2	49.1	31.6	76.4	21.0	9.0	6.8
10분위	상위 10%	98.6	66.5	54.7	31.2	77.1	20.6	9.7	6.0
20분위	상위 5%	99.0	67.6	59.9	29.8	77.5	18.7	10.3	5.9
100분위	상위 1%	99.1	75.7	69.2	21.3	82.5	17.0	10.0	3.5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2.3	35.1	12.3	24.6	1551.6	2.5	0.5	7.4
	하위 20~40%	54.7	34.3	11.8	22.7	122.2	4.2	0.6	2.6
	중간 40~60%	57.6	35.9	12.9	19.5	90.4	4.6	0.7	1.5
	상위 20~40%	60.5	36.0	15.2	15.1	20.4	4.8	1.1	1.5
	상위 20%	63.2	33.7	20.3	11.8	15.6	3.8	1.3	1.3
10분위	상위 10%	63.5	31.1	22.6	11.0	15.3	3.6	1.3	1.1
20분위	상위 5%	63.8	28.5	24.9	9.4	15.1	2.9	1.3	1.0
100분위	상위 1%	67.6	25.0	29.8	6.2	17.6	2.6	0.9	0.3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17〉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3년)

(단위: %)

구분		〈 보유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1.2	47.8	24.1	38.5	47.8	9.8	2.1	5.2
	하위 20~40%	86.4	52.3	26.3	40.2	68.7	17.4	2.6	7.0
	중간 40~60%	92.1	56.6	30.0	38.0	74.0	21.3	4.3	6.9
	상위 20~40%	94.3	61.3	36.9	35.0	75.3	23.3	6.5	6.9
	상위 20%	97.4	67.5	51.5	29.8	77.1	21.9	9.6	7.0
10분위	상위 10%	98.4	70.0	59.1	27.2	79.3	22.2	10.9	5.9
20분위	상위 5%	99.2	71.4	63.9	26.3	78.6	20.6	12.1	5.2
100분위	상위 1%	100.0	78.9	72.6	19.1	76.9	14.9	13.5	2.5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 총자산 대비 비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0.8	32.8	12.7	25.4	284.9	3.2	0.5	9.9
	하위 20~40%	54.3	33.7	12.1	21.8	44.0	5.3	0.6	2.3
	중간 40~60%	57.0	34.5	13.1	17.7	25.4	5.1	0.8	1.8
	상위 20~40%	59.2	34.4	15.3	15.4	32.8	6.0	1.1	1.6
	상위 20%	62.0	32.4	20.3	11.5	16.3	4.1	1.3	1.4
10분위	상위 10%	63.7	30.7	23.3	9.7	17.0	3.7	1.4	1.0
20분위	상위 5%	65.0	28.3	26.2	8.6	15.2	3.1	1.5	1.0
100분위	상위 1%	70.3	22.6	31.8	5.0	15.9	1.9	1.9	0.2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3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18〉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4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0.5	49.5	24.3	37.3	45.8	9.4	2.2	5.1
	하위 20~40%	87.0	53.4	27.9	38.9	68.3	17.6	3.4	7.9
	중간 40~60%	91.5	57.5	29.7	37.6	73.4	22.9	5.0	7.9
	상위 20~40%	94.3	63.8	37.7	32.9	74.3	23.3	5.9	7.5
	상위 20%	97.7	68.8	51.7	28.0	76.6	23.0	9.9	7.1
10분위	상위 10%	99.0	71.2	59.0	25.7	77.1	20.5	11.6	6.0
20분위	상위 5%	99.2	70.7	62.7	25.9	78.4	18.5	14.1	5.4
100분위	상위 1%	100.0	78.2	77.8	19.5	81.0	13.6	14.1	1.9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1.0	33.8	12.5	25.0	389.1	10.2	0.6	2.4
	하위 20~40%	55.4	34.3	12.6	20.1	40.1	5.9	0.7	2.7
	중간 40~60%	57.0	35.3	12.4	18.0	24.7	5.5	1.1	2.2
	상위 20~40%	60.2	35.6	15.2	14.1	17.9	5.2	1.0	1.8
	상위 20%	63.0	33.0	20.3	10.8	16.6	4.3	1.4	1.4
10분위	상위 10%	64.5	31.0	23.2	8.8	16.5	3.6	1.5	1.0
20분위	상위 5%	64.8	28.2	25.5	8.6	15.5	3.2	1.7	0.9
100분위	상위 1%	71.8	22.5	33.4	4.4	17.5	2.1	2.0	0.4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19〉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5년)

(단위: %)

구분		〈 보유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0.3	49.7	23.2	37.3	44.7	9.2	1.9	4.8
	하위 20~40%	87.2	54.9	29.2	37.9	66.4	18.5	2.7	8.0
	중간 40~60%	91.0	58.6	29.6	36.9	71.2	22.4	4.7	8.2
	상위 20~40%	95.4	66.0	37.0	30.3	73.5	27.0	5.5	6.9
	상위 20%	97.1	69.4	51.0	26.7	76.4	23.6	9.8	7.5
10분위	상위 10%	98.7	72.6	58.2	24.3	78.9	22.1	11.2	7.2
20분위	상위 5%	99.3	74.8	63.4	22.3	80.8	20.6	12.5	5.3
100분위	상위 1%	100.0	82.3	74.4	15.8	80.2	13.9	12.4	1.1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 총자산 대비 비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0.6	34.1	11.9	25.2	327.6	2.9	0.5	2.2
	하위 20~40%	56.2	34.8	12.6	19.6	273.3	5.0	0.7	2.8
	중간 40~60%	57.8	36.5	11.8	17.0	27.3	5.6	0.9	2.1
	상위 20~40%	61.7	38.2	14.3	13.1	19.6	6.3	1.0	1.8
	상위 20%	63.1	33.6	20.1	10.4	18.5	4.7	1.6	1.5
10분위	상위 10%	64.6	31.9	22.9	8.9	16.6	4.0	1.7	1.4
20분위	상위 5%	65.9	30.3	25.5	7.3	16.3	3.7	2.0	0.9
100분위	상위 1%	70.6	26.1	29.6	4.6	15.4	3.2	2.0	0.0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3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20〉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6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9.2	50.1	22.1	35.5	43.9	10.0	1.8	4.9
	하위 20~40%	86.5	55.2	28.1	38.4	67.5	19.4	3.4	8.0
	중간 40~60%	91.6	61.7	30.7	34.1	71.5	25.2	4.8	8.7
	상위 20~40%	94.7	65.3	36.4	30.1	73.5	27.3	6.3	7.4
	상위 20%	97.3	70.6	51.1	26.4	76.4	27.0	11.1	6.2
10분위	상위 10%	98.8	72.6	57.5	24.4	78.3	25.8	13.6	5.9
20분위	상위 5%	99.3	73.3	63.7	24.4	79.9	23.1	16.1	4.9
100분위	상위 1%	98.8	80.4	78.6	16.5	85.9	17.0	19.1	2.8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1.1	35.3	10.8	24.2	977.1	668.8	0.5	6.3
	하위 20~40%	56.3	35.9	11.9	20.2	61.5	5.8	0.9	2.7
	중간 40~60%	60.5	38.4	12.5	15.2	33.4	6.3	0.9	2.5
	상위 20~40%	61.2	37.8	14.2	13.3	20.4	6.3	1.0	1.9
	상위 20%	64.1	34.8	20.1	10.3	19.1	5.3	1.8	3.3
10분위	상위 10%	65.8	33.0	23.3	8.8	20.9	4.8	2.3	5.2
20분위	상위 5%	66.5	30.0	26.6	8.3	24.3	4.1	2.7	8.9
100분위	상위 1%	73.9	25.3	37.5	4.1	18.3	3.1	3.3	0.3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21〉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7년)

(단위: %)

구분		〈 보유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9.3	47.9	21.3	37.7	44.5	11.0	2.2	5.4
	하위 20~40%	87.2	57.7	28.5	34.8	65.8	21.2	4.4	7.4
	중간 40~60%	91.6	62.9	30.9	32.2	70.5	26.5	5.0	7.1
	상위 20~40%	94.7	68.9	36.3	27.3	72.5	27.7	5.6	7.3
	상위 20%	97.5	72.6	52.1	24.9	73.6	25.0	10.7	6.2
10분위	상위 10%	98.0	73.5	56.8	24.5	72.9	22.8	11.4	5.1
20분위	상위 5%	98.9	73.8	61.3	24.1	74.0	20.3	13.0	3.1
100분위	상위 1%	99.2	75.0	72.0	21.7	75.6	13.3	18.1	2.8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 총자산 대비 비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49.5	33.7	10.6	24.5	178.1	4.1	0.5	2.5
	하위 20~40%	58.5	37.5	12.2	18.0	104.5	6.1	0.9	5.4
	중간 40~60%	60.7	39.1	12.4	14.9	31.6	7.6	0.9	7.4
	상위 20~40%	63.1	40.4	13.8	12.5	20.1	6.3	1.2	2.4
	상위 20%	65.4	36.7	19.9	9.5	63.1	4.7	1.9	1.3
10분위	상위 10%	65.7	34.6	22.4	8.7	107.3	4.0	2.0	0.9
20분위	상위 5%	66.4	33.0	25.0	8.0	14.5	3.5	2.2	0.4
100분위	상위 1%	69.7	28.0	33.3	5.5	16.9	3.0	3.3	0.2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3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22〉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8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71.1	49.6	23.1	36.3	45.9	10.8	2.4	5.6
	하위 20~40%	85.0	56.6	27.7	36.1	64.9	19.6	3.6	7.7
	중간 40~60%	91.7	63.6	33.2	31.5	71.4	24.8	5.4	7.4
	상위 20~40%	94.6	68.8	38.0	27.7	73.4	29.0	7.7	7.7
	상위 20%	97.6	73.7	52.1	23.6	74.0	25.6	12.0	6.3
10분위	상위 10%	98.5	74.6	57.1	23.5	75.1	25.0	14.3	6.0
20분위	상위 5%	99.0	75.8	60.6	22.8	76.6	24.3	15.0	4.1
100분위	상위 1%	100.0	73.5	70.5	24.8	75.7	14.1	18.9	1.4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1.0	34.5	11.3	23.4	154.2	4.1	0.6	3.5
	하위 20~40%	56.9	36.3	12.1	18.8	82.4	5.5	0.9	4.8
	중간 40~60%	61.7	39.1	13.1	14.1	72.0	6.2	1.1	2.3
	상위 20~40%	63.9	40.1	14.6	12.7	223.3	6.5	1.5	2.4
	상위 20%	66.5	37.9	19.9	9.0	16.6	4.7	2.0	1.3
10분위	상위 10%	67.2	36.3	22.2	8.2	16.3	4.6	2.4	1.0
20분위	상위 5%	68.5	35.3	24.3	7.5	16.4	4.6	2.2	0.7
100분위	상위 1%	70.6	28.5	31.9	5.7	14.5	2.0	2.5	0.3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23〉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9년)

(단위: %)

구분		〈 보유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9.6	49.8	21.9	36.2	45.2	10.3	2.1	5.8
	하위 20~40%	85.3	56.4	27.6	36.5	65.2	18.7	3.8	9.1
	중간 40~60%	91.6	62.7	31.1	32.4	70.2	24.5	5.8	9.3
	상위 20~40%	94.5	69.6	37.3	27.2	73.6	28.4	7.5	7.3
	상위 20%	97.5	74.6	52.3	22.6	74.9	27.1	12.6	7.1
10분위	상위 10%	98.6	76.7	57.0	21.4	75.8	26.0	13.7	7.0
20분위	상위 5%	99.4	76.4	61.6	22.3	76.9	25.6	15.3	6.5
100분위	상위 1%	99.7	71.0	74.2	26.4	78.9	13.0	14.3	7.5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0.8	34.8	10.9	23.4	211.0	3.2	0.5	3.1
	하위 20~40%	55.9	35.9	11.6	19.6	106.0	5.8	0.8	4.4
	중간 40~60%	61.0	38.9	12.7	15.0	35.1	6.2	1.1	3.0
	상위 20~40%	63.9	40.9	13.9	12.1	22.0	6.5	1.3	2.3
	상위 20%	67.3	39.2	20.1	8.9	17.7	4.8	2.1	1.6
10분위	상위 10%	68.1	37.6	22.5	7.4	16.8	4.6	2.2	1.5
20분위	상위 5%	68.9	36.1	24.5	7.2	17.6	4.3	2.5	1.4
100분위	상위 1%	67.4	28.7	29.8	8.4	18.1	1.5	2.9	3.1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3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24〉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0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8.6	49.5	21.9	36.9	43.5	9.0	2.1	5.9
	하위 20~40%	84.5	56.5	26.4	36.4	65.8	17.2	3.9	9.3
	중간 40~60%	91.3	63.9	30.0	31.3	72.4	26.6	5.5	9.7
	상위 20~40%	94.7	69.1	36.6	27.4	72.6	27.7	8.0	8.6
	상위 20%	97.4	72.8	50.2	24.8	75.1	25.8	11.9	7.2
10분위	상위 10%	98.1	74.4	56.1	23.7	75.8	24.5	14.2	6.2
20분위	상위 5%	98.7	73.6	58.8	24.8	73.3	21.3	15.1	6.2
100분위	상위 1%	99.4	70.9	70.9	28.5	76.7	19.0	11.9	4.2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0.2	34.3	10.9	24.1	789.9	2.6	0.5	3.7
	하위 20~40%	56.2	36.9	11.4	19.8	112.0	4.9	1.0	3.6
	중간 40~60%	61.4	40.3	12.2	15.4	69.3	6.9	1.1	4.8
	상위 20~40%	65.2	42.0	14.6	12.4	23.4	6.0	1.4	2.8
	상위 20%	66.5	38.6	19.8	9.9	19.2	4.8	2.2	1.8
10분위	상위 10%	67.6	37.3	22.5	8.9	17.0	4.4	2.5	1.2
20분위	상위 5%	67.8	36.3	24.3	8.7	17.2	3.8	2.7	1.1
100분위	상위 1%	67.5	31.5	28.9	7.5	16.4	3.2	2.3	0.7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25〉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1년)

(단위: %)

구분		〈 보유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9.4	50.5	22.6	36.9	44.5	10.3	2.2	5.5
	하위 20~40%	85.1	56.3	26.8	37.3	64.8	19.7	4.6	9.5
	중간 40~60%	91.0	63.1	29.3	31.7	71.2	27.3	5.1	9.6
	상위 20~40%	95.0	67.4	35.6	29.3	73.4	27.9	6.7	9.5
	상위 20%	97.0	72.7	49.2	24.8	74.3	27.1	11.5	7.5
10분위	상위 10%	97.5	73.7	55.9	24.3	75.9	26.6	13.8	6.6
20분위	상위 5%	98.1	74.3	59.1	23.9	75.3	24.0	14.4	6.5
100분위	상위 1%	98.8	70.6	64.5	26.5	76.1	17.1	13.3	9.5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 총자산 대비 비율 〉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1.1	35.1	11.0	23.4	144.5	2.6	1.5	2.8
	하위 20~40%	56.6	37.0	11.7	19.8	34.1	4.9	1.0	4.4
	중간 40~60%	61.6	41.0	11.7	15.1	130.2	6.3	1.2	4.2
	상위 20~40%	64.3	41.4	14.1	13.7	26.3	6.0	1.3	3.1
	상위 20%	67.7	41.1	19.1	9.8	17.8	4.7	1.9	2.2
10분위	상위 10%	68.6	39.4	22.7	9.0	17.3	4.4	2.1	1.9
20분위	상위 5%	68.4	38.5	23.8	8.8	16.3	4.1	2.1	1.8
100분위	상위 1%	67.9	33.7	28.0	8.1	17.4	2.7	2.2	2.6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4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26〉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2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7.0	48.6	20.9	38.5	43.9	10.2	2.2	6.2
	하위 20~40%	84.7	55.6	27.0	38.5	64.9	20.7	4.5	9.7
	중간 40~60%	90.4	60.8	29.5	34.9	68.5	24.5	4.9	10.3
	상위 20~40%	94.9	66.2	37.3	30.1	75.1	28.8	7.9	9.9
	상위 20%	96.5	72.3	48.2	25.9	74.5	28.0	11.3	9.6
10분위	상위 10%	96.2	71.0	53.3	27.4	73.9	25.0	12.6	9.0
20분위	상위 5%	96.6	73.0	55.8	26.0	72.8	23.5	14.7	7.5
100분위	상위 1%	95.6	68.6	56.2	29.6	71.4	14.8	9.8	7.3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49.2	34.4	10.2	24.5	321.2	2.6	0.6	19.6
	하위 20~40%	57.0	37.1	11.6	20.1	39.8	5.0	0.9	4.4
	중간 40~60%	60.0	39.0	12.2	17.1	26.0	5.5	0.8	3.7
	상위 20~40%	65.0	41.3	14.9	13.1	29.3	6.0	1.4	6.7
	상위 20%	67.2	41.4	18.3	10.8	17.0	4.5	1.8	2.8
10분위	상위 10%	66.8	38.8	21.0	10.9	17.0	3.9	2.1	2.5
20분위	상위 5%	67.5	38.5	22.4	10.4	15.9	3.1	2.5	2.0
100분위	상위 1%	65.3	35.2	23.2	12.4	15.2	1.5	1.6	2.8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27〉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3년)

(단위: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8.6	49.4	20.6	38.2	42.4	10.8	2.6	5.4
	하위 20~40%	82.8	55.7	25.8	38.8	63.3	19.7	3.7	10.3
	중간 40~60%	90.3	60.0	28.7	34.5	69.6	25.4	4.9	11.3
	상위 20~40%	94.6	64.6	35.2	31.9	72.6	27.5	7.0	9.9
	상위 20%	96.3	70.4	46.5	27.7	72.3	26.7	10.6	7.7
10분위	상위 10%	96.5	69.8	52.2	28.0	70.6	22.9	12.2	6.6
20분위	상위 5%	97.5	70.3	57.8	26.7	72.0	21.5	14.5	4.6
100분위	상위 1%	97.8	70.4	59.1	25.6	75.9	18.9	12.0	4.6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49.9	34.7	10.2	23.7	1754.4	2.8	0.6	3.7
	하위 20~40%	55.9	36.5	11.2	19.9	46.8	5.2	0.7	4.7
	중간 40~60%	58.8	38.2	11.2	16.5	27.5	6.3	0.8	4.9
	상위 20~40%	63.3	39.7	14.0	13.4	24.9	6.3	1.5	3.3
	상위 20%	65.3	39.2	18.1	11.2	18.2	4.7	1.7	2.3
10분위	상위 10%	65.4	36.4	20.7	10.5	17.3	3.4	1.8	1.6
20분위	상위 5%	66.5	34.3	22.8	9.1	14.5	2.8	2.0	0.9
100분위	상위 1%	69.8	33.3	26.4	9.1	13.7	2.7	1.1	1.3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4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28〉 소득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4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68.5	49.0	20.7	38.6	41.8	10.5	2.1	4.9
	하위 20~40%	83.9	55.6	26.0	37.9	63.2	20.6	4.1	8.3
	중간 40~60%	88.8	60.3	29.7	35.6	68.5	26.3	5.3	11.2
	상위 20~40%	93.4	62.5	33.9	33.4	69.8	26.1	7.4	10.2
	상위 20%	96.4	71.0	49.2	27.1	69.8	24.8	9.5	7.1
10분위	상위 10%	98.1	72.3	55.9	25.9	70.7	22.0	10.8	6.6
20분위	상위 5%	99.1	75.1	60.6	23.1	72.1	21.9	12.2	4.3
100분위	상위 1%	97.5	77.9	68.0	20.1	72.8	20.0	11.1	2.9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49.5	34.6	9.9	23.5	68.3	3.0	0.5	2.6
	하위 20~40%	56.4	36.0	11.5	18.3	63.7	5.5	0.9	3.5
	중간 40~60%	58.9	37.6	12.0	16.0	238.4	6.7	1.0	4.5
	상위 20~40%	61.1	37.4	13.8	14.1	22.5	6.4	1.5	3.5
	상위 20%	65.1	38.0	19.1	10.6	16.8	4.5	1.5	1.8
10분위	상위 10%	66.5	36.5	22.3	9.9	16.0	3.6	1.7	1.8
20분위	상위 5%	67.5	35.8	23.8	8.6	15.4	3.5	2.0	1.1
100분위	상위 1%	69.2	34.7	26.7	6.6	12.6	3.1	1.9	0.2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전월세보증금은 자산 정의에 따라 실물자산이 아닌 금융재산의 하위 요소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29〉 분석자료의 연도별 자산분위별 가구 수(가중치 미적용)

(단위: 가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분위	하위 20%	2,267	2,412	4,832	4,484	4,332
	하위 20~40%	1,949	2,050	3,976	3,696	3,535
	중간 40~60%	1,845	1,956	3,732	3,547	3,385
	상위 20~40%	1,858	1,924	3,481	3,311	3,216
	상위 20%	2,081	2,175	3,723	3,556	3,395
10분위	상위 10%	1,143	1,159	1,949	1,859	1,780
20분위	상위 5%	629	613	1,030	964	931
100분위	상위 1%	153	137	253	243	230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분위	하위 20%	4,386	4,535	4,622	4,670	4,655
	하위 20~40%	3,597	3,666	3,728	3,826	3,800
	중간 40~60%	3,382	3,338	3,412	3,428	3,370
	상위 20~40%	3,235	3,259	3,221	3,181	3,196
	상위 20%	3,431	3,475	3,514	3,535	3,385
10분위	상위 10%	1,785	1,837	1,867	1,858	1,764
20분위	상위 5%	949	995	991	980	932
100분위	상위 1%	229	241	239	248	218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분위	하위 20%	4,596	4,784	4,769	4,858	4,916
	하위 20~40%	3,677	3,683	3,735	3,657	3,625
	중간 40~60%	3,426	3,394	3,370	3,334	3,345
	상위 20~40%	3,162	3,162	2,982	3,108	3,235
	상위 20%	3,203	3,164	3,098	3,137	3,193
10분위	상위 10%	1,645	1,659	1,627	1,694	1,725
20분위	상위 5%	848	878	889	900	948
100분위	상위 1%	198	209	210	221	227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 기준 소득분위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4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30〉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0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6.8	14.7	5.4	63.1	49.3	3.3	1.1	7.5
	하위 20~40%	86.7	48.8	13.9	48.0	57.6	17.9	1.5	7.9
	중간 40~60%	96.9	70.1	28.5	28.1	61.6	20.3	3.3	5.7
	상위 20~40%	98.8	80.3	43.9	18.7	63.4	21.9	6.3	2.9
	상위 20%	100.0	84.7	66.3	14.1	69.6	15.8	10.1	1.5
10분위	상위 10%	100.0	86.8	74.5	11.6	71.4	11.5	11.2	1.2
20분위	상위 5%	100.0	83.7	81.3	13.6	72.2	10.2	11.6	1.2
100분위	상위 1%	100.0	81.9	89.3	12.2	81.4	12.2	10.8	0.4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4	11.0	2.8	40.8	2948.9	1.7	0.8	7.4
	하위 20~40%	48.6	36.2	6.5	29.3	14.7	5.4	0.4	1.8
	중간 40~60%	65.7	47.5	13.6	14.5	12.2	4.5	0.7	0.8
	상위 20~40%	75.0	51.2	20.2	6.9	11.9	3.8	1.1	0.3
	상위 20%	82.3	45.3	34.3	3.0	10.6	1.9	1.4	0.1
10분위	상위 10%	85.0	41.5	41.0	1.9	10.2	1.3	1.4	0.1
20분위	상위 5%	85.8	36.5	46.7	1.9	9.9	0.8	1.5	0.0
100분위	상위 1%	89.7	27.5	59.5	1.2	9.4	0.6	1.6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31〉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1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4.6	11.7	5.2	64.9	52.3	3.7	1.3	7.9
	하위 20~40%	85.9	50.1	14.9	46.8	60.9	19.3	2.5	8.4
	중간 40~60%	96.1	70.3	30.3	27.1	64.7	23.1	3.1	5.1
	상위 20~40%	98.6	78.8	44.8	19.0	67.1	23.8	6.6	3.0
	상위 20%	99.5	83.3	69.6	15.0	71.7	15.1	11.4	1.3
10분위	상위 10%	99.8	83.2	77.5	15.0	74.9	11.0	12.0	1.6
20분위	상위 5%	99.6	84.8	83.5	12.6	78.2	9.5	10.8	1.7
100분위	상위 1%	100.0	80.8	91.5	13.4	80.6	11.7	11.9	0.0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2.3	8.8	2.8	39.7	1759.4	2.9	0.7	62.0
	하위 20~40%	50.4	37.0	7.1	26.7	16.3	5.7	0.6	1.9
	중간 40~60%	65.6	46.4	14.2	13.8	13.4	4.8	0.6	0.8
	상위 20~40%	74.5	50.2	20.3	6.9	12.0	3.8	1.2	0.3
	상위 20%	79.7	42.1	34.4	3.3	11.0	1.8	1.6	0.1
10분위	상위 10%	81.0	37.8	40.3	2.7	10.9	1.2	1.5	0.1
20분위	상위 5%	81.6	33.1	46.0	1.7	10.1	0.9	1.2	0.1
100분위	상위 1%	85.1	22.4	60.6	1.1	9.6	0.9	1.4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4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32〉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2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6.3	13.5	4.5	64.3	52.2	4.1	0.8	8.3
	하위 20~40%	89.0	50.6	16.6	45.4	63.4	19.7	2.4	9.1
	중간 40~60%	96.4	70.3	28.5	27.8	68.3	26.3	4.0	5.6
	상위 20~40%	99.1	77.9	44.0	20.8	70.5	24.4	5.6	4.0
	상위 20%	99.7	82.2	70.4	16.4	74.7	15.2	10.5	2.2
10분위	상위 10%	99.9	83.1	78.1	15.6	76.2	12.7	12.0	2.0
20분위	상위 5%	99.9	82.9	84.0	15.4	78.3	11.6	13.7	1.8
100분위	상위 1%	100.0	87.2	92.2	12.2	83.1	9.0	13.6	1.3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1	10.2	2.3	39.8	1906.4	2.0	0.4	10.8
	하위 20~40%	52.7	37.0	7.8	25.5	16.3	5.9	0.6	2.2
	중간 40~60%	66.9	47.4	12.4	13.7	13.8	5.9	0.7	0.9
	상위 20~40%	72.9	47.5	18.4	8.2	12.1	4.0	1.0	0.5
	상위 20%	78.9	39.0	33.8	3.9	11.4	1.9	1.4	0.2
10분위	상위 10%	80.3	34.6	39.6	3.0	10.8	1.3	1.5	0.1
20분위	상위 5%	81.3	30.3	44.7	2.3	10.5	1.1	1.5	0.1
100분위	상위 1%	84.5	24.1	54.5	0.9	9.5	0.6	1.5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33〉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3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6.5	13.4	5.3	64.4	53.3	5.0	1.1	8.4
	하위 20~40%	89.7	49.6	17.2	45.5	66.3	21.5	2.1	10.4
	중간 40~60%	96.9	69.8	29.8	27.7	69.9	27.1	3.6	6.4
	상위 20~40%	98.5	76.8	46.6	21.4	72.3	24.5	6.6	4.2
	상위 20%	99.8	82.1	72.5	16.7	76.1	15.0	11.2	2.4
10분위	상위 10%	99.9	83.2	80.1	15.5	77.4	12.6	13.1	2.6
20분위	상위 5%	100.0	84.9	86.4	13.8	79.7	11.8	14.8	2.5
100분위	상위 1%	100.0	90.7	94.2	7.6	82.2	5.5	15.9	1.8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4	10.1	2.8	38.7	366.7	4.6	0.5	13.1
	하위 20~40%	52.1	35.9	7.7	25.0	17.6	6.7	0.6	2.5
	중간 40~60%	65.7	45.6	12.5	13.4	14.6	5.9	0.7	1.1
	상위 20~40%	70.6	44.6	18.6	8.6	12.9	4.0	1.2	0.5
	상위 20%	76.6	36.7	33.7	4.3	11.7	1.9	1.4	0.2
10분위	상위 10%	78.2	32.6	39.4	3.4	11.4	1.4	1.5	0.2
20분위	상위 5%	80.2	29.1	44.9	2.5	10.8	1.0	1.4	0.2
100분위	상위 1%	83.2	21.8	54.4	1.0	10.0	0.4	1.5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4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34〉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4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5.8	13.9	5.6	64.7	52.7	5.2	1.0	10.3
	하위 20~40%	89.0	52.8	18.1	42.9	64.8	21.4	3.1	10.3
	중간 40~60%	97.1	71.0	30.6	26.0	69.3	29.0	4.7	6.4
	상위 20~40%	98.8	78.0	46.2	20.3	70.7	24.0	6.4	4.5
	상위 20%	99.8	83.5	72.7	15.0	74.8	15.6	10.7	2.4
10분위	상위 10%	99.9	84.0	81.0	14.3	75.8	12.1	13.2	2.6
20분위	상위 5%	100.0	84.8	86.3	13.9	77.6	9.3	14.2	1.7
100분위	상위 1%	100.0	88.6	94.7	10.4	82.7	6.7	19.9	0.0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9	10.5	2.9	39.2	472.0	11.9	0.4	5.6
	하위 20~40%	53.2	37.6	7.6	22.7	18.2	7.0	0.9	2.5
	중간 40~60%	67.2	46.7	12.5	11.8	15.4	6.6	0.9	1.0
	상위 20~40%	70.7	45.0	18.5	8.5	13.0	4.1	1.2	0.5
	상위 20%	76.6	37.3	33.2	4.1	11.5	2.0	1.3	0.2
10분위	상위 10%	78.8	33.0	39.9	3.1	11.3	1.3	1.6	0.2
20분위	상위 5%	79.3	29.1	44.4	2.7	10.8	0.8	1.6	0.2
100분위	상위 1%	82.9	21.7	54.2	1.3	9.6	0.4	1.9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35〉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5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5.1	13.6	5.9	65.2	50.6	4.9	1.1	9.9
	하위 20~40%	89.6	54.1	17.5	40.8	64.2	23.0	2.6	10.4
	중간 40~60%	96.8	73.4	29.8	23.9	69.2	31.1	3.8	6.0
	상위 20~40%	98.9	79.4	44.6	19.1	68.3	25.3	5.3	4.5
	상위 20%	99.8	83.6	72.9	14.9	73.8	15.1	11.0	3.0
10분위	상위 10%	99.9	83.9	81.4	14.5	78.0	13.0	13.0	2.8
20분위	상위 5%	100.0	84.4	86.3	13.8	80.0	12.0	15.5	2.5
100분위	상위 1%	100.0	88.8	94.7	8.9	87.3	10.0	20.3	1.1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8	10.2	3.2	39.2	602.5	2.8	0.5	5.0
	하위 20~40%	54.3	38.7	7.0	21.4	18.8	7.5	0.7	2.7
	중간 40~60%	67.8	48.6	11.7	11.2	16.1	7.3	0.8	1.2
	상위 20~40%	71.1	46.6	17.1	8.3	12.8	4.4	0.9	0.5
	상위 20%	76.6	38.0	32.7	4.1	11.2	2.0	1.5	0.3
10분위	상위 10%	78.4	33.8	38.8	3.2	11.0	1.3	1.7	0.2
20분위	상위 5%	79.0	29.7	43.5	2.7	10.9	1.1	2.0	0.2
100분위	상위 1%	82.6	22.8	54.3	1.1	11.0	0.8	2.4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5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36〉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6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3.8	13.9	5.0	64.4	50.7	5.5	0.8	11.2
	하위 20~40%	89.3	56.3	17.3	38.9	64.1	25.1	2.2	9.3
	중간 40~60%	97.4	75.5	28.8	21.9	69.7	33.5	4.3	6.2
	상위 20~40%	99.0	81.0	45.4	17.3	68.4	27.6	7.5	4.0
	상위 20%	99.6	83.1	73.4	15.3	73.6	16.0	12.1	2.5
10분위	상위 10%	100.0	82.7	82.2	15.5	76.8	13.8	14.6	2.0
20분위	상위 5%	100.0	84.2	85.9	14.0	78.6	12.3	17.7	1.6
100분위	상위 1%	100.0	86.7	94.0	10.9	84.7	7.0	22.9	0.4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4.0	10.7	2.5	38.9	1157.6	752.2	0.4	11.7
	하위 20~40%	56.5	41.1	7.1	20.0	19.1	8.4	0.6	2.5
	중간 40~60%	69.1	50.4	11.3	10.4	16.1	7.9	1.0	1.1
	상위 20~40%	72.6	47.7	17.6	7.3	12.9	4.8	1.3	0.5
	상위 20%	76.2	38.3	32.2	4.6	11.3	2.1	1.6	0.2
10분위	상위 10%	77.3	33.5	38.4	4.0	11.0	1.6	2.0	0.1
20분위	상위 5%	79.4	30.8	43.3	2.8	10.7	1.2	2.3	0.1
100분위	상위 1%	82.8	23.7	54.8	1.3	10.5	0.3	2.6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37〉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7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4.1	14.2	5.1	63.2	51.0	6.3	1.1	10.6
	하위 20~40%	89.9	57.8	16.9	37.4	62.7	26.8	2.4	9.3
	중간 40~60%	96.9	76.3	29.2	21.4	68.1	32.4	4.7	6.0
	상위 20~40%	99.0	82.8	46.3	15.7	67.0	26.4	7.0	3.6
	상위 20%	99.6	84.1	72.0	14.4	71.8	18.2	12.0	2.4
10분위	상위 10%	99.6	83.1	81.1	15.3	74.0	14.1	13.3	1.7
20분위	상위 5%	99.8	84.5	85.3	13.6	76.4	11.0	16.0	1.5
100분위	상위 1%	100.0	84.5	88.5	12.7	82.1	7.1	18.6	2.3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9	10.9	2.6	37.7	327.2	4.8	0.5	12.3
	하위 20~40%	57.8	42.0	7.3	19.4	19.6	9.1	0.6	2.6
	중간 40~60%	69.6	50.8	11.1	10.1	15.5	7.4	1.0	1.1
	상위 20~40%	73.6	49.4	17.5	6.8	12.3	4.5	1.2	0.5
	상위 20%	76.6	39.4	31.4	4.2	11.5	2.4	1.8	0.3
10분위	상위 10%	77.1	34.0	37.8	3.9	11.1	1.7	2.1	0.2
20분위	상위 5%	79.4	31.8	42.8	2.8	11.0	1.2	2.5	0.1
100분위	상위 1%	82.5	25.9	52.5	1.6	10.7	0.5	3.0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5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38〉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8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4.2	14.7	5.2	64.0	51.7	6.3	1.2	11.0
	하위 20~40%	90.7	59.7	18.4	35.0	64.4	26.7	2.9	9.4
	중간 40~60%	96.6	76.3	31.6	21.3	68.5	31.8	5.0	6.4
	상위 20~40%	99.2	83.3	46.7	15.0	67.6	26.4	7.5	4.1
	상위 20%	99.8	84.0	73.2	14.3	71.7	17.4	13.4	2.0
10분위	상위 10%	99.8	83.2	79.4	15.0	73.7	14.2	15.5	1.4
20분위	상위 5%	100.0	84.0	83.1	14.3	76.2	11.3	17.9	1.2
100분위	상위 1%	100.0	88.8	84.6	8.2	81.3	5.4	19.3	0.0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4.7	11.5	2.6	38.0	426.9	4.1	0.6	8.6
	하위 20~40%	58.8	42.6	7.8	18.0	19.5	8.7	0.8	2.7
	중간 40~60%	69.6	49.9	12.1	9.9	15.8	7.2	1.1	1.3
	상위 20~40%	74.1	49.7	17.6	6.4	12.6	4.4	1.4	0.6
	상위 20%	77.5	39.7	32.3	4.0	11.2	2.2	2.0	0.2
10분위	상위 10%	78.6	36.0	37.7	3.6	11.0	1.7	2.0	0.1
20분위	상위 5%	80.4	33.6	42.1	2.7	10.9	1.1	2.4	0.1
100분위	상위 1%	81.4	29.8	47.2	1.1	9.6	0.3	2.6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39〉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19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3.4	14.9	4.0	64.0	52.7	6.2	1.0	12.1
	하위 20~40%	89.8	59.9	17.6	34.9	64.3	26.1	3.0	10.6
	중간 40~60%	96.5	75.8	30.6	22.0	67.0	30.2	5.1	6.4
	상위 20~40%	99.0	83.1	47.3	15.0	66.3	25.9	8.0	4.4
	상위 20%	99.9	85.4	71.6	13.1	71.7	18.8	13.5	3.0
10분위	상위 10%	99.9	85.0	77.2	13.0	73.3	16.3	14.6	2.1
20분위	상위 5%	100.0	83.4	82.7	14.4	75.1	14.1	15.5	2.1
100분위	상위 1%	100.0	87.1	86.7	10.1	79.6	11.6	14.9	0.4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4.3	11.6	1.9	38.2	333.9	4.0	0.5	7.7
	하위 20~40%	57.4	42.1	7.4	19.0	19.9	8.6	0.8	3.2
	중간 40~60%	68.9	49.6	11.5	10.5	15.3	6.7	1.0	1.4
	상위 20~40%	74.4	49.4	18.2	5.9	12.7	4.4	1.4	0.6
	상위 20%	78.8	42.5	31.4	3.4	11.2	2.2	1.9	0.3
10분위	상위 10%	79.6	39.5	35.7	3.0	10.8	1.8	1.9	0.2
20분위	상위 5%	80.3	35.6	40.4	2.9	10.5	1.3	2.0	0.3
100분위	상위 1%	79.7	30.0	45.3	1.2	9.7	0.9	1.6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5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40〉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0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2.3	14.2	4.1	65.1	53.4	5.8	0.7	13.2
	하위 20~40%	89.1	59.9	17.8	35.3	65.4	25.0	3.4	11.1
	중간 40~60%	96.1	75.1	29.1	22.7	66.0	27.0	4.5	6.8
	상위 20~40%	98.7	83.5	45.9	14.4	65.0	26.9	8.2	4.5
	상위 20%	99.6	85.0	69.2	13.5	71.2	19.1	13.6	2.6
10분위	상위 10%	99.8	84.6	75.9	13.7	72.8	15.4	15.0	2.3
20분위	상위 5%	100.0	83.5	80.5	15.2	74.8	12.2	14.7	1.6
100분위	상위 1%	100.0	84.2	84.9	14.6	79.4	8.9	16.6	1.2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5	10.9	2.2	39.3	1027.9	3.0	0.4	9.2
	하위 20~40%	57.4	42.1	7.5	19.8	20.6	8.2	1.0	3.6
	중간 40~60%	67.8	49.1	11.2	11.5	15.4	6.1	1.1	1.7
	상위 20~40%	75.3	51.2	18.1	5.7	12.9	4.8	1.4	0.7
	상위 20%	80.1	44.2	31.3	3.5	11.3	2.3	2.0	0.3
10분위	상위 10%	81.5	41.7	36.0	2.9	10.7	1.5	2.1	0.2
20분위	상위 5%	81.9	36.7	41.5	2.6	10.2	1.1	2.0	0.1
100분위	상위 1%	82.3	30.9	47.0	1.6	9.0	0.5	1.8	0.0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41〉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1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3.9	14.5	4.1	65.9	53.0	5.7	0.9	13.4
	하위 20~40%	90.2	58.7	19.4	36.7	64.5	23.7	2.9	12.1
	중간 40~60%	95.7	74.4	32.6	23.0	66.6	29.0	5.5	6.8
	상위 20~40%	98.6	84.2	45.2	14.3	66.6	30.5	7.8	3.9
	상위 20%	99.8	86.0	65.0	12.9	70.5	22.0	12.4	2.5
10분위	상위 10%	99.9	86.0	71.6	12.8	72.4	18.6	14.0	1.9
20분위	상위 5%	100.0	85.6	78.8	13.2	73.2	15.1	15.5	1.3
100분위	상위 1%	100.0	84.2	87.6	14.3	79.4	9.8	16.1	1.4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9	11.0	2.1	38.7	270.7	2.6	1.7	8.3
	하위 20~40%	56.7	40.3	8.1	19.9	19.9	7.2	0.8	4.2
	중간 40~60%	67.7	48.0	12.4	11.7	15.1	6.5	1.2	1.8
	상위 20~40%	77.2	53.5	17.8	5.4	13.1	5.3	1.4	0.6
	상위 20%	81.9	49.0	29.1	3.3	10.7	2.5	1.7	0.3
10분위	상위 10%	82.5	46.1	33.1	2.8	10.5	1.9	1.8	0.1
20분위	상위 5%	82.7	41.9	37.8	2.4	10.0	1.3	2.0	0.1
100분위	상위 1%	83.1	34.4	45.7	1.9	8.4	0.6	1.8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5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42〉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2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1.9	12.4	4.1	68.6	52.9	4.6	0.9	13.8
	하위 20~40%	88.7	56.8	18.9	39.4	62.4	22.8	3.0	13.0
	중간 40~60%	96.0	74.8	33.6	22.9	65.1	29.3	5.4	7.4
	상위 20~40%	98.7	82.9	46.0	15.8	68.7	31.9	8.4	5.5
	상위 20%	99.6	86.6	64.1	12.0	71.0	23.3	12.8	2.6
10분위	상위 10%	99.5	86.4	71.0	11.7	72.3	18.8	14.9	2.1
20분위	상위 5%	99.6	85.4	74.7	12.7	73.0	15.3	15.9	1.5
100분위	상위 1%	100.0	81.3	84.7	16.4	77.4	11.0	13.1	2.1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2.0	9.3	2.0	40.2	389.9	1.9	0.5	28.3
	하위 20~40%	55.5	39.2	7.7	21.1	18.9	7.0	0.7	4.7
	중간 40~60%	69.1	48.9	13.2	11.1	15.1	6.5	1.2	1.8
	상위 20~40%	76.6	53.0	18.0	6.3	13.1	5.4	1.4	1.0
	상위 20%	82.6	50.5	28.6	3.0	10.5	2.6	1.6	0.2
10분위	상위 10%	82.9	46.7	33.1	2.3	9.9	1.8	1.8	0.1
20분위	상위 5%	83.2	43.6	36.7	2.0	8.9	1.2	2.0	0.1
100분위	상위 1%	82.7	35.3	45.3	2.4	7.3	0.9	1.2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표 3-43〉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3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3.5	13.6	3.7	68.1	52.6	5.1	0.8	13.5
	하위 20~40%	87.8	57.8	17.4	37.8	62.1	24.7	2.9	13.1
	중간 40~60%	96.0	74.8	30.2	22.9	65.0	31.1	4.8	8.2
	상위 20~40%	98.1	81.6	45.0	16.8	65.4	29.5	7.9	3.8
	상위 20%	99.5	83.3	65.3	15.3	68.6	19.8	12.5	2.5
10분위	상위 10%	99.6	83.0	72.2	15.6	71.3	17.3	14.6	1.9
20분위	상위 5%	100.0	82.9	77.7	15.8	74.5	13.7	15.0	1.6
100분위	상위 1%	100.0	76.2	83.2	22.7	77.7	8.0	15.7	1.8

〈 총자산 대비 비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3.6	10.5	1.7	38.0	1915.3	2.3	0.5	9.0
	하위 20~40%	55.2	40.3	6.6	20.2	19.9	7.9	0.7	4.8
	중간 40~60%	68.3	49.3	11.9	11.6	16.2	7.7	1.0	2.3
	상위 20~40%	74.8	50.7	17.9	6.7	12.5	4.8	1.4	0.7
	상위 20%	79.5	45.6	29.4	4.2	10.6	2.3	1.6	0.2
10분위	상위 10%	80.4	42.3	34.0	3.6	10.2	1.7	1.7	0.2
20분위	상위 5%	81.5	39.6	38.1	2.9	9.1	1.1	1.7	0.1
100분위	상위 1%	83.8	29.1	48.3	2.7	7.8	0.4	1.1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5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3-44〉 자산분위별 자산 원천 보유율 및 총자산 대비 비율(2024년)

(단위: %)

〈 보유율 〉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53.2	13.5	4.7	68.7	49.7	5.9	1.1	11.2
	하위 20~40%	87.9	58.1	18.0	38.1	61.6	26.5	2.8	12.7
	중간 40~60%	95.5	73.9	29.1	23.4	63.2	28.9	4.4	8.6
	상위 20~40%	98.3	81.6	46.7	16.4	63.4	26.6	8.0	3.6
	상위 20%	99.6	83.8	66.5	14.7	69.8	20.4	12.2	2.3
10분위	상위 10%	99.7	83.2	73.0	15.2	73.3	17.7	14.0	2.4
20분위	상위 5%	99.8	83.1	76.4	15.6	75.5	15.0	15.5	2.2
100분위	상위 1%	99.4	76.8	86.6	21.1	84.8	14.2	19.0	2.9

〈 총자산 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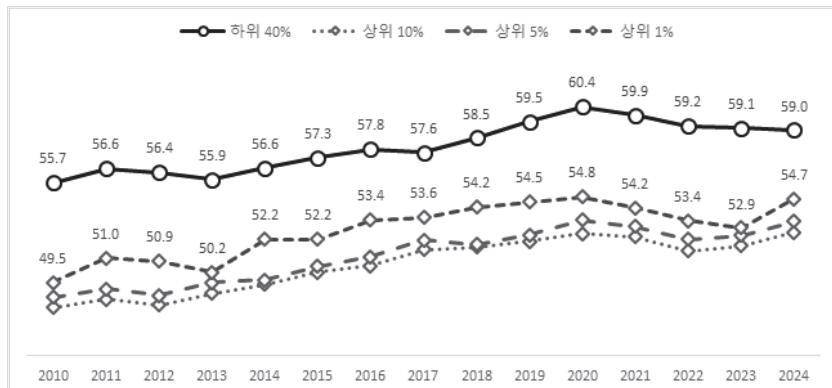
구분		실물 자산	거주 주택 자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전월세 보증금	부채	거주 주택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5분위	하위 20%	24.4	10.4	2.5	37.0	280.4	2.7	0.6	6.5
	하위 20~40%	56.1	40.6	7.0	18.8	20.9	8.9	0.7	4.8
	중간 40~60%	66.7	48.2	11.1	11.6	15.2	7.0	1.0	2.3
	상위 20~40%	73.9	49.0	18.7	6.8	12.1	4.7	1.4	0.6
	상위 20%	78.7	44.3	29.9	3.8	10.5	2.3	1.6	0.2
10분위	상위 10%	79.2	40.3	34.7	3.2	10.2	1.5	1.7	0.2
20분위	상위 5%	80.5	37.9	38.7	2.8	9.3	1.1	2.0	0.2
100분위	상위 1%	81.2	27.2	50.2	2.4	8.8	0.6	1.8	0.1

주: 총자산에서 부채를 감하고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순자산 기준 자산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산 기준 연도임.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그림 3-9]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2010~2024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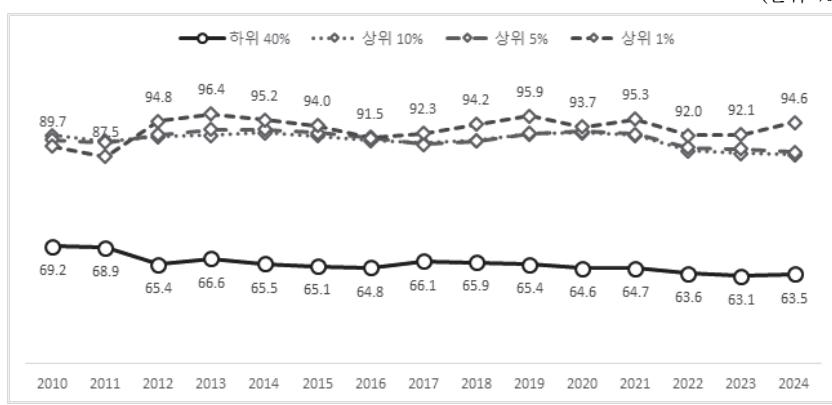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차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차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그림 3-10] 소득분위별 남성 가구주 비율(2010~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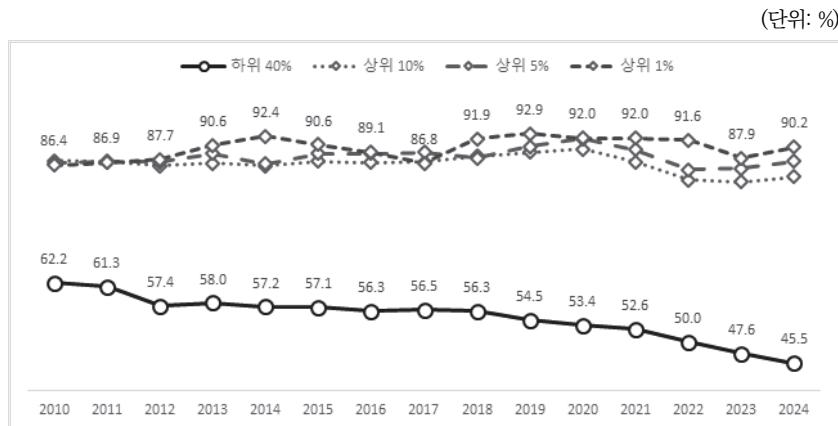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차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차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6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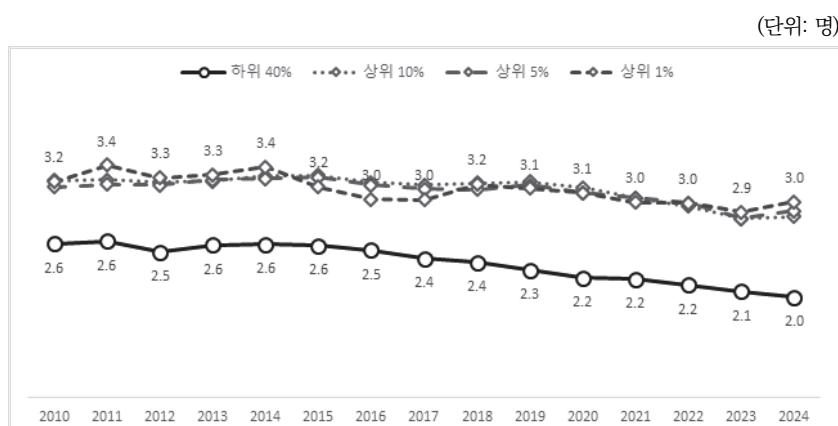
[부그림 3-11] 소득분위별 기준 가구주 비율(2010~2024년)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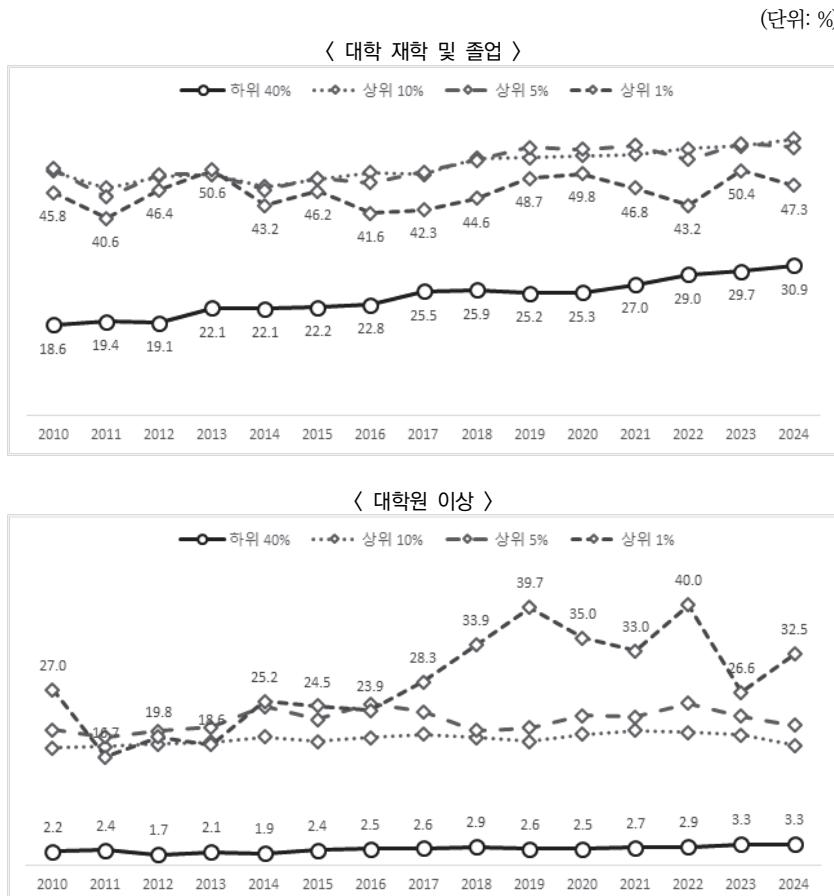
[부그림 3-12] 소득분위별 가구규모(2010~2024년)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그림 3-13] 소득분위별 가구주 교육수준(201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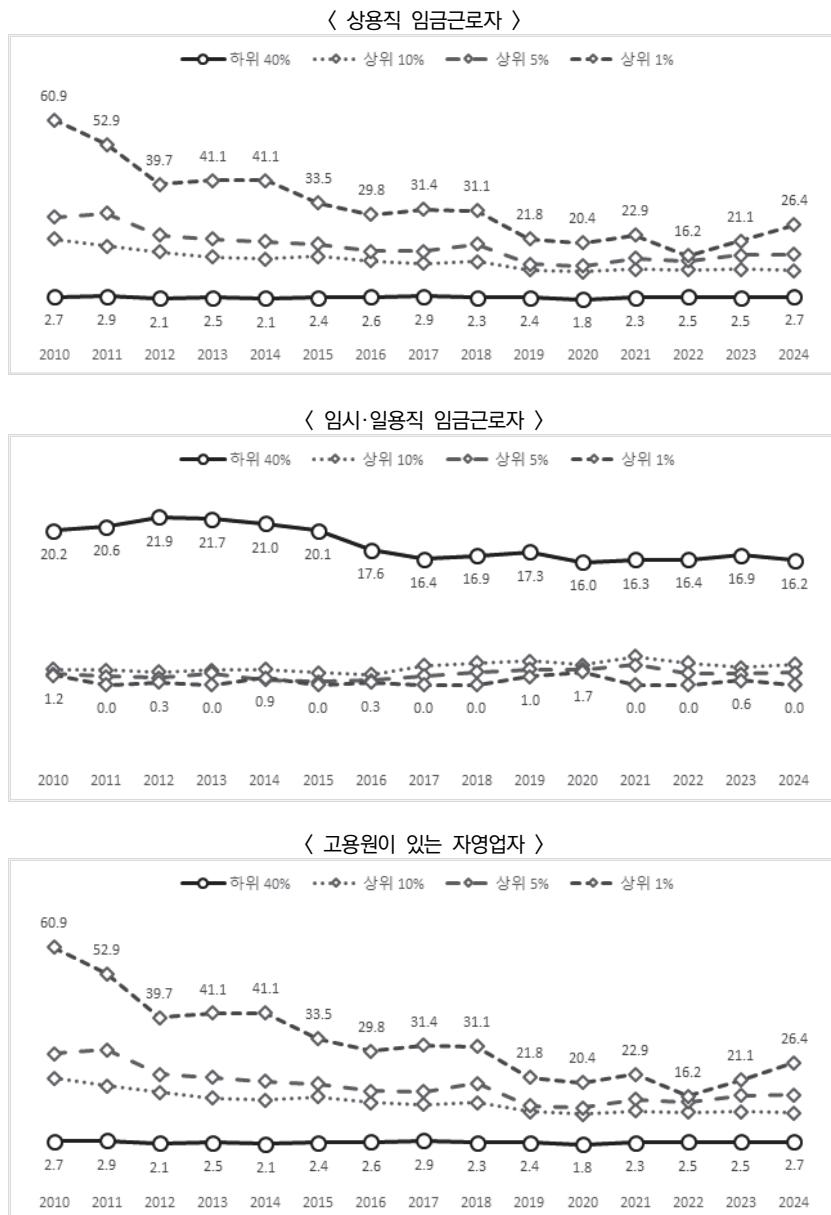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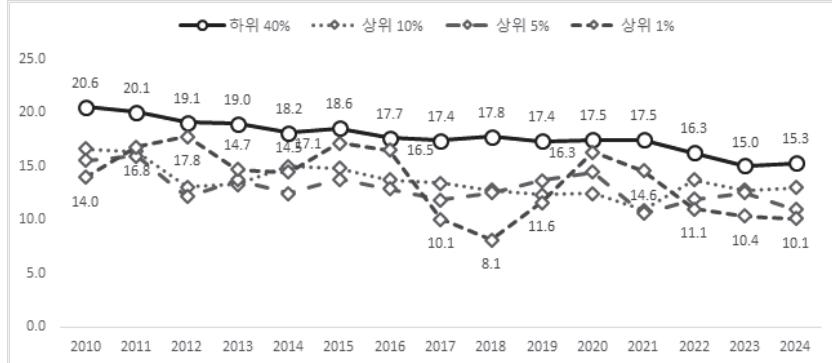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부그림 3-14] 소득분위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201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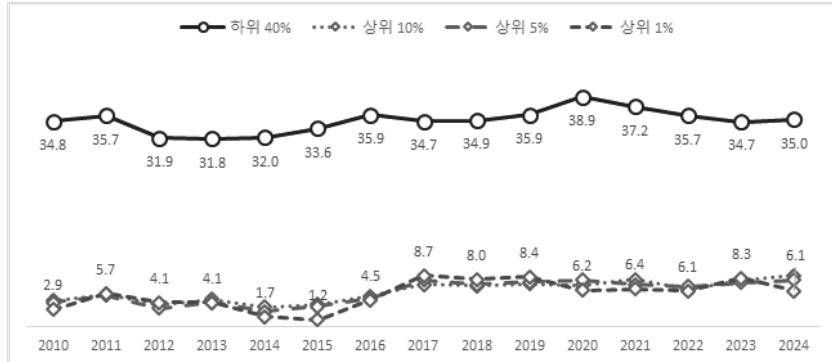
(단위: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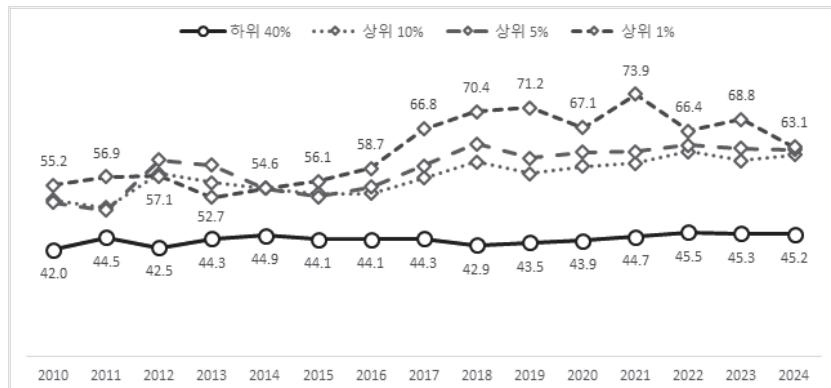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26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그림 3-15] 소득분위별 수도권 거주 가구 비율(2010~2024년)

(단위: %)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위임. 가구 단위 분석 결과임.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2010~2011년은 가계금융조사임. 2012~2016년은 행정데이터로 보완하지 않은 조사자료 기준임. 2017~2020년은 소득, 비소비지출, 치분가능소득 통계를 행정데이터로 보완한 자료임. 2021~2024년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자료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원자료(다운로드 서비스용), 각 연도, 통계청.

[제4장 부록]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 : 가계금융복지조사

〈부표 4-1〉 개인 단위 기초통계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나이(세)	45.2	45.8	46.3	46.9	47.1	47.2	47.5	47.8
남성(%)	48.6	48.3	48.5	48.4	48.4	48.7	48.7	4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3	16.1	16.0	15.9	15.2	14.5	14.0	13.3
고졸	31.6	31.2	30.8	30.2	30.1	30.0	30.2	29.7
대학 (3년제 이하)	14.5	14.1	14.5	15.3	15.7	15.9	15.8	15.6
대학 (4년제 이상)	32.6	33.5	33.5	33.3	33.9	34.2	34.4	35.8
대학원 이상	5.0	5.2	5.3	5.3	5.1	5.5	5.6	5.6
혼인상태(%)								
미혼	25.9	25.0	25.2	24.6	24.6	25.1	25.5	26.5
배우자 있음	65.7	66.7	66.4	66.9	66.7	66.2	65.8	64.9
사별	5.2	5.0	5.1	5.2	5.1	5.0	4.8	4.7
이혼	3.3	3.3	3.3	3.4	3.6	3.8	3.9	3.9
종사상 지위(%)								
상용 근로자	33.7	34.3	35.1	34.5	35.1	36.8	38.3	39.2
임시·일용 근로자	10.5	10.0	10.1	10.1	10.1	10.4	10.5	10.2
고용원 있는 자영자	3.1	3.1	2.9	2.8	2.9	2.9	2.8	3.0
고용원 없는 자영자	8.7	8.8	8.6	8.6	9.0	9.1	9.1	9.0
무급가족종사자	2.9	2.9	2.9	2.8	2.8	2.6	2.4	2.3
기타 종사자	1.3	1.3	1.6	1.6	1.4	1.4	1.6	1.4
무직자	39.8	39.5	38.9	39.6	38.7	36.9	35.2	34.9
노인 있는 가구(%)	5.3	5.9	6.5	7.5	7.4	7.4	7.8	8.1
한부모 가구(%)	2.5	2.3	2.2	2.0	2.1	1.9	1.8	1.8
장애인 있는 가구(%)	11.0	10.6	10.5	10.3	14.2	13.3	13.1	13.5
장애인(%)	4.0	4.0	3.9	3.9	4.0	3.7	3.6	5.0
주택 점유형태(%)								
자가	68.7	68.6	69.2	69.0	69.2	68.8	69.9	70.5
전세	12.3	11.7	12.4	12.7	12.9	13.1	12.5	11.9
보증금 있는 월세	14.5	15.2	13.8	14.1	13.7	14.3	13.8	13.8
보증금 없는 월세	0.7	0.7	0.6	0.5	0.6	0.5	0.6	0.5
기타	3.9	3.9	3.9	3.7	3.6	3.3	3.2	3.3
가구주와 동거(%)	94.8	96.3	95.7	96.3	96.8	96.7	96.6	96.2
N	40,780	40,221	39,259	38,009	37,363	36,315	35,919	35,740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각 연도

26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4-2〉 가구 단위 기초통계량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가구주 나이(세)	53.8	54.6	55.4	56.1	55.6	55.2	55.0	54.9
남성 가구주(%)	77.5	77.9	77.4	76.6	76.1	74.8	74.0	74.3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4	24.4	24.5	24.7	23.1	21.9	21.0	19.9
고졸	33.5	33.1	33.2	32.6	32.6	31.9	31.7	31.6
대학 (3년제 이하)	10.5	10.6	10.8	11.5	12.5	13.2	13.5	13.7
대학 (4년제 이상)	25.5	25.8	25.5	25.1	25.8	26.6	27.3	28.4
대학원 이상	6.0	6.1	6.0	6.1	6.1	6.4	6.5	6.4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8.9	8.6	8.8	9.2	10.9	13.3	15.8	17.8
배우자 있음	69.8	70.0	68.9	67.8	66.5	63.7	61.2	59.5
사별	11.5	11.6	12.2	12.7	11.9	11.6	11.4	10.9
이혼	9.8	9.8	10.1	10.3	10.7	11.4	11.7	11.8
가구주 종사상 지위(%)								
상용 근로자	43.2	43.0	42.7	41.9	42.9	44.5	45.5	46.0
임시·일용 근로자	11.9	12.1	12.4	12.0	11.7	11.8	11.8	11.4
고용원 있는 자영자	5.4	5.1	4.6	4.2	4.4	4.3	4.2	4.4
고용원 없는 자영자	17.2	17.2	16.9	16.5	16.8	16.4	15.8	15.5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1	0.1	0.0	0.0	0.0	0.0
기타 종사자	1.2	1.2	1.3	1.4	1.5	1.5	1.5	1.5
무직자	21.0	21.3	22.1	24.0	22.7	21.6	21.2	21.3
노인 있는 가구(%)	15.8	16.9	18.3	20.2	19.1	18.7	18.7	19.3
한부모 가구(%)	2.7	2.5	2.3	2.2	2.2	2.1	1.9	1.7
장애인 있는 가구(%)	10.3	10.4	10.5	10.2	13.2	12.3	11.6	11.4
주택 점유형태(%)								
자가	60.6	61.1	61.2	60.9	60.7	59.4	58.9	58.5
전세	13.5	12.8	13.2	13.8	14.1	14.7	14.9	13.8
보증금 있는 월세	18.5	18.9	18.4	18.3	18.5	19.5	19.8	21.3
보증금 없는 월세	1.2	1.2	1.1	1.1	1.1	1.1	1.2	1.1
기타	6.1	6.0	6.1	6.0	5.6	5.3	5.2	5.4
아파트 거주(%)	52.2	53.4	54.2	54.2	54.4	54.1	53.9	53.4
수도권 거주(%)	48.2	48.1	48.1	48.7	48.8	48.9	49.2	49.3
저축액(만 원)	3362.4	3454.4	2181.8	2223.6	2411.5	2556.9	2632.8	2832.4
거주주택 자산 /총자산×100	37.1	37.3	37.6	38.0	38.7	38.2	37.3	36.5
거주주택 외 부동산 /총자산×100	13.4	13.9	13.5	13.4	13.2	13.0	12.6	12.8
주택담보대출(만 원)	17796.4	19387.0	20581.8	21703.4	26021.7	28989.8	26418.8	26192.3
N	18,497	18,640	18,406	18,064	18,187	17,954	18,094	18,314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각 연도.

〈부표 4-3〉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나이	0.053*** (0.002)	0.121*** (0.002)	0.108*** (0.002)	0.050*** (0.002)	0.037*** (0.002)	0.029*** (0.004)
나이제곱/100	-0.069*** (0.002)	-0.128*** (0.002)	-0.118*** (0.002)	-0.053*** (0.002)	-0.040*** (0.002)	-0.032*** (0.004)
남성	-0.111*** (0.021)	0.047** (0.016)	0.071*** (0.016)	0.066*** (0.014)	0.041** (0.013)	0.054** (0.017)
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283*** (0.029)	-0.153*** (0.017)	-0.166*** (0.019)	0.137*** (0.020)	0.059** (0.020)	0.043 (0.034)
사별	-0.105** (0.040)	0.101*** (0.029)	0.055+ (0.032)	0.619*** (0.027)	0.465*** (0.026)	0.423*** (0.051)
이혼	-0.029 (0.047)	0.126*** (0.023)	0.121*** (0.031)	0.421*** (0.025)	0.361*** (0.027)	0.329*** (0.054)
성별×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647*** (0.028)	0.676*** (0.019)	0.619*** (0.019)	0.727*** (0.022)	0.645*** (0.023)	0.540*** (0.043)
남성×사별	0.295*** (0.071)	0.283*** (0.054)	0.319*** (0.055)	0.029 (0.064)	0.049 (0.077)	-0.022 (0.117)
남성 ×이혼	0.250*** (0.058)	0.227*** (0.029)	0.237*** (0.038)	0.105** (0.036)	0.052 (0.042)	0.019 (0.104)
가구원 수	-0.054*** (0.006)	-0.036*** (0.004)	-0.039*** (0.004)	0.035*** (0.005)	0.031*** (0.006)	0.050*** (0.012)
교육수준 (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030 (0.019)	-0.039** (0.013)	0.016 (0.017)	-0.036* (0.015)	-0.050** (0.016)	-0.127*** (0.033)
대학 (3년제 이하)	0.081** (0.025)	0.013 (0.016)	0.039* (0.020)	0.093*** (0.020)	0.033 (0.023)	-0.146*** (0.042)
대학 (4년제 이상)	-0.038+ (0.022)	-0.019 (0.015)	-0.014 (0.019)	0.186*** (0.019)	0.073*** (0.021)	-0.032 (0.045)
대학원 이상	-0.120*** (0.035)	0.117*** (0.020)	-0.006 (0.022)	0.660*** (0.039)	0.620*** (0.050)	0.828*** (0.125)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23*** (0.032)	-0.556*** (0.009)	-0.972*** (0.015)	-0.244*** (0.011)	-0.115*** (0.010)	0.001 (0.016)
고용원 있는 자영자	0.025 (0.065)	0.201*** (0.014)	0.123*** (0.014)	0.372*** (0.040)	0.549*** (0.053)	1.163*** (0.158)
고용원 없는 자영자	-0.047 (0.039)	-0.233*** (0.009)	-0.271*** (0.013)	-0.289*** (0.018)	-0.212*** (0.020)	-0.105** (0.038)
무급가족종사자	-2.948*** (0.035)	-1.604*** (0.070)	-1.452*** (0.051)	-0.334*** (0.030)	-0.178*** (0.028)	-0.096** (0.036)

26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기타 종사자	0.176+ (0.092)	-0.205*** (0.022)	-0.269*** (0.035)	-0.244*** (0.031)	-0.088** (0.032)	0.054 (0.074)
무직자	-2.462*** (0.022)	-1.680*** (0.015)	-1.452*** (0.012)	-0.183*** (0.011)	-0.056*** (0.011)	0.017 (0.019)
장애인	-0.420*** (0.027)	-0.146*** (0.021)	-0.173*** (0.025)	-0.119*** (0.028)	-0.101*** (0.029)	-0.062 (0.059)
가구주와 동거	0.164*** (0.025)	0.202*** (0.022)	0.139*** (0.018)	0.003 (0.028)	0.023 (0.035)	0.155** (0.060)
가구 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상수	1.099*** (0.072)	3.880*** (0.055)	4.204*** (0.053)	6.809*** (0.060)	7.492*** (0.066)	8.149*** (0.121)
N	303606	211329	211329	211329	211329	211329
pseudo / adj. R-sq	0.053	0.563	0.469	0.314	0.228	0.087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소득 및 자산은 명의 기준임. 공란은 해당 변수의 유효값이 없거나 투입하지 않은 경우임. 임금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채가 있는 표본에 한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

〈부표 4-4〉 개인 총부채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나이	0.085*** (0.003)	0.016* (0.007)	0.036*** (0.010)	-0.014+ (0.008)	-0.005 (0.009)	-0.036* (0.016)
나이제곱/100	-0.094*** (0.003)	-0.016* (0.007)	-0.039*** (0.010)	0.020** (0.008)	0.017+ (0.009)	0.058** (0.018)
남성	0.018 (0.026)	0.197** (0.069)	0.065 (0.090)	-0.022 (0.041)	-0.020 (0.039)	-0.085 (0.059)
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554*** (0.027)	0.615*** (0.066)	0.698*** (0.085)	0.391*** (0.054)	0.174** (0.057)	-0.096 (0.092)
사별	0.846*** (0.041)	0.809*** (0.090)	0.945*** (0.126)	0.256*** (0.069)	0.068 (0.079)	-0.203 (0.140)
이혼	0.958*** (0.041)	0.711*** (0.079)	0.830*** (0.106)	0.290*** (0.067)	0.090 (0.066)	-0.251** (0.091)
성별×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319*** (0.031)	0.231** (0.075)	0.413*** (0.098)	0.046 (0.055)	0.041 (0.060)	0.082 (0.092)
남성×사별	-0.112 (0.078)	-0.253+ (0.152)	-0.156 (0.227)	0.052 (0.134)	0.119 (0.166)	-0.182 (0.191)
남성 ×이혼	-0.258*** (0.052)	-0.196* (0.097)	-0.220 (0.137)	-0.098 (0.081)	-0.072 (0.082)	-0.078 (0.068)
가구원 수	-0.050*** (0.006)	0.005 (0.012)	-0.021 (0.015)	0.036** (0.013)	0.048** (0.015)	0.053+ (0.028)
교육수준 (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152*** (0.020)	0.210*** (0.039)	0.285*** (0.057)	0.110** (0.041)	0.139** (0.049)	0.286** (0.097)
대학 (3년제 이하)	0.206*** (0.025)	0.430*** (0.047)	0.542*** (0.065)	0.322*** (0.053)	0.274*** (0.063)	0.368** (0.115)
대학 (4년제 이상)	0.138*** (0.023)	0.542*** (0.044)	0.653*** (0.061)	0.550*** (0.050)	0.505*** (0.060)	0.411*** (0.107)
대학원 이상	0.120*** (0.032)	0.688*** (0.054)	0.736*** (0.072)	0.760*** (0.077)	0.736*** (0.096)	0.741*** (0.191)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47*** (0.017)	-0.231*** (0.039)	-0.431*** (0.051)	0.018 (0.038)	0.060 (0.047)	0.083 (0.053)
고용원 있는 자영자	0.329*** (0.029)	0.698*** (0.039)	0.549*** (0.043)	0.986*** (0.077)	1.312*** (0.113)	2.073*** (0.270)
고용원 없는 자영자	0.172*** (0.017)	0.238*** (0.028)	0.202*** (0.038)	0.230*** (0.039)	0.249*** (0.045)	0.223** (0.082)
무급가족종사자	0.010 (0.054)	0.544*** (0.160)	0.532** (0.185)	0.502*** (0.146)	0.634*** (0.182)	1.321** (0.498)

270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6)
	보유 여부	로그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기타 종사자	0.095** (0.036)	-0.007 (0.066)	-0.098 (0.093)	-0.019 (0.077)	-0.014 (0.080)	-0.018 (0.055)
무직자	-0.193*** (0.017)	0.042 (0.043)	-0.054 (0.053)	0.177*** (0.044)	0.238*** (0.055)	0.184** (0.063)
장애인	0.023 (0.033)	-0.102 (0.064)	-0.145+ (0.087)	-0.104 (0.069)	-0.015 (0.081)	0.151 (0.202)
가구주와 동거	0.284*** (0.041)	0.148* (0.072)	0.111 (0.101)	0.091 (0.108)	0.240* (0.108)	0.400*** (0.089)
가구 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개인 근로/사업소득 분위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상수	-2.819*** (0.085)	5.960*** (0.182)	5.457*** (0.246)	9.258*** (0.200)	9.358*** (0.227)	11.035*** (0.369)
N	211329	78238	78238	78238	78238	78238
pseudo / adj. R-sq	0.173	0.166	0.124	0.087	0.072	0.033

주: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소득 및 자산은 명의 기준임. 공란은 해당 변수의 유효값이 없거나 투입하지 않은 경우임. 임금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채가 있는 표본에 한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

〈부표 4-5〉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로그 처분가능 소득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가구주 나이	-0.006*** (0.001)	0.000 (0.001)	0.002** (0.001)	0.005** (0.002)	0.005 (0.005)
가구주 나이제곱/100	0.006*** (0.001)	-0.000 (0.001)	-0.001*** (0.000)	-0.003* (0.001)	-0.002 (0.004)
남성 가구주	0.004 (0.015)	-0.007 (0.008)	0.005 (0.008)	-0.003 (0.022)	0.033 (0.044)
가구주 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0.018 (0.015)	-0.011 (0.008)	0.009 (0.011)	-0.038 (0.028)	-0.130* (0.058)
사별	0.058*** (0.016)	-0.014+ (0.008)	0.004 (0.007)	-0.002 (0.021)	0.045 (0.051)
이혼	0.053** (0.017)	-0.002 (0.009)	-0.002 (0.007)	0.001 (0.021)	0.090+ (0.049)
가구주 성별×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011 (0.017)	0.012 (0.010)	-0.012 (0.011)	0.043 (0.030)	0.166** (0.060)
남성×사별	-0.013 (0.021)	0.005 (0.010)	-0.002 (0.010)	-0.029 (0.030)	-0.001 (0.091)
남성 ×이혼	-0.050* (0.023)	0.001 (0.010)	-0.005 (0.009)	-0.020 (0.025)	-0.073 (0.054)
가구주 교육수준 (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037*** (0.006)	0.006+ (0.003)	0.003 (0.003)	0.009 (0.007)	0.012 (0.023)
대학 (3년제 이하)	-0.038*** (0.009)	0.011* (0.005)	0.010* (0.005)	0.025+ (0.013)	0.036 (0.037)
대학 (4년제 이상)	-0.047*** (0.008)	0.008+ (0.004)	0.006+ (0.004)	0.065*** (0.011)	0.105** (0.040)
대학원 이상	-0.021* (0.010)	0.004 (0.005)	0.024** (0.008)	0.183*** (0.028)	0.780*** (0.112)
가구주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041*** (0.007)	-0.016*** (0.004)	-0.003 (0.003)	-0.012 (0.008)	-0.002 (0.022)
고용원 있는 자영자	-0.000 (0.012)	0.009+ (0.005)	0.004 (0.007)	0.228*** (0.026)	0.829*** (0.118)
고용원 없는 자영자	-0.017*** (0.005)	-0.008* (0.004)	-0.004 (0.004)	-0.008 (0.011)	0.012 (0.034)
무급가족종사자	0.002 (0.024)	0.003 (0.032)	-0.079** (0.030)	0.039 (0.116)	-0.176 (0.118)

27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로그 처분가능 소득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기타 종사자	0.007 (0.013)	-0.005 (0.011)	-0.005 (0.011)	0.021 (0.032)	0.073 (0.089)
무직자	-0.010 (0.009)	-0.014*** (0.004)	0.002 (0.004)	0.001 (0.010)	-0.004 (0.034)
노인 있는 가구	0.072*** (0.007)	-0.008+ (0.004)	0.002 (0.003)	-0.009 (0.009)	0.024 (0.036)
한부모 가구	0.001 (0.015)	-0.039*** (0.010)	0.002 (0.005)	-0.002 (0.018)	-0.050+ (0.027)
장애인 있는 가구	0.014+ (0.008)	-0.002 (0.003)	0.001 (0.003)	-0.017+ (0.010)	-0.067* (0.029)
주택 점유형태(준거집단=자가)					
전세	-0.014 (0.012)	-0.011 (0.007)	-0.003 (0.008)	-0.087*** (0.026)	-0.130 (0.086)
보증금 있는 월세	0.008 (0.015)	-0.014+ (0.007)	-0.004 (0.008)	-0.081** (0.025)	-0.043 (0.091)
보증금 없는 월세	0.034 (0.021)	-0.026* (0.012)	0.005 (0.011)	-0.082** (0.028)	0.003 (0.101)
기타	0.009 (0.015)	-0.021* (0.008)	-0.003 (0.009)	-0.098*** (0.025)	-0.096 (0.090)
아파트 거주	-0.003 (0.004)	0.006* (0.002)	0.005* (0.002)	0.011 (0.007)	0.025 (0.021)
수도권 거주	-0.001 (0.004)	0.002 (0.002)	0.004 (0.003)	0.035*** (0.008)	0.149*** (0.025)
로그 저축액	0.033*** (0.001)	0.004*** (0.001)	0.003*** (0.000)	0.023*** (0.001)	0.077*** (0.004)
거주주택 자산/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3** (0.001)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총자산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0.001)
로그 주택담보대출	-0.002*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0.002)	0.011 (0.007)
가구 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상수	5.813*** (0.034)	6.149*** (0.019)	8.078*** (0.018)	8.224*** (0.052)	8.353*** (0.162)
N	146154	146154	146154	146154	146154
adj. R-sq	0.729	0.892	0.895	0.526	0.101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

〈부표 4-6〉 가구 균등화 총부채 분위 영향요인(2017~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2)	(3)	(4)	(5)
	로그 총부채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가구주 나이	0.050*** (0.008)	0.348*** (0.084)	-0.008 (0.006)	0.012+ (0.006)	0.025** (0.008)
가구주 나이제곱/100	-0.093*** (0.008)	-0.604*** (0.078)	-0.005 (0.005)	-0.013* (0.005)	-0.018* (0.008)
남성 가구주	0.235* (0.107)	-1.242 (0.927)	0.013 (0.077)	-0.092 (0.078)	-0.096 (0.090)
가구주 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배우자 있음	1.314*** (0.123)	6.563*** (1.118)	0.226* (0.099)	0.056 (0.110)	-0.151 (0.137)
사별	1.215*** (0.107)	6.623*** (1.021)	0.273*** (0.080)	0.112 (0.085)	-0.058 (0.110)
이혼	1.493*** (0.113)	11.149*** (1.055)	0.337*** (0.084)	0.164+ (0.086)	-0.011 (0.109)
가구주 성별×혼인상태 (준거집단=미혼)					
남성×배우자 있음	-0.109 (0.138)	5.076*** (1.240)	-0.135 (0.105)	-0.046 (0.114)	0.061 (0.137)
남성×사별	-0.499** (0.162)	0.401 (1.657)	-0.172+ (0.103)	-0.060 (0.109)	-0.010 (0.133)
남성×이혼	-0.491*** (0.145)	-3.351* (1.333)	-0.093 (0.099)	0.002 (0.104)	-0.056 (0.115)
가구주 교육수준 (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523*** (0.052)	3.983*** (0.546)	0.054+ (0.032)	0.090** (0.034)	0.171*** (0.044)
대학 (3년제 이하)	0.696*** (0.071)	3.328*** (0.691)	0.154** (0.052)	0.161** (0.055)	0.279*** (0.070)
대학 (4년제 이상)	0.532*** (0.063)	2.562*** (0.635)	0.479*** (0.045)	0.463*** (0.048)	0.442*** (0.065)
대학원 이상	0.297** (0.092)	1.292 (0.855)	0.599*** (0.079)	0.750*** (0.094)	0.600*** (0.124)
가구주 종사상 지위(준거집단=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0.194*** (0.053)	-0.840 (0.561)	-0.024 (0.033)	0.050 (0.035)	0.079* (0.039)
고용월 있는 자영자	1.360*** (0.072)	7.149*** (0.705)	1.197*** (0.085)	1.261*** (0.107)	1.168*** (0.162)
고용원 없는 자영자	0.392*** (0.052)	2.151*** (0.491)	0.064 (0.041)	-0.043 (0.045)	-0.102* (0.052)
무급가족종사자	1.767*** (0.516)	9.139 (7.281)	2.527*** (0.757)	1.058 (0.810)	0.415 (1.059)
기타 종사자	0.524*** (0.129)	4.708*** (1.133)	-0.067 (0.102)	-0.196* (0.091)	0.020 (0.129)

27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구분	(1)	(2)	(3)	(4)	(5)
	로그 총부채 수준	하위 40%	상위 10%	상위 5%	상위 1%
무직자	-0.161*** (0.052)	-1.838*** (0.525)	0.100** (0.036)	0.116** (0.040)	0.088 (0.058)
노인 있는 가구	-0.684*** (0.063)	-5.457*** (0.640)	-0.098* (0.039)	-0.115** (0.044)	0.035 (0.071)
한부모 가구	-0.011 (0.113)	1.059 (1.200)	-0.178* (0.074)	-0.117 (0.073)	-0.029 (0.083)
장애인 있는 가구	-0.079 (0.052)	0.185 (0.526)	-0.098*** (0.034)	-0.078* (0.037)	-0.045 (0.045)
주택 점유형태(준거집단=자가)					
전세	5.543*** (0.088)	26.320*** (0.927)	2.004*** (0.092)	1.362*** (0.103)	0.545*** (0.136)
보증금 있는 월세	6.048*** (0.096)	32.663*** (1.019)	1.903*** (0.090)	1.345*** (0.102)	0.679*** (0.139)
보증금 없는 월세	6.093*** (0.152)	28.440*** (1.745)	2.238*** (0.103)	1.530*** (0.110)	0.726*** (0.134)
기타	5.694*** (0.107)	25.440*** (1.164)	2.018*** (0.095)	1.297*** (0.106)	0.549*** (0.140)
아파트 거주	-0.090** (0.035)	-1.261*** (0.353)	0.185*** (0.027)	0.130*** (0.029)	0.073+ (0.040)
수도권 거주	0.224*** (0.036)	0.940** (0.358)	0.465*** (0.028)	0.417*** (0.030)	0.257*** (0.039)
로그 저축액	-0.110*** (0.006)	-0.587*** (0.069)	-0.075*** (0.005)	-0.069*** (0.006)	-0.049*** (0.008)
거주주택 자산/ 총자산	0.029*** (0.001)	0.133*** (0.010)	0.014*** (0.001)	0.010*** (0.001)	0.003 (0.002)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 총자산	0.057*** (0.001)	0.276*** (0.008)	0.046*** (0.001)	0.045*** (0.001)	0.032*** (0.002)
로그 주택담보대출	0.576*** (0.006)	3.083*** (0.070)	0.165*** (0.007)	0.101*** (0.007)	0.051*** (0.010)
가구 소득분위	Yes	Yes	Yes	Yes	Yes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상수	-4.346*** (0.257)	-44.420** (2.616)	6.575*** (0.196)	7.321*** (0.203)	8.894*** (0.250)
N	146154	146154	146154	146154	146154
adj. R-sq	0.360	0.110	0.222	0.174	0.060

주: 가구 가중치를 적용함.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함. +p<0.1 *p<0.5 **p<0.01 ***p<0.001.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원격접근서비스),” 통계청, 2017~2024.

[제5장 부록] 한국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 II: 한국복지패널

〈부표 5-1〉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인구사회학적 속성

(단위: 세, × 100=%)

구분	연령	여성	가구주 및 배우자	수도권	자가 거주	아파트 거주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54.8	0.495	0.934	0.572	0.485	0.641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52.6	0.501	0.917	0.665	0.497	0.547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58.7	0.471	0.905	0.495	0.781	0.590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55.3	0.498	0.914	0.500	0.766	0.527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56.8	0.487	0.912	0.677	0.789	0.626
전체	55.9	0.490	0.915	0.581	0.694	0.584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2〉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상대적 자산 수준

(단위: 분위)

구분	실물자산 백분위	금융자산 백분위	부채 백분위	노동소득 백분위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39	54	38	52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41	51	52	55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63	60	37	44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57	56	45	51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72	65	56	53
전체	57	58	46	51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7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5-3〉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총자산과 소득

(단위: 만 원, 분위)

구분	총자산	총자산 백분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백분위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25,655	49	3,777	58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	24,122	49	3,895	62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	41,283	65	3,638	57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	32,185	60	3,884	62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	56,851	75	4,442	67
전체	38,242	62	3,962	62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주: 백분위는 당해 연도 전체 인구 기준.

〈부표 5-4〉 2007년 당시의 프로파일별 2023년 현재 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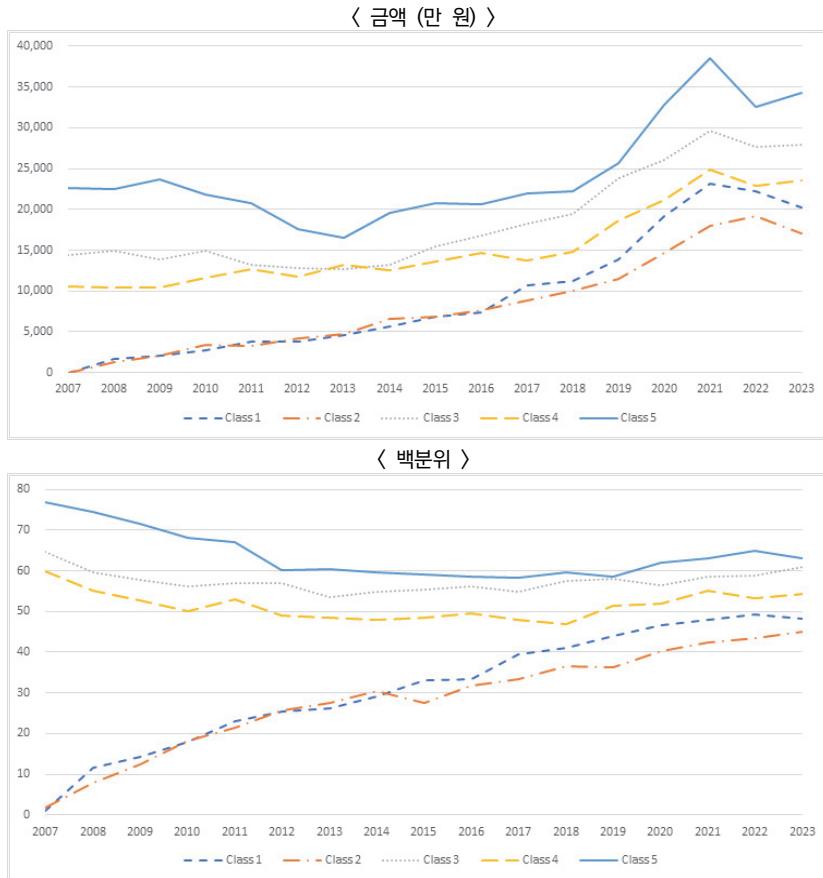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총자산 중 실물자산	총자산 중 금융자산	총자산 중 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0.421	0.514	0.118	0.642
〈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0.442	0.483	0.216	1.243
〈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산-무부채-중소득	0.648	0.308	0.090	0.923
〈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산-중부채-중소득	0.635	0.306	0.126	0.949
〈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산-고부채-고소득	0.702	0.258	0.139	1.712
전체	0.595	0.350	0.136	1.149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주: 부채는 금융기관 및 전월세 임차보증금(받은 돈)의 합으로 비공식 부채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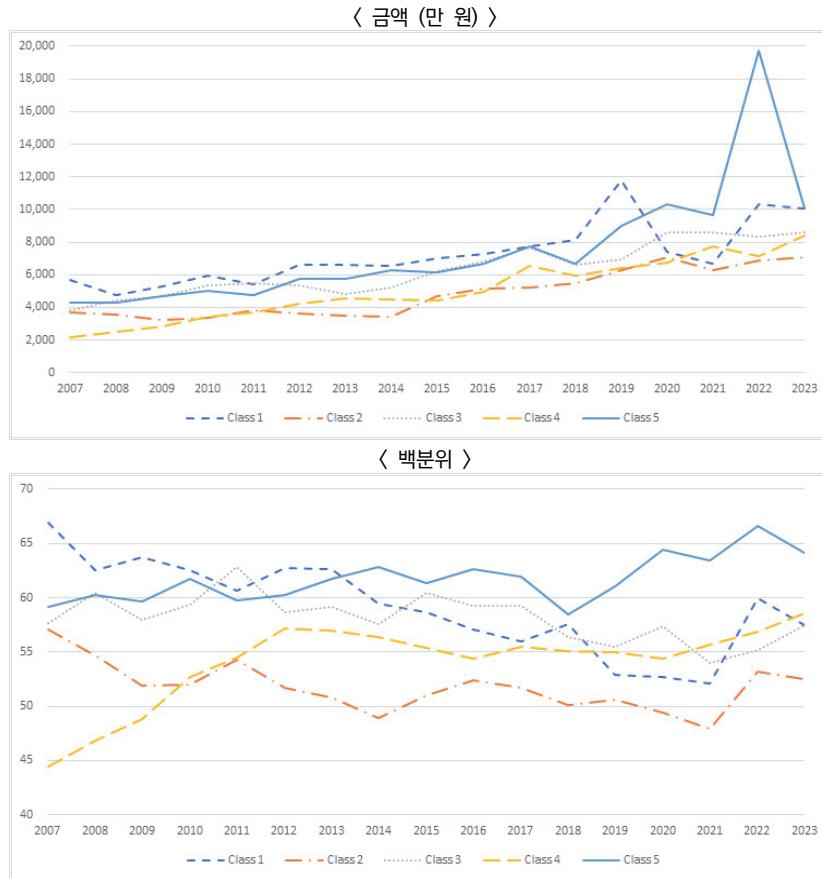
[부그림 5-1]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실물자산 추이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7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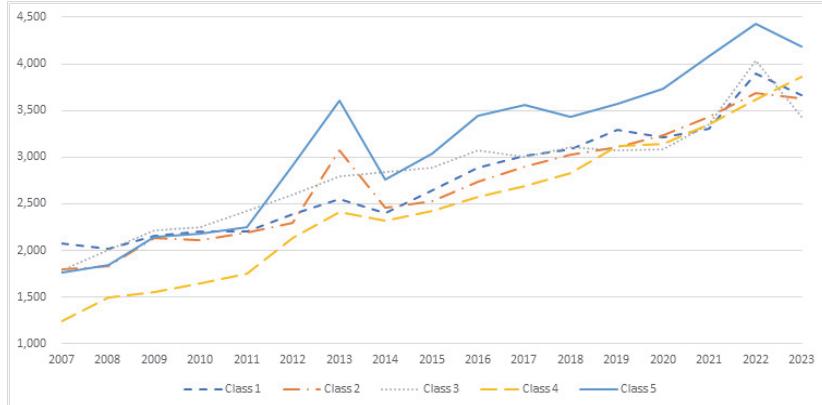
[부그림 5-2]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금융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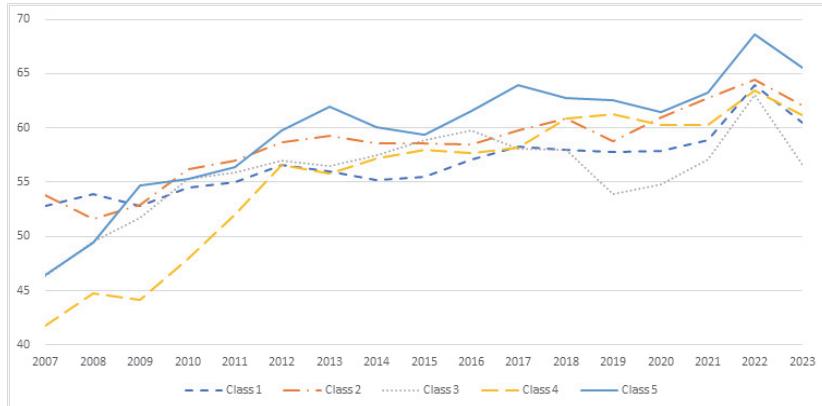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그림 5-3] 자산 유형 잠재집단별 노동소득 추이

〈 금액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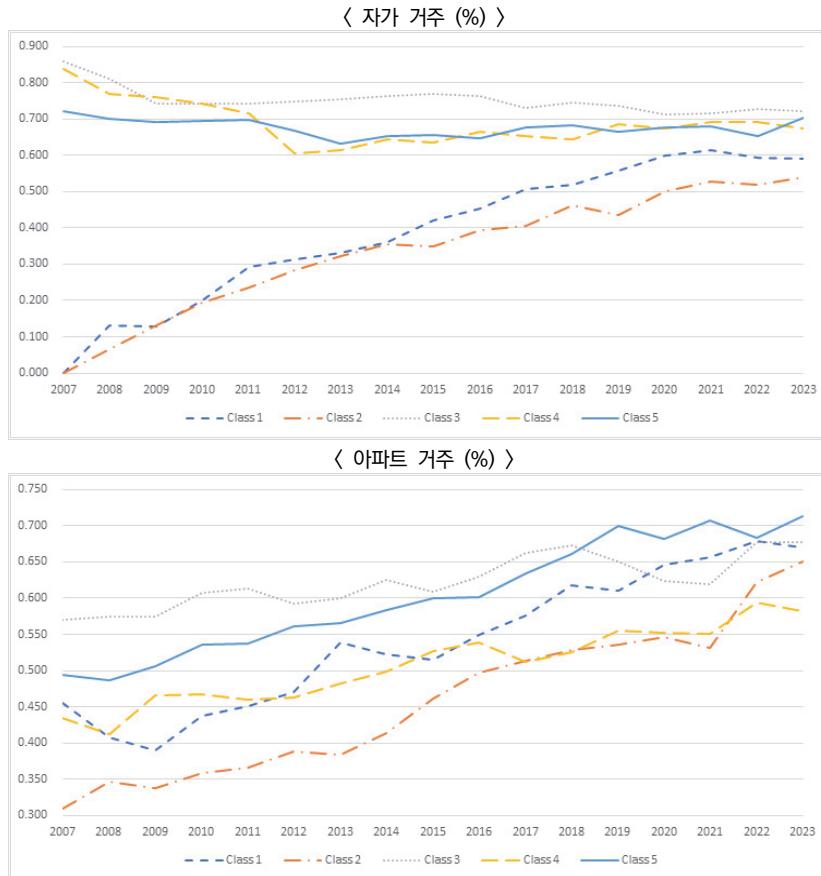


〈 백분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그림 5-4] 자산 유형 프로파일별 자가 거주, 아파트 거주 비율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5〉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가치분소득(금액, 백분위)

(단위: 만원, 백분위)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 산-무부채	3,380 57	4,072 67	4,334 62	4,859 72	4,381 67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 산-중부채	4,354 71	3,457 57	3,432 58	4,301 70	4,015 66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 산-무부채	1,927 30	3,505 58	4,244 70	4,665 72	4,130 65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 산-중부채	5,177 71	3,330 55	3,456 60	4,476 71	4,170 66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 산-고부채	3,417 58	4,195 69	3,626 61	4,997 74	4,549 70
전체	3,904 61	3,695 61	3,770 61	4,649 72	4,246 67

주: 각 셀의 두 번째 열은 백분위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6〉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가구주(배우자)인 비율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자 산-무부채	0.760	0.914	0.678	0.957	0.860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자 산-중부채	0.711	0.692	0.856	0.891	0.842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자 산-무부채	0.627	0.617	0.865	0.854	0.772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자 산-중부채	1.000	0.558	0.715	0.860	0.798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자 산-고부채	0.869	0.698	0.791	0.848	0.816
전체	0.810	0.683	0.781	0.874	0.815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8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5-7〉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동산 자산

(단위: 만원)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	19,733	17,177	24,536	18,773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	19,741	5,561	22,602	16,303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	22,252	10,861	38,469	28,026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	21,513	13,435	27,847	21,883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	28,286	20,024	40,786	32,819
전체	0	22,496	13,035	31,557	23,921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8〉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동산 자산 백분위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	60	34	56	45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	59	21	58	44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	64	42	69	61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	64	47	60	53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1	70	48	69	62
전체	1	64	37	63	54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9〉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금융자산

(단위: 만원)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1,646	13,029	12,619	7,728	10,510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0,170	5,854	2,853	7,568	6,588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4,338	8,701	12,817	7,833	8,640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2,790	5,185	4,665	10,082	8,562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17,586	7,963	5,445	10,453	9,739
전체	11,861	8,308	7,123	8,942	8,728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0〉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금융자산 백분위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59	65	55	55	58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63	54	38	56	52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54	62	58	56	58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67	52	49	61	58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64	62	58	63	62
전체	62	60	51	59	58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8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5-11〉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채

(단위: 만원)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	0	864	9,590	4,277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	0	968	9,616	5,626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	0	667	14,800	7,618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	0	969	12,058	7,107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	0	735	11,316	7,058
전체	0	0	858	11,583	6,469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2〉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부채 백분위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	1	58	80	47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	1	58	82	59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	1	56	83	50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1	1	59	84	59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1	1	57	84	61
전체	1	1	58	83	56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3〉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노동소득

(단위: 만원)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2,815	3,463	3,486	4,424	3,797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3,418	2,966	3,135	4,089	3,680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450	2,950	3,715	4,129	3,592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4,935	2,540	3,006	4,395	3,895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4,224	4,460	3,327	4,313	4,180
전체	3,579	3,250	3,298	4,263	3,838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4〉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노동소득 백분위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50	61	58	66	61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61	58	62	65	63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36	53	60	64	59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69	48	62	66	62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75	69	61	67	67
전체	60	57	61	66	63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8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5-15〉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 중 부동산

(단위: × 100=%)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604	0.298	0.643	0.475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640	0.223	0.638	0.484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666	0.431	0.736	0.643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761	0.590	0.620	0.584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000	0.720	0.530	0.681	0.620
전체	0.000	0.680	0.407	0.663	0.567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6〉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 중 금융자산

(단위: × 100=%)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946	0.342	0.544	0.287	0.440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909	0.319	0.548	0.299	0.416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866	0.281	0.432	0.210	0.289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865	0.197	0.342	0.325	0.353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825	0.224	0.408	0.267	0.319
전체	0.888	0.270	0.458	0.279	0.359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7〉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총자산 중 부채
(단위: ×100=%)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000	0.193	0.281	0.162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000	0.354	0.320	0.258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000	0.102	0.272	0.152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000	0.083	0.321	0.200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000	0.000	0.084	0.281	0.185
전체	0.000	0.000	0.175	0.297	0.193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18〉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
(단위: ×100=%)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000	0.237	1.741	0.795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000	0.294	2.434	1.435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000	0.150	2.650	1.384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000	0.303	2.416	1.437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000	0.000	0.253	2.652	1.667
전체	0.000	0.000	0.255	2.443	1.379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28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5-19〉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자가 거주 비율

(단위: × 100=%)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818	0.342	0.675	0.549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613	0.228	0.741	0.540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000	0.875	0.568	0.742	0.730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000	0.961	0.687	0.654	0.654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000	0.897	0.578	0.723	0.682
전체	0.000	0.852	0.468	0.709	0.636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20〉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아파트 거주 비율

(단위: × 100=%)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483	0.721	0.706	0.706	0.682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506	0.475	0.573	0.644	0.594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0.741	0.532	0.759	0.695	0.654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417	0.573	0.455	0.671	0.595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0.509	0.602	0.552	0.797	0.708
전체	0.505	0.579	0.597	0.705	0.645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부표 5-21〉 '07년 자산 유형 집단 – '23년 자산 유형 집단 이행별 증여·상속액(관측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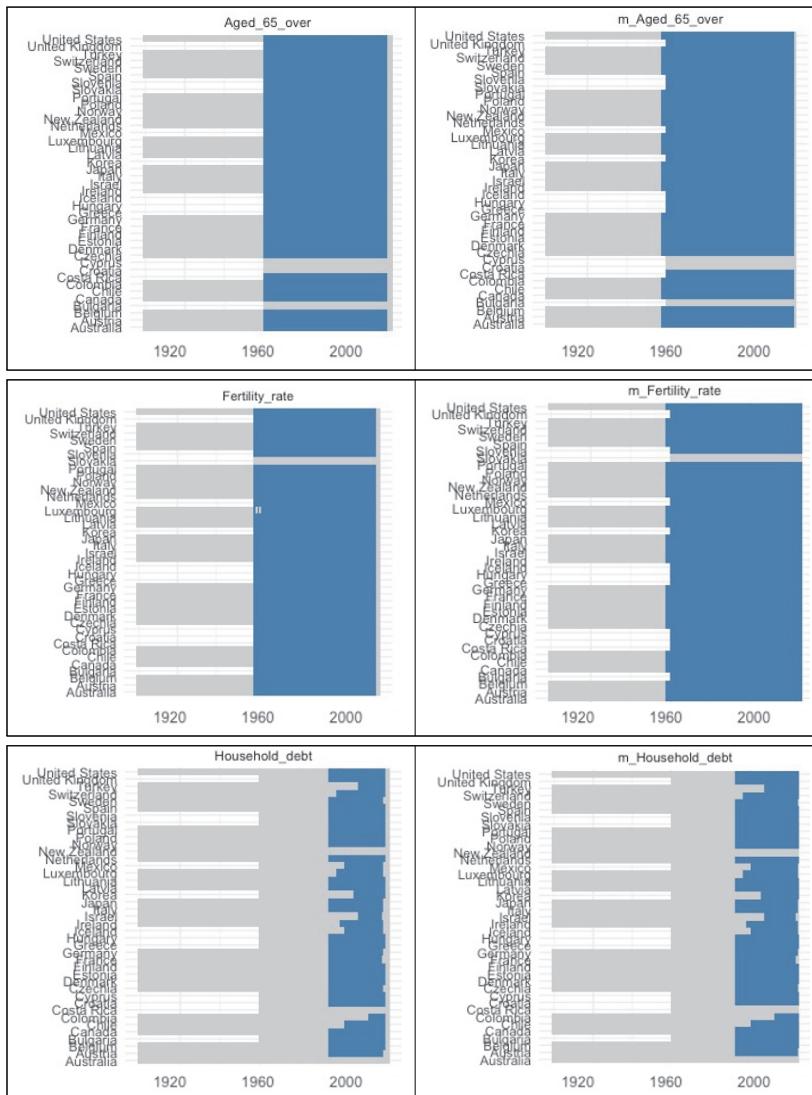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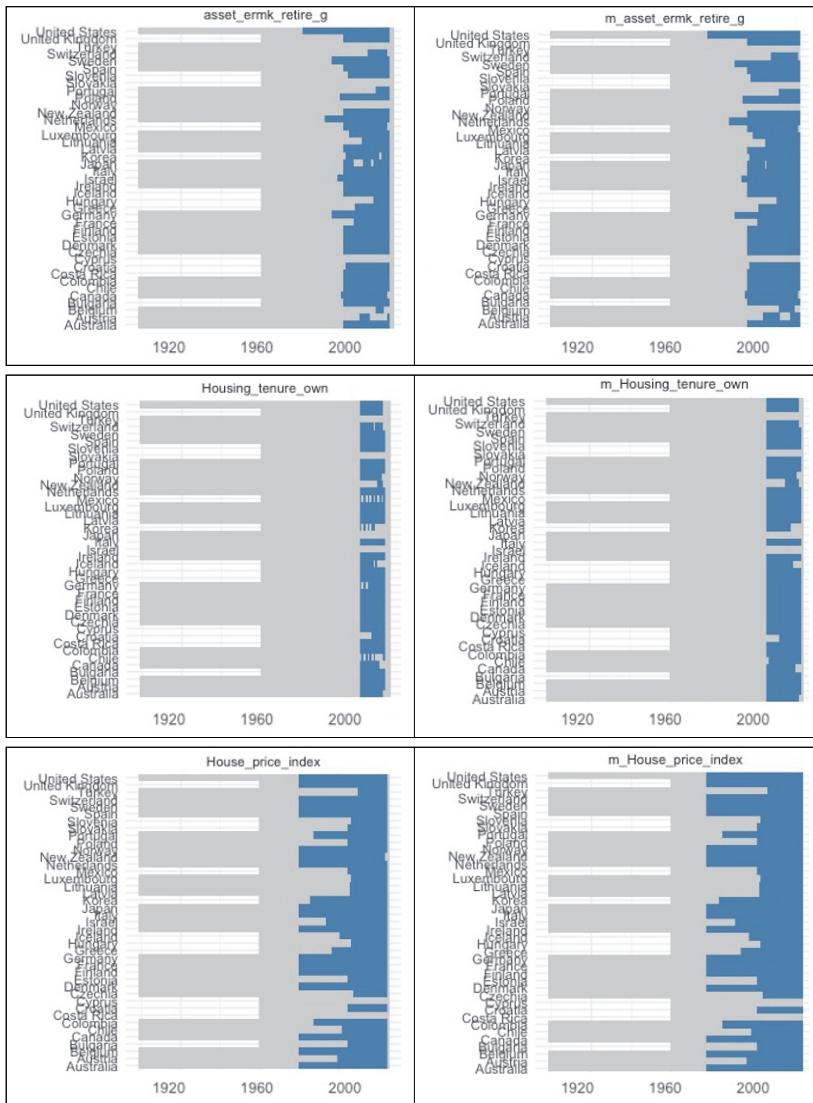
구분	〈'23년-집단1〉 무부동산-저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2〉 중부동산-중금 융자산-무부채	〈'23년-집단3〉 저부동산-저금 융자산-저부채	〈'23년-집단4〉 고부동산-고금 융자산-고부채	전체
〈'07년-집단1〉 무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46	509	1,316	1,210	946
〈'07년-집단2〉 무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0	7,651	163	1,506	1,798
〈'07년-집단3〉 고부동산-중금융 자산-무부채	1,661	404	521	3,105	1,846
〈'07년-집단4〉 중부동산-저금융 자산-중부채	538	555	949	750	735
〈'07년-집단5〉 고부동산-중금융 자산-고부채	6,824	1,731	1,248	1,043	1,571
전체	1,562	1,611	814	1,480	1,393

출처: “한국복지패널(3~19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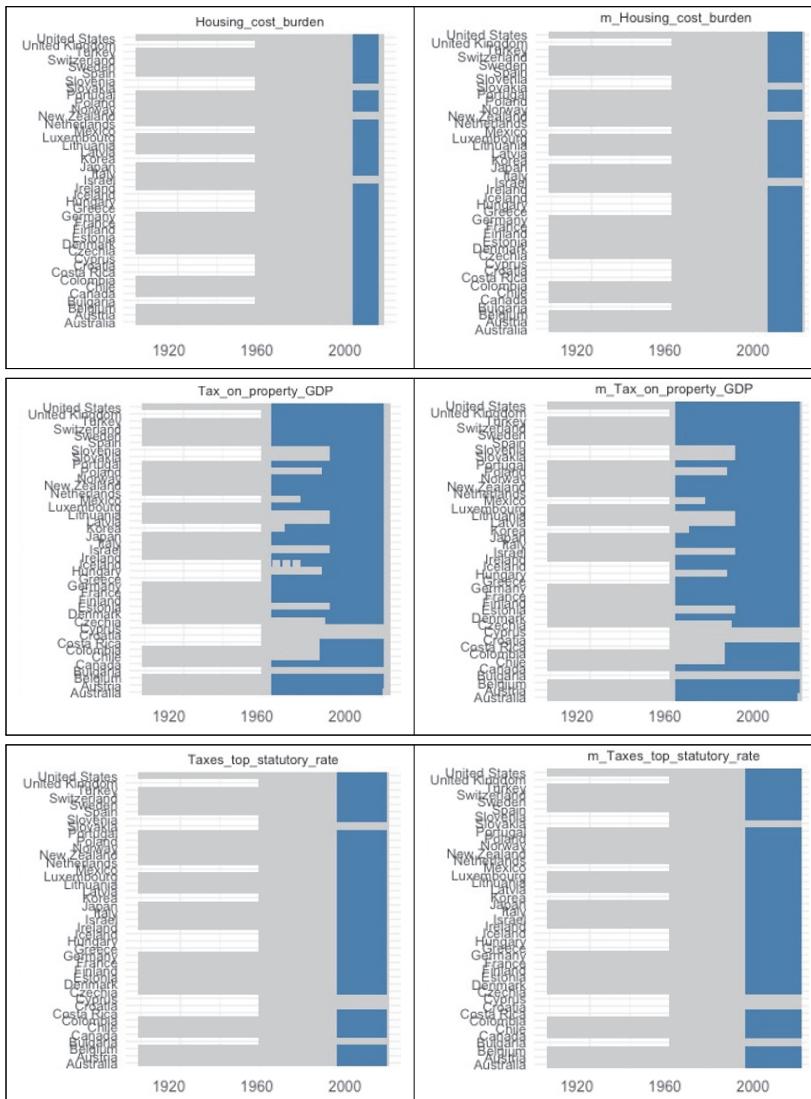
[제6장 부록] OECD 국가의 자산 격차 요인 패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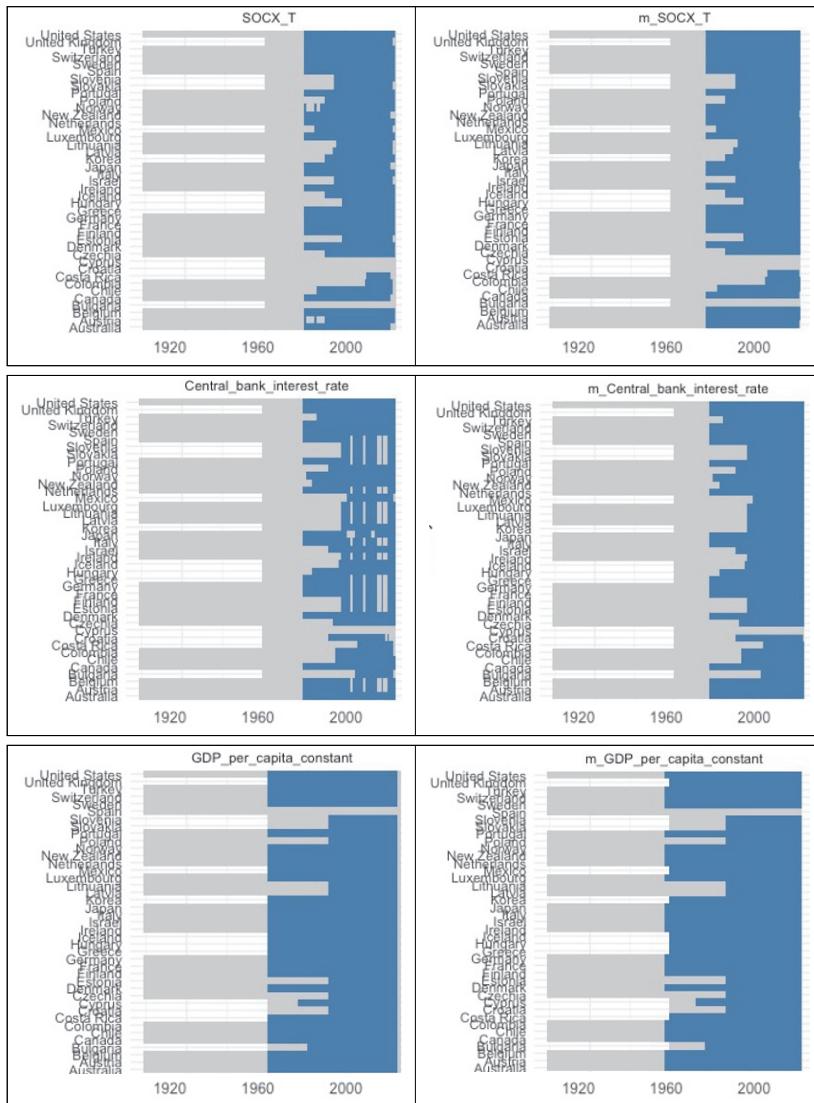
[부그림 6-1] 패널데이터 구조(좌: 결측치 처리 전, 우: 결측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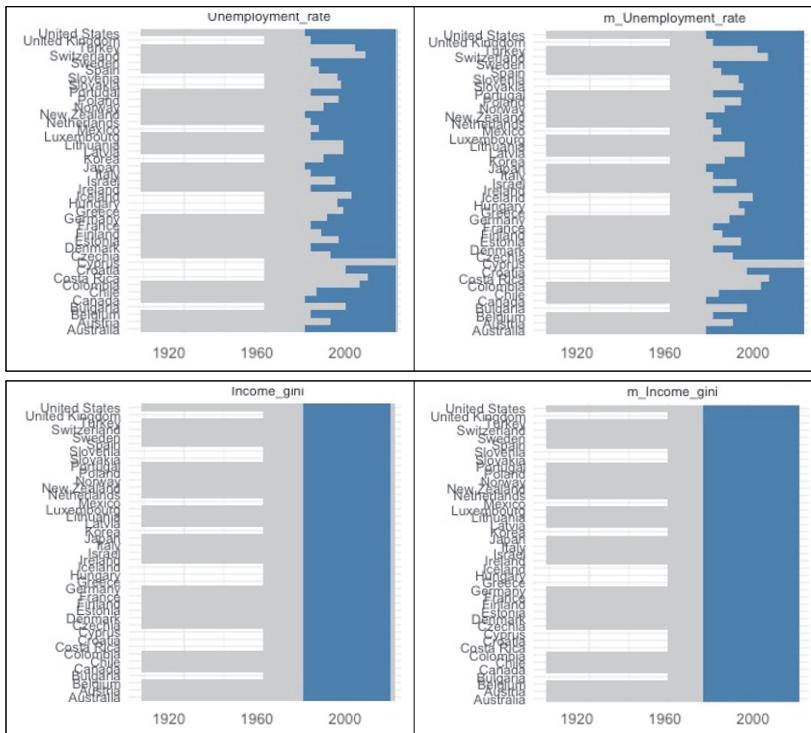


292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294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6-1〉 국가 패널데이터 기초통계량(결측치 처리 전)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65세 이상 인구 비율	2,394	12.39715	4.494392	2.904362	29.00114
출산율	2,558	2.107788	0.924761	0.721	6.833
로그 1인당 실질 GDP	2,285	9.851827	0.848094	6.935035	11.62998
중앙은행 금리	1,550	7.983375	41.91152	-0.75	1330.049
실업률	1,355	7.632635	3.967905	1.558333	27.825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1,804	0.4668497	0.105099	0.1248	0.7561
가계부채(% GDP)	987	57.8104	32.49034	1.754906	151.5209
주거비용	494	16.21255	7.821109	0	30
주택소유율	426	68.07394	12.60039	35.5	93.8
주택가격(실질)	1,297	93.26103	32.88843	24.37773	196.695
재산세(% GDP)	1,834	1.728201	1.100406	0.073	17.026
최고소득구간세율	925	44.24749	13.02297	0	125.7446
총사회지출	1,452	18.99123	6.366447	0	34.693
사적연금자산	940	44.85837	51.82819	0.011	215.9532
연도	4,475	1967.398	36.14079	1899	2025
자산 불평등(지니계수)	1,189	0.7605007	.0632575	0.5774	0.9925
상위 1% 자산 점유율	1,189	0.2506649	.0596076	0.121	0.4027
상위 5% 자산 점유율	1,189	0.4608573	.0645584	0.3001	0.6046
상위 10% 자산 점유율	1,189	0.5964427	.0636915	0.4201	0.7433
하위 40% 자산 점유율	1,189	0.0055904	.027311	0-.121	0.0762

296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6-2〉 결측치 처리 이전, 수집된 데이터 원본의 분석 결과

	(1)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2) 상위 1% 점유율	(3) 상위 5% 점유율	(4) 상위 10% 점유율	(5) 하위 40% 점유율
총사회지출	-0.00295 (% GDP)	0.000921 (-2.05)	-0.000582 (-0.89)	-0.00134 (-1.64)	0.00169* (2.37)
연금자산	-0.000105 (% GDP)	-0.0000167 (-1.01)	-0.00000826 (-0.23)	-0.0000134 (-0.09)	0.0000811 (1.85)
65세 이상 인구	0.000444	-0.00120 (0.22)	0.000798 (-0.67)	0.000639 (0.51)	0.000235 (0.40)
비율					(0.26)
출산율	0.00885 (0.46)	0.0260*** (3.89)	0.0136 (1.44)	0.0108 (0.95)	-0.00311 (-0.31)
1인당 GDP(로그)	0.0141 (0.62)	0.0227 (1.83)	0.0113 (1.07)	0.00679 (0.43)	-0.0144 (-1.17)
중앙은행 금리	0.00114 (0.81)	-0.000234 (-0.34)	0.000100 (0.13)	0.000423 (0.50)	-0.000671 (-0.89)
실업률	0.000145 (0.20)	0.000528 (1.29)	0.000150 (0.35)	0.000139 (0.27)	-0.000133 (-0.32)
소득 지니계수	-0.0455 (-0.49)	0.0657 (1.13)	0.0136 (0.22)	-0.0200 (-0.31)	0.0285 (0.59)
가계부채	0.000587* (% GDP)	-0.00000693 (2.15)	0.000194 (-0.06)	0.000321* (1.61)	-0.000332* (2.29)
주거비용부담	0.0000196 (% 처분가능소득)	0.000147 (0.07)	0.000126 (0.91)	0.000148 (0.73)	0.0000537 (0.37)
주택소유율	-0.000188 (-0.29)	-0.000113 (-0.38)	-0.000484 (-1.18)	-0.000620 (-1.37)	-0.000119 (-0.36)
주택가격	-0.000154 (-1.13)	-0.000149 (-1.63)	-0.000155 (-1.66)	-0.000127 (-1.39)	0.0000691 (1.05)
재산세(%GDP)	-0.000810** (-2.95)	0.000352* (2.21)	0.000150 (0.66)	0.0000563 (0.22)	0.000717** (3.35)
최고 소득세율	0.000116 (1.22)	-0.000109 (-1.36)	-0.0000409 (-0.58)	0.00000364 (0.05)	-0.0000788 (-1.58)
L.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0.608*** (8.83)				
L.상위 1% 점유율		0.584*** (19.56)			
L.상위 5% 점유율			0.664*** (15.55)		
L.상위 10% 점유율				0.657*** (13.42)	
L.하위 40% 점유율					0.549*** (6.48)
상수	0.223 (1.24)	-0.179 (-1.21)	0.0492 (0.40)	0.183 (1.05)	0.115 (0.98)
N	233	233	233	233	233

주: 2010~2022년도 연도 더미가 분석에 포함되어 있음.

〈부표 6-3〉 금리와 연금자산만 결속치 처리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

	(1)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2) 상위 1% 점유율	(3) 상위 5% 점유율	(4) 상위 10% 점유율	(5) 하위 40% 점유율
총사회지출 (% GDP)	-0.00287*	0.000426 (0.78)	-0.000319 (-0.57)	-0.000870 (-1.25)	0.00173* (2.72)
연금자산 (% GDP)	-0.000161 (-1.67)	-0.0000454 (-0.65)	-0.0000342 (-0.41)	-0.0000417 (-0.50)	0.000116* (2.54)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0108 (0.86)	-0.000786 (-0.61)	0.000419 (0.39)	0.000467 (0.45)	-0.000195 (-0.31)
출산율	0.0134 (0.86)	0.0244*** (4.57)	0.0151 (2.01)	0.0142 (1.57)	-0.00318 (-0.39)
1인당 GDP(로그)	-0.00170 (-0.10)	0.0124 (1.38)	0.00720 (0.74)	0.00245 (0.20)	-0.00503 (-0.46)
중앙은행 금리	0.00243 (0.73)	-0.00186 (-1.13)	-0.000688 (-0.38)	0.000250 (0.13)	-0.00199 (-1.02)
실업률	0.000661 (0.92)	0.000503 (1.74)	0.000398 (1.12)	0.000478 (1.17)	-0.000389 (-0.89)
소득 지니계수	-0.0317 (-0.39)	0.0527 (1.00)	0.0250 (0.46)	0.00492 (0.09)	0.0273 (0.66)
가계부채 (%GDP)	0.000421* (2.34)	0.0000787 (0.97)	0.000144 (1.62)	0.000207 (2.00)	-0.000223* (-2.26)
주거비용부담 (% 처분가능소득)	-0.0000584 (-0.26)	0.0000490 (0.36)	0.0000551 (0.43)	0.0000713 (0.50)	0.0000626 (0.52)
주택소유율	-0.000262 (-0.64)	-0.000303 (-1.17)	-0.000662 (-1.99)	-0.000742* (-2.13)	-0.0000936 (-0.45)
주택가격	-0.0000947 (-0.79)	-0.0000344 (-0.52)	-0.0000459 (-0.75)	-0.0000351 (-0.54)	0.0000625 (1.01)
재산세(% GDP)	-0.000805 (-1.91)	0.000285 (1.00)	0.000130 (0.34)	0.0000589 (0.15)	0.000774** (2.84)
최고 소득세율	0.000128 (0.99)	-0.000132* (-2.35)	-0.0000289 (-0.43)	0.0000218 (0.25)	-0.0000718 (-1.29)
L.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0.622*** (7.82)				
L.상위 1% 점유율		0.703*** (23.55)			
L.상위 5% 점유율			0.774*** (20.50)		
L.상위 10% 점유율				0.750*** (15.26)	
L.하위 40% 점유율					0.517*** (5.75)
상수	0.346* (2.32)	-0.0908 (-0.84)	0.0365 (0.31)	0.150 (1.04)	0.0237 (0.21)
N	315	315	315	315	315

주: 2010~2022년 연도 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298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부표 6-4〉 모든 변수 결측치 처리 후 분석 결과

	(1)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2) 상위 1% 점유율	(3) 상위 5% 점유율	(4) 상위 10% 점유율	(5) 하위 40% 점유율
총사회지출 (% GDP)	0.000459 (0.79)	0.000867* (2.09)	0.000879 (1.70)	0.000793 (1.44)	-0.0000701 (-0.29)
연금자산 (% GDP)	-0.000122* (-2.59)	-0.00000504 (-0.16)	-0.0000383 (-1.09)	-0.0000592 (-1.61)	0.0000620** (2.93)
65세 이상 인구 비율	0.0000646 (0.08)	-0.000656 (-1.02)	-0.000222 (-0.36)	-0.000153 (-0.25)	0.0000283 (0.08)
출산율	0.00613 (0.90)	0.00891* (2.52)	0.00577 (1.19)	0.00603 (1.12)	-0.00149 (-0.52)
1인당 GDP(로그)	0.0111 (0.94)	0.0106 (1.73)	0.0104 (1.32)	0.00971 (1.11)	-0.00708 (-1.30)
중앙은행 금리	0.00114 (0.84)	-0.000462 (-0.83)	-0.0000871 (-0.11)	0.000205 (0.23)	-0.000798 (-1.23)
실업률	0.000770* (2.50)	0.000246 (0.89)	0.000426 (1.36)	0.000521 (1.64)	-0.000352* (-2.40)
소득 지니계수	0.0587 (0.95)	0.0497 (1.07)	0.0539 (1.11)	0.0538 (1.06)	-0.0236 (-0.88)
가계부채 (% GDP)	0.0000866 (1.43)	0.0000180 (0.43)	0.0000208 (0.38)	0.0000365 (0.60)	-0.0000504 (-1.88)
주거비용부담 (% 처분가능소득)	0.0000537 (0.33)	0.0000926 (1.04)	0.000103 (0.90)	0.000102 (0.86)	-0.0000170 (-0.23)
주택	-0.000138 (-0.58)	-0.000301 (-1.65)	-0.000426 (-1.96)	-0.000427 (-1.94)	-0.0000432 (-0.44)
소유율					-0.0000039 6
주택가격	-0.00000174 (-0.05)	-0.0000228 (-0.88)	-0.0000234 (-0.77)	-0.00000679 (-0.23)	
재산세(% GDP)	-0.00395** (-3.55)	-0.000229 (-0.18)	-0.00142 (-1.00)	-0.00200 (-1.44)	0.00218*** (7.79)
최고 소득세율	-0.000260 (-0.98)	-0.000188 (-1.56)	-0.000172 (-1.09)	-0.000175 (-1.00)	0.000134 (1.05)
L.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0.874*** (37.05)				
L.상위 1% 점유율		0.889*** (51.24)			
L.상위 5% 점유율			0.918*** (39.44)		
L.상위 10% 점유율				0.911*** (36.00)	
L.하위 40% 점유율					0.850*** (40.77)
상수	-0.0457 (-0.35)	-0.0984 (-1.42)	-0.0801 (-0.87)	-0.0590 (-0.57)	0.0854 (1.40)
N	441	441	441	441	441

주: 2008~2024년 연도 더미가 포함되어 있음.



Abstract

Drivers of Wealth Disparity and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Kim, Seonga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and structural drivers of w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to mitigate widening asset gaps. Wealth, alongside income, is a key determinant of economic security and life chances; however, the processes through which wealth is accumulated are shaped by complex interactions among life-course trajectories, asset composition, debt utilization, and institutional contexts. Using micro-level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2017–2024) an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mbined with a macro-level panel analysis of OECD countries, this study provide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wealth disparities. The results show that wealth disparity in Korea is reinforced not only by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marital status, but also by a real-estate-centered asset structure and debt-financed wealth accumulation strategies. In particular, asset composition and inheritance during the early stages of wealth formation play a decisive role in shaping long-term accumulation path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persistent inter-

Co-Researchers: Lee, Jumi·Park, Hyungjohn·Han, Solhee·Han, Sujin

generational wealth inequality. Cross-national panel analysis further indicates that social expenditure, private pension assets, and property taxatio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asset base of lower-wealth groups, while household debt and unemployment exacerbate wealth ga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argues for policy interventions centered on a life-course perspective, with strengthened support for low- and middle-wealth groups and closer integration of social policy and tax policy to promote more inclusive wealth formation.

Key words: Wealth disparity, Multidimensional drivers, Asset accumulation, Life-course dynamics, Social and tax policy implications